

연구보고서 2023-03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우해봉·임지영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임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03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44-7 93330
<https://doi.or.kr/10.23060/kihasa.a.2023.03>

발|간|사

2021년부터 진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삶의 질’을 강조하며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등의 논의가 새롭게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논의만 무성할 뿐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초저출산 현상이 2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됨에도 정책적 대응의 명확한 방향 설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출산율 회복 없이 저출산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기제의 존재 여부이다. 예컨대 저출산 대응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민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민의 가능성과 한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 설정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직면하여 이민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민이 인구학적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국내의 이민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이민 ‘행정’과 ‘정책’에 초점을 맞춘 관계로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이민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이민을 단순히 인구학적 차원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민 과정의 복잡성, 자료의 활용 가능성, 불충분한 이론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이민은 분석과 전망이 매우 어려운 인구학적 주제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이 ‘인구학적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민정책을 둘러싼 후속의 정치사회적 논의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2000년대 이후 20년 이상 지속된 초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 및 감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연구는 이민이 '인구학적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또한 이민이 인구학적으로 초래하는 파급 효과에 기초하여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이민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이 연구는 본원의 우해봉 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아 수행하였으며, 임지영 전문연구원이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경희대학교의 김현식 교수와 본원의 조성호 부연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국제인구이동(이민) 통계의 귀중한 자료원인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통계청과 통계진흥원의 관계자들도 연구자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용어	13
제2장 이민의 국제 동향과 인구학적 쟁점	23
제1절 이민의 국제 동향	25
제2절 이민의 인구학적 쟁점	46
제3장 이민과 인구의 규모 및 구조	83
제1절 서론	85
제2절 이민과 인구의 규모 및 구조: 시뮬레이션 접근	90
제3절 이민과 인구의 규모 및 구조: 수리인구학 접근	112
제4절 종합 및 소결	125
제4장 이민자의 혼인과 출산	131
제1절 서론	133
제2절 이민과 혼인	144
제3절 이민과 출산	169
제4절 종합 및 소결	186

제5장 이민자의 국내이동과 공간적 분포	191
제1절 서론	193
제2절 이민자의 국내이동 현황과 특징	194
제3절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와 집중	212
제4절 종합 및 소결	226
제6장 종합 및 정책 과제	229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231
제2절 국제이동 통계의 현황과 과제	235
제3절 인구변동 대응 정책과 이민의 역할	243
제4절 인구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한 정책 방향과 과제	251
참고문헌	257

표 목차



〈표 2-1〉 순유입-순유출 상위 5개국(연평균)	32
〈표 2-2〉 OECD 국가의 이민자 규모 및 전체 인구 대비 구성비	36
〈표 2-3〉 OECD 국가 이민자의 성비 및 중위연령	42
〈표 2-4〉 안정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와 평균 연령	54
〈표 3-1〉 인구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별 주요 가정	98
〈표 3-2〉 현 국제순이동 고정 시나리오의 주요 인구학적 지표	101
〈표 3-3〉 현 국제순이동 고정 시나리오의 주요 인구학적 지표: 수리인구학 접근	120
〈표 3-4〉 인구변동 요인 시나리오별 정지인구 지표	123
〈표 4-1〉 원주민과 이민자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 1950~2005년 출생자	139
〈표 4-2〉 이민자의 출신 국적별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 1950~2005년 출생자	141
〈표 4-3〉 원주민과 이민자의 혼인 생명표: 남성 1951~1970년생(코호트)	149
〈표 4-4〉 원주민과 이민자의 혼인 생명표: 여성 1951~1970년생(코호트)	150
〈표 4-5〉 원주민과 이민자의 미혼율과 미혼 기간 중앙값: 1951~1970년생(코호트)	155
〈표 4-6〉 이민자의 출신 국적별 미혼율과 미혼 기간 중앙값: 1951~1970년생(코호트)	158
〈표 4-7〉 이민자의 출신 국적별 입국-혼인 패턴: 1951~1970년생(코호트)	159
〈표 4-8〉 원주민과 이민자의 미혼율과 미혼 기간 중앙값: 2015~2019년(기간)	161
〈표 4-9〉 이민자의 출신 국적별 미혼율과 미혼 기간 중앙값: 2015~2019년(기간)	164
〈표 4-10〉 이민자의 출신 국적별 입국-혼인 패턴: 2015~2019년(기간)	167
〈표 4-11〉 원주민/이민자 기혼 여성의 출생 코호트별 출산진도비와 코호트 출산율	175
〈표 4-12〉 이민자 기혼 여성의 출신 국적 및 국적 상태별 출산진도비와 코호트 출산율	177
〈표 4-13〉 인구주택총조사(표본 20%)에 기초한 연령별 출생과 출산율: 2019년	182
〈표 4-14〉 출신 국적별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2019년	185
〈표 5-1〉 분석 대상 원주민과 이민자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	199
〈표 5-2〉 이민자(기혼)의 입국 코호트별 출신 국적의 분포	201
〈표 5-3〉 원주민과 이민자의 이동률: 2015년 → 2020년	202
〈표 5-4〉 원주민/이민자의 권역 단위 이동/체류 패턴: 2015년 → 2020년	206
〈표 5-5〉 원주민과 이민자의 이동 여부 및 이동 유형별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	209

〈표 5-6〉 원주민/이민자의 광역시도, 권역(수도권-비수도권) 및 시군 분포	215
〈표 5-7〉 이민자(기존)의 출신 국적별 광역시도 및 권역(수도권-비수도권) 분포	216
〈표 5-8〉 이민자(기존)의 입국 코호트별 광역시도 및 권역(수도권-비수도권) 분포	217
〈표 5-9〉 광역시도별 이민자(기존)의 유입률-유출률과 순이동: 2015~2020년	220
〈표 5-10〉 출신 국적별 이민자의 유입률-유출률과 순이동: 2015~2020년	221
〈표 5-11〉 원주민과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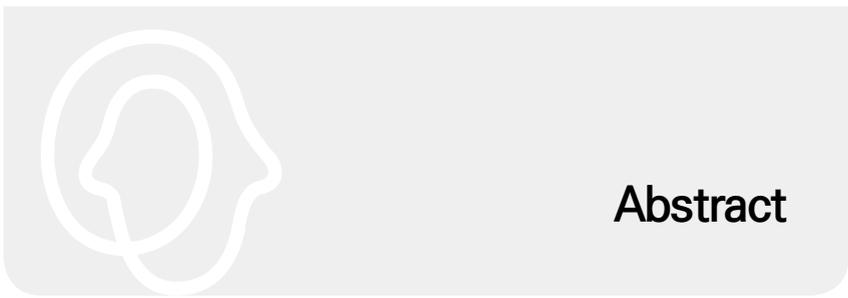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1] 국제순이동자 추이: 1950~2020년	29
[그림 2-2] 지역(대륙)별 국제순이동자 추이: 1950~2020년	33
[그림 2-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민자 연령 분포: 2020년	39
[그림 2-4] 이민자의 연령별 성비 분포: 2020년	41
[그림 2-5] OECD 국가 이민자의 성별 연령 분포: 2020년	43
[그림 2-6] OECD 국가의 자연증가율과 순이동률: 2000년(상), 2020년(하)	45
[그림 2-7] 이민자의 출산력 조정 기제(선별, 교란, 적응) 도식	69
[그림 2-8] 국내이동과 국제이동의 연계 경로	77
[그림 3-1] 국제순이동의 패턴(전체; 좌)과 성별 구성비(평균; 우): 2016~2020년	94
[그림 3-2] 현 국제순이동 고정 시나리오의 전체 및 연령대별 인구: 2020~2520년	100
[그림 3-3] 현 국제순이동 고정 시나리오의 인구 구조 지표: 2020~2520년	102
[그림 3-4] 국제순이동(좌) 및 출산율(우) 시나리오별 인구 전망	104
[그림 3-5] 국제순이동(좌) 및 출산율(우) 시나리오별 중위연령 전망	106
[그림 3-6] 출산율-국제순이동 조합별 전체 인구(좌) 및 중위연령(우) 전망	108
[그림 3-7] 국제순이동 수준별 인구의 구성 변화: 현 수준(좌) 및 대체이동 수준(우)	111
[그림 4-1] 코호트 분석과 기간 분석 틀: 렉시스 다이어그램	146
[그림 4-2] 원주민과 이민자의 코호트 혼인 생명표 지표: 남성	153
[그림 4-3] 원주민과 이민자의 코호트 혼인 생명표 지표: 여성	154
[그림 4-4] 이민자의 출신 국적별 혼인 확률과 생존곡선: 1951~1970년생(코호트)	157
[그림 4-5] 원주민과 이민자의 기간 혼인 생명표 지표: 2015~2019년	162
[그림 4-6] 이민자의 출신 국적별 혼인 확률 및 생존곡선: 2015~2019년(기간)	165
[그림 4-7] 원주민(좌)/이민자(우) 기혼 여성의 출생 코호트별 출산진도비	173
[그림 4-8] 전체(통계청)/표본(20%) 및 원주민/이민자의 연령별 출산율: 2019년	181
[그림 4-9] 출신 국적별 연령별 출산율: 2019년	186
[그림 5-1] 원주민/이민자의 연령별 이동률(%): 2015년 → 2020년	203
[그림 5-2] 원주민(좌)과 이민자(우)의 이동 유형별 및 연령별 이동률(%)	204





Abstract

Impa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on Population Dynamics and Policy Dir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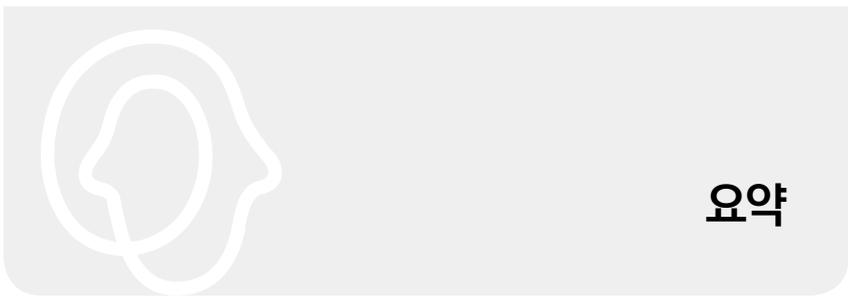
Project Head: Woo, Haebong

This study addresses the impa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on macro-level population dynamics (population aging and decline) and micro-level patterns of demographic behavior (fertility and internal migration). It is well known that preventing the aging of populations with international migration is extremely difficult. This study finds that given the long-lasting lowest-low fertility in South Korea the magnitude of international migration needed to preserve the current population size is well beyond the reasonable range of migration flows. This study suggests that only a combination of policy measures such as fertility increase, investment and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international migration, reforms of social systems may reduce the negative impacts of population aging and decline.

Keyword : international migration, demographic change, marriage, fertility, internal migration

Co-Researchers: Lim, Jiyoung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연구는 이민이 '인구학적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이민이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미시적 차원에서 원주민과 비교한 이민자의 혼인-출산 행동과 국내이동 패턴을 살펴보았다.

2. 주요 연구 결과

첫째, 이민자 여성의 출산력 등과 같은 특정 주제를 넘어 이민의 국제 동향과 인구학적 파급 효과에 관한 쟁점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인구학적 측면에서 이민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인구 시뮬레이션과 수리인구학 모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미치는 이민의 파급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이민을 통해 인구 고령화는 물론 인구 감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인구학적 목표 대신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이민자를 수용하여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고 고령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자 한다면 출산율이 일정한 수준까지 회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관련하여 원주민과 이민자의 출산력을 비교하는 한편 그 기초가 되는 혼인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원주민 여성의 출생 코호트별 혼인 패턴 변화와 이민자 여성의 구성(출신 국적) 변화로 인해 코호트 출산율(원주민 > 이민자)과 기간 출산율(원주민 < 이민자) 분석 결과는 상반된 방향을 보였다. 현 가임기 세대에서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원주

4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민 여성에 비해 높지만, 출신 국적 등 이민자의 구성 변화와 이민자의 적응 양상에 따라 출산에 대한 이민의 영향은 다를 수 있다. 셋째,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관련하여 이민자의 국내이동 현황과 패턴, 그리고 국내이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과 분포의 문제를 살펴해보았다. 원주민과 비교할 때 이민자의 이동률이 높으며, 출신 국적별 변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 경향이 원주민에 비해 강하다.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민자의 지역적 분산을 촉진하는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민이 공간적 집중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민을 통해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어려움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학적 상황에서는 이민 같은 어떤 단일의 정책 수단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완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및 활용 강화, 이민과 사회제도의 혁신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이민자의 출산율이나 노동력 등 인구변동에 대응하여 이민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요 용어 : 국제인구이동, 인구변동, 혼인, 출산, 국내인구이동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용어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통계청이 새로운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기존의 전망보다 총인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 2016년 인구추계(중위)에서 총인구가 2031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2019년 인구추계(중위)에서 2028년으로 3년 단축된 데 이어 가장 최근인 2021년 인구추계(중위)에서는 총인구가 이미 2020년부터 감소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통계청, 2023a).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인구 감소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됨과 함께 고령화 현상 또한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1년 인구추계(중위)에 의하면 중위연령은 2020년의 43.7세에서 2031년에 50세를 넘어서고 2056년에는 60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3a).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는 최근 들어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그 파급 효과를 둘러싼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물론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의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기에 그 함의를 정확히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같은 인구변동이 반드시 부정적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비교할 때 인구 감소는 반드시 부정적인 함의만을 가지는 것은 아님이 지적된다(Coleman and Rowthorn, 2011; Lutz, 2023). 비록 인구 감소가 인류 역사에서 빈번히 발생한 현상이지만,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 진행되는 인구 감소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산연령인구를 중심으로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그 부정적 파급 효과의 개연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구변동을 둘러싼 우려가 큰 것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속도가 가파른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인구변동의 속도가 가파를수록 전체 사회 체계나 이를 구성하는 하위 제도에 요구되는 개혁의 강도는 더욱 커질 개연성이 높다. 이미 현시점에서도 연령에 기초하여 가입 및 급여 제도를 설계한 공적연금(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불안감이 상당하다. 직접적으로 연령에 기초하지는 않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에 제도 운영을 위한 기여 기반이 악화되는 건강보험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렇듯 인구변동을 둘러싼 우려가 크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인구변동은 생존 기간(수명)의 연장이나 건강 향상 등 인류가 오랫동안 열망했던 삶이 초래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까지 한국 사회가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유지하되 인구변동이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 물론 현시점에서도 급격한 인구변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도록 제도의 적응력을 높이는 한편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인구변동의 속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삶의 질’을 강조하며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등의 논의가 새롭게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논의만 무성할 뿐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비전

과 전략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초저출산 현상이 2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됨에도 정책적 대응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출산율의 회복 없이 저출산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기제의 존재 여부이다. 예컨대 20년 가까이 추진된 저출산 대응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민(국제인구이동)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¹⁾ 그러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기제로 이민을 주목하는 것이 이민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저출산 대응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선책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의 표시인지는 불명확하다.

물론 최근까지의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인구변동에서 이민의 역할이 커질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민을 통해 인구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의 가능성과 한계가 제대로 규명되어야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구변동 요인 중에서 이동에 대한 인구학적 관심은 출생이나 사망에 비해 많지 않았다. 이동력(mobility)에 관한 관심 부족은 이론의 체계화나 방법론의 구축 측면에서도 사망력(mortality)이나 출산력(fertility)에 비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에 따라 인구의 절대적 규모(증감)에 대한 함의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과거의 인구변동(특히 고령화)에서 이동력

1) 이 연구에서는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국제인구이동(international migration) 개념이 국내로 들어오는 이입(유입)(移入; immigration)뿐만 아니라 국외로 나가는 이출(유출)(emigration)을 포괄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immigration(immigrant) 용어를 이입(이입자)으로 표기하는 대신에 포괄적인 용어인 이민(이민자)을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구이동 관련 용어에 대해서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의 실제 파급 효과 또한 출산력이나 사망력에 비해 크지 않았음이 지적된다(우해봉, 2023, pp. 62-63; Fihel, Janicka, and Kloc-Nowak, 2018, pp. 1324-1325; Goldstein, 2009, p. 15; Murphy, 2016a, p. 149; 2016b, p. 239; 2021, p. 231).²⁾

그러나 운송 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최근의 이민은 20세기 전반부까지의 이민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거에 이민은 물리적 혹은 재정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잠재적 수준(욕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었다. 그러나 초고속-장거리 운송 수단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국제인구이동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크게 줄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잠재적 이민 대상 국가(지역)에 관한 정보 획득도 한층 수월해졌다(Winter and Teitelbaum, 2013, pp. 26-27).

이러한 국제인구이동의 구조적 맥락 변화와 맞물려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에 따라 인구 감소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아짐으로써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학적 혹은 정치사회적 논의에서 이민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Teitelbaum and Winter, 1985, pp. 91-92). 이렇게 이민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것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 맞춰 사회 및 경제 체계를 성공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운 것과 관계가 있다(Golini, 1998, p. 70).

최근 들어 노동시장 참여율(특히 여성, 노인)을 스웨덴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캐나다 수준으로 순국제이동률을 높이되 고학력자 중심으로 이민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시키는 정책이 출산율을 상승시키려는 정책보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의 부정적

2) 참고로 Fihel et al.(2018, p. 1325)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이민의 영향은 이민자의 출산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주장한다.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임을 강조하는 낙관적인 주장 (Marois, Bélanger, and Lutz, 2020, p. 7690, 7694)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인구학적 논의는 대체로 이민이 인구(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민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의 장기적 추세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움을 지적한다(예컨대, United Nations, 2017a, p. 3). 다른 한편으로 이민은 단순히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이슈이다. 예컨대, 대규모 이민자 유입은 인종·민족, 언어, 종교 등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Winter and Teitelbaum, 2013, p. 23).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직면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민이 인구학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이민 관련 연구들이 이민 ‘행정’과 ‘정책’에 초점을 맞춘 관계로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예외적으로 이민자의 출산력 수준 및 이민자와 원주민의 출산력 비교 연구가 국내 인구학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민자의 출산력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인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출산력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정책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두섭, 2008, p. 2; 김현식, 2015, p. 428, 2018, p. 43; 유삼현, 2017, p. 30; 유정균, 2015, pp. 49-51). 그럼에도 출산력 등 특정 주제를 넘어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는 부족했다.

한편 기후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민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국제적 이슈라는 점에서 이민의 파급 효과에 관한 논의에서는

이민의 국제 동향과 인구학적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와 논의도 필요하다. 이민 과정의 다양성과 복잡성,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 불충분한 이론 등으로 인해 이민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분석과 전망이 매우 어려운 인구학적 주제로 남아 있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이민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이민을 단순히 ‘인구학적’ 차원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민이 인구의 규모 및 구조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인구변동이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질 개연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복지재정 등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면적인 함의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과정을 통해 조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Saczuk, 2003, pp. 14-19). 그럼에도 이민이 ‘인구학적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인구변동 대응 정책을 둘러싼 후속 논의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연구는 이민이 ‘인구학적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에 관한 세부적인 분석에 더하여 이 연구는 최근까지 진행된 국제인구이동 동향과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에 관한 쟁점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인구학적 측면에서 이민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이민이 인구학적으로 초래하는 파급 효과에 기초하여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이민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인구변동 대응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

의한다.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적응 양상을 보여 줌으로써 후속적으로 이민자의 사회 통합 논의에서도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용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이민의 국제 동향과 인구학적 쟁점(제2장)을 살펴본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민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이동의 국제적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민의 파급 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지역)를 넘어 이민자를 내보내는 국가(지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제2장에서는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 분석은 거시적 수준에서 인구의 규모 및 구조에 대한 이민의 효과 분석(제3장)과 미시적 수준에서 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행동에 대한 분석(제4장, 제5장)으로 구성된다. 인구의 규모 및 구조에 관한 이민의 파급 효과 분석에서는 인구 시뮬레이션(인구추계) 접근과 수리인구학(정지인구) 접근을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한편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미치는 거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활용 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혼인과 출산, 그리고 국내인구이동에서 관측되는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을 살펴

본다. 특히 혼인과 출산은 가치관, 규범 등 개별 국가의 문화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에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는 연구 주제이다. 또한 이민자의 혼인(특히, 원주민과 이민자 간 혼인)과 출산은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보여 주는 징표로 해석되기도 한다(Adsera and Ferrer, 2014, p. 10; Massey, 1981, p. 63).³⁾ 국내인구이동에서는 이민자의 국내이동 현황과 특징,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공간적 분포와 집중의 문제를 다룬다.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 분석에서는 2020년에 조사된 통계청(2023e)의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자료를 분석한다.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 분석에서 사망력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현재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관계로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인구이동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이 연구에서 결혼, 취업, 난민 등 국제인구이동의 세부 유형(구성)은 검토하지 않는다.⁴⁾ 다만 이민의 유형(구성)에 대해서는 이민의 국제 동향과 인구학적 쟁점을 살펴보는 제2장에서 간략한 수준의 검토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인구변동 대응 정책에서 이민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제6장). 우선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국제인구이동 통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이어서 인구

3) 미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인종·민족 간 혼인(racial/ethnic intermarriage)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민자 지위와 인종·민족이 명확히 구분되어 분석되지 않음으로써 분석 결과의 해석에서 어려움이 제기되기도 한다. 참고로 Massey(1981, pp. 63-76)는 이민자의 적응(동화)을 1) 가족주의, 2) 출산, 3) 거주지 격리, 4) 정치적 참여, 5) 혼종혼(intermarriage), 6) 사회이동의 6가지 측면에서 파악한다.

4) 국가별 법적 지위에서의 차이로 인해 국제인구이동 통계에서 난민(refugees) 혹은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s)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UN(2020a)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난민(망명 신청자 포함)은 3,381만 명으로 전체 세계 이민자의 대략 12%에 해당한다. 전 세계 난민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가 48%, 아프리카가 22%로 세계 전체 난민의 대략 70%가 이들 두 대륙에 분포한다. 아시아에서는 서아시아의 난민이 1,193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세계 전체 난민의 35%에 달한다.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 이민을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연구의 구성에 이어 아래에서는 인구이동(migration) 관련 용어의 사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현대 인구학에서 이동력은 출산력이나 사망력 같은 인구변동 요인들과 비교할 때 학문적인 체계화가 크게 뒤떨어진 분야('weak sister')로 간주된다(Coleman, 2008, p. 452). 인구학에서 이동력 분야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는 '인구이동'에 대한 일치된 정의조차 쉽지 않은 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대부분의 인구학적 논의(특히 인구학 방법론)는 이동자(migrant)에 대한 정의가 작위적일 수밖에 없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e.g., Morrison, Bryan, and Swanson, 2004, p. 495).⁵⁾

그럼에도 이동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구이동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일반적인 인구학적 논의를 따라 이 연구에서도 인구이동을 1) 상주지(place of usual residence)의 변화와 2) 정치적 혹은 행정적 경계를 옮기는 조건을 충족하는 공간적 이동으로 정의한다(Bilsborrow, 2016, p. 111).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한시적 혹은 계절적 이동(temporary or seasonal migration) 등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동력(mobility)의 형태가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인구이동의 유형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구분이 국제인구이동(국제이동; 이민)과 국내인구이동(국내이동)이다. 국제이동(international migration)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상주지를 옮기는 인구이동을, 국내이동

5) 인구이동(migration)을 '이주', 이동자(migrant)를 '이주자'로 표기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두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인구이동(이동자)으로 표기한다.

(internal migration)은 개별 국가 내에서 행정 구역을 넘어 상주지를 옮기는 인구이동을 의미한다.⁶⁾ 이러한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사용되는 인구이동의 정의는 매우 복잡하다. 특히 국제이동(이민)은 국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는 국제이동 통계에서 국제 비교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참고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일본, 유럽은 전통적으로 ‘국적’ 기준의 ‘외국인’ 통계(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대규모 이민자 정착 국가들은 ‘출생지’를 기준으로 국제이동(저량) 통계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OECD, 2022, p. 338).

이동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UN의 1998년 권고안은 출생지나 국적과는 무관하게 최소 1년(12개월) 이상 상주지를 다른 국가로 옮긴 개인을 ‘장기 이동자’(long-term migrant),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상주지를 다른 국가로 옮긴 개인을 ‘단기 이동자’(short-term migrant)로 정의하였다(United Nations, 1998, p. 10). 비록 12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에 걸쳐 이동하는 인구의 증가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 ‘단기 이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1998년 권고안에서 사용된 ‘단기 이동자’는 UN이 사용하는 상주지(place of usual residence) 개념과 조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6) 동일 국가 내의 행정 구역(지역사회) 간 이동을 국내인구이동(internal migration), 행정 구역(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을 거주지 이동(local migration or residential mobility)으로 구분하기도 한다(Rowland, 2003, p. 386).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에서 국내인구이동과 거주지 이동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국내인구이동과 거주지 이동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기본 목적이 장거리 이동(지역사회 간 이동)을 국내인구이동, 단거리 이동(지역사회 내 이동)을 거주지 이동으로 개념화하는 것이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이동 거리와 무관하게 국가 혹은 광역 단위 행정 구역 간 이동은 대체로 거주지 이동이 아니라 국내인구이동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여기에서 논의하는 이동(mobility)의 개념은 공간적, 물리적, 지리적 이동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계층적 지위 이동 같은 사회학적 이동(예컨대, 계층·계급 이동) 개념과는 구분된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Morrison et al.(2004, pp. 493-494)을 참고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UN(2017b, p. 40)은 실제의(actual) 체류 기간 혹은 의도하는(intended) 체류 기간에 기초하여 상주지를 1) 지난 12개월의 대부분을 연속해서 거주(최소 6개월 1일 이상 거주; 일시적 부재 기간 제외)했거나 최소 6개월 동안 거주하고자 하는 장소, 혹은 2) 최소한 지난 12개월 동안 연속해서 거주(일시적 부재 기간 제외)했거나 최소 12개월 동안 거주하고자 하는 장소로 정의한다.⁷⁾ 그러나 이러한 상주지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단기 이동자’는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실제 체류했거나 체류할 것을 의도하기에) 상주지 변화(change in usual residence) 조건을 온전히 충족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Bilsborrow, 2016, p. 111).⁸⁾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체류가 상주지 변화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에서 후속으로 이루어진 국제이동에 관한 조작적 정의에서 UN(2017c, p. 7, 9)은 ‘단기 이동자’ 개념이 부정확한 용어임을 받아들이고 ‘장기 이동자’ 대신에 ‘국제이동자’(international migra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에서 ‘국제이동자’는 UN이 기존에 사용한 ‘장기 이동자’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⁹⁾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UN의 국제이동 개념은 최소 1년(12개월) 이상 상주 국가

7) 국제이동에 관한 자료 구축에서 UN(2017c, p. 6)은 두 번째 기준의 사용이 더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참고로 상주지를 정의하는 데 UN이 사용하는 이 두 가지 기준은 2015년에 발간된 ‘인구주택총조사 원칙 및 권고(제3판)’에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현재 2015년에 발간된 보고서는 2017년에 발간된 보고서(United Nations, 2017b)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8) 단기 이동자와 마찬가지로 계절 이동자(seasonal migrant) 개념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9) UN의 ‘장기 이동자’ 개념은 상주국 간 이동, 즉 상주국 A에서 상주국 B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반면에 ‘국제이동자’ 개념은 하위 범주로 이입자(immigrant)와 이출자(emigrant)를 조작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상주국 간 이동’ 요건을 완화한다(United Nations, 2017c, p. 7). 예컨대, 여러 국가에 걸쳐 단기간(1년 미만) 체류한 후 A 국가로 이동한 개인은 A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상주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주국 간 이동이 아니기에 ‘장기 이동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UN의 이입자 조건(A 국가 기준)을 충족하기에 ‘국제이동자’ 개념에 부합한다.

(country of usual residence)를 옮기는 인구이동으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통계청은 상주지가 있는 국가를 떠나 체류하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이동을 국제이동으로 정의한다.

앞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민자 개념은 UN의 ‘국제이동자’ 개념과 (이론적으로) 동의어로 사용된다. 한편 ‘이민자’ 개념에 대비되는 용어로는 ‘원주민’을 사용한다. 이민자 집단의 하위 범주로 볼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으로 정의하며, ‘외국인’ 개념에 대비되는 용어로는 ‘내국인’을 사용한다. 참고로 내국인에는 출생 시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인을 포함한다.

위의 국제이동자 정의에 기초하여 두 가지 유형의 측정치, 즉 국제이동자에 대한 유량(flow) 및 저량(stock) 측정치를 산출할 수 있다. 국제이동자 ‘유량’은 상주 국가를 떠나 일정한 기간(예컨대, 1년) 이상 특정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특정 국가를 떠나는 국제이동자의 규모로, 국제이동자 ‘저량’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 이상 상주 국가를 옮긴 국제이동자의 규모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이동자 ‘저량’에 관한 실제 논의에서는 전체 국제이동자(저량)를 포괄하는 대신에 국제이동자의 하위 집단이나, (국제이동자는 아니지만) 국제이동자와 관련이 있는 집단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외 출생자(foreign-born persons)와 외국인(foreigners),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민자 2세대(second-generation immigrants)가 있다(United Nations, 2017c, p. 16). 물론 이민자 2세대도 상주국을 벗어나 다른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후 귀환하여 상주하면 이민자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적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학술적으로도 ‘저량’ 측면에서의 관심은 대체로 국제이동자의 두 가지 특성, 즉 국적(country of citizenship)과 출생국(country of birth)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센서스(표본조사)나 사회조사 등 특정 시점에서 측정된 정보에 기초하여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대체로 출생국(예컨대, 국외출생자)을 기준으로 이민자를 정의하는 경향이 강하다(Darlington-Pollock, Lomax, and Norman, 2019, p. 70; Lichter and Johnson, 2006, p. 116; Perry and Schachter, 2003, p. 2; Reher and Silvestre, 2009, p. 825; Silvestre and Reher, 2014, p. 54). 출생국에 기초하여 이민자를 정의할 때도 기본적으로 상주지 조건(예컨대, 1년 이상 체류)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 요건에 대한 예외로 논의되는 대표적인 집단이 1세 미만의 영아이다. 이론적으로 국외출생 영아는 거주 기간 요건(예컨대, 12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실제 이민자 통계 작성 과정에서는 이민자로 간주된다. 참고로 우리나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국민과 외국인이며, 여기에서 ‘상주’ 개념은 기준 시점까지 거주한 기간과 앞으로 거주하려는 기간을 합쳐 3개월 이상을 의미한다(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2조). 인구주택총조사의 대상자 판정이 현실적으로는 체류 기간과 관련한 개인의 의도(intention)에 기초함을 보여 준다.¹⁰⁾

비록 출생국(국외 출생자)이나 국적(외국인)을 기준으로 이민자(저량)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개념 정의가 앞에서 논의한 ‘이민자’에 대한 이론적 정의와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국외출생자(foreign-born persons)를 이민자로 정의하는 방식은 출생국이

10) 상주지 정의에서 ‘실제’ 거주 기간 대신에 개인의 ‘의도’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이동자 정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United Nations, 2017c, p. 7).

아닌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출생국으로 귀환하여 상주하는 국내 출생자(native-born persons)를 이민자 범주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국적 기준으로 시민권자(citizens)에 대비해 외국인(foreigners)을 이민자로 정의하는 방식도 ‘이민자’에 대한 이론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외국인 부모의 자녀로 출생하여 부모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해외 체류 없이 지속해서 국내에 거주했다라도 이민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비록 이들이 국적 기준으로 외국인으로 분류되지만,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이민자가 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상주지를 옮긴 후 다시 시민권 보유 국가로 귀환하여 상주 중인 개인은 이론상 이민자 정의에 부합하지만, 국적 기준으로 이민자 범주에 속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를 분석(제4장, 제5장)할 때는 자료상의 한계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민자를 정의하는 대신에 국적(country of citizenship)에 기초하여 이민자를 정의한다. 다만,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외국인 지위를 갖는 개인뿐만 아니라 귀화 과정을 거쳐 국적을 취득한 개인(귀화인)도 이민자 정의에 포함한다.¹¹⁾ 이민자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제4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한편 최근 들어 국제이동자의 국내이동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국제이동과 마찬가지로 국내이동에 관한 정의도 정치·행정 단위 등

11) 우리나라처럼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출생지에 기초한 정의와 국적에 기초한 정의 간 불일치의 정도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 참고로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한다.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와 출생 전에 부(父)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다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제1항). 또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항).

의 차이로 인해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통계청 기준)의 국내이동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참고로, 우리나라 통계청이 수집 및 공표하는 국내이동 통계에서 국내이동은 읍면동 경계를 넘어서는 인구이동을 의미하기에 읍면동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은 국내이동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이민의 국제 동향과 인구학적 쟁점

제1절 이민의 국제 동향

제2절 이민의 인구학적 쟁점



제 2 장 이민의 국제 동향과 인구학적 쟁점

제1절 이민의 국제 동향

최근 들어 인구변동에서 이동력이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18세기 중반 이전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률 변동이 인구학적 변화(증감)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었음이 지적된다.¹²⁾ 이는 현재의 서구 선진국이 산업화되기 이전에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인구 이동도 대체로 일부 지역(예컨대, 무역상, 군대)을 중심으로 국지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맞물린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이 본격화된 후 사망률이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출산력이 인구변동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Edmonston, Raymer, and Salzman, 2010, p. 11).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러 출산율 감소는 추가적인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출산율이 대체출산율(replacement-level fertility) 아래로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인구변천(1차) 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근까지 출산율과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비록 과거에 비해 출산율과 사망률이 낮아졌지만, 선진국 내부에서 관측되는 변이가 작지 않은 것도 사실이

12) 선진국 중에서 인구변천을 가장 먼저 경험한 국가는 프랑스로 18세기 말부터 출산율과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 이전의 농업사회에서 인구변천이 시작되었다는 점과 출산율과 사망률의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표준적인 인구변천이론(theory of demographic transition)과 조응하지 않는 사례에 속한다. 참고로 전통적인 인구변천이론에서는 인구변천의 조건으로 산업화를 통한 사회의 근대화가 강조되며, 사망률 하락이 출산율 하락을 선행하는 것으로 논의된다(Perrin, 2022, p. 432).

다.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 출산율과 사망률이 낮은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이동이 주목을 받게 된다 (Edmonston et al., 2010, p. 12; May, 2012, p. 57). 이러한 인구변천과 함께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를 통합한 세계화 현상은 인구이동의 역할이 향후 더욱 커질 구조적 조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

비록 최근의 인구변동에서 인구이동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과거의 인구변천 과정에서도 인구이동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전적 인구변천이론(theory of demographic transition)에 따르면 출생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망률 감소는 인구가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며, 이 과정에서 국제이동은 인구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인구변천의 최종 단계인 저사망률-저출생률 단계에서는 인구 압력이 낮아지고 과거와 달리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May, 2012, p. 32). 예컨대, 유럽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북미와 호주 지역으로 대규모 인구 유출을 경험했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주요 이민 수용국이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인구이동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절에서는 인구이동의 국제 동향을 살펴본다. 비록 국가(지역), 인구이동 유형 등 국제이동 내부의 이질성이 매우 크지만, 이 절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측되는 국제이동의 전반적인 동향 파악에 초점을 맞춘다. 다만 일부 주제들에 대해서는 대륙 혹은 OECD 국가군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앞의 국제이동자 정의 부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국제이동의 수준과 추세에 대한 분석은 유량과 저량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인구이동 유량(flow)은 특정 기간(예컨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1년)에 걸친 유입자(유출자)의 수를 의미한다. 인구이동의 국제 동향을 전반적으로 개관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UN의 국제이동 유량 통계를 사용한

다. 현재 UN의 국제이동 유량 통계(추정치)는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공된다. 한편 국제이동 저장(stock)은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된 국제이동자(이민자)의 규모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민자 저장 통계로 UN의 국제이동자 저장(International Migrant Stock) 통계를 사용하는데, 기준 시점은 7월 1일로 연앙인구(mid-year population)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제이동의 유량과 저장 통계는 인구이동의 다른 측면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이동 유량 통계가 설정된 기간(대개 1년)에 걸쳐 발생한 국제이동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관측함으로써 가장 최근의 정보와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에 국제이동 저장 통계는 기준 시점까지 ‘누적된’ 인구이동의 효과를 보여 준다(United Nations, 2012, p. 3). 아래에서는 국제이동 유량 통계를 통해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국제이동의 추세와 특징을 살펴본 후에 특정 시점을 기준(특히 2020년)으로 한 국제이동자 저장 통계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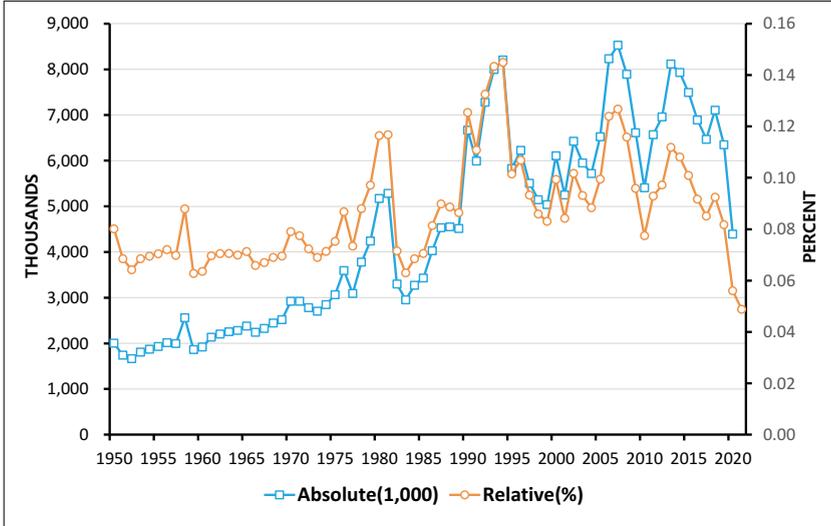
전 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국제이동의 총량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가 UN의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국제이동 통계이다. 현재 UN은 전 세계를 237개 국가 혹은 지역(Country/Area)으로 구분하여 1950년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과거 인구통계 추정치(estimate)와 2100년까지의 시나리오(가정)별 미래 전망치(forecast)를 제공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인구추계와 마찬가지로 UN의 인구통계에서도 출산력이나 사망력에 비해 이동력 통계는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제공된다. 아래에서는 세계인구전망 2022년 개정판(United Nations, 2022a)에서 제공되는 국제순이동자(net number of migrants) 지표를 통해 지난 20세기 후반 이

후에 이루어진 국제이동의 수준과 추이를 살펴본다.¹³⁾

국제순이동자 규모의 산출과 관련하여 어떤 특정 기간에 걸친 전 세계적 수준의 국제순이동 값은 항상 0(zero)이기에 여기에서는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양(+의 국제순이동 값을 갖는 국가(지역)의 국제순이동자 수를 합산하여 전체 국제순이동 규모를 산출하였다. 물론 음(-)의 국제순이동 값을 갖는 국가(지역)들의 국제순이동자 수(절대치)를 합산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적 추이를 보면 1950년 2백만 명 수준이었던 국제순이동자는 1980년대 초에 5백만 명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비록 1980년대에 들어 기존의 증가세가 꺾였지만, 1990년대 전반에는 다시 8백만 명대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1970년대까지의 추세와 비교할 때 1980년대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국제이동의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순이동자는 등락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코로나일구)의 영향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현재 UN(2022a)이 제공하는 국제순이동 추정치는 2021년까지 제공되는데, 2021년 추정치는 2020년의 439만 명에서 더욱더 감소한 386만 명에 그친다. 한편 [그림 2-1]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절대적 차원의 국제순이동자와 함께 세계 인구(연앙인구 기준) 대비 국제순이동자의 구성비(%)를 추가로 보여 준다. 국제순이동자의 절대적 규모와 비슷한 시계열 추세를 보이지만, 전 세계 인구 대비 국제순이동자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패턴을 보여 준다. 이는 국제순이동자의 추세처럼 전 세계 인구도 과거 70년의 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증가한 상황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13) UN의 세계인구전망에서 제공되는 국제이동 지표는 순이동(net migration)에 한정되며, 유입(immigration)과 유출(emigration)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뒤에서 논의하듯이 순이동 정보가 인구추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유입과 유출 과정을 통해 순이동이 결정되는 인구의 복잡성을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림 2-1] 국제순이동자 추이: 1950~2020년



주: 분석 대상 기간에 걸쳐 237개 국가(지역) 중 국제순이동자가 양(+)인 국가(지역)의 순이동자 규모를 합산한 값임.

자료: United Nations (UN). (2022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Most used)[data file]. Retrieved from <https://population.un.org/wpp/Download/Standard/MostUsed/>. 2023. 1. 8.

앞에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한 국제순이동의 추이를 살펴보았지만, 국제순이동의 패턴은 대륙이나 국가(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2-2] 참고). 전통적인 대규모 이민 수용 지역에 해당하는 북미와 오세아니아는 일부 예외적 기간을 제외하고 1950년대 이후 지속해서 순유입 패턴을 보인다. 1950년대에 주요 순유출 지역이었던 유럽은 1970년대부터 순유입 지역으로 전환되었으며, 순유입의 규모 또한 대체로 증가세를 보인다. 중남미와 아프리카는 1950~2020년의 대부분 기간에 걸쳐 순유출 현상을 경험한 지역이다. 아시아 대륙 또한 1970년대 이후 대체로 순유출 현상을 경험했다. 참고로 [그림 2-2]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1980년대 중반에 순유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감소세에 진입하여 2010년대 이후에는 30만 명 전후 수준까지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United Nations, 2022a).

국가 단위의 국제순이동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표 2-1>에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체 기간을 하위 기간으로 구분하여 순유입-순유출(연평균) 상위 5개국을 보여 준다. 기간별로 미국의 순유입 규모가 가장 큰 점을 제외하면 순유입-순유출 순위에서 일관된 패턴은 관측되지 않는다.¹⁴⁾ 순유입과 관련하여 미국과 러시아가 지속해서 순유입 상위 국가로 나타난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대표적인 순유입 국가이다(2000~2010년 기간 순유입 15위). 유럽에서는 스페인의 사례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은 대체로 순유출 국가였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순유입 패턴을 보인다. <표 2-1>은 2000~2010년 기간에 스페인이 미국 다음으로 순유입이 많은 국가였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2000년대 초중반에 연간 60~70만 명 수준의 순유입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¹⁵⁾ 스페인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 나타난 이러한 순유입의 급증 현상은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보다는 대규모로 존재하던 기존 미등록 이민자의 합법화와 관련이 있는데(Coleman, 2008, p. 464), 이는 결과적으로 2000년대 이후 스페인 인구 성장에서 큰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순유출과 관련하여 1990~2000년 기간의 최대 순유출 국가는 중국이었는데(1992년 87만 3천 명 순유출),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들어 중국의 순유출 규모는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참고로 2010~2020년 기간에

14) 참고로 연도별로 순유입-순유출 순위를 보면 30여 년의 기간에 걸쳐 미국이 가장 많은 순유입을 보이는 패턴도 일관되게 관측되지 않는다.

15) 1998년 기준으로 스페인의 이민자(추정치)는 637,085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1998년 대비 727.01% 증가한 5,268,762명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전체 스페인 인구는 39,852,651명에서 46,157,822명으로 15.82% 증가하였다. 해당 기간의 전체 인구 증가량(6,305,171명)의 73.45%(4,631,673명)가 이민자 인구의 증가에 기인한다(Verdugo and Swanson, 2011, p. 26).

걸친 중국의 순유출은 17만 7천 명 수준이다(순유출 6위).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순유출 국가에 해당하는 멕시코는 1990~2000년 기간에 순유출 상위 국가로 분류되지만, 사실 멕시코의 순유출이 정점을 찍은 시기는 이보다 이른 1980년대 중후반이다. 이는 잘 알려진 미국의 1986년 이민 개혁-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IRCA)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¹⁶⁾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는 가장 많은 순유출을 경험하는 지역이다. 비록 중국의 순유출이 감소세를 보이지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등의 순유출 규모가 상당하다. 변동성을 보이지만, 인도는 2000년대 이후부터 순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졌다. 방글라데시는 2010년대에 순유출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2000년대에 걸쳐 순유출이 급증한 패턴을 보였다. 한편 파키스탄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까지는 대체로 순유입을 경험했지만, 2000년대 초부터 순유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대에 이르러 급증하는 패턴을 보인다. UN의 인구통계(추정치)에 의하면 우리나라 또한 순이동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인 국가에 해당한다. 1990~2000년 기간에 우리나라는 주요 순유출 국가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순유출 5위).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 순유입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대 초반에는 순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2010~2020년 기간 순유입 8위). 이러한 우리나라의 순유입 증가에는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¹⁷⁾

16) 1986년의 IRCA는 기존의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사면, 국경 통제 강화, 미등록 이민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을 지향했지만, 개혁 의도와는 달리 미등록 이민자 축소에 성공적이지 못했음이 지적된다(Donato, Durand, and Massey, 1992).

17) 참고로 고용허가제 범주에는 일반고용허가제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시행된 특례고용허가제 대상인 외국 국적 동포(방문취업: H-2)

32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표 2-1〉 순유입-순유출 상위 5개국(연평균)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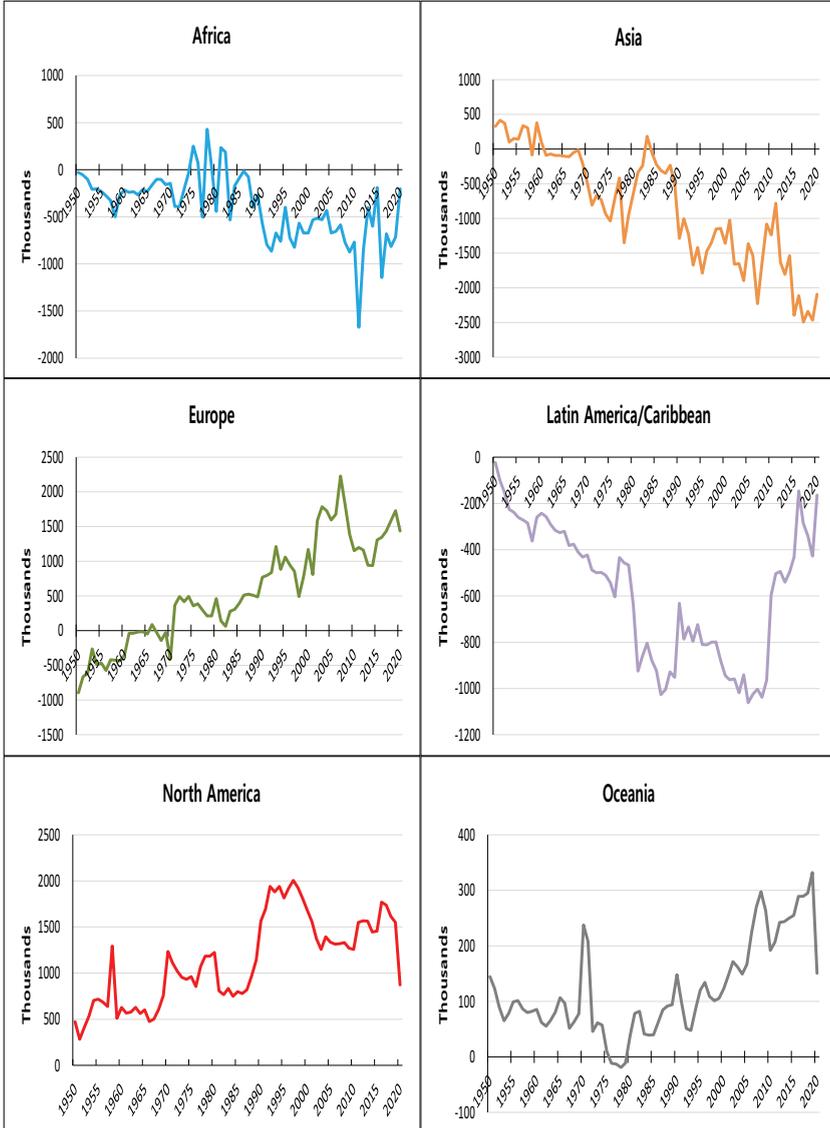
순위	순유입(net immigration)					
	1990~2000년		2000~2010년		2010~2020년	
	국가	규모	국가	규모	국가	규모
1	미국	1,694	미국	1,161	미국	1,212
2	러시아	461	스페인	465	독일	358
3	독일	300	아랍에미리트	419	러시아	320
4	아프가니스탄	206	러시아	307	캐나다	278
5	에티오피아	154	이탈리아	284	영국	251
순위	순유출(net emigration)					
	1990~2000년		2000~2010년		2010~2020년	
	국가	규모	국가	규모	국가	규모
1	중국	-574	방글라데시	-698	파키스탄	-1,457
2	방글라데시	-342	인도	-458	시리아	-438
3	멕시코	-313	중국	-452	베네수엘라	-393
4	카자흐스탄	-289	파키스탄	-343	인도	-288
5	대한민국	-158	멕시코	-293	방글라데시	-246

주: 국가별로 분석 대상 기간의 연간 국제순이동자를 합산한 후 11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United Nations (UN). (2022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Most used)[data file]. Retrieved from <https://population.un.org/wpp/Download/Standard/MostUsed/>. 2023. 1. 8.

도 있다. 외국 국적의 동포를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은 방문취업(H-2) 외에도 재외동포(F-4)가 있다.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에 기초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체류 기간에서 제한이 없으며(3년 단위로 연장 가능), 단순노무 업종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취업이 자유롭게 허용됨으로써 단순노무 업종에 한해 허용되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과는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도 재외동포법의 대상자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방문취업자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재외동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체류자격 분류에 대해서는 법무부(2023) 자료 참고).

[그림 2-2] 지역(대륙)별 국제순이동자 추이: 1950~2020년



자료: United Nations (UN). (2022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Most used)[data file]. Retrieved from <https://population.un.org/wpp/Download/Standard/MostUsed/>. 2023. 1. 8.

국제이동 유량 통계에 이어 아래에서는 UN(2020a)의 국제이동자 저장 통계(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20)를 통해 이민자의 규모와 전체 인구 대비 구성비(%), 그리고 이민자의 연령별-성별 분포를 살펴본다.¹⁸⁾ 국제이동자 저장 통계와 관련하여 UN은 현재까지 1990년부터 5년 단위로 국제이동 저장(7월 1일 기준)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¹⁹⁾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는 1990년 1억 5,299만 명, 2000년 1억 7,323만 명, 2010년 2억 2,098만 명, 2020년 2억 8,060만 명으로 추정된다. 1990년에서 2020년까지의 30년에 걸쳐 이민자 규모(저량)는 평균적으로 매년 2.02%씩 증가하였다($\ln(2\text{억 } 8,060\text{만 명}/1\text{억 } 5,299\text{만 명})/30 \times 100 = 2.02\%$). 전반적으로 세계 인구보다 이민자의 규모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관계로 전 세계 인구 대비 이민자의 구성비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 세계 인구 대비 이민자의 구성비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90년 2.87%, 2000년 2.82%, 2010년 3.18%, 2020년 3.6%로 높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18) 국제이동 저장 통계에 관한 아래의 논의에서 별도의 인용 표시가 없는 자료는 UN(2020a)의 국제이동자 저장 통계에 기초하고 있다. 참고로 OECD(2022, pp. 339-340, p. p. 360-361) 또한 국제이동자 저장 통계를 제공한다. OECD의 국제이동자 저장 통계는 출생국 기준과 국적 기준을 구분하여 제공한다. 예컨대,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국적 기준 이민자의 규모와 전체 인구(UN의 연안인구 추정치 사용) 대비 구성비 정보가 제공되지만, 출생국 기준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19) 이민자(저량)에 대한 UN의 정의에서는 출생국 정보가 존재하면 이를 우선해서 사용하며, 출생국 정보가 부재하면 국적 정보를 사용한다. 국적에 기초하여 이민자를 정의하면 이민자(저량) 규모 추정에서 상대적으로 한계가 크다. 예컨대, 속인주의(jus sanguinis)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현지에서 태어나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없더라도 이민자로 분류될 수 있다. 반대로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민 후 시민권을 받은 개인(귀화인)은 이민자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적에 기초하여 이민자를 정의하면 이민자의 연령 분포 추정에서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출생국에 기초하여 이민자를 정의할 때 해당 정보가 부재한 국가(지역)(46)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UN은 국적 정보를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한편 난민 신청자의 거주 이전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지역)에서는 센서스 등의 인구통계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UN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정 작업을 진행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UN의 International Migrant Stock 홈페이지(<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content/international-migrant-stock>)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기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의 이민자는 총 1억 5,153만 명으로 세계 전체 이민자의 54%를 차지한다. 이는 1990년의 6,555만 명(세계 전체 이민자의 42.85%)에 비해 규모(명)에서는 2.31배, 구성비에서는 11.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OECD 국가에서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30년에 걸친 이민자 증가율은 연평균 2.79%로 전 세계 수준(2.02%)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에서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 추정치)는 큰 변이를 보인다. 2020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 인구의 47~48%가 이민자이지만, 멕시코의 이민자 구성비는 1% 미만이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전체 인구가 1백만 명 미만인 상황에서 이민자의 구성비가 높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대략 절반인 호주도 이민자의 구성비가 30%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 스위스, 뉴질랜드, 이스라엘, 캐나다도 2020년 기준으로 이민자의 구성비가 20% 이상이며, 스웨덴을 포함한 19개국의 이민자 구성비가 10% 이상 20% 미만이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민자 구성비는 3% 수준이며, 일본은 2% 수준에 그친다(국적 취득자(귀화인) 미포함).²⁰⁾ OECD 38개 회원국 전체(평균) 기준으로 이민자의 구성비는 13.94%인데, 이는 1990년에 비해 대략 5%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1990년 대비 2020년의 이민자 구성비가 증가했지만, 일부 예외적인 사례도 관측된다. 이스라엘,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코스타리카, 폴란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20) 대한민국, 일본, 체코의 자료는 국적에 기초하여 이민자가 정의되고 있기에 실제 이민자의 규모를 과소 추정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이들 국가의 경우 외국인의 시민권 획득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2020년 기준으로 외국인 인구 대비 시민권 획득자의 비율에서 OECD 평균(31개국 기준)이 2.2%이지만, 대한민국, 일본, 체코의 경우 외국인의 국적 취득률은 모두 평균 미만이다(OECD, 2022, p. 39).

36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표 2-2〉 OECD 국가의 이민자 규모 및 전체 인구 대비 구성비

(단위: 천 명, %)

국가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그리스	618	6.04	1,112	10.03	1,321	12.13	1,340	12.86
네덜란드	1,182	7.90	1,556	9.77	1,833	10.98	2,358	13.76
노르웨이	193	4.53	292	6.50	525	10.74	852	15.72
뉴질랜드	518	15.24	679	17.59	947	21.68	1,382	28.65
대한민국	43	0.10	244	0.52	920	1.86	1,728	3.37
덴마크	235	4.57	371	6.95	501	9.02	718	12.39
독일	5,936	7.51	8,993	11.05	9,812	12.14	15,762	18.81
라트비아	646	24.25	430	18.04	314	14.81	239	12.69
룩셈부르크	114	29.81	140	32.04	163	32.12	298	47.62
리투아니아	349	9.45	214	6.12	161	5.15	145	5.33
멕시코	696	0.83	538	0.54	970	0.85	1,198	0.93
미국	23,251	9.22	34,814	12.36	44,184	14.30	50,633	15.30
벨기에	1,281	12.80	1,268	12.34	1,504	13.75	2,005	17.30
스웨덴	789	9.21	1,004	11.30	1,337	14.24	2,004	19.84
스위스	1,392	20.93	1,571	21.99	2,075	26.58	2,491	28.79
스페인	822	2.10	1,657	4.06	6,280	13.38	6,842	14.63
슬로바키아	41	0.78	116	2.16	146	2.71	197	3.61
슬로베니아	178	8.88	215	10.79	254	12.42	278	13.37
아이슬란드	10	3.76	16	5.67	35	10.95	65	19.17
아일랜드	228	6.49	351	9.27	731	16.04	871	17.64
에스토니아	382	24.40	250	17.83	218	16.36	199	15.02
영국	3,650	6.39	4,730	8.03	7,120	11.22	9,360	13.79
오스트리아	793	10.27	997	12.35	1,275	15.16	1,738	19.30
이스라엘	1,633	36.70	1,851	31.14	1,956	26.63	1,954	22.57
이탈리아	1,428	2.50	2,122	3.74	5,788	9.76	6,387	10.56
일본	1,075	0.86	1,686	1.32	2,134	1.66	2,771	2.19
체코	110	1.07	221	2.15	398	3.78	541	5.05
칠레	108	0.81	177	1.16	375	2.20	1,645	8.61
캐나다	4,333	15.73	5,512	18.02	6,761	19.80	8,049	21.33
코스타리카	418	13.39	311	7.85	406	8.86	521	10.22
콜롬비아	104	0.32	110	0.28	130	0.29	1,905	3.74
튀르키예	1,164	2.16	1,281	2.03	1,374	1.90	6,053	7.18
포르투갈	436	4.40	651	6.33	763	7.20	1,002	9.83
폴란드	1,128	2.97	825	2.14	642	1.68	817	2.16
프랑스	5,897	10.41	6,279	10.64	7,310	11.63	8,525	13.06
핀란드	63	1.27	136	2.63	228	4.26	386	6.97
헝가리	348	3.35	297	2.91	437	4.40	585	6.05
호주	3,955	23.32	4,386	23.10	5,883	26.55	7,686	30.14
OECD 38	1,725	9.07	2,300	9.54	3,084	11.29	3,988	13.94

주: 이민자 추정에서 일본과 체코는 국적, 대한민국은 국적-난민, 이스라엘과 튀르키예는 출생국-난민, 나머지는 출생국 자료가 사용됨; OECD 38 수치는 OECD 회원국의 산술 평균임.

자료: United Nations (UN). (2020a). 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20[data file]. Retrieved from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content/international-migrant-stock>. 2023. 1. 2.

이민자의 규모와 전체 인구 대비 구성비에 이어 아래에서는 이민자(저량)의 연령 및 성별 분포를 살펴본다. UN(2020a)의 국제이동자(저량) 통계(International Migrant Stock)를 통해 이민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20년(7월 1일 기준) 기준으로 이민자의 중위연령은 39.1세이다. 참고로 동일 시점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은 29.7세이다(United Nations, 2022a). 이렇게 세계 인구에 비해 이민자의 중위연령이 높은 것은 근로 연령대에 이민이 집중됨으로써 이민자 집단에서 청소년인구의 구성비가 낮은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방법론적으로 UN(2020a)의 국제이동자(저량) 통계는 출생지 정보가 존재하면 이를 기준으로 이민자를 정의하는데, 결과적으로 출생지 정보가 존재하는 국가(지역)의 경우에는 이민 수용국에서 출생한 이민자의 자녀(이민 2세대)를 원주민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이민자 정의 방식은 국적에 기초한 이민자(외국인) 통계 작성 방식과 비교할 때 이민자의 중위연령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United Nations, 2020b, p. 28).

대륙별로 이민자의 중위연령(2020년 기준)을 보면 아프리카 31.0세, 아시아 35.5세, 유럽 43.4세, 중남미 31.2세, 북미 44.3세, 오세아니아 41.9세로 아프리카에 상주하는 이민자의 중위연령이 가장 낮고 북미 이민자의 중위연령이 가장 높다. 참고로 대륙별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은 아프리카 18.6세, 아시아 30.8세, 유럽 41.5세, 중남미 29.9세, 북미 37.7세, 오세아니아 31.9세이다(United Nations, 2022a). 전체 인구와 이민자 집단의 중위연령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아프리카이며, 중남미 지역에서 그 격차가 가장 작다.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민자 중위연령의 추이를 보면 1990년 36.5세에서 2000년 38.2세, 2010년 38.3세, 2020년 39.1세로 상승세를 보여 준다. 세계 인구와 마찬가지로 이민자 또한 고령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이민자의 연령 분포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구성비는 77.65%를 차지한다. 참고로 전 세계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는 64.89%이다(United Nations, 2022b).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민자 집단의 중위연령이 세계 인구에 비해 높지만, 이민자의 연령 구조는 상대적으로 생산연령인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관측된다. 이민자의 연령 분포에서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 추이를 보면 1990년 75.29%, 2000년 76.88%, 2010년 78.67%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5년 78.51%, 2020년 77.65%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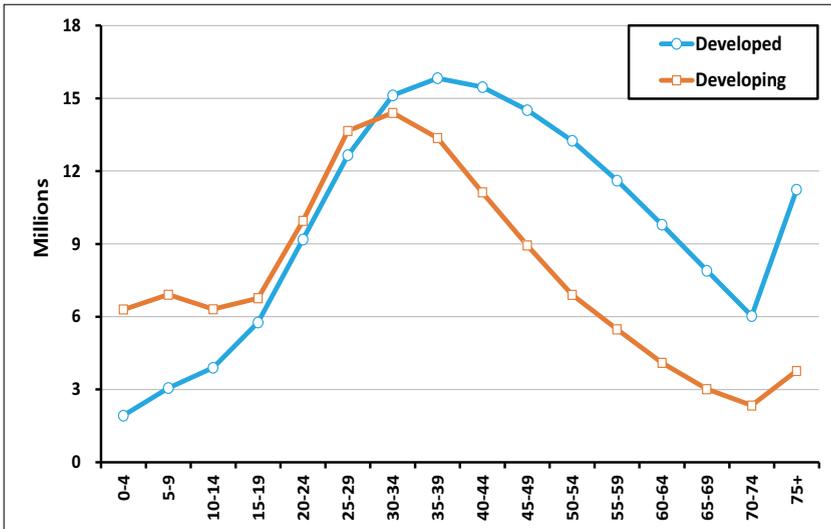
한편 이민자의 연령 분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는 1990년 이후 12% 전후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1990년 12.08% → 2020년 12.22%). 15세 미만 유소년인구의 구성비는 1990년부터 감소 추세를 이어왔지만(1990년 12.63% → 2015년 9.56%), 2020년에는 10.12%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로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는 9.43%, 15세 미만 유소년인구의 구성비는 25.68%이다(United Nations, 2022b). 세계 인구의 연령 분포에 비해 이민자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높은 반면에 유소년인구의 구성비가 낮은 패턴을 보인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이민자의 56.04%, 생산연령대(15~64세) 이민자의 56.54%가 선진국에 거주한다.²¹⁾ 전체 및 생산연령대 이민자 중에서 선진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구성비는 1990년(전체 54.10%, 생산연령대 56.32%) 이후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5년(전체 60.95%, 생산연령대 62.82%)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2-3]은 2020년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이

21) 참고로 UN 인구통계에서 선진국은 유럽과 북미의 모든 국가(지역)에 뉴질랜드, 호주, 일본을 포함하는 통계적 목적의 범주이다.

민자의 연령 분포를 보여 준다. 20대 이하 연령 구간에서는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많지만, 30대 이상에서는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특히 14세 이하와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연령 분포에서 큰 차이가 관측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민자 연령 분포: 2020년



자료: United Nations (UN). (2020a). 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20[data file]. Retrieved from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content/international-migrant-stock>. 2023. 1. 2.

이민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이민자의 성비(sex ratio)는 여성 100명당 남성 107.94명이다. 선진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성비가 93.84명임에 비해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성비는 129.19명으로 여성은 선진국, 남성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민자의 성비는 연령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그림 2-4] 참고). 6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여성에 비

해 남성 이민자가 더 많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의 연령대에서 남성 이민자가 여성 이민자보다 15% 이상 많다(여성 이민자 대비 남성 이민자 성비 ≥ 1.15). 반면에 고연령대에서는 여성 이민자의 구성비가 높아지는데, 75세 이상 연령대의 성비는 0.71까지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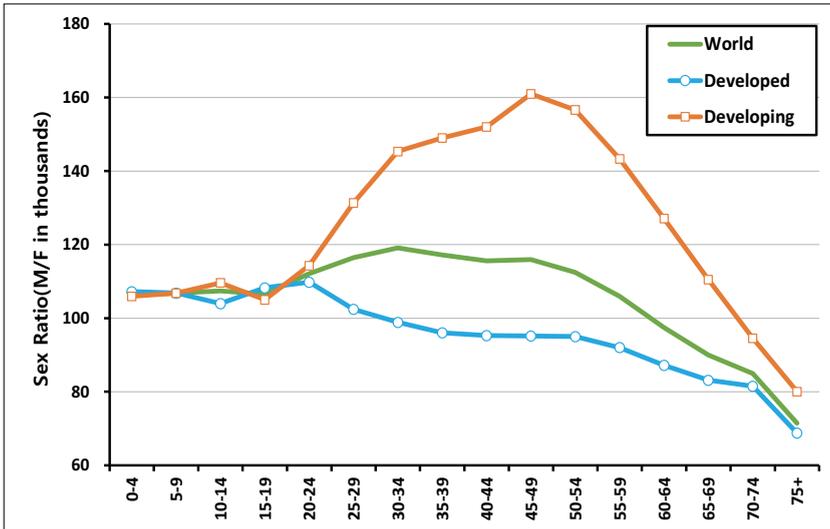
이민자의 연령별 성비 분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2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여성 이민자 대비 남성 이민자의 성비가 1.02~1.1로 남성 이민자 수가 여성을 넘어선다. 그러나 3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성비가 점차 감소하여 75세 이상 연령대의 성비는 0.69까지 떨어진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이민자 성비는 선진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 이민자가 여성보다 많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60대 전반 연령 구간의 성비는 매우 높은데, 40대 후반의 성비는 1.61에 이르는 모습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민자의 연령별 성비 분포는 핵심 근로 연령대를 중심으로 남성은 개발도상국, 여성은 선진국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 준다.

앞에서는 세계 전체,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이민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를 살펴보았지만, 국가별 변이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3>과 [그림 2-5]는 OECD 회원국(2020년 기준)의 이민자 성비와 중위연령, 그리고 연령 분포를 보여 준다. 2020년 기준으로 여성 이민자 100명당 남성 이민자 수로 측정된 이민자 성비는 라트비아의 68.13명에서 슬로베니아의 141.40명까지 큰 변이를 보인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민자(저량) 성비(124.49)는 슬로베니아와 체코 다음으로 높은 모습을 보인다.

이민자의 중위연령도 멕시코의 14.36세에서 라트비아의 64.06세까지 큰 변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이민자 중위연령은 31.53세로 상대적으로

이민자의 연령 구조가 젊은 국가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통적인 대규모 이민 수용국의 이민자 연령 분포와 비교해도 50대 이상 이민자의 구성비가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민자의 성비와 연령 구조는 노동력 수요(예컨대 고용허가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민자의 성비와 연령 분포는 이민자의 출산력에 기초한 추가적인 인구변동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시적 이민을 전제하는 고용허가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민자의 출산에 기초한 이민의 간접적 파급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개연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2-4] 이민자의 연령별 성비 분포: 2020년



자료: United Nations (UN). (2020a). 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20[data file]. Retrieved from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content/international-migrant-stock>. 2023. 1. 2.

42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표 2-3〉 OECD 국가 이민자의 성비 및 중위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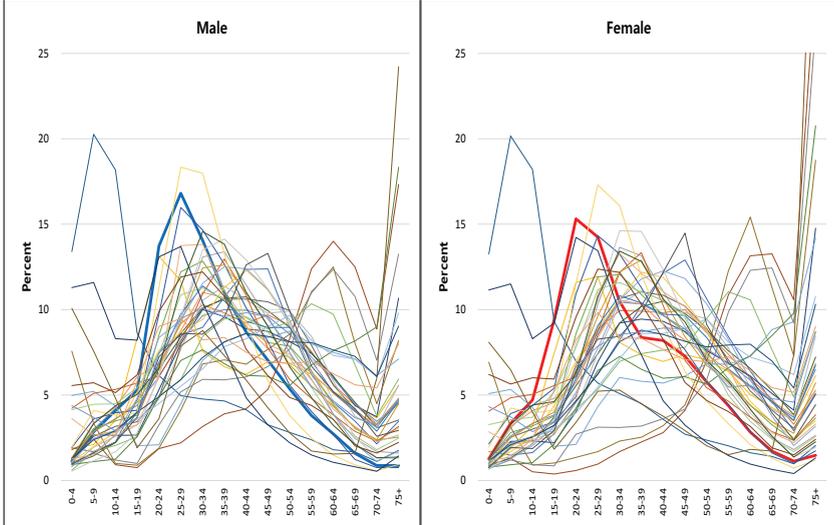
(단위: %)

국가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성비	중위연령	성비	중위연령	성비	중위연령	성비	중위연령
그리스	114.56	30.66	101.44	32.34	94.17	37.09	92.09	43.55
네덜란드	100.41	35.10	96.75	37.02	92.64	40.87	92.69	42.27
노르웨이	107.03	33.43	98.11	34.89	103.83	35.46	106.34	37.62
뉴질랜드	99.38	41.86	94.57	41.03	93.99	40.17	93.64	37.08
대한민국	128.84	31.26	141.78	30.30	127.45	32.85	124.49	31.53
덴마크	94.73	32.91	94.20	34.45	93.54	36.74	97.63	37.47
독일	124.60	36.24	100.33	39.77	97.69	43.23	100.26	45.70
라트비아	81.87	51.49	70.34	54.58	65.93	59.55	68.13	64.06
룩셈부르크	97.11	37.47	98.33	38.08	99.63	39.58	103.58	42.29
리투아니아	89.12	44.37	88.38	49.89	76.35	55.23	101.54	57.13
멕시코	100.30	19.05	101.40	14.46	102.47	12.10	100.90	14.36
미국	95.75	37.02	98.90	37.41	96.46	40.31	93.60	43.60
벨기에	104.55	35.50	100.66	41.25	93.56	41.48	96.35	41.89
스웨덴	94.43	39.24	91.72	41.93	94.02	41.66	101.22	39.87
스위스	101.44	38.89	115.50	33.07	93.98	42.86	96.31	43.81
스페인	90.56	28.94	102.30	33.35	106.46	34.77	91.69	40.76
슬로바키아	78.70	46.47	78.70	50.74	84.32	53.59	104.08	49.22
슬로베니아	101.07	45.67	115.08	45.67	133.59	47.74	141.40	49.17
아이슬란드	79.61	27.36	82.98	33.69	100.84	30.71	120.22	33.44
아일랜드	96.74	28.54	97.39	32.84	97.39	32.82	99.60	36.53
에스토니아	81.64	44.46	67.83	54.64	67.29	58.22	77.12	61.31
영국	92.75	39.74	89.09	40.08	94.25	36.67	91.20	38.91
오스트리아	86.67	40.46	92.30	40.46	90.94	41.35	95.35	41.50
이스라엘	89.42	48.69	85.58	51.13	83.97	54.69	83.08	56.23
이탈리아	81.75	30.69	85.30	34.60	85.27	35.73	86.70	41.31
일본	100.41	30.14	89.59	33.01	83.71	34.28	94.61	38.20
체코	108.33	52.18	117.39	52.84	145.48	35.40	137.27	39.20
칠레	103.01	30.59	91.47	29.51	90.28	34.32	101.86	31.89
캐나다	94.87	43.58	93.21	45.53	91.82	46.35	90.70	49.13
코스타리카	103.27	28.63	101.72	28.44	93.48	33.39	102.54	36.27
콜롬비아	103.79	17.59	105.31	21.40	110.45	24.01	100.22	23.79
튀르키예	98.46	25.68	92.64	41.19	84.67	41.94	106.68	31.99
포르투갈	92.94	24.57	96.73	31.22	94.95	36.80	91.94	43.54
폴란드	74.69	60.49	69.48	64.68	68.99	69.15	91.48	45.12
프랑스	103.50	42.86	97.08	46.25	94.65	47.65	94.01	47.77
핀란드	100.35	26.54	98.16	31.55	101.53	34.28	106.19	36.70
헝가리	81.63	42.76	87.07	49.27	92.85	41.53	107.66	40.65
호주	103.67	42.66	99.71	45.76	98.69	44.85	98.41	42.77
OECD 38	96.89	36.68	95.49	39.43	95.31	40.77	99.55	41.52

주: 이민자 추정에서 일본과 체코는 국적, 대한민국은 국적/난민, 이스라엘과 튀르키예는 출생국/난민, 나머지는 출생국 자료가 사용됨; OECD 38 수치는 OECD 회원국의 산술 평균임; 성비는 여성 이민자 100명당 남성 이민자 수로 측정됨.

자료: United Nations (UN). (2020a). 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20[data file]. Retrieved from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content/international-migrant-stock>. 2023. 1. 2.

[그림 2-5] OECD 국가 이민자의 성별 연령 분포: 2020년



주: 그래프의 가독성 및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Y-축 범위(0~25%)를 제한한 관계로 라트비아(29.61%), 에스토니아(26.60%), 폴란드(39.99%)의 여성 75세 이상 구간 값이 절단됨(굵은 파란색(좌)과 빨간색(우)은 대한민국).

자료: United Nations (UN). (2020a). 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20[data file]. Retrieved from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content/international-migrant-stock>. 2023. 1. 2.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민이 주요 논의의 대상임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에서는 마지막으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 현상과 국제이동이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지를 간략히 살펴본다. [그림 2-6]은 OECD 38개 회원국의 2000년과 2020년의 자연증가율과 순이동률의 관계를 보여 준다.²²⁾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속한 OECD 국가의 자연증가율과 순이동률의 전반적인 패턴을 보면 자연증가율이 높은 국가에서 순이동률 또한 높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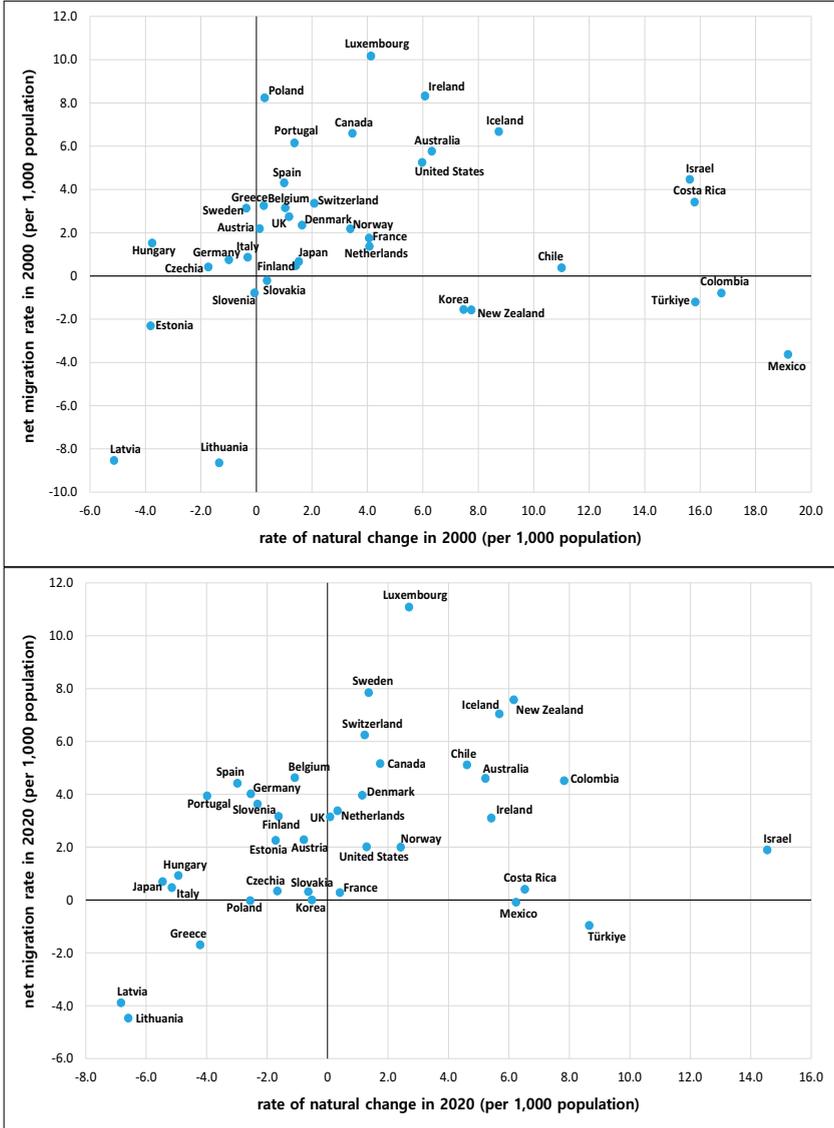
22) 참고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국제순이동률이 감소하였지만, 자연증가율과 순이동률의 전반적인 패턴은 2019년과 유사하다.

이 관측된다. 다른 한편으로 2000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순이동률은 양(+)이지만, 자연증가율이 양(+)에서 음(-)으로 전환된 국가들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일어나도, 즉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더라도 순유입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이민이 총인구의 감소를 막거나 감소 폭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UN(2022a)의 2020년 추정치에 의하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인구가 감소한 국가는 11개국이지만, 자연 감소가 이루어진 국가는 18개국에 달한다. 독일, 벨기에, 스페인,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의 7개국은 순유입이 자연 감소를 초과함으로써 총인구가 증가한 사례에 해당한다. 예컨대, 독일의 인구는 2020년에 12만 3천 명 증가하였는데(2021년 1월 1일 인구 - 2020년 1월 1일 인구), 이는 자연 감소(출생 - 사망 = 76만 명 - 97만 2천 명 = -21만 1천 명; 2020년 1월~12월 기준)를 넘어서는 순유입(33만 4천 명; 2020년 1월~12월 기준)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나머지 11개 국가 중에서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포르투갈, 헝가리는 인구가 감소했지만, 양(+)의 국제순이동으로 인구의 감소 폭이 줄어든 사례에 해당한다. 반대로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자연 감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순유출(-)이 발생함으로써 인구의 감소 폭이 확대된 국가들이다.²³⁾

23) 우리나라도 자연 감소와 함께 전체 인구가 감소한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UN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2020년 순이동 추정치는 0이다. 이는 우리나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공식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통계청의 국제이동 집계 기준은 90일 초과 체류 여부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2020년의 우리나라 국제순이동은 112,813명(입국 673,215명, 출국 560,402명)이다(통계청, 2023b). 한편 통계청은 체류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상주지를 옮긴 내외국인을 집계한 장기국제이동 통계도 추가로 제공하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2020년의 국제순이동은 132,982명(입국 459,254명, 출국 326,272명)이다(통계청, 2023c). 다만 UN과 우리나라 통계청의 통계 모두 총인구가 2020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2021년부터 감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통계청, 2023a, United Nations, 2022a).

[그림 2-6] OECD 국가의 자연증가율과 순이동률: 2000년(상), 2020년(하)



자료: United Nations (UN). (2022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Most used)[data file]. Retrieved from <https://population.un.org/wpp/Download/Standard/MostUsed/>. 2023. 1. 8.

제2절 이민의 인구학적 쟁점

이민의 인구학적 쟁점과 관련하여 이 절에서는 인구변동에서 국제이동의 중요성이 커지는 최근의 상황이 인구변동에 대한 이해와 미래 전망에서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인구의 규모와 구조 변화, 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행동 등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본다.

1. 이민과 인구변동

이민의 인구학적 쟁점을 살펴보기 전에 이 소절에서는 인구변동에서 이민이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본다. Coleman(2008, p. 453)은 인구변동에서 이민의 역할이 커지는 새로운 인구학적 환경의 도래가 유럽의 인구학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힘들게 하는 동시에 인구변동의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됨을 지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민의 역할 증가가 인구변동에 대한 이해와 미래 전망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인구변동 요인 중에서 이동력 자료의 질이 출산력이나 사망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둘째, 출산이나 사망에 비해 인구이동에 대한 이론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셋째, 인구변동 요인 중에서 인구이동은 출산이나 사망에 비해 변동성이 매우 크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래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비록 Coleman의 논의가 유럽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인구변동에 대한 이해와 전망 측면에서 이민이 갖는 함의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이동 통계 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질의 문제이다. 출산력과 사망력 분야의 인구통계 생산과 관리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UN의 인구통계 외에도 HFD(Human Fertility Database)나 HMD(Human Mortality Database) 같은 국제적 인구통계 데이터베이스는 인구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출산력과 사망력 분야의 자료원이다.²⁴⁾ 비록 2000년대 이후의 최근 자료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력과 사망력 자료 또한 최근에 이들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UN을 중심으로 인구가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예컨대, UN 인구통계국의 International Migrant Stock 데이터베이스), 출산력과 사망력 데이터에 비교할 때 그 한계는 여전하다.

물론 출산력과 사망력에 비해 국제이동 통계 자료(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어려운 것은 인구변동 요인으로서 이동력이 갖는 고유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 한 개인에게 출생과 사망은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다. 반면에 인구가동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방향성 또한 고정되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출생이나 사망과 비교할 때 인구가동은 활동성이 강한 연령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에 통계 구축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측하기도 쉽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사전에 정의된 조건에 기초하여 인구가동을 정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출생이나 사망 통계와 비교할 때 인구가동 통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복잡한 인구가동 현상의 일부분만을 포착할 개연성이 높다.

서론에서 살펴본 인구가동의 정의를 둘러싼 문제에서 추론해 볼 수 있듯이 최근까지도 인구가동 분야, 특히 국제이동 분야의 자료 구축과 국가

24) HFD와 HMD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https://www.humanfertility.org/>; <https://www.mortality.org/>.)를 참고할 수 있다.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국제이동 유량(flow) 통계의 경우 유입(inflow)과 유출(outflow) 규모를 직접 측정하는 대신에 행정통계(체류-취업 허가 통계, 사회조사 포함)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연도별 규모를 비교(추정)하거나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을 활용해 연도별로 인구의 전체 변화량과 자연 변화량(natural change; 출생-사망)을 비교하여 간접적으로 국제이동 규모를 산출하기도 한다. 특히 국제이동 ‘유출’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는데, 이는 국제이동 후 상주 국가로 귀환할 예정인 이민자가 국제이동(유출)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누리던 권리를 상실할 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Coleman, 2008, p. 453; OECD, 2022, p. 293).

우리나라 통계청의 국제이동 통계는 상주하는 국가를 떠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국적(내국인-외국인)별 유량 통계를 2000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체류 기간 90일을 기준으로 국제이동을 정의하지만, 체류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상주지를 옮긴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국제이동 통계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 한편 우리나라 통계청의 국제이동(유량) 통계는 국적(귀화인은 내국인으로 분류)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제공할 뿐 출생국(country of birth)을 구분한 통계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²⁵⁾

국제이동 저장(stock) 통계 또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한편 정확성 측

25) 다만, 통계청은 2020년부터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기초로 내외국인 인구를 전망하고 있다. 2022년의 내외국인 인구 전망(통계청, 2022)은 2021년의 장래인구추계에 기초하여 내외국인 인구와 이민자 배경 인구(내국인(귀화), 내국인(이민자 2세대), 외국인의 합)의 전망치(2020~2040년)를 제공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통계청의 사례처럼 일반적으로 내외국인을 구분한 인구 전망에서는 이민자 배경 인구를 이민자 1세와 그 자녀인 2세대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민자 2세대 후에는 원주민과 이민자 배경 인구를 동일 집단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 배경 인구와 원주민 간 구분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과정이 아닐 수 있다(예컨대, 종교).

면에서 그 한계가 크다. 최근까지도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국가별 이민자 통계에서는 거주 외국인의 규모만을 보고할 뿐 외국 출생 이민자의 규모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특히 개발도상국). 만일 귀화인의 규모가 커지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와 출생지에 기초한 이민자 통계 간 간극은 커지게 된다(Coleman, 2008, p. 453; OECD, 2022, p. 338). 정책적으로 혹은 학술적으로 출생지에 기초하여 이민자를 정의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 또한 이론적 정의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음은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국제이동 통계에서는 현재까지 이민자 ‘저량’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둘째, 출산이나 사망에 비해 인구이동에 대한 이론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인구학 분야의 대표적인 거대 이론인 인구변천이론(theory of demographic transition)은 근대화(산업화) 과정과 맞물려 과거의 고출생률-고사망률에서 최종적으로 저출생률-저사망률 단계로의 이행을 전망한다. 비록 인구이동 법칙이나 이론에 관한 고전적 연구(Ravenstein, 1885, 1889; Lee, 1966)가 있지만, 인구이동에 관한 논의가 인구변천 과정(이론)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개되지는 않는다. 예외적으로,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Zelinsky(1971, pp. 221-222)는 시간과 공간에 걸친 인간의 인구이동에는 유형화된 규칙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규칙성이 근대화 과정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근대화 과정의 일부로서 출산력 및 사망력 변천과 맞물려 이동력 변천(mobility transition) 또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²⁶⁾

정의나 측정상의 문제는 물론 국제이동에서 관측되는 이질성이 매우

26) Zelinsky의 이동력 변천(mobility transition hypothesis)에 관한 최근의 재해석 시도에 대해서는 Skeldon(2019)을 참고할 수 있다. King and Skeldon(2010, pp. 1629-1631) 또한 인구의 국제이동과 국내이동을 연계하는 측면에서 Zelinsky의 이론에 주목한다.

크다는 점도 체계적인 이론 구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제 이동은 수많은 국가에 기원을 두는 한편 국제이동의 목적(이유) 또한 매우 다양하다. 더욱이 이민의 발원지와 이민의 목적(이유) 간에 일정한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국제이동을 설명하는 어떤 체계적인 종합 이론이나 모형의 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Coleman, 2008, p. 465).

국제이동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Massey와 그의 동료들(Massey, Arango, Hugo, Kouaouci, Pellegrino, and Taylor, 1993)은 인구이동 이론을 인구이동의 시작 (initiation)을 기술하는 이론과 시공을 가로질러 인구이동의 지속 (perpetuation)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구분한다.²⁷⁾ 이들의 논의는 국제 이동에 대한 이론들이 다양한 분석 수준의 명제와 가정에 기초하기에 각 이론의 타당성은 실제 사례의 분석에 기초하여 경험적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지적한다.²⁸⁾ 그러나 이들의 검토 또한 기본적으로 자발적 성격이 강한 경제적 동기에 기초한 국제이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인류학, 역사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는 인구이동 이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²⁹⁾ 예컨대, 정치 혹은 기후 위기로 인해

27) 전자에 해당하는 이론으로 신고전 미시-거시 경제학(neoclassical micro/macro economics), 신이민 경제학(new economics of migration),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 세계체제론(world systems theory)이 있으며, 후자에 속하는 이론으로 연결망이론(network theory), 제도화이론(institutional theory), 누적원인론(cumulative causation) 등이 있다.

28) Massey와 동료들은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의 경험적 연구(Massey, Arango, Hugo, Kouaouci, Pellegrino, and Taylor, 1994)에서 각 이론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는 경험적 지지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론이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음으로써 다양한 국제이동 이론이 경쟁 관계보다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29) 이에 따라 국제이동에 관한 다양한 학문 분야별 이론의 주요 내용, 분석 단위와 수준, 자료와 방법론, 분야별 연구의 연계 등에 대한 후속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Brettell and Hollifield(2000)를 참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인구이동이 대표적이다.³⁰⁾

셋째, 인구변동 요인 중에서 인구이동은 출산이나 사망에 비해 변동성이 매우 크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래 인구변동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한다. 출산이나 사망에 비해 국제이동의 변동성이 큰 것은 인구이동 요인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사망률 감소의 ‘속도’를 둘러싼 상이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 성원들이 생존 기간(수명)의 연장을 희망하기에 최소한 사망률 변동의 ‘방향성’ 전망(사망률 감소)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인구변동 요인 중 출산력은 사망률과 비교할 때 본격적으로 개인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방향성 예측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출산에서 저출산 구조로의 이행 측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공통점을 보여 준다. 반면에 출산력과 비교할 때 이민은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인 관계로 미래 전망에는 더욱 큰 불확실성이 수반된다. 더욱이 국제이동과 관련한 경제적 및 정치적 상황은 이민 수용국(receiving countries)뿐만 아니라 이민 송출국(sending countries)의 조건과도 관련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제 혹은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진 인구추계에서 국제이동에 관한 전망(가정)을 최대한 단순화하거나 사망률 전망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예컨대, Lee-Carter Model)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구변동 요인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것은 위에서 논의한 이론의 설명력 부족과도 관련이 있다. 통상적으로 인구추계에서 인구이동에 대한 전

30) 일반적으로 이민의 범주를 경제적 이민과 비경제적 이민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Martin and Widgren, 2002, pp. 6-8). 또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경제적 이민(economic migration)을 자발적 이민(voluntary migration)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정치 혹은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이민을 강제 혹은 비자발적 이민(forced/involuntary migration)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구이동에는 선택과 강요의 요소가 들어 있음이 지적된다(Keely, 2000, p. 50).

망은 순이동(net migration) 지표에 기초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인구추계와 비교할 때 인구이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 논의는 순이동 지표 대신에 유입(immigration)과 유출(emigration) 지표를 구분하여 해당 지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유입과 유출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특정 국가나 지역의 역사 혹은 문화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에 일반화하기도 쉽지 않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p. 156, pp. 160-161). 결과적으로 유입과 유출을 초래하는 복잡한 원인이 최종적으로 순이동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 차원의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인구변동에서 이민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인구변동에 대한 이해와 미래 전망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는 국제이동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민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변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인구변동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우선, 인구이동의 정의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통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일 국가 수준에서 구축되고 관리되는 통계로는 국제이동 흐름의 복잡성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별로 상이한 이민 역사가 있으며, 이러한 이민 역사의 맥락이 미래 인구이동에도 유의미한 함의를 가질 수 있기에 개별 국가의 특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이동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민의 통제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 또한 국가별로 다양함(Massey, 1999, pp. 315-317)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대규모 이민 수용국을 넘어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의 효과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2. 이민의 인구학적 영향

가. 이민과 인구의 규모 및 구조

인구 고령화는 기후 변화와 더불어 전 세계를 사로잡는 핵심 이슈 중의 하나이다.³¹⁾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인구 고령화 문제는 인구변천, 즉 고출생-고사망에서 저출생-저사망 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결과물에 해당한다. 최근까지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관련된 논의에서 핵심 쟁점은 이민이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물론 이민은 연령 구조 변화의 기초가 되는 연령별 인구의 증가 혹은 감소와도 연관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국가에서는 전체 인구 혹은 특정 연령대 인구의 증감에서 이민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의 절대적 증감과 연령 구조 변화에서 인구가동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한다.

인구학에서 인구의 연령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은 전통적으로 안정인구 모형과 인구추계 모형(코호트-요인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Garcia, Garcia, and Markides, 2019, p. 144). 첫째, 인구변동 요인에서의 변화가 인구의 연령 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데 안정인구 모형이 활용될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동일한 사망력 조건에서 상이한 출산율 수준에 기초한 안정인구의 연령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출산율 변화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표 2-4>에서 볼 수 있듯이 기대수명이 80년인 안정인구에서 총재생산율(Gross Reproduction Rate: GR

31) 인구 고령화의 해결책으로 이민이 논의되는 경향이 있지만, 기후 변화 또한 국제이동의 촉발 혹은 가속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R)이 2이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백분비는 7.5%이지만, 총 재생산율이 1로 낮아지면 65세 이상 인구의 백분비는 20.2%까지 상승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평균 연령도 27.9세에서 41.1세로 크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출산력과 비교할 때 사망력 변동이 인구의 연령 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사망력 변동이 인구의 연령 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사망률의 연령별 패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아 사망률의 감소는 사실상 출산율 증가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인구 고령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고령기 사망률 감소는 인구 고령화의 원인이 된다.

〈표 2-4〉 안정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와 평균 연령

지표	기대수명(e_0^e)	총재생산율(GRR)					
		0.80	1.00	1.50	2.00	3.00	4.00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20	.165	.134	.085	.058	.032	.020
	30	.178	.142	.087	.055	.031	.019
	40	.189	.149	.090	.059	.030	.018
	50	.198	.154	.091	.060	.030	.017
	60	.201	.156	.092	.059	.029	.017
	70	.212	.165	.096	.061	.030	.017
	80	.259	.202	.119	.075	.036	.021
평균 연령 (세)	20	44.5	41.5	35.7	31.6	26.2	22.7
	30	43.8	40.5	34.2	29.9	24.4	21.0
	40	43.5	39.9	33.2	28.8	23.3	20.0
	50	43.3	39.5	32.6	28.1	22.5	19.3
	60	43.1	39.1	32.0	27.5	21.9	18.7
	70	43.3	39.2	31.9	27.2	21.6	18.4
	80	45.6	41.1	33.0	27.9	21.9	18.6

주: 모형 생명표 서부(West) 유형의 여성 기준(평균 출산연령 29세)임.
 자료: Coale, A. J., Demeny, P., and Vaughan, B. (1983). *Regional Model Life Tables and Stable Populations* (Second Edition). New York: Academic Press. p. 31(Table XIII).

인구의 연령 구조 변화에 대한 인구변동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안정인구 모형의 효용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안정인구 모형은 인구이동이 없는 폐쇄인구(closed population)를 가정한다. 이에 따라 인구변동 요인 중 인구이동(이민)이 인구의 연령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안정인구 모형의 효용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안정인구(정지인구) 이론은 폐쇄인구를 넘어 인구이동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Alho, 2008; Arthur and Espenshade, 1988; Espenshade, Bouvier, and Arthur, 1982; McDonald and Hosseini-Chavoshi, 2022; Mitra, 1990; Parr, 2021; Schmertmann, 1992, 2012; Wu and Li, 2003). 이민에 기초한 정지인구 모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제3장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둘째, 인구추계 모형은 인구의 연령 구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규모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줄 수 있다. 또한 안정인구 모형이 초점을 맞추는 연령 구조 변화의 최종 결과에 관한 정보와 함께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는 중간(조정) 과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 국가의 인구추계에서 인구이동에 대한 가정은 현재의 인구이동 수준이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된다는 단순한 가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국제이동이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가정이 그대로 실현될 개연성은 매우 낮지만, 다른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인구추계에서 인구이동이 현 수준에서 고정된다는 가정은 현재의 인구이동 조건이 장기간 지속될 때 나타나는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한편 인구이동 전망에서 정확한 예측치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는 최근 들어 불확실성(uncertainty)을 계량화하는 확률적 모형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측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연령 구조가 원주민에 비해 젊기에 이민은 젊은 연령층(생산연령대)의 인구를 확대하며, (이민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은퇴 등으로 촉발된 고령자 이민은 이민 수용국에서 반대의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이민의 효과는 이민자 집단과 이민 수용국 인구의 평균 연령 차이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의 불가피성, 그리고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됨에 따라 이민의 인구 재생 효과(rejuvenating effect)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이민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인구 고령화와 감소에 대한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에 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한 이민의 파급 효과를 국제적 이슈로 부상 시킨 것은 UN(2000)의 ‘대체이동’(replacement migration)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UN(2000)의 대체이동 프로젝트는 그간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성적’ 차원에서 논의되던 이민의 파급 효과를 본격적으로 ‘계량적’ 차원에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 중요한 시도이다(Teitelbaum, 2004, p. 323). 그 명칭에서 추론해 볼 수 있듯이 국제이동 분야에서 사용되는 ‘대체이동’은 출산력 분야의 대체출산율(replacement-level fertility)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사망률이 고정된 폐쇄인구에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기준으로 여성 1명당 대략 2.1명에 해당하는 출산율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인구의 규모와 연령 구조가 일정한 정지인구(stationary population)가 출현함은 인구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³²⁾

32) 정지인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대체출산율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대체이동은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현상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국제이동의 규모를 지칭한다. UN(2000, p. 5)은 대체이동을 총인구의 감소,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그리고 전반적인 인구의 고령화를 상쇄하는 데 필요한 국제이동으로 정의한다. 대체이동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방법론과 관련하여 UN(2000, pp. 13-17)은 저출산 국가가 1995년 이후 국제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도달하는 최고 수준의 1) 총인구, 2) 생산연령인구(15~64세), 3) 인구의 연령 구조(잠재부양비; 65세 이상 인구 대비 15~64세 인구의 비)를 유지하기 위해 1995~2050년 기간에 걸쳐 매년 수용해야 하는 국제순이동자(net international migrants) 규모를 추정하였다.³³⁾ 이 프로젝트에서는 1995년을 기준 인구로 하여 UN의 세계인구전망 1998년 개정판의 중위 시나리오(medium variant)에서 사용된 인구변동 요인(출산율, 사망률)의 전망치 정보를 활용하였다.³⁴⁾³⁵⁾

33) UN은 총인구, 생산연령인구, 잠재부양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민자 규모를 연간 단위(year-to-year basis)로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출생 코호트 규모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연령 구조의 영향으로 인해 연도별 '필요' 이민자 규모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하기에 실제 이민정책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인구의 연령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민자 규모를 단계적 차원에서 조절하는 이민정책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Blanchet(1989, p. 36)가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 시뮬레이션에서 이민자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4) 대체이동 프로젝트에 포함된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영국, 미국 8개국이다. 또한 유럽과 EU 회원국을 단일 국가로 간주하여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였다. 참고로 UN(2000, p. 14)의 세계인구전망 1998년 개정판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목표 수준인 1.9까지 상승한 후 인구추계 기간 말까지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35) 일반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인구학적 대응의 효과는 잠재부양비(Potential Support Ratio: PSR)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측정된다(Coleman, 2008, p. 467). UN의 대체이동 프로젝트에서도 이 지표가 사용되었다. 통상적으로 잠재부양비(PSR)는 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15~64세 인구의 비로 측정된다. 이는 잘 알려진 노년부양비(Old-Age Support Ratio: OASR)의 역수에 해당한다. 잠재부양비(PSR)는 순수한 인구학적 지표이며, 실제 부양비는 비취업 인구 대비 취업 인구의 비 등의 방식으로 측정될

언론을 중심으로 저출산 국가가 직면한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혹은 정책적 요구 사항으로 개방적 이민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UN의 ‘대체이동’ 프로젝트를 이해했지만, 이는 대체이동 프로젝트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Coleman, 2002, p. 587; Teitelbaum, 2004, pp. 323-325).³⁶⁾ UN의 대체이동 프로젝트에서 이민이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사례(United Nations, 2000, pp. 55-6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이동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의 1995년 기준 잠재부양비(12.6)를 유지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50년까지 필요한 총 국제순이동 규모는 51억 4,893만 명으로 연평균으로는 9,362만 명에 해당한다. 1995년의 세계 인구가 57억 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United Nations, 2022a) 이러한 대체이동 프로젝트의 결과는 1995년 기준의 연령 구조(잠재부양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인구에 맞먹는 수준의 (순)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수치가 산출된 것은 잠재부양비로 표시된 1995년의 우리나라 연령 구조가 상당히 젊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12.6)를 제외한 나머지 7개국의 1995년 기준 잠재부양비는 4~5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United Nations, 2000, pp. 104-135).

물론 UN(2000)의 대체이동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시나리오 설정의 논리적 근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예컨대, Saczuk(2003, p. 9)는 UN의 대체이동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시나리오의 논리적 근거나 현실에서 실행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에

수 있다.

36) 참고로 대체이동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 대체이동에 관한 UN의 공식적인 보고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널리 인용되는 UN의 대체이동 프로젝트 보고서(United Nations, 2000)는 대체이동 논의가 언론을 통해 정치사회적 논란이 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UN이 작업하여 발간한 것이다.

서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Coleman(2000, p. 46) 또한 인구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잘 알려진 대규모 이민의 형식을 벗어나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Espenshade(2001, pp. 387-388)도 대체이동이 기본적으로 인구학적 주제이지만, 대체이동 시나리오의 목표치 설정에 관한 논거가 제시되지 못한다는 점과 함께 이민의 파급 효과와 관련하여 경제학 및 여타 사회과학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한다.³⁷⁾

비록 UN(2000)의 대체이동 프로젝트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민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민이 인구 고령화의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점은 인구학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Blanchet, 1989; Craveiro, De Oliveira, Gomes, Malheiros, Moreira, and Peixoto, 2019; Espenshade, 1986; Gesano, 1994; Lesthaeghe, Page, and Surkyn, 1988; Mitra, 1992; Schmertmann, 1992). 예컨대, Blanchet(1989, p. 36)는 단기적 안목에서 인구의 연령 구조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민을 사용하는 접근은 문제를 잠정적으로 연기할 뿐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단기적 시각에 기초하여 이민을 통해 인구의 연령 구조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수반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³⁸⁾ Craveiro et al.(2019, p. 1339)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회고적

37) Espenshade et al.(1982)의 연구가 실제 관측된 인구(1977년 미국)를 대상으로 대체이동의 규모를 산출한 반면에 UN(2000)의 대체이동은 실제 관측된 인구가 아니라 미래 인구 시나리오(1998년 세계인구전망 중위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대체이동의 규모를 산출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1995년 이후 국제이동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산출된 총인구, 생산연령인구, 잠재부양비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개연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38) Blanchet(1989, pp. 35-36)는 이민을 통해 인구의 연령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프랑스의 사례에 기초하여 그는 장기간 이민자 유입률을 일정한

(retrospective) 방식의 연령 대신에 출생 코호트를 아울러 잔여 생존 기간(예컨대, 15년)을 일정하게 맞추는 전향적(prospective) 방식으로 연령(prospective age)을 측정하더라도 이민을 통해 인구의 연령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도가 실현 불가능한 수준임을 보여 준다. 다른 한편으로 대체이동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들(Bijak, Kupiszewska, and Kupiszewski, 2008; Burcin, Drbohlav, and Kucera, 2005; Coleman, 2002; Habicsek and Tóth, 2002)은 대안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하거나 이민 외에 출산율 상승과 노동시장 변화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조합하는 접근을 시도하기도 한다.

본 연구가 이민의 '결과', 즉 이민으로 인한 인구의 절대적 규모와 연령 분포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이민의 유형(구성)이나 원인은 주된 분석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제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인구 이동 유형(구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간략한 수준이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전 세계적 차원의 경제적 및 인구학적 불균형은 지난 20세기 동안에 대규모 국제이동의 원인이 되었다. 즉 저출생률-저사망률 단계로 진입하여 인구변천을 마무리한 선진국과 사망률에 비해 출생률이 높아 급격한 인구 성장을 경험한 개발도상국의 소득 격차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국제이동을 촉발하는 강한 유인으로 작용하였다(Coleman, 2008, p. 456;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9, pp. 32-33).³⁹⁾

수준에서 고정하는 접근을 통해 어떤 주어진 출산력-사망력 조건에서 연령 구조(60세 이상 인구 대비 20~59세 인구)를 안정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정된 연령 구조에 도달하기까지 6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출산율이 낮을수록 안정된 연령 구조로 이행하는 기간 동안에 상당한 수준의 연령 구조 변화가 나타나므로 현실적인 정책 방안으로 수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39) 참고로 경제적 격차의 핵심은 선진국과 후발개발도상국 간 차이이다. 1975년에 선진국의 1인당 GDP는 개발도상국(전체)의 21배 수준이었으며, 20여 년 후인 1997년에 이르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전체) 간 격차는 소폭 상승하였다(21.2배). 그러나 선진국과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1945년부터 1970년대 초에 걸친 경제 호황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촉진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국제이동의 공통된 특징은 경제적 동기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이다(Castles and Miller, 2003, p. 76). 과거 유럽이 국제이동의 주요 발원지였던 것과 달리 이 시기는 이민자의 규모가 증가하는 한편 이민 발원지가 유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인구이동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적 현상으로 전환된 시기이다. 예컨대, 1930년 이전 기간에는 국제이동의 85%가 유럽 대륙에서 비롯되었지만, 1960년 이후 기간에는 국제이동의 85%가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했다(Massey, 2003, pp. 548-549).

1970년대 초까지 유럽 주변부로부터 서부 유럽으로 남성 중심의 한시적 이민 노동자(guest worker)의 이동과 함께 과거 식민지 지배에 기초하여 형성된 노동력(colonial worker)의 이동 또한 전후에 나타난 주요 국제이동 흐름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또한 초기에는 유럽, 나중에는 아시아와 남미 대륙에서 북미 지역과 호주로 영구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에 해당한다(Castles and Miller, 2003, pp. 68-69).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루어진 첫 번째 단계의 국제이동은 1970년대 초에 발생한 석유 위기로 인해 종료된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1980~1990년대에 크게 확대된 두 번째 단계의 국제이동은 첫 번째 단계와 달리 경제적 동기가 주류를 이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노동력 이동이 인구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노동력 이동이 취업 허가(work permit)를 통해 엄격히 관리된 반면에 200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국제이

후발개발도상국(least-developed countries) 간 격차는 같은 기간 동안 43.9배에서 78.7배로 대폭 확대되었다(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9;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p. 169 재인용).

동에서는 기존 이민자의 피부양자, 학생, 난민 신청자, 결혼이민자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향한 연쇄적 이동을 지속시키는 네트워크와 이민 지원 조직이 형성되어 추가적인 국제이동 흐름을 만들어 내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Coleman, 2008, p. 456). 인구학에서 Massey(1990, p. 4, p. 15)는 이러한 과정을 누적 원인론(theory of cumulative causation)으로 이론화하였다. Martin and Widgren(2002, pp. 6-8)도 인구이동의 원인으로 수요(demand-pull) 및 공급(supply-push) 요인과 함께 네트워크(network) 요인을 별도로 구분한다. 더욱이 최근 들어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이 개발도상국을 국제무역 체계 속으로 통합시키는 흐름을 가속화함으로써 국제이동의 잠재적 후보군(pool)을 양산하는 한편 자유 무역이 국가 간 소득과 고용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선진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절대적 및 상대적 규모를 증가시켰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p. 169).

이민의 발원지와 이민자의 특성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구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출산 상황에서 이질적 특성을 보유한 대규모의 이민자 유입은 장기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 배경 인구의 구성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체 인구가 이민자 배경 인구로 대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Coleman, 2008, p. 469). 이는 인구 고령화의 대응 방안으로 이민의 효과를 제약하는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물론 이민으로 인해 인구의 구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할 것인지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그럼에도 이민을 통해 저출산에 기인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이민 수용국의 인구 구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이해한 상황에서 그 추진 여부와 세부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나. 이민과 인구 행동: 이민자의 혼인, 출산, 사망 패턴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 분석의 어려움은 이민자 집단이 이민 송출국의 전체 인구에서 ‘선별된’ 집단이라는 점과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을 분석할 적절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직면하는 이러한 문제는 분석 결과의 해석에서도 추가적인 어려움을 제기한다. 예컨대, 혼인-출산 행동에서 관측되는 이민자와 원주민의 차이를 이민 송출국이 보유한 문화의 영향이나 이민 과정이 혼인-출산에 미친 영향(이민으로 인한 혼인-출산의 연기 혹은 가속화)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차이가 선별된 이민자 집단의 인구학적 혹은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다(Adsera and Ferrer, 2014, pp. 3-4).

이민자의 혼인-출산 과정에 대한 인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민 수용국에서 관측되는 인구학적 행동뿐만 아니라 이민 송출국에서 이루어지는 선별 과정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자료에 대한 접근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민자의 혼인-출산에 관한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분석 자료(표본)에 대한 접근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과 관련하여 이 소절에서는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이민자의 혼인-이혼, 출산, 사망(건강)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본다.

첫째, 이민자의 혼인 형성과 해체이다. 이민정책은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이민 수용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는 물론 가족 구성원의 이민 순서(예컨대, 동시적 이동, 순차적 이동)와 혼인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잠

재적 배우자 후보군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Adsera and Ferrer, 2014, p. 27). 이민자의 가족 형성을 범주화해 보면 1) 이민 송출국에서 결혼한 후 가족 단위로 동시적으로 혹은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유형(가족 이민), 2) 이민과 결혼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결혼 이민), 3) 단신으로 이민한 후 이민 수용국에서 혼인하는 유형(단신 이민)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민 수용국에서 원주민 혹은 (이민 수용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결혼하거나 결혼 이민의 형태를 통해 이민 송출국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민자의 혼인에 관한 연구는 1) 배우자의 특성에 대한 개인적 선호(특히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자원), 2)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의 영향력(집단 정체성, 사회적 제재), 3) 배우자의 탐색 관련 혼인 시장의 구조(후보군 집단의 규모 및 분포)를 주요 요인으로 지적한다(Kalmijn, 1998, pp. 398-404). 우선, 배우자 선택에 관한 개인의 선호 체계가 개인이 성장한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에 성인기 도달 전에 이민을 온 이민 1.5세대나 이민 수용국에서 출생한 이민 2세대의 경우 이민 1세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원주민과 혼인할 개연성이 높음이 지적된다. 출생국에서 형성한 종교성(religiosity)의 유지 여부, 동일 출생국 출신 이민자 공동체와의 접촉 가능성이나 빈도 또한 원주민과의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혼인 시장의 구조적 제약 요인과 관련해서는 이민자 집단의 규모가 작거나 집단 내부의 성비 불균형이 클수록 원주민과 혼인할 개연성이 높음이 지적된다(Adsera and Ferrer, 2014, pp. 13-14).

일반적인 가족 형성에 관한 연구에 비해 이민자의 가족 형성 ‘시점’에 관한 연구는 분석상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 예컨대, 방법론적 차원에서 이민 수용국 내의 혼인 시장에서 배우자를 찾기 어렵거나 이민자의 배우자 신분으로 비자 발급이 수월하면 이민과 혼인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

기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이민 송출국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경우 혼인 시점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개연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유럽의 이민자 집단들은 원주민에 비해 일찍 혼인할 개연성이 높음이 지적된다. 다만, 이민 2세대는 원주민에 비해 일찍 혼인하지만, 이민 1세대에 비해서는 늦게 혼인함이 보고된다(Adsera and Ferrer, 2014, p. 22). 비록 이민과 출산 연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혼인의 경우에도 이민이 미혼 이민자의 배우자 탐색 시간을 증가시켜 혼인 시점을 단기적으로 늦추는 교란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다(Carlson, 1985, pp. 62-67).

이민자의 가족 해체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이민자와 원주민 간 혼인의 해체에 초점을 맞춘다. 경험적 증거는 대체로 인종·민족 간 혼인과 마찬가지로 이민자와 원주민 간 혼인의 안정성이 원주민 간 혼인에 비해 낮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민자 간 혼인은 원주민 간 혼인에 비해 해체 위험이 낮음도 보고된다(Adsera and Ferrer, 2014, p. 26).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도 원주민 간 혼인에 비해 원주민과 이민자 간 혼인의 해체 위험이 높음을 보고하지만, 출신 국적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관측됨을 지적한다(유삼현, 유정균, 2019, p. 25).

둘째, 이민과 출산이다. 기존 논의에서 출산에 대한 이민의 영향(가설)은 대체로 1) 선별(selection), 2) 교란(disruption), 3) 적응 혹은 동화(adaptation or assimilation) 기제를 통해 설명된다(Adsera and Ferrer, 2014, pp. 29-35; Schmid and Kohls, 2009, pp. 41-42; Schmid and Kohls, 2010, pp. 180-182).⁴⁰⁾ 우선 선별 기제(가설)에

40) 국내에서 이루어진 김현식(2015, pp. 430-434; 2018, pp. 46-51)의 연구는 이민자의 출산력 이론에 동질혼 이론을 접목하여 결혼 이민 여성의 출산율을 한국 출생 기혼 여성의 출산율과 비교하는 접근을 취한다. 이 접근은 결혼 이민의 독특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김두섭(2008, pp. 4-5)은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적응 유형이 결혼 이민 여성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서 이민자는 이민 송출국의 비이민자(non-migrants)와 구분되며, 이러한 선별 과정이 후속해서 이민자의 독특한 출산 패턴을 설명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이민자는 이민 송출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이민 수용국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출산 선호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경력 지향적인 이민자의 경우에 그러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Milewski, 2007, p. 864; Schmid and Kohls, 2009, p. 41).

두 번째 기제는 이민 과정에서 경험하는 단기적인 교란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으로 교란 효과는 이민자가 이민 수용국에서 정착함에 따라 사라지는 ‘단기적’ 효과로 보고되는데, 이는 교란 기제의 효과가 완결 출산율 대신에 출산 속도의 조절이나 터울 조정에 그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한다(Carlson, 1985, pp. 67-70; Schmid and Kohls, 2009, p. 42). 기본적으로 임신 혹은 출산이 이동 비용을 높여 이민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개연성을 낮추기에 이민을 계획하는 개인은 이민 수용국에 정착하기까지 임신-출산을 연기한다는 것이 교란 효과의 작동 기제이다. 또한 이민 수용국(특히 숙주국의)에서 출산 시 기대되는 혜택이 클수록 이민이 임신-출산을 연기할 유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Adsera and Ferrer, 2014, p. 32). 이러한 교란 기제가 작용하면 국제이동은 이민 이전의 출산율을 낮추고 이민 이후의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Milewski, 2007, pp. 861-862; Toulemon, 2004, p. 2).⁴¹⁾⁴²⁾ 그러

데, 이 또한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41)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한 Toulemon(2004, pp. 2-3)에 의하면 13세 이전에 이주한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프랑스 출생 여성의 출산율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에 그치지만, 25세에서 30세에 프랑스에 도착한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은 프랑스 출생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은 모습을 보인다. 다만, 25세에서 30세에 프랑스에 도착한 이들의 연령별 출산율 패턴은 도착 전후로 상당히 불연속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민 연령에 따른 이러한 독특한 출산율 패턴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합계출산율(TFR)을 산출할 때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과다 추정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나 선별 기제와 마찬가지로 이민이 이루어지기 이전 기간의 정보 부족으로 교란 효과를 정확히 검정하기는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적응 기제는 이민자가 이민 수용국에 정착함에 따라 이민 송출국 대신에 이민 수용국의 출산 규범이나 기대를 따르는 것으로 본다(Schmid and Kohls, 2009, p. 42). 기본적으로 적응 기제는 출산에 대한 선호 체계가 이민자가 아동기를 보낸 국가에서 형성된다는 사회화(socialization) 기제와는 대비된다. 앞에서 논의한 교란 기제와 비교할 때 적응 혹은 사회화 기제는 출산에 대한 이민의 장기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Lübke, 2015, p. 4). 적응 기제는 전체 이민자 세대를 아울러 장기적으로 이민자의 출산 행동이 원주민에 수렴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지만, 사회화 기제는 이민자 1세대, 특히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민 송출국의 가치와 규범 체계를 내면화한 후에 이민 수용국으로 이동한 이민자의 출산 행동은 지속해서 원주민과 차이를 보일 것임을 시사한다(Schmid and Kohls, 2009, p. 41). 결국 사회화 가설에 따르면 적응 기제는 이민 2세대(혹은 1.5세대) 이후에만 작동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출산에 대한 이민의 효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가설이 제안되고 있지만, 이민자의 출산 행동에 관한 다양한 기제 중 가장 광범위한 관심을 받은 기제가 적응 기제이다. 이는 ‘적응’ 현상이 단순히 이민자의 출산 행동에 관한 함의를 넘어 이민자의 사회 통합에 관한 징표로 해석될 수 있는 동시에 단기적 효과를 넘어 이민 2세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장기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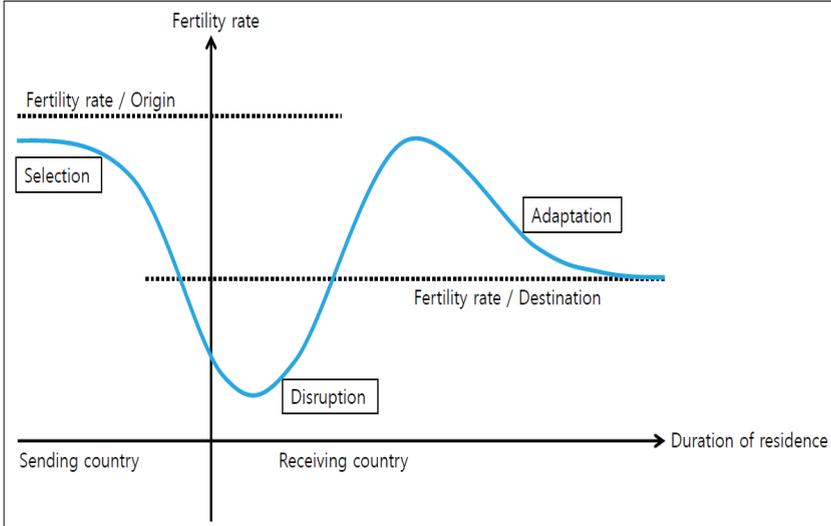
42) 참고로 교란 효과와 유사한 맥락을 공유하지만 구분하여 논의되는 기제(가설)가 결혼 이민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interrelation hypothesis)이다. 교란 기제와 유사하게 결혼 이민에서도 이민 후 가까운 미래에 임신-출산 과정이 뒤따를 것을 기대할 수 있다(단기 효과). 다만 이민이 출산 행동 변화의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관련 사건, 예컨대 이민과 가족 형성(결혼 이민)이 동시에 전개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Andersson, 2004, p. 771; Milewski, 2007, p. 862; Schmid and Kohls, 2009, p. 42).

(Adsera and Ferrer, 2014, p. 35). 특히 이러한 적응 과정의 다양한 경로와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민 수용국에서의 체류 기간(duration of residence)과 이민 시점의 연령(age at immig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응 기제는 문화적 측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적 적응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Andersson, 2004, pp. 771-772; Milewski, 2007, p. 862).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출산에 대한 이민의 영향은 명확히 정의된 어떤 하나의 패턴을 따르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선별, 교란, 적응 기제의 작용이 이민 송출국과 수용국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개연성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경험적 연구(Schmid and Kohls, 2010, pp. 199-200) 또한 출생 국가별로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고한다. 더 나아가 동일한 이민 송출국과 수용국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이동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 기제의 작동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의 [그림 2-7]에서 제시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선별, 교란, 적응 기제의 작동 패턴은 이민자 출산 행동의 복잡한 양상 중에서 하나의 가능한 유형을 도식화한 것에 불과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산에 대한 이민의 영향을 검토한 기존 연구가 선별, 교란, 적응 기제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제의 작용이 궁극적으로 완결 출산율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민 수용국에서 나타나는 이민자와 원주민의 출산 행동은 물론 이민 송출국에서 관측되는 이민자와 비이민자의 출산 행동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종단 자료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림 2-7] 이민자의 출산력 조정 기제(선별, 교란, 적응) 도식



자료: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앞에서는 이민과 출산의 이론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실제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출산력에서 국제이동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이 보고된다 (Coleman, 2008; Verdugo and Swanson, 2011). 예컨대, 뉴잉글랜드-웨일스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의 1.63에서 2006년 1.86까지 상승하였으며, 출생아도 594,634명에서 669,601명으로 증가하였다. 비록 이러한 출생아 증가의 일부분은 연기된 출산의 회복에 의한 것이지만, 증가분(74,967명)의 65%(49,051명)는 이민자 여성의 출생 증가에 기인함이 지적된다. 또한 뉴잉글랜드-웨일스의 전체 출생 중 이민자 여성의 출생이 차지하는 구성비도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대략 12%를 유지하였지만,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6년에는 24%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과거 신영연방(New Commonwealth) 지역 출신 이민자 여성이 출산한 출생아의 구성비가 높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 외 지역 출

신 이민자 여성이 출산한 출생아의 구성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Coleman, 2008, p. 463).

한편 이민 과정의 선별성, 특히 이민자 인구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 구조를 고려할 때 이민자 인구의 (조)출생률(birth rate)이 내국인의 조출생률에 비해서 높을 것임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국제이동 중에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향한 국제이동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최소한 이민 초기에는 이민자의 출산율이 원주민의 출산율을 넘어설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여성)의 구성비가 높지 않는 한 이민자의 출산이 전체 출산율(fertility rate)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개연성이 높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적응 가설처럼 이민 수용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민자의 출산 패턴이 원주민에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수렴하게 될 경우에도 이민 수용국에서 이민자 출산이 전체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유럽(서부, 북부, 남부)에서 출산에 대한 이민의 영향을 분석한 Sobotka(2008, p. 225)의 분석 결과는 이민 송출국별 변이가 상당히 크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출산율은 원주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 준다. 특히 이민은 이민 수용국의 출생아 수 증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 출생아의 1/5을 넘어선다. 그러나 이민자의 출산 행위는 체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원주민 수준으로 급격히 적응하는 양상을 보이며, 출생아 수와 비교할 때 합계출산율에 대한 이민자 출산의 기여는 절대치 기준으로 0.05~0.1 정도에 그침으로써 그 순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출산을 통한 이민의 간접적인 파급 효과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이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이다. 이민자의 연령

구성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연령대에 집중되더라도 출산에 대한 이민의 파급 효과는 이민의 유형 혹은 이민자의 속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컨대, 최근 들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이민이 과거 독일의 사례처럼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이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출산을 통한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이민 송출국으로 귀환이 예정된 불안정한 지위의 한시적 이민자가 출산을 계획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셋째, 이민과 사망(건강)이다. 이민자와 내국인 간 사망률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인구학적으로 사망력의 파급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망 위험이 낮은 근로 연령대에 이민이 집중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이민자의 젊은 연령 구조로 인한 낮은 조사망률).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주민과 이민자의 사망률을 비교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잘 알려진 역학 역설(epidemiologic paradox) 혹은 히스패닉 사망률 역설(Hispanic mortality paradox)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처한 이민자가 원주민에 비해 건강하거나 오래 생존하는 역설적 현상을 지칭한다(Markides and Coreil, 1986; Palloni and Arias, 2004).⁴³⁾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사망률이 낮은 역설적 현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이민 과정의 선별성(selectivity)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이민 과정에서 건강한 개인들이 선별(healthy migrant effect)되는 한편 건강이 나쁜 고령(은퇴) 이민자가 사망 전에 출생국(송출국)으로 귀환 이동(salmon effect or unhealthy-remigration effect)하는 기제와 관련이 있다(Kohls, 2010, pp. 155-156).

43) 사망에 비해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사망에 비해 이민자의 건강에 관해서는 일관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가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출산력과 마찬가지로 이민과 사망력에 관한 논의는 최근 들어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최근에 이루어진 메타분석 결과는 근로 연령대(30~60세)에서 이민자의 사망 위험이 낮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만, 그러한 효과는 비서구권(특히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서구 선진국으로 이동한 이민자에 국한됨을 보여 준다(Shor and Roelfs, 2021).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민과 건강-사망의 관계는 시공을 가로질러 상당한 변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민자의 건강과 사망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이동을 시도하는 개인의 특성(individual-level selection), 국가 간 이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별 과정(state-level selection), 이민 수용국에서 이민자가 경험하는 적응 양상(본국으로의 귀환 이동 포함)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민 송출국과 수용국을 모두 아우르는 자료 구축이 요구된다. 출산에 비해 행정 자료의 구축과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자료 제약상의 문제로 이민자의 사망력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 이민과 인구 행동: 이민자의 국내이동과 공간적 분포-집중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가 진행되는 시기에 이민이 주목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민이 인구 고령화 혹은 감소가 진행 중인 ‘지역’의 인구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민 수용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원주민과의 차이가 감소하는 출산력이나 사망력 같은 인구학적 현상과 비교하여 이민자의 공간적 이동과 분포는 상이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 기회 구조와 이민자 네트워크가 집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정착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민자의 국

내이동은 기존의 불균형한 인구 분포를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도 있는 것이다(Beaujot, 2002, p. 15).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민자들은 도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인구사회학적으로 취약한 속성을 보유한 이민자들은 도시 지역 내에서도 실업률이 높고 주거비 부담이 낮은 취약 근린 지역에 집중될 개연성이 높다(Viñuela, 2022, p. 2).

현재까지도 이민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국가’ 단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같은 인구학적 차원은 물론 이민이 노동시장, 주택시장, 사회기반시설,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OECD, 2016, pp. 105-145). 이러한 점에서 이민의 파급 효과와 관련하여 이민자의 국내이동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민자의 국내이동은 후속적으로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집중)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통합은 물론 이들의 사회적, 공간적 가시성과 정치적 권력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이민정책의 설계와 실행 측면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Belanger and Rogers, 1992, pp. 1343-1344; Lichter, Parisi, and Ambinakudige, 2020, p. 465; Viñuela, 2022, pp. 1-2).

공간적 차원에서 이민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이동력과 정착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이동 후 이민 수용국에서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민자의 국내이동 패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국제이동’과 ‘국내이동’의 관계에 관한 분석 틀이다. 기본적으로 이민자가 국가 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동을 했다는 점에서 송출국에 체류하는 비이민자와는 이동 성향에서 차이를 보일 것임은 쉽게 추정할 수 있지만, 국제이동 후 이민 수용국에서 이민자가 어떠한 (국내) 이동 패턴을 보이는가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다. 특히 국제이

동과 국내이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이론적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제적(forced) 이동과 자발적(voluntary) 이동, 임시적(temporary) 이동과 영구적(permanent) 이동 등 인구이동을 분류하는 이분법적 구분이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구분은 국내이동과 국제이동이다. 국내이동과 국제이동이 인구이동에서 가장 근본적인 구분이라는 점은 개념적, 이론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상호 소통이 거의 없는 완전히 구분된 독자적인 문헌 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이러한 구분이 자료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 분석 방법론, 관심 이슈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지만, 국내이동과 국제이동의 엄격한 구분은 인구이동 이론의 체계적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인구, 사회, 경제, 정치 영역에서 이민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King and Skeldon, 2010, p. 1620).

시간과 공간(지역-국가)을 가로지른 다양한 양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국내이동과 국제이동 간 구분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공간(영토)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동과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이동의 구분은 유효하다. 그럼에도 국내이동과 국제이동이 유사한 동인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한편 두 유형의 이동 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의 국내이동과 국제이동이 사실상 하나의 독자적인 전통으로 굳어진 현상이 어떤 논리적 필연성의 결과라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 등 공간을 가로지른 통합적 분석에 수반된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에서는 King and Skeldon(2010, p. 1622)의 모형을 사용해 국내이동과 국제이동의 연계를 살펴본다. 아래의 도식에

서는 두 국가(X, Y)를 상정하며, 국가별로 두 개의 지역(a, b)을 설정한다. X는 이민 송출국, Y는 이민 수용국을 표시하며, Xa는 X 국가의 농어촌 혹은 중소도시, Xb는 X 국가의 대도시를 표시한다. 또한 Ya는 이민자가 도착하는 대도시, Yb는 Y 국가의 농어촌이나 중소도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이동이 개인의 선택적 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도식화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 세계적 파급 효과를 갖는 자본의 역할 같은 구조적 조건이 작용한 결과의 측면도 있다. 예컨대, 대도시의 노동력 수요는 단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의 노동력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국내이동을 통해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이동에 의한 노동력 대체가 추진될 수 있다. [그림 2-8]의 10가지 이동 유형 중 첫 번째 및 두 번째처럼 단순한 형태의 국내이동(1)과 국제이동(2)을 상정할 수 있지만, 국내이동을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국제이동(3)과 국제이동 후에 이루어지는 국내이동(4) 및 이러한 패턴들이 중첩된 이동(5) 또한 생각할 수 있다. 국제이동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보와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민 송출국에서 국내이동을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국제이동은 인구이동 문헌에서 가장 논리적인 이동 순서로 언급된다(그림의 유형 3 혹은 5)(King and Skeldon, 2010, p. 1623).⁴⁴⁾ 반면에 국제이동 후에 이루어지는 국내이동(예컨대, 그림의 유형 4)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은데, 이는 본 연구(5장 참고)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존 논의가 국제이동 후에 이루어지는 국내이동을 국제이동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대신에 해당 국가(이민 수용국)의 전체 ‘국내이동’의 일환으로 이민자의 (국내) 이동을 논의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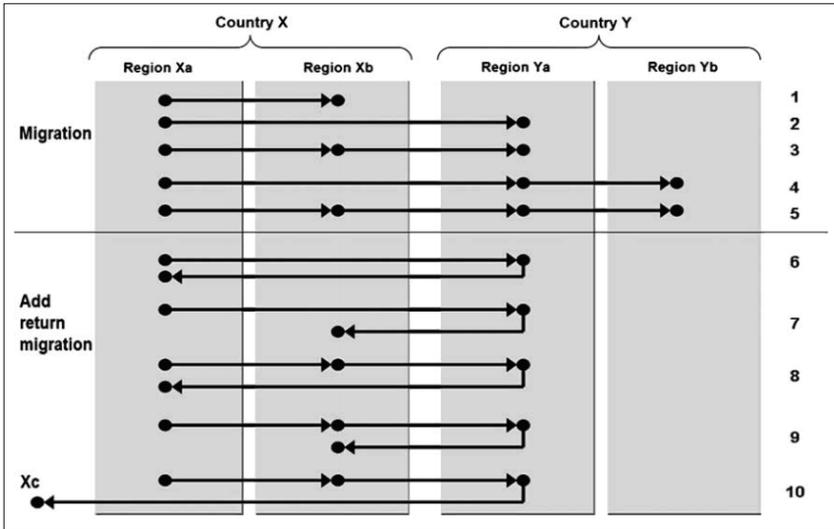
44) 이민 송출국에서 이루어지는 국내이동과 마찬가지로 이민 수용국에서의 국내이동도 유사한 논의가 가능하다. 최근의 연구는 이민자가 처음에는 근접 지역으로 국내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근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험을 거친 후 공간적 이동 범위를 확장함을 시사한다(Reher and Silvestre, 2011, p. 181).

이다(King and Skeldon, 2010, pp. 1624-1625). [그림 2-8]에서는 또한 귀환 이동의 유형들(6~10)이 제시되어 있다. 인구이동의 규모가 커지고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이동의 함의를 충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귀환 이동(return migration)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러한 귀환 이동은 앞에서 논의한 출산이나 사망 같은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과 그 결과를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예컨대, 귀환 이동은 이민 수용국에서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분석할 때 또 다른 선별 효과(selection effect)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한편 아래 그림에서는 일회성 이동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국제이동과 국내이동의 연계 경로를 좀 더 완전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순환 이동(circular migration) 또한 상정할 수 있는데, 귀환 이동은 순환 이동의 일환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변동에서 이민의 역할이 커지면서 국내이동과 국제이동의 연계성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이동과 국제이동의 이론적 통합에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에서 국제이동에 관한 이론의 설명력이 미흡함을 지적한 바 있는데, 국제이동과 국내이동의 연계에 관한 이론 체계의 구축은 더욱 어려운 문제에 해당한다. 인구이동 현상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모든 유형, 모든 공간(국가), 모든 시간에 적용되는 단일의 거대 이론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생산적이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King and Skeldon(2010, p. 1640)은 인구이동에 대한 1) 거대 이론 체계의 구성과 2) 가설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실증 분석에 대한 대안으로 중범위 이론화(middle-range theorization) 작업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Castles(2010, p. 1582) 또한 어떤 역사적으로 주어진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관측되는 이동 현상의 규칙성과 변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시각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범위 이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

음을 제안한다. 이렇듯 인구의 국내이동과 국제이동을 통합하는 이론적 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지만, 이민자의 국내이동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확대와 국가별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한 비교 분석은 향후 국내이동과 국제이동을 이론적으로 통합하는 시도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논의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1) 이민자의 국내이동 패턴과 특징 분석에 초점을 맞추거나, 2) 원주민과 이민자를 모두 아우른 전체 국내이동의 일부로 이민자의 국내이동과 공간적 분포-집중 패턴을 검토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반복적 국내이동에 관한 최근의 일부 연구(Reher and Silvestre, 2011; Silvestre and Reher, 2014)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민자의 국내이동을 일회성 이동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2-8] 국내이동과 국제이동의 연계 경로



자료: King, R., and Skeldon, R. (2010). 'Mind the gap!' Integrating approaches to internal and international migratio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10), p. 1622(Figure 1).

출산력이나 사망력과 마찬가지로 인구이동의 연령별 패턴에서도 규칙성이 존재함은 잘 알려져 있다(Rogers, 1988; Rogers and Castro, 1981). 인구이동에서 연령별 패턴을 강조하는 것은 생애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적 사건들(life transition events)의 영향이 연령별 패턴에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학-졸업, 노동시장 진입, 혼인-출산, 은퇴 등과 같은 생애과정을 구성하는 주요 사건들이 인구이동의 연령별 패턴(age profile of migration)으로 구조화되는 방식은 국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인구이동의 연령별 패턴에서 관측되는 국가별 차이는 국가를 가로지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구학적 맥락에서의 차이를 반영한다(Bernard, Bell, and Charles-Edwards, 2014, pp. 214-219). 기본적으로 생애 사건들(근접 요인; proximate determinants)과 이를 반영하는 인구이동의 연령별 패턴, 그리고 인구이동의 연령별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맥락에 관한 논의는 이민자 집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⁴⁵⁾ 한편 이민자의 국내이동에 관한 논의에서는 출발지와 목적지의 경제적 조건(예컨대, 고용 기회, 소득 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조건(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인적자본(교육 등), 인종·민족, 출생 국가-지역, 이민 시점의 연령과 수용국에서의 체류 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함이 지적된다(Darlington-Pollock et al., 2019; Reher and Silvestre, 2009; Silvestre and Reher, 2014).

국제이동 후에 이루어지는 국내이동이 이민자의 정착 혹은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Raymer and Baffour, 2018, p. 1073; Silvestre and Reher, 2014, p. 50), 국내이동은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집중)에서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동인이 될 수 있다(Belanger

45) 참고로 Bernard et al.(2014)의 분석 도식은 인구학에서 잘 알려진 출산력의 근접 요인들(proximate determinants of fertility)에 관한 분석 틀(Bongaarts and Potter, 1983)을 차용한 것이다.

and Rogers, 1992, p. 1343; Silvestre and Reher, 2014, p. 51).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가 학술적으로 관심을 끈 것은 이민자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높은 수준의 빈곤율이나 분절적 동화(segmented assimilation) 같은 사회문제와 연관될 개연성과 관계가 있다(Jargowsky, 2009, p. 1129).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이민자,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이민자가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다(Chiswick and Miller, 2004, p. 185; Colic-Peisker and Peisker, 2023, p. 365; Kostaki, Kotzamanis, and Agorastakis, 2009, p. 171; Lichter and Johnshon, 2006, p. 119; Newbold, 1999, p. 263). 그러나 이민자,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 현상은 국제이동 후 초기의 적응 단계에서 인적자본이나 문화적 자본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Colic-Peisker and Peisker, 2023, p. 380; Jargowsky, 2009, p. 1148).

이민자의 국내이동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공간적 분포는 국가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Viñuela(2022, p. 32)의 분석은 이민이 지역사회가 직면한 인구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의 분석에서 제시된 프랑스의 사례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높은 지역에 이민자가 집중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민자 집단이 위치한 공간적 조건이 그들의 잠재력을 계발할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거나 박탈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간정의’(spatial justice)를 희생하는 부정적 함의도 지남을 시사한다. 반면에 미국 이민자의 정착 양상을 분석한 Lichter and Johnshon(2006, p. 128)은 1990년대에 걸쳐 이민자의 공간적 집

중과 원주민과의 거주지 격리 수준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한다. 멕시코계 이민자 같은 예외가 있지만, Jargowsky(2009, pp. 1129, 1148-1149)의 연구도 이민자가 원주민 백인에 비해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점차 벗어나는 공간적 동화(spatial assimilation) 패턴이 관측됨을 보여 준다.

한편 호주는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노동이나 특정 기술이 요구되는 대도시 외부 지역에 이민자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프로그램(State-Specific and Regional Migration: SSRM)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다른 주요 이민 수용국과는 구분된다. 동시에 호주의 이 프로그램은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청년층의 대도시 유출 등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최근까지의 논의는 이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노동력과 기술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이민자, 특히 인적자본을 갖춘 이민자의 공간적 분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Massey and Parr, 2012, p. 1, 4). 그러나 수십 년에 걸쳐 기술이나 언어 능력에 기초한 이민자 수용(선별)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 문제는 지속되고 있음이 보고된다(Colic-Peisker and Peisker, 2023, p. 380). Raymer and Baffour(2018, p. 1074)의 연구 또한 시드니 등 전통적인 국내이동의 주요 목적지로 이민자들이 지속해서 이동하는 경향이 관측됨을 보고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도시 외부 지역으로 이민자의 정착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용 기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기회의 제공이 필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유럽 27개국을 대상으로 국제 비교를 진행한 Lichter et al.(2020, p. 486)의 연구는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가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다

양한 방식으로 나타남을 보여 준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이민자 집단 내부의 이질성을 강조한다. 유럽 내부에서 이동한 이민자 집단에 비해 유럽 외부에서 유럽으로 이동한 (경제적 및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지 못한) 이민자 집단이 원주민과 격리될 개연성이 더욱 높음을 보여 준다. 스페인을 대상으로 이민자의 국내이동을 일회 이동과 다중 이동(multiple move)으로 구분한 Silvestre and Reher(2014)의 연구는 일회 이동자나 다중 이동자 모두 최초 입국 장소에 지속해서 체류하는 이민자에 비해 국내이동을 통해 이민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외부로 이동할 개연성이 높아짐을 보여 준다. 특히 다중 이동자의 이동 패턴이 이민 수용국에서 이민자가 경험한 사회경제적 진전이나 공간적 동화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이민자의 국내이동 유형과 공간적 분포에서 관측되는 내부적 이질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제3장

이민과 인구의 규모 및 구조

제1절 서론

제2절 이민과 인구의 규모 및 구조: 시뮬레이션 접근

제3절 이민과 인구의 규모 및 구조: 수리인구학 접근

제4절 종합 및 소결



제3장 이민과 인구의 규모 및 구조

제1절 서론

20년 가까이 추진된 저출산 대응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이민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기대를 넘어 이민이 저출산 대응 정책의 대안적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민이 중장기적으로 인구의 규모와 연령 구조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 인구의 규모와 연령 구조에 미치는 이민의 파급 효과 분석은 선행 연구(Arthur and Espenshade, 1988; Espenshade et al., 1982; McDonald and Hosseini-Chavoshi, 2022; Mitra, 1990; Parsons and Gilmour, 2018; Philipov and Schuster, 2010; United Nations, 2000)에서 많이 사용된 인구 시뮬레이션과 수리인구학 모형(정지인구 모형)을 사용한다. 다음 절의 분석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들 두 접근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는 순수한 사고 실험적(thought experimental) 접근 대신에 수리인구학적 모형(정지인구 이론)을 염두에 두고 인구 시뮬레이션을 설계함으로써 두 접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기본적으로 두 접근의 관계는 정지인구 이론에 기초하여 설계된 인구 시뮬레이션이 무한대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면 그 극한값이 수리인구학적 모형에 의해 산출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장의 기초가 되는 안정인구(정지인구) 이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널리 알려진 관계로 코호트-요인법(cohort-component method)을 활용한 인구추계의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며, 코호트-요

인법에서 사용된 가정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인구학에서 안정인구 모형(stable population model)은 출생과 사망 같은 인구변동 요인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궁극적으로 인구의 연령 구조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다. 안정인구는 연령별 출산율-사망률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폐쇄인구(closed population)에서 궁극적으로 출현하는 이론적 혹은 가상의 인구를 의미한다. 안정인구 모형의 특별한 사례에 해당하는 정지인구 모형(stationary population model)은 기본적으로 안정인구의 특성을 공유하되 인구 증가율이 영(zero)이기에 연령 구조뿐만 아니라 연령별 및 전체 인구의 '절대적' 규모 또한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인구이다.⁴⁶⁾

수리인구학 모형을 사용한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 분석에서는 대체로 정지인구가 논의의 중심이 된다. 이는 인구 증가율이 영(zero)이 아닌 일반적인 안정인구 모형에서는 연령 구조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변하기에 이민을 통한 인구 감소 억제 등 인구의 절대적 규모에 관한 함의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과 관련이 있다. 반면에 정지인구 모형(인구 증가율 = 0)은 이민을 통해 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인구의 연령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안정인구 모형에서 이민의 역할에 대한 선구적 분석은 Espenshade et al.(1982)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Net Reproduction Rate(NRR) < 1)에서 정지인구가 출현하는 인구학적 조건을 밝히고 있다. 정지인구와 관련하여 인구학에서 인용되는 교과서적 사례는 대체출산율(replacement-level fertil-

46) 정지인구가 안정인구의 특별한 사례에 해당하지만, 명시적인 언급이 바람직할 때는 정지인구를 사용한다.

ity)에 기초하여 도출되는 정지인구인데, 사망률이 고정된 폐쇄인구에서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NRR = 1$)에서 장기간 지속될 때 출현하는 인구이다. 대체출산율에 기초한 정지인구(Stationary Population through Replacement-level Fertility: SP-RF)는 후속적으로 인구 모멘텀(population momentum) 논의의 기초가 된다.⁴⁷⁾ 그러나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에서 고정되는 표준적인 정지인구 모형은 저출산($NRR < 1$)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선진국의 상황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인구학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통적으로 안정인구(정지인구) 이론은 폐쇄인구 조건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는데, Espenshade et al.(1982)은 이동력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기존 안정인구(정지인구) 모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연구는 연령별 출산율과 사망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저출산($NRR < 1$) 국가에 '규모'와 '연령 분포'가 고정된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궁극적으로 정지인구가 출현함을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이민 수용국의 출산율과 사망률 수준, 그리고 국제이동의 규모나 성별-연령별 분포와 관계없이 적용되며,⁴⁸⁾ 최종 정지인구의 규모와 특성은 초기 인구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민자의 출산율과 사망률, 성별-연령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47) 참고로 인구 모멘텀은 기준(초기) 인구 대비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에서 고정될 때 출현하는 정지인구의 비(ratio)로 측정된다(사망률 고정 폐쇄인구). 과거와 비교할 때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은 출산율이 즉각적으로 대체출산율 수준으로 상승하더라도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음(-)의 인구 모멘텀이 발생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음(-)의 인구 모멘텀이 발생한다는 것은 출산율의 유의미한 상승을 통해서도 인구 감소를 저지하기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인구 모멘텀의 실제 크기와 함의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제6장에서 소개한다.

48) 정지인구에 도달하기 위해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원주민 여성의 출산율 '수준'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민에 기초한 균형 상태(정지인구)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 이민자의 출산율도 대체출산율 미만($NRR < 1$)으로 낮아진 후 해당 수준에서 항구적으로 유지될 것이 요구된다(Espenshade, 1986, p. 251).

(Espenshade et al., 1982, p. 125, 132). 특이한 점은 전통적인 안정인구 논의와 마찬가지로 성별-연령별 '인구동태율'(출산율, 사망률)이 고정되지만, 이민에 기초한 정지인구(Stationary Population through Constant Immigration: SP-CI) 논의에서 이민은 '율'(rate)이 아니라 성별-연령별 분포가 고정된 이민자의 '규모'(size)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차이가 있다.⁴⁹⁾

이론적 혹은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이동'률'에 기초하여 이민의 효과를 검토하는 대신에 이민자 '규모'를 통한 논의가 더욱 적절하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동률 대신에 이민자 유입의 절대적 규모(연간 기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민정책이 추진되는 한편 이동률(rate of migration)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인구(population at risk of migration)가 이민 수용국의 인구가 아니라 이민 수용국을 제외한 전 세계 인구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Espenshade, 1986, p. 250).⁵⁰⁾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Arthur and Espenshade(1988)의 연구는 이민에 기초한 정지인구(SP-CI)의 크기와 연령 분포가 이민자의 연령 분포(입

49) 참고로 이민자의 절대적 규모 대신에 (순)이동률을 고정시켜도 성별-연령별 구조와 성장률이 일정한 균형 상태(안정인구)에 도달한다. 이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해서는 Espenshade(1986, p. 250)를 참고할 수 있다.

50) UN(2000)의 대체이동 프로젝트에서는 총인구 혹은 생산연령인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이민자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에 Espenshade et al.(1982)의 정지인구 모형에서는 이민자의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목표로 설정된 총인구 혹은 생산연령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UN(2000)의 방식을 장기간 계속 적용하면 궁극적으로 이민자 규모는 정지인구 모형과 유사하게 어떤 고정된 값으로 수렴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두 접근 간 차이는 최종 정지인구에 도달하는 기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민을 통해 인구의 '연령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는 저출산과 고정된 규모의 이민 조합이 상정하는 정지인구의 연령 구조와 현재의 연령 구조 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정된 규모의 이민 조합에 기초하여 도출되는 정지인구보다 연령 구조를 영구적으로 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민자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것이다(Espenshade, 2001, p. 388). 이는 UN(2000)의 대체이동 프로젝트에서 인구의 잠재부양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요구하는 이민자 규모가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이유를 설명한다.

국 시점)에 민감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⁵¹⁾ Mitra(1990)는 이민에 기초한 정지인구(SP-CI)의 연령 분포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단조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이 아니라 복수의 정점이 형성될 수 있는 등 특이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Schmertmann(1992)은 어떠한 조건에서 이민이 인구 재생(rejuvenating)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은 이민이 인구 감소를 막는 데는 출산율 상승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지만, 인구의 연령 구조를 재생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떨어짐을 지적한다. 폐쇄인구 상황에서 대체출산율에 기초한 정지인구(SP-RF)와 저출산 상황에서 이민에 기초한 정지인구(SP-CI)가 기본적으로 분석 대상 인구에 진입하는 연령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기에 이민에 기초한 정지인구의 연령 분포는 항상 대체출산율에 기초한 표준적인 정지인구에 비해 고령화된 연령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민자의 입국 시 연령 분포에 따라 이민은 인구 고령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한편 인구의 연령 구조 재생 효과에서 이민에 기초한 정지인구(SP-CI)가 대체출산율에 기초한 정지인구(SP-RF)만큼 효과적이지는 못하지만, Wu and Li(2003, p. 36)는 생산가능연령대의 가장 낮은 연령대(예컨대, 20세경)에 이민이 집중되면 이민에 기초한 정지인구(SP-CI)가 대체출산율에 기초한 정지인구(SP-RF)에 비해 총부양비(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가 낮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Schmertmann(2012, p. 328)은 대체출산율에 기초한 정지인구(SP-RF)에 비해 총부양비를 낮추기 위해 이민자가 반드시 생산가능연령대의 가장 낮은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는 없음을 주장한다. 그의 분석 결과는 이민자가 30대 중반에 집중될 때 이민

51) 1983년의 미국 이민자의 실제 중위연령보다 2년이 낮은 연령 분포와 5년이 높은 연령 분포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인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Arthur and Espenshade(1988, pp. 320-321)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2100년 기준으로 총인구에서는 2천만 명(정지인구 기준 54백만 명), 중위연령에서는 1.2년 정도의 차이가 관측된다.

에 기초한 정지인구(SP-CI)의 총부양비가 최소화됨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다음 절의 인구 시뮬레이션과 수리인구학 모형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이민자 수용과 출산율 변화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지만, 이는 이동력과 출산력에서의 변화가 인구의 규모와 연령 구조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가상 실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검토하는 특정 수준의 국제순이동과 출산율(TFR) 수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기에 이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는 불가하다.

제2절 이민과 인구의 규모 및 구조: 시뮬레이션 접근

저출산과 이민이 상호 작용하여 초래하는 미래 인구변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인구 시뮬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지인구 이론에 기초를 두고 인구 시뮬레이션 모형을 설계한다. 참고로 UN(2000)의 대체이동 프로젝트도 기본적으로 인구 시뮬레이션 접근에 해당한다. 그러나 UN(2000)의 대체이동 프로젝트처럼 총인구나 잠재부양비(PSR) 등 인구학적 지표를 어떤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민자 규모를 연도별로 미세 조정하는 접근은 (해당 시점에서 관측되는 인구의 연령 구조(분포)에 따라) 필요한 이민자 규모가 매우 불안정하게 변동할 수 있기에 이민정책의 현실에서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과 동시에 기존 논의(Blanchet, 1989, p. 36)는 이러한 접근이 인구 고령화 문제를 단기적으로 지연시킬 뿐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올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다. 인구의 연령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년 이민자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처럼 단기적 시각에 기초한 이민정책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인구학적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학적 목표에 기초하여 매년 이민자 규모를 조정하는 접근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잠재 부양비를 실제로 결정하는 경제 상황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하기 어려운 동시에 상당수의 이민자가 근로자가 아니라 피부양자라는 점도 간과한다(Coleman, 2002, p. 589).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이민정책의 현실에 좀 더 부합하도록 이민자의 규모를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수준에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비록 장기적 차원에서 이민자 규모가 변화를 보일 개연성이 높지만, 내외적 조건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중단기적으로 이민자 규모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⁵²⁾ 다른 한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민자 규모를 일정한 수준에 고정하는 접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지인구 모형에 기초한 논의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의 접근은 순수한 사고 실험적 성격의 인구 시뮬레이션 대신에 인구학적 이론(정지인구 모형)을 접목한 인구 시뮬레이션의 성격을 띤다.⁵³⁾

수리인구학적 접근과 비교한 인구 시뮬레이션 모형의 장점은 인구 시

52) 예컨대, 미국 정부가 설정한 합법적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s) 규모는 2000년대 이후 연간 1백만 명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 참고로 미국의 연간 영주권 발급 규모에서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21세 이상 미국 시민의 부모)은 제한이 없지만, 나머지 가족초청이민(family-sponsored preference immigration),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reference immigration), 난민 등의 범주에는 상한을 설정하여 영주권자 규모를 통제한다.

53) 어떤 특정 시뮬레이션에서 (정지인구 모형이 설정하는 것처럼)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규모와 성별-연령 분포가 일정하다는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식의 가정 설정은 연도별 조정 등 단기적 시각에 기초한 이민정책이 초래하는 인구학적 불안정 문제를 피하면서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민정책의 논리적 한계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다(Gesano, 1994, p. 58).

물레이션을 통해 정지인구에 준하는 인구의 세부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구 시물레이션 모형은 최종 균형 상태인 정지인구에 도달하는 ‘중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 구조 변화 등 ‘이행기’ 정보를 보여 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⁵⁴⁾ 최종 균형 상태뿐만 아니라 이행기의 조정 패턴도 인구변동이 중단기적으로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해 보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인구 규모가 현재의 인구와 큰 차이가 없더라도 이행기 동안의 인구변동 폭이 상당히 크다면 적응 과정에서 사회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구체적인 인구 시물레이션 모형의 설계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준 연도(2021년)의 연령별 출산율(NRR < 1)과 사망률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규모(성별-연령별 분포 고정)의 이민자 유입이 인구의 규모와 연령 구조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초래하는지를 분석한다.⁵⁵⁾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세부적인 가정(시나리오)과 모형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모형에서는 현재의 인구학적 조건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을 사용한다. 2021년의 추계인구, 합계출산율(2021년 TFR=0.808), 출생 성비(2021년 SR=105.1), 사망률(2021년 기대수명 남성 80.5년, 여성 86.5년) 조건을 적용하며(통계청, 2023a, 2023f, 2023g, 2023

54) 물론 인구 시물레이션 모형에 비해 정지인구 모형은 초기 인구 구조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5) 정지인구 모형과 인구 시물레이션을 결합하는 또 다른 접근으로 McDonald and Hossaini-Chavoshi(2022)의 방법이 있다. 이들은 장기간 일정한 규모의 출생아가 태어날 때 인구가 정지인구에 준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 여기에서 일정한 규모의 출생아 수는 출산율과 국제이동의 조합에 의해 도출된다. 이렇게 출생아 수를 일정하게 유지한 조건에서 도달하는 정지인구는 기대수명의 최대 수준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대략 35% 수준이라는 점에서 인구 고령화 수준의 통제와 관련해서도 유용한 측면이 있다(McDonald and Hosseini-Chavoshi, 2022, p. 3). Gesano(1994, pp. 53-57) 또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인구 시물레이션을 진행한 바 있다.

h), 국제순이동(장기; 연령 미상자 제외)은 다른 인구변동 요인들에 비해 연도별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동시에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16~2020년 평균(132,942명)을 사용한다(통계청, 2023c). 2016~2020년 기간의 국제순이동(장기) 평균(132,942명)은 인구 시뮬레이션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장기(1년 기준) 국제이동 통계인 2020년의 국제순이동(132,982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2020년 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하여 확산하였지만, 2020년의 국제순이동 규모는 2015~2017년 기간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0년을 제외한 과거 5년 평균, 즉 2015~2019년 기간의 국제순이동 평균은 123,851명으로 2016~2020년 평균(132,942명)보다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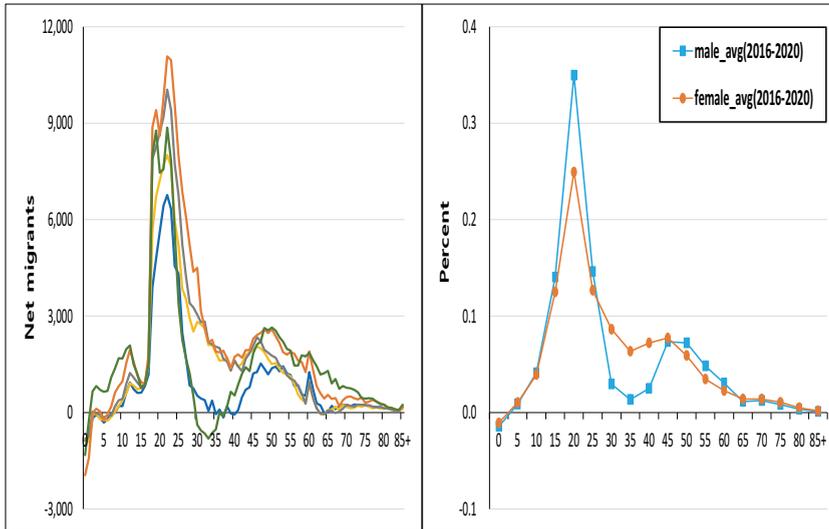
비록 통상적인 90일 기준의 국제이동 통계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민을 검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민자의 영구적 정착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기에 이 연구에서는 1년 기준의 장기 국제이동 통계를 사용한다.⁵⁶⁾ 또한 1년 미만의 국제이동이 단기적으로 인구에 큰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 연구가 검토하는 장기적 파급 효과 분석에서는 장기 국제이동이 더 큰 함의를 가질 개연성이 높다. 참고로 이 연구의 기본 모형(시나리오)에서 사용하는 연간 13만 명 수준의 국제순이동은 통계청(2023a)의 202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사용된 국제순이동 가정(중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통계청(2023a)의 2020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에 의하면 국제순이동은 2024년에 5만 8천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70년에 4만 명, 그리고 2120년에는 3만 6천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있다. 고위 가정도 2024년에 12만 3천 명에서 정점을 찍고 2070년에

56) 참고로 통계청(2023b)의 90일 기준 국제이동 통계에 의하면 2016~2020년의 국제순이동(평균)은 96,550명이다. 현시점에서 90일 기준의 국제이동 통계는 2021년까지 제공되며, 1년 기준 국제이동 통계는 2020년이 가장 최근의 통계치이다.

9만 6천 명, 2120년에 9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에 비해 장기적으로 4만 명 이상 낮은 수준이다.⁵⁷⁾

앞에서 언급한 국제순이동 가정(규모)과 더불어 이민의 파급 효과에 관한 인구 시뮬레이션에서는 2016~2020년 기간의 국제순이동(장기)에서 관측된 성별-연령별 패턴을 사용한다. [그림 3-1]의 좌측은 2016~2020년에 걸친 국제순이동의 연령별 패턴(남녀 통합)을 보여 주며, 우측은 국제순이동 5년(2016~2020년) 평균의 성별 및 연령별 구성비를 보여 준다. 참고로 2016~2020년에 걸친 국제순이동의 성비(여성 100명 기준)는 97.1명으로 2011~2015년 기간의 157.5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3-1] 국제순이동의 패턴(전체; 좌)과 성별 구성비(평균; 우): 2016~2020년



자료: 통계청. (2023c).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국제인구이동-내외국인/성/연령별 장기국제이동(연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8026&conn_path=12에서 2023. 1. 12. 인출.

57) 물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사용되는 국제이동은 장기 국제이동(1년 기준)이 아니라 통상적인 기준인 90일 초과 여부에 기초한다.

인구 시뮬레이션에서 검토해야 할 또 다른 사항으로 원주민과 이민자의 인구동태율(출산율-사망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논리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각주 48 참고), 다수의 선행 연구(Alho, 2008, p. 649; Burcin et al., 2005, p. 58; McDonald and Hosseini-Chavoshi, 2022, p. 3; Mitra, 1990, p. 128; United Nations, 2000, p. 15)와 마찬가지로 논의의 간명성과 가독성(정치인구 도달 과정의 시각적 표현)을 높이기 위해 이민자의 출산율과 사망률이 원주민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각주 59 참고). 물론 현실에서 이민자의 인구동태율이 원주민과 차이를 보일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민자 또한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이민 송출국별 차이 등 내부적 다양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시점의 이민자 인구동태율이 미래에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규모 이민자를 수용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출신 국적 등 이민자의 구성에서 큰 변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민자의 인구동태율을 원주민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접근은 뒤에서 검토하는 수리인구학 모형(정치인구 모형)에 기초한 접근과 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둘째,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하는 정책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국제순이동 규모를 현 수준(2016~2020년 평균; 132,942명)에 고정하는 기본 모형과 비교하여 국제순이동 규모를 1) 25만 명, 2) 50만 명, 3) 선진국 중 순이동 규모가 최대인 미국의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의 순이동자 규모에 가까운 100만 명(United nations, 2022a)으로 상향 조정할 때 관측되는 주요 인구학적 지표를 분석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민의 파급 효과를 살펴본다. 지난 20세기 후반부 이후 선진국의

국제순이동 상황을 고려할 때 연간 국제순이동 50만 명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제2장 제1절 참고). 한편 국제순이동 100만 명은 실현 개연성 측면 보다는 대규모의 이민자 유입이 장기적으로 초래하는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가늠하기 위한 극단적인 사례를 표상한다.

셋째, 현 수준(2016~2020년 평균) 대비 국제순이동 규모를 25만 명~100만 명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접근과 비교하여 국제순이동 규모를 현 수준(132,942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대안적인 방법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1.5명, 1.7명으로 상승할 때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민자 수용 규모를 조정하는 접근과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넷째, 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에 대응하여 특정 인구변동 요인(출산력 혹은 이동력)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대신에 국제순이동과 출산율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혼합(출산력 + 이동력) 방식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변동 요인을 혼합하는 방식에서는 국제순이동을 25만 명 수준에 고정시킨다. 현 국제순이동의 2배에 가까운 25만 명으로 '연간 국제순이동'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구조로 진입한 시점에서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국제순이동을 매년 25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이민 수용국의 최근 국제순이동 동향을 고려하면 연간 국제순이동 25만 명 정도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최대치로 판단된다. 미국의 사례에 기초한 국제순이동 100만 명은 물론 50만 명의 국제순이동 또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선택지로 판단되어 혼합 방식에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참고로 UN(2022a)의 인구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2012~2021년) 기준으로 국제순이동 평균치는 호주 20만 4천 명, 캐

나다 28만 명, 독일 36만 9천 명, 영국 24만 1천 명 수준이다.⁵⁸⁾ 한편 혼합 방식에서 합계출산율은 1.3과 1.5 수준을 가정한다. 통상적으로 합계출산율 1.3은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의 경계점에 해당하며 (Kohler, Billari, and Ortega, 2002, p. 641), 합계출산율 1.5는 저출산 함정 가설(low-fertility trap hypothesis)(Lutz, Skirbekk, and Testa, 2006, p. 173)의 준거점인 동시에 2021년 기준으로 OECD 38개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이 대략 1.5~1.6 수준임(United Nations, 2022a)을 고려한 가정이다. 비록 한국 사회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정책적 개입 수준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1.3 수준으로 상승할 개연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합계출산율 1.5는 그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아동 세대가 성공적으로 성인 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 조치가 마련될 때 실현될 수 있는 출산율 상승의 최대치로 검토한다.⁵⁹⁾

58) UN(2022a)의 국제이동 통계(추정치)에 의하면 1950~2021년 기간에 걸쳐 국제순이동 규모가 50만 명을 초과한 국가로는 세계 최대 이민 수용국인 미국을 제외하면 스페인과 튀르키예의 사례가 있다. 물론 이들 국가가 매년 이런 수준의 순유입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참고로 독일의 국제순이동 최대치는 48만 3천 명에 이르지만, 이는 동서독 통일 시기의 국제순이동 수치이다(1991년). 튀르키예의 2014년 국제순이동 규모가 70만 명을 넘어서는데, 이는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한 난민 수용의 결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사례인 스페인의 국제순이동은 2000년대 초중반에 걸쳐 60~70만 명대 수준을 기록했다(2007년 77만 4천 명).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스페인의 사례는 통상적인 의미의 순유입이 아니라 기존에 대규모로 존재하던 미등록 이민자의 합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9) 이민에 기초한 정치인구(SP-CI) 모형에서 초점은 이민자의 출산율이다. 정치인구의 규모와 특성은 전적으로 이민자의 출산율과 사망률, 그리고 이민자의 규모와 성별-연령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비록 장기간에 걸친 조정 과정에서 원주민의 출산율이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균형 상태를 결정하는 출산율은 이민자 및 그 후세대의 출산율이다. 본 연구의 인구 시뮬레이션에서 원주민 중심의 출산율 전망을 이민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일정한 인구추계 기간(예컨대, 300~500년) 내에 정치인구에 도달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원주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무한대 기간을 상정하는 수리인구학 접근(제3절)에서는 원주민과 그 후세대의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미만의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다.

〈표 3-1〉 인구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별 주요 가정

구분		인구변동 요인			비고
		출산력	사망력	국제인구이동	
기본 시나리오		2021년 출산율 고정 TFR=0.808	2021년 사망률 고정 $e_0^M=80.5$ $e_0^F=86.5$	2016~2020년 국제순이동(평균) 132,942명	- 기준인구는 통계청 2021년 추계인구 - 출생 시 성비는 2021년 성비(105.1) 적용 - 국제순이동의 연령 분포는 통계청 장기 국제이동 2016~2020년 순이동(평균) 패턴 적용
이민자 수용	시나리오 A	2021년 출산율 고정 TFR=0.808		국제순이동 250,000명	
	시나리오 B	2021년 출산율 고정 TFR=0.808		국제순이동 500,000명	
	시나리오 C	2021년 출산율 고정 TFR=0.808		국제순이동 1,000,000명	
출산율 상승	시나리오 D	출산율 상승 TFR=1.3		2016~2020년 국제순이동(평균) 132,942명	
	시나리오 E	출산율 상승 TFR=1.5		2016~2020년 국제순이동(평균) 132,942명	
	시나리오 F	출산율 상승 TFR=1.7		2016~2020년 국제순이동(평균) 132,942명	
출산율 상승 + 이민자 수용	시나리오 G	출산율 상승 TFR=1.3		국제순이동 250,000명	
	시나리오 H	출산율 상승 TFR=1.5	국제순이동 250,000명		

자료: 통계청. (2023a). 국가통계포털: 온라인간행물(주제별)-인구-장래인구추계[데이터파일].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에서 2023. 1. 8. 인출; 통계청. (2023c).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국제인구이동-내외국인/성/연령별 장기국제이동(연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8026&conn_path=I2에서 2023. 1. 12. 인출; 통계청. (2023f).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인구동향조사-출생-모의 연령별 출산율(각세)[데이터파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2&conn_path=I2에서 2023. 5. 4. 인출; 통계청. (2023g).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인구동향조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conn_path=I2에서 2023. 5. 2. 인출; 통계청. (2023h).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통계-보건-생명표-간이생명표(5세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1&conn_path=I2에서 2023. 5. 2.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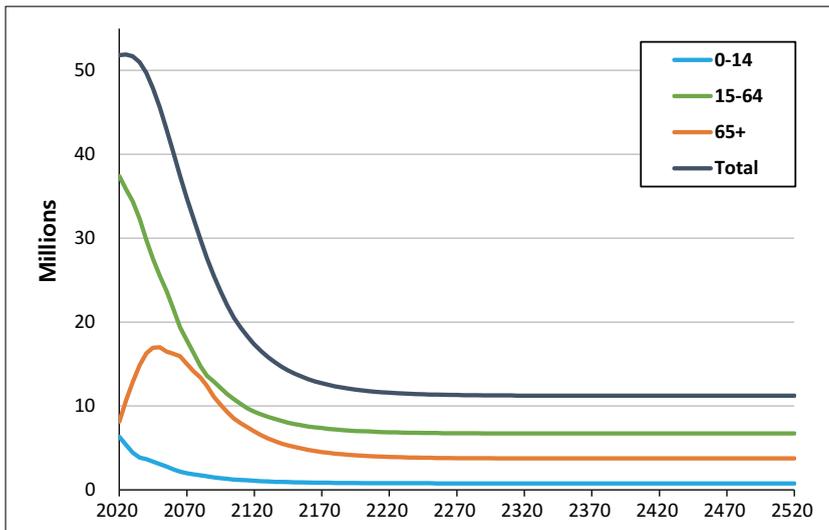
인구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먼저 기본 시나리오인 현 수준의 저출산(2021년; TFR=0.808) 및 국제이동(2016~2020년; 132,942명) 조건에 기초한 미래의 인구학적 상황을 살펴본다. [그림 3-2]와 <표 3-2>는 2021년의 출산율-사망률 조건과 2016~2020년 기간의 국제순이동(평균)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때 나타나는 인구학적 상황을 보여준다. 참고로 인구 시뮬레이션의 기준 연도가 2021년이지만, X축의 시간(연도) 간격(50년)에서 일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20년(추계인구; 확정치)을 추가하여 그래프를 산출하였다.⁶⁰⁾ [그림 3-2]에는 2520년까지의 500년에 걸친 인구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만, 총인구와 연령대(유소년, 생산연령, 노인)별 인구 모두 2220년경부터 큰 변화가 관측되지 않고, 2320년 이후에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인구 대비 연도별 인구의 구성비를 산출해 보면 2320년 전후부터 21.6~21.7%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인구 시뮬레이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320년을 기준으로 균형 상태(정지인구)를 정의하고 특징을 살펴본다. 현 수준의 출산율과 국제순이동이 '무한대' 기간에 걸쳐 지속될 때 출현하는 정지인구의 규모와 특징에 대해서는 이 장의 3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3-2>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출산율과 사망률 조건에서 국제순이동 규모를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면 큰 폭의 인구 감소는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고착화한 상황에서 최근 5년 수준의 이민자 순유입은 인구 고령화의 저지는 물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인구 시뮬레이션 결과는 현재의 출산율

60) 인구추계 모형은 1년 단위의 모형이지만, 그래프는 50년 간격으로 결괏값을 추출하여 작성하였다.

(TFR=0.808)과 사망률 수준에서 최근 수준의 국제순이동 패턴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20년 인구의 대략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될 것임을 시사한다. 연령대별 인구를 보면 감소세를 보이는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인구에 비해 노인인구는 2050년경에 정점을 찍은 후에 감소 국면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림 3-2] 현 국제순이동 고정 시나리오의 전체 및 연령대별 인구: 2020~2520년



자료: <표 3-1>과 동일.

앞의 연령대별 인구 전망에서 추론해 볼 수 있듯이 현 수준의 출산율과 국제순이동에 기초할 때 큰 폭의 인구 감소가 이루어짐과 함께 인구의 연령 구조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변화가 나타난다. <표 3-2>와 [그림 3-3]은 인구의 연령 구조 지표들의 추이를 보여 준다.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정지인구의 구조가 현 인구의 연령 구조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2020년의 중위연령(남녀 통합)이 43.19세임에 비

해 2320년 인구의 중위연령은 53.14세로 대략 10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와 중위연령이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생산연령인구와 노인인구의 관계에 기초한 노년부양비(DRaged) 지표는 상대적으로 더욱 급격하게 증가한 후에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앞에서 노인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2050년경에 정점에 도달함을 언급하였는데, 인구 고령화 지표들은 이보다 30여 년 후인 2080~2085년경에 정점에 이른다.

〈표 3-2〉 현 국제순이동 고정 시나리오의 주요 인구학적 지표

(단위: 천 명, 세,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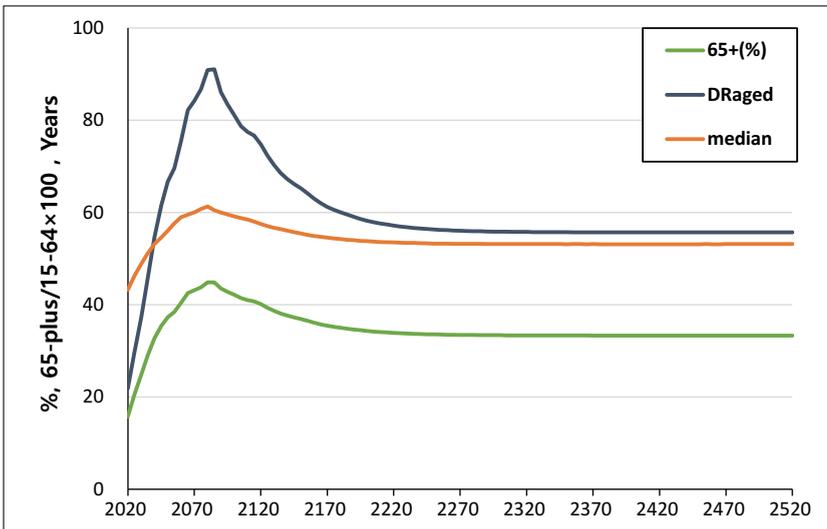
구분		2020년	2045년	2070년	2120년	2220년	2320년	
인구 규모	총인구	51,386	47,879	34,792	17,358	11,577	11,237	
	연령 계층	0~14세	6,306	3,363	1,967	1,081	788	771
		15~64세	37,379	27,572	17,818	9,314	6,865	6,719
		65세+	8,152	16,944	15,008	6,963	3,924	3,747
인구 구조	중위연령(세)	43.19	54.56	60.02	57.49	53.49	53.14	
	65세+(%)	15.73	35.39	43.14	40.11	33.90	33.34	
	노년부양비(×100)	21.81	61.45	84.23	74.76	57.16	55.77	

자료: 〈표 3-1〉과 동일.

한편 [그림 3-2]와 [그림 3-3]은 수리인구학적 접근과 비교한 인구 시뮬레이션 접근의 장점을 잘 보여 준다. [그림 3-2]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지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 3-3]의 인구 구조 지표들도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인 후 최종적으로 균형 상태에 진입함을 살펴볼 수 있다. 수리인구학적 접근은 [그림 3-2]의 최종 결과값만을 보여 줄 뿐 이러한 결과에 이르는 조정 과정을 보여 주지는 못한

다. [그림 3-3]은 현 수준(2016~2020년)의 국제순이동 조건이 장기간 지속될 때 출현하는 정지인구의 고령화 수준(65세+(%), DRaged)이 2020년의 2배 이상임을 보여 준다. 더욱이 인구 시뮬레이션 결과는 2080년대 중반까지 인구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된 후에야 감소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예컨대, 2080년대 중반경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90명 이상이며, 중위연령도 60세 이상이다. 종합적으로 기본 시나리오에 기초한 인구 시뮬레이션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현 수준의 이민자 유입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한편 중단기적 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구변동도 상당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그림 3-3] 현 국제순이동 고정 시나리오의 인구 구조 지표: 2020~25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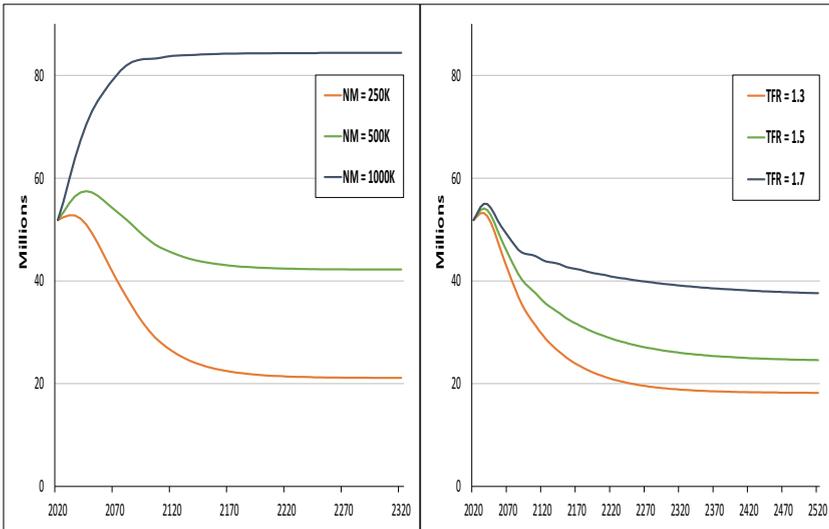
자료: <표 3-1>과 동일.

기본 시나리오(가정)에 기초한 분석에 이어 [그림 3-4]의 좌측은 대안 시나리오로 국제순이동 규모를 25만 명, 50만 명, 1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할 때의 인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 준다(출산율과 사망률은 2021년 수준 고정). 또한 [그림 3-4]의 우측은 이민자 수용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출산율이 상승할 때, 즉 합계출산율이 1.3, 1.5, 1.7로 상승할 때의 인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 준다(사망률은 2021년, 국제순이동은 2016~2020년(평균) 수준 고정). [그림 3-4]의 좌측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순이동을 25만 명은 물론 50만 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국제순이동을 기본 시나리오의 2배에 가까운 25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2320년의 인구(2,111만 명)는 2020년 인구의 41% 수준까지 감소하며, 국제순이동을 기본 시나리오의 4배에 가까운 5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2320년의 인구(4,219만 명)는 2020년 인구의 81% 수준에 그친다. 반면에 국제순이동 규모를 연간 100만 명까지 상향 조정하면 인구는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8,436만 명(2320년)에서 안정화되는데, 이는 2020년 인구의 16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 참고로 장기적으로 2021년 인구(기준 인구)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지인구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국제순이동 규모는 연간 61만 명 수준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인구의 구성 및 다음 절의 수리인구학 접근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한편 [그림 3-4]의 우측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1년의 0.808명에서 1.3~1.7명 수준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에 기초한 인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 준다. 검토한 모든 출산율 상승 시나리오에서 기준 인구(2021년) 대비 인구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율이 1.3명까지 상승하면 2320년의 인구(1,884만 명)는 2020년 인구의 36% 수준까지 감소하며, 합계출산율이 1.7명까지 상승하더라도 2320년의 인구

(3,908만 명)는 2020년 인구의 3/4 수준까지 감소한다. 참고로 [그림 3-4]는 국제순이동 규모를 조정하는 시나리오에 비해 출산율이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 인구가 장기 균형 상태(정지인구)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출산율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2520년까지도 인구가 장기 균형 상태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출산율 상승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출현하는 정확한 정지인구의 규모는 다음 절의 수리인구학 접근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4] 국제순이동(좌) 및 출산율(우) 시나리오별 인구 전망



자료: <표 3-1>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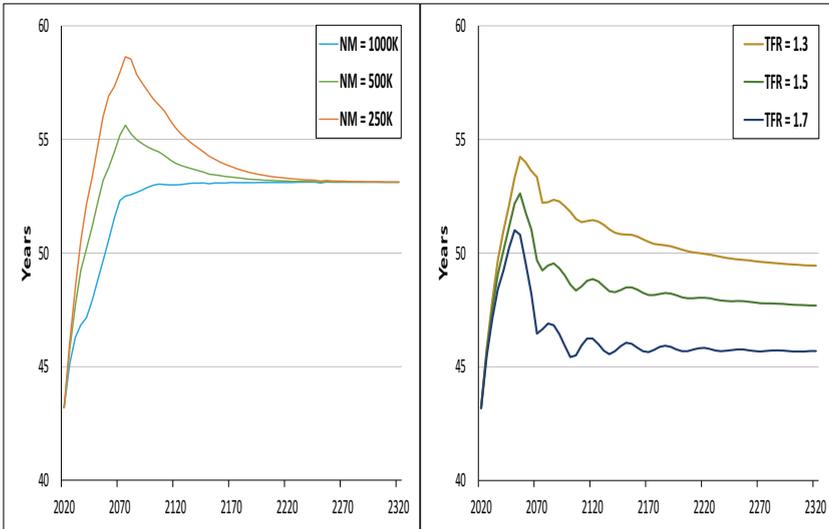
한편 [그림 3-5]에서는 국제순이동 확대(25만 명, 50만 명, 100만 명) 및 출산율 상승(TFR=1.3~1.7) 시나리오에 따른 중위연령의 추이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는 인구 고령화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중위연령 (median age)만을 보여 주지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

비(%)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노년부양비) 지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그림 3-5]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순이동 확대 시나리오들은 균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큰 폭의 변이가 관측될 뿐 기본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후에는 중위연령에서 차이가 없다. 이는 국제순이동 확대 시나리오들이 순이동 '규모'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이민자의 성별-연령 구조와 출산율-사망률 조건이 모두 동일하기에 나타난 결과이다. 연간 국제순이동 규모를 100만 명까지 상향 조정하여 인구 감소를 막을 수는 있지만, 인구 고령화 추세를 되돌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에서 연간 50만 명 이상으로 이민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언급한 바 있지만, [그림 3-5]는 국제순이동 규모가 작을수록 이행기 동안에 경험하는 인구 고령화 수준이 높아짐을 보여 준다. 비록 낮은 수준의 국제순이동이 사회적(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인구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는 한편 '조정 과정'에서 연령 구조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변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도 살펴볼 수 있다.

국제순이동 조정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그림 3-5]의 출산율 상승 시나리오에서도 중위연령이 상승한 후 감소 국면을 거쳐 안정화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럼에도 국제순이동 확대 방식과 비교할 때 출산율 상승 시나리오별 중위연령 차이는 조정 과정이 마무리되는 2320년까지 지속해서 관측되는데, 출산율 상승 폭이 클수록 장기 균형 상태의 중위연령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의 인구 규모와 마찬가지로 인구 구조(중위연령)에서도 국제순이동 확대 방식에 비해 출산율 상승 시나리오에서 최종 균형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된다. 예컨대, [그림 3-5]의 합계출산율 1.7 시나리오에서는 최종 추계 연도인 2320년까지도 중위연령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제순이동 확대든 출산율 상승이든 어떤 개별 인구변동 요인의 변화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렵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이민자 확대와 출산율 상승은 인구학적 파급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 예컨대, [그림 3-4]와 [그림 3-5]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수리인구학적 모형(제3절 참고)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정지인구의 규모가 국제순이동 25만 명에 상응하는 합계출산율을 추정하면 대략 1.4명이다. [그림 3-5]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듯이 전체 인구가 공통적으로 2020년 인구의 대략 40% 초반까지 감소하더라도 이민자 확대 방식에 비해 출산율 상승에 따른 인구 고령화 수준이 낮다([그림 3-5] 우측의 TFR 1.3과 TFR 1.5에 따른 중위연령 전망치 시계열의 사이 구간). 더욱이 연령 구조(중위연령)가 최종 균형 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 경험하는 이행기 연령 구조의 변동 폭도 작다.

[그림 3-5] 국제순이동(좌) 및 출산율(우) 시나리오별 중위연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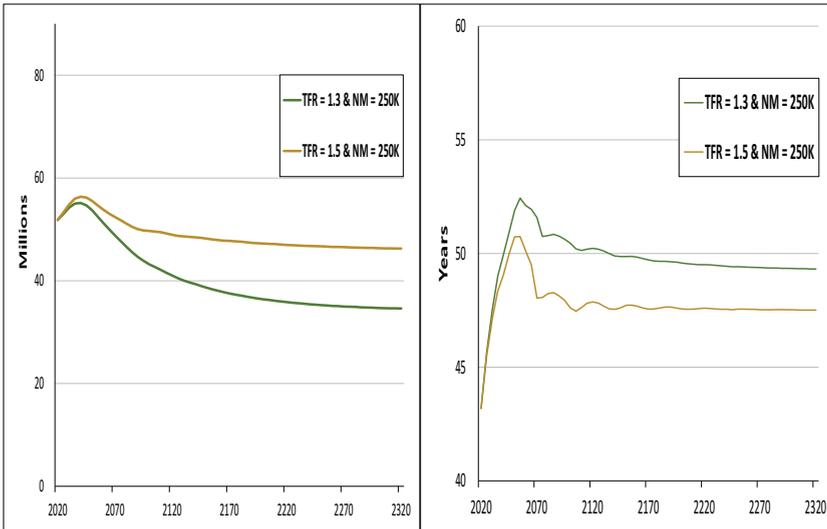
자료: <표 3-1>과 동일.

앞에서는 현 출산율 수준(2021년)을 유지한 상태에서 국제순이동 규모를 확대하거나 국제순이동을 현 수준(2016~2020년 평균)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출산율이 상승할 때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비해 [그림 3-6]은 출산율 상승과 국제순이동 확대를 동시에 고려한 조합 시나리오의 인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 준다. 비록 향후의 출산율 추세나 이민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기 쉽지 않지만, 이 연구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3 또는 1.5 수준까지 상승하고 연간 국제순이동 규모가 25만 명으로 확대될 때 인구의 규모 및 연령 구조 지표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간 국제순이동 50만 명 이상이나 합계출산율 1.7은 인구변동의 국제적 동향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검토하지 않는다.

[그림 3-4]의 국제순이동 50만 명 시나리오와 비교할 때 [그림 3-6]은 국제순이동을 25만 명으로 확대하고 출산율이 1.5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의 2020년 인구 대비 감소 폭이 줄어들음을 보여 준다(2320년 기준 4,624만 명; 2020년 인구 대비 89%). 현 출산율(TFR=0.808)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연간 25만 명으로 순유입이 확대되더라도 2320년의 인구가 2020년 인구의 4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할 때 추가로 출산율이 1.3으로 상승하면 2320년의 인구는 3,458만 명(2020년 인구 대비 67%)으로 인구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든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이민자 확대(25만 명)와 출산율 상승(1.3~1.5)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인구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 출산율 수준(TFR=0.808)을 유지한 채 국제순이동 규모를 5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시나리오([그림 3-4] 참고)에 비해 국제순이동을 25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출산율이 1.5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의 비교우위는 인구 감소 폭을 줄이는 동시에 인구 고령화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최종 균형

상태의 인구학적 조건과 함께 이행기에 경험하는 인구변동의 폭이 감소함으로써 적응의 수월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다. 국제순이동 25만 명에 합계출산율이 1.3까지 상승하는 조합 시나리오는 국제순이동을 50만 명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출산율 현 수준 고정)에 비해 인구감소의 저지 측면에서 효과가 떨어지지만, 인구 고령화의 진행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현재의 저출산 상황에서 대규모 이민자 수용이 초래하는 인구 구성에서의 급격한 변화 문제(후술)를 고려할 때 인구의 감소 폭을 줄이고 고령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측면에서는 출산율 상승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이민자 수용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다.

[그림 3-6] 출산율-국제순이동 조합별 전체 인구(좌) 및 중위연령(우) 전망



자료: <표 3-1>과 동일.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여 대규모의 이민자 유입을 추진하면 장기적으로 인구의 구성에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 상황에

서 이민자가 지속해서 유입되면 원주민 현세대와 그 후세대는 궁극적으로 이민자와 그 후세대로 대체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민자 수용에 따른 인구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언어나 문화 등 국가의 정체성에서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변화가 가파를수록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질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에서는 인구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이 지속될 때 이민자 확대가 인구의 구성에서 어떠한 파급 효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본다.

현실은 물론이거니와 모형 설계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인구 구성에서의 변화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이민 송출국 등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민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의 구성에서 관측되는 변화를 살펴본다. 추가로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기준 연도에 해당하는 2021년의 인구를 모두 원주민으로 간주하고 이민자는 모두 새롭게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준 연도 이후 원주민은 유입과 유출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한편 원주민과 이민자 간 혼인도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인구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원주민 (후)세대와 이민자 (후)세대를 명확히 구분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⁶¹⁾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인구 구성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민자 유입에 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사용한다. 첫 번째는 인구 시뮬레이션의 기본 시나리오로 사용된 2016~2020년 기간의 국제순이동(평균: 132,942명) 규모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시나리오이다. 두 번째

61) 이러한 접근은 선행 연구(예컨대, Espenshade, 1986, p. 252)에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인구 구성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Espenshade(1986, p. 252)는 분석 대상 국가를 공간적으로 원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이민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구분하고 양 지역 간 교류가 없는 상황을 상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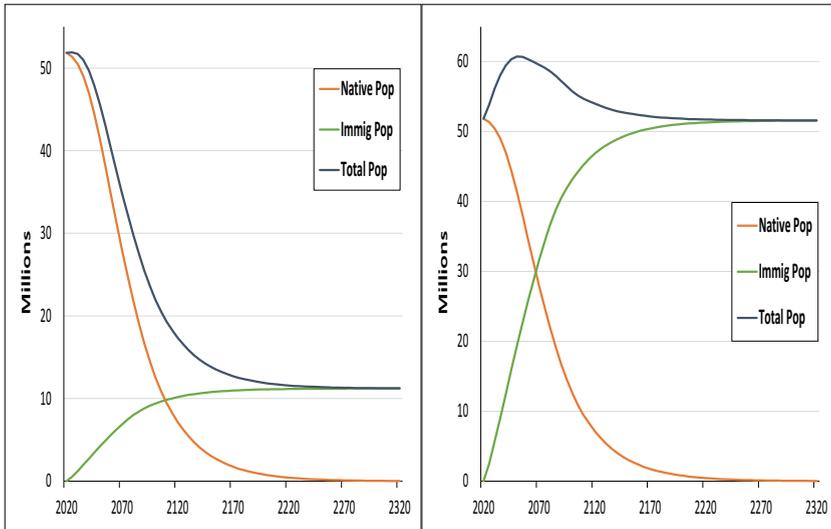
시나리오는 동일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되 국제순이동 규모를 61만 1천 명으로 조정한 시나리오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궁극적으로 출현하는 정지인구의 규모가 기준 인구인 2021년 인구에 근사적으로 수렴하는 국제순이동 수준이다. 이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국제순이동 규모(61만 1천 명)의 도출에 관해서는 수리인구학 접근에 기초한 제3절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나머지 가정은 앞의 인구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기본 시나리오와 동일하다.

[그림 3-7]은 위의 두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2320년까지의 인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 준다. 좌측은 연간 132,942명의 국제순이동이 지속될 때 나타나는 전체 인구와 원주민, 그리고 이민자 배경 인구의 추이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 원주민 인구는 2021년 이후 유입과 유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망에 해당하며, 이민자 배경 인구는 설정된 수준의 국제순이동에 따른 이민 1세대와 그 후세대를 모두 포괄한다. 2016~2020년 기간의 국제순이동(평균) 가정을 사용한 좌측에서는 전체 인구가 1,10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주민 인구는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원주민 인구는 대략 50년 후인 2070년에 전체 인구의 80% 수준까지 감소하며, 2120년에는 전체 인구의 41% 수준, 2220년에는 전체 인구의 대략 4%까지 감소한다.

한편 [그림 3-7]의 우측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균형 상태의 인구 규모가 기준 시점인 2021년 인구에 근사하도록 하는 국제순이동(61만 1천 명)이 지속될 때 나타나는 전체 인구와 원주민 및 이민자 배경 인구의 추이를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인구는 인구 모멘텀 현상으로 인해 6,0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후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2021년 인구 수준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 수준(2016~2020년)의 국제순이동과 비교할 때 대체이동, 즉 장기적으로 2021년 인구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국제순이동이 이루어지면 원주민과 이민자 배경 인구의 구성은 더욱 가파르게 변한다. 연간 61만 1천 명 수준의 국제순이동자가 지속해서 유입될 때 전체 인구 대비 원주민 인구의 구성비는 2045년에 대략 74%, 2070년에는 47%, 2120년에는 13% 수준까지 감소한다. 10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이민자 배경 인구가 전체 인구의 90%를 점유할 정도로 인구 구성에서 가파른 변화를 보인다.

[그림 3-7] 국제순이동 수준별 인구의 구성 변화: 현 수준(좌) 및 대체이동 수준(우)



자료: <표 3-1>과 동일.

비록 현실에서 원주민과 이민자 배경 인구의 구성 변화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시뮬레이션에 비해 훨씬 복잡하게 전개되겠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여 대규모로 이민자를 수용하는 접근은 인구 구성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로 인해 그 정치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초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 구성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이민자 수용에 따른 인구 구성에서의 가파른 변화가 이민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개연성을 크게 높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적 적응에 비해 언어, 종교 등을 아우르는 문화적 차원의 적응과 통합에는 여러 세대에 걸친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민자 증가로 인한 인구 구성에서의 가파른 변화는 기존 사회 체계를 전제로 한 적응과 통합의 시간적 여지를 크게 축소시켜 사회 체계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질 개연성을 높인다. 이민의 이러한 측면 또한 이민에 기초하여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갖는 중요한 제약 요인이다.

제3절 이민과 인구의 규모 및 구조: 수리인구학 접근

이 절에서는 Espenshade et al.(1982)의 접근을 발전시킨 가장 최근의 논의에 해당하는 Parr(2021, 2023)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⁶²⁾ UN(2000) 등 대체이동에 관한 다른 접근들에 비해 이 접근은 인구 시뮬레이션 등의 추가적인 분석 없이 장기적인 인구 규모(증감)에 미치는 국제이동의 파급 효과를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연령별 국제순이동 규모가 고정되기에 이민에 기초한 안

62) UN(2000)의 사례 외에도 대체이동(replacement migration)을 분석하는 다양한 접근이 제안된 바 있다. 기존 인구학적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논의된 방법으로 출생 코호트 대체비(birth replacement ratio) 지표가 있다. 예컨대, t 기에 30세인 출생 코호트와 $t+30$ 기에 30세인 출생 코호트의 크기를 비교하여 세대를 가로질러 출생 코호트가 '대체'되는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Billari and Dalla-Zuanna, 2011, p. 107). 대안적으로 출생 시 모(母) 세대의 크기와 자녀(여아) 세대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Ortega, 2006, p. 7).

정인구(SP-CI) 이론(Espenshade et al., 1982)은 물론 앞에서 살펴본 인구 시뮬레이션 접근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다만, 일반적인 ‘기간’(period) 인구통계 측정치들(예컨대, 합계출산율, 기대수명)과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도출되는 정지인구(Stationary Population; P)나 인구이동 조정 합계출산율(Migration-Adjusted TFR; TFR_{AdjR})도 지표 도출에 사용된 값들이 무한한 기간에 걸쳐 지속될 때 산출되는 ‘이론적’ 혹은 ‘가상적’ 수치임에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수리인구학적 접근에 기초하여 도출된 정지인구(P)의 분석 결과는 설정된 출산력, 사망력, 이동력 가정이 무한대에 걸쳐 인구 성장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의 인구 시뮬레이션 접근에서는 300~500년 기간에 걸쳐 고정된 출산율(다만, $NRR < 1$), 사망률, 국제순이동이 인구의 규모(증감)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지만, 이 절에서 살펴보는 수리인구학적 접근은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기간에 걸친 인구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해당하는 값(극한값)을 제공한다. 특히 수리인구학 접근은 유한한 기간에 걸친 인구 시뮬레이션과 달리 초기 인구의 연령 구조에서 비롯된 인구 모멘텀(population momentum)의 영향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⁶³⁾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Parr(2021, 2023)가 제시한 수리인구학 모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우선, P 는 정지인구의 전체 규모를 의미하며, 이는 이민자 배경 인구 중 가장 최근 세대에 해당하는 이민 1세대(P_1)부터 이민 1세대 여성이 출산한 이민 2세대(P_2), 이민 2세대 여성이 출산한 이민 3세대(P_3) 등 모계(母系) 기준으로 정의된 이민자 배경 인구(immigrant background

63) 반대로 최종적인 정지인구를 보여 주는 수리인구학적 접근과 비교할 때 인구 시뮬레이션 접근은 인구 모멘텀의 크기를 명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opulation)의 전체 집합으로 구성된다.⁶⁴⁾

$$P = \sum_{i=1}^{\infty} P_i,$$

where $i = \text{migrant generation index}$

정지인구에서 1세대 이민자 집단의 규모는 아래의 수식 같이 산출된다. 여기에서 M 은 매년 고정적으로 유입되는 순이동자 규모, $m_{x,j}$ 는 순이동자 중에서 연령(0~ ω 세)이 x 세, 성별이 j (1=여성, 2=남성)인 집단의 구성비($M \times m_{x,j}$ 는 연령이 x 세, 성별이 j 인 집단의 규모), $e_{x,j}$ 는 연령이 x 세, 성별이 j 인 집단의 기대여명을 나타낸다.

$$P_1 = M \times \sum_{j=1}^2 \sum_{x=0}^{\omega} m_{x,j} e_{x,j}$$

이민 2세대는 이민 1세대 여성의 출산 과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아래의 수식에서 TFR 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s_j 는 출생아 중 성별 j 의 구성비, $e_{0,j}$ 는 성별 j 의 기대수명(0세 기대여명), f_{x+t} 는 TFR 에 대한 $x+t$ 세(구간) 연령별 출산율의 기여도($TFR \times f_{x+t}$ 는 연령별 출산율($asfr_{x+t}$)), ${}_t p_{x,1}$ 는 x 세에서 $x+t$ 세 구간의 생존율(여성; 생명표 함수의 L_{x+t}/L_x), k 는 가임 연령의 상한(49

64) 원주민의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미만($MRR < 1$)이기에 극한값에 해당하는 정지인구는 이민자 배경 인구로만 구성된다.

세)을 나타낸다. $M \times TFR \times \sum_{x=0}^k m_{x,1} \times \sum_{t=0}^{k-x} f_{x+t} t p_{x,1}$ 가 정지인구의 연간 출생아 수(B)를 나타내기에 이민 2세대의 규모는 성별로 연간 출생아 수에 기대수명을 곱하여 산출됨을 볼 수 있다.

$$P_2 = M \times TFR \times \sum_{j=1}^2 s_j e_{0,j} \times \sum_{x=0}^k m_{x,1} \times \sum_{t=0}^{k-x} f_{x+t} t p_{x,1}$$

순이동(M)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3세대 이상 이민자 세대의 규모는 부모 세대의 순재생산율(Net Reproduction Rate: NRR)에 의해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순재생산율(NRR)이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상대적 크기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세대별 인구(P_{i+1})를 산출할 수 있다.

$$P_{i+1} = NRR \times P_i, \quad \text{where } i \geq 2$$

앞의 수식이 시간을 이산적(discrete) 혹은 불연속적 현상으로 모형화하기에 (지수적 성장 모형 대신에) 기하적 성장 모형(geometric growth model)을 적용하면 2세대 이상 이민자 집단의 전체 규모는 초항(first term)이 P_2 이고 공비(common ratio)가 NRR 인 기하급수(등비수열; geometric series)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⁶⁵⁾

65) 참고로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의 절댓값이 1보다 작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지속적인 저출산이 가정되기에 $|NRR| < 1$ 의 조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

$$\sum_{i=2}^{\infty} P_i = P_2 (1 + NRR + NRR^2 + \dots) = \frac{P_2}{1 - NRR}$$

이에 따라 이민 1세대를 포함하는 전체 정지인구(P)의 규모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 P_1 + \frac{P_2}{1 - NRR}$$

주어진 정지인구 모형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인구학적 지표의 산출도 가능하다. 우선 POP 를 현재 인구(예컨대, 2021년 추계인구) 혹은 목표 인구라고 정의할 때, $P = POP$ 의 조건하에 위의 수식을 재정리하면 전통적인 대체출산율, 즉 인구이동이 없는 폐쇄인구에 기초하여 산출된 대체출산율 개념에 대비하여 양(+의 국제순이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출된 대체출산율을 의미하는 인구이동 조정 대체출산율(TFR_{MadjR}))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고정된 양(+의 국제순이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인구이동 조정 대체출산율(TFR_{MadjR}))에서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현재 인구 혹은 목표 인구 규모에 상응하는 정지인구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성립하는 관계이기 에 단기적으로 현재 인구 혹은 목표 인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그림 3-7]의 인구 시뮬레이션 우측 참고).

$$TFR_{MadjR} = \frac{TFR}{NRR} \times \frac{POP - P_1}{(POP - P_1) + (P_2 / NRR)}$$

위 수식은 인구이동 조정 대체출산율(TFR_{MadjR})이 인구이동이 없는

통상적인 대체출산율(TFR/NRR)과 (현재 또는 목표 인구(POP), 정지 인구의 1세대(P_1)와 2세대(P_2) 인구, 그리고 순재생산율(NRR)에 기초한) 인구이동 조정 지수($[POP - P_1] / [(POP - P_1) + (P_2/NRR)]$)의 곱으로 표시됨을 보여 준다. 국제순이동(M)이 커질수록 P_1 과 P_2 가 커지기에 다른 조건이 고정된 상태에서 인구이동 조정 대체출산율(TFR_{MadjR})은 감소하는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국제순이동 인구 집단의 이민 후 기대여명(e_{NM_j})은 성별(j)로 연령별(x) 순이동 인구에 해당 연령(x)의 기대여명을 곱한 값을 합산한 후 해당 성별의 전체 순이동 규모로 나누어 산출한다. 후속적으로 국제순이동 인구의 기대여명 지수($I_{e_{NM_j}}$)는 기대수명($e_{0,j}$) 대비 국제순이동 인구의 이민 후 기대여명(e_{NM_j})의 비로 산출된다.

$$e_{NM_j} = M \times \sum_{x=0}^{\infty} m_{x,j} e_{x,j} / M \times \sum_{x=0}^{\infty} m_{x,j} = \sum_{x=0}^{\infty} m_{x,j} e_{x,j} / \sum_{x=0}^{\infty} m_{x,j}$$

$$I_{e_{NM_j}} = e_{NM_j} / e_{0,j}$$

한편 $I_{avgB/TFR}$ 지수는 아래와 같이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당 출생아 수 대비 정지인구의 이민자당 출생아 수의 비로 측정된다. 이 지표는 연령별 출산율(합계출산율)과 함께 이민자의 성별 및 연령 분포의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이민자의 성비가 높거나 이민 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을수록 $I_{avgB/TFR}$ 지수는 감소할 개연성이 높다. 즉 이민자 중 남성 이민자의 비중이 높아지거나 여성 이민자의 이민 후에 남겨진 가임 기간이 짧으면 합계출산율 대비 이민자당 출생아 수는 감소할 개연성이 높다.

$$I_{avgB/TFR} = \frac{B/M}{TFR} = \frac{B}{M \times TFR} = \sum_{x=0}^k m_{x,1} \sum_{t=0}^{k-x} f_{x+t} i^t p_{x,1}$$

마지막으로 관측된(설정된) 출산율이 장기간 유지될 때 현(목표) 인구(POP)와 동일한 규모의 정지인구(P)가 출현하도록 하는 대체이동(M_R)의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앞에서 산출한 인구이동 조정 대체출산율(TFR_{MadjR}) 지표가 국제순이동이 어떤 수준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현(목표) 인구 규모에 상응하는 정지인구(P)가 출현하도록 하는 합계출산율 수준을 의미하는 반면에 대체이동(M_R) 지표는 합계출산율을 어떤 수준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현(목표) 인구(POP)에 상응하는 규모의 정지인구(P)가 출현하도록 하는 국제순이동 규모를 의미한다.

$$M_R = \frac{M \times POP}{P}$$

〈표 3-3〉은 위에서 논의한 수리인구학 모형을 적용하여 현 수준(2016~2020년 평균)의 국제순이동(132,942명)이 장기간 지속될 때 출현하는 정지인구의 주요 지렛값들을 보여 준다. 〈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수준의 국제순이동이 장기간 지속될 때 출현하는 정지인구는 1,125만 2천 명으로 기준 인구인 2021년 인구의 21.75%이다. 이 수치는 극한값으로 기준 인구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의 영향(예컨대, 인구 모멘텀)을 받지 않는데, 앞 절의 인구 시뮬레이션에서 2320년의 인구인 1,123만 7천 명(2021년 인구의 21.72%)과 유사한 수준이다.⁶⁶⁾ 인구 시

66) 정지인구에 관한 앞 절의 인구 시뮬레이션 모형(2320년 기준)과 이 절의 수리인구학 모형 간 총인구의 차이는 1만 6천 명 수준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구 시뮬레이션 결과가 무한대 기간에 걸친 극한값의 근사치에 해당함과 함께 인구 시뮬레이션 모형과 수리인

물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수리인구학적 접근 또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 수준(2016~2020년 평균)의 국제순이동으로는 대규모 인구 감소를 피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정지인구를 세대별로 분해하면 이민 1세대가 61%, 이민 2세대가 24%, 이민 3세대 이상이 15% 수준이다. 합계출산율(TFR) 대비 이민자당 출생아 수(B/M)의 구성비(I_{avgB}/TFR)는 29.77%로 상당히 낮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국제순이동의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97.1명)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는 기본적으로 여성 이민자의 평균 연령이 높은 점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 기초 자료로 사용된 2016~2020년의 여성 이민자 평균 연령은 33.67세로 2021년 기준의 평균 출산 연령(33.19세)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의 국제순이동 상황(여성 이민자의 평균 연령)을 전제(조건)로 하면 이민자의 출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크게 상승할 개연성은 높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표 3-3〉은 폐쇄인구에 기초한 전통적인 대체출산율 수준(TFR 기준 대략 2.1)과 비교할 때 개방인구(open population) 체계에서 2016~2020년 기간의 국제순이동(평균)이 장기간 지속될 때 현(2021년) 인구 규모에 상응하는 정지인구를 출현시키는 대체출산율(TFR_{MadjR})은 1.8 수준으로 상당히 낮음을 보여 준다. 비록 폐쇄인구에 기초한 전통적인 대체출산율 수준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TFR=0.808$)은 이러한 인구이동 조정 대체출산율(TFR_{MadjR})의 대략 45%에 불과하다.

구학 모형의 설계 과정에서 사용된 기초 자료(예컨대, 5세 단위 기초율 대 1세 단위 기초율)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20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표 3-3〉 현 국제순이동 고정 시나리오의 주요 인구학적 지표: 수리인구학 접근

(단위: 천 명, %, 가입 여성 인구 1명당 명, %, 세)

구분		지표값 (기준인구(<i>POP</i>)=2021년)	
정지인구 지표	정지인구 규모(천 명)	전체 11,252 (100.00)	
		1세대 6,871 (61.06)	
		2세대 2,671 (23.74)	
		3세대 이상 1,710 (15.20)	
	기준인구 대비 정지인구 비(%)		21.75
출산력 지표	평균 출산 연령(세)		33.19
	순재생산율(<i>NRR</i>)		0.3904
	인구이동 조정 대체출산율(TFR_{MadjR})		1.7954
	TFR_{MadjR} 대비 현 출산율 비(%)		44.99
	합계출산율 대비 이민자당 출생아 비(I_{avgB} / TFR)(%)		29.77
이동력 지표	평균 이동 연령(세)	남성 32.07	
		여성 33.67	
	대체이동(M_R)(천 명)		611
	기준인구 대비 M_R 비(%)		11.81
사망력 지표	국제이동 후 기대여명(e_{NM_j})(세)	남성 49.59	
		여성 53.72	
	기대수명 대비 e_{NM_j} 비($I_{e_{NM_j}}$)(%)	남성 61.52	
		여성 62.02	

자료: 저자 작성.

한편 국제순이동을 상수화하는 대신에 출산율을 현 수준($TFR=0.808$)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기준 인구(2021년)에 상응하는 정지인구를 출현시키는 국제순이동(M_R) 규모를 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2021년의 합계출산율($TFR=0.808$)이 장기간 지속될 때 2021년의 총인구에 상응하는 정지인구를 출현시키는 데 필요한 국제순이동 규모는 61만 1천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 국제순이동(장기)의 대략 4.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앞 절의 이민과 인구의 구성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2021년의 인구를 대체하는 수준의 국제순이동 규모(<그림 3-7>의 우측)가 바로 이 수준이다. 여기에서 국제순이동 규모가 61만 1천 명에서 장기간 고정될 때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정지인구가 2021년 총인구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총인구가 항상 2021년 수준에서 유지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현재의 연령 구조에 내재된 인구 모멘텀의 영향을 반영하며, 연령 구조로 인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기준 시점의 인구(규모)로 복귀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으로 <표 3-4>는 현 수준의 국제순이동 규모를 넘어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정지인구를 수리인구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앞의 인구 시뮬레이션 접근에서 사용한 시나리오 구성에 상응한다. 다만 <표 3-4>에서는 통계청(2023a)의 장래인구추계에서 사용된 중위 및 고위 가정에 근사하는 국제이동 시나리오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추가로 분석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망치가 변화하는 통계청의 국제이동 전망과 달리 국제순이동 규모가 고정된 모형을 사용하는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2023a) 장래인구추계의 최종 추계 연도에 해당하는 2120년의 전망치를 사용한다. 통계청(2023a)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120년의 국제순이동 중위 가정

은 36,496명이며, 고위 가정은 90,268명이다.⁶⁷⁾ 기본적으로 통계청(2023a)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에 실현될 개연성이 가장 높은 예상치의 성격을 띠며, 장래인구추계의 고위 가정은 미래에 실현될 최고 수준의 국제순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⁸⁾ 비록 이 연구에서는 체류 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한 ‘장기’ 국제이동 통계에 기초하여 기본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고위 가정(2120년 기준 90,268명)은 체류 기간 90일을 기준으로 한 2016~2020년 국제순이동 평균값(96,550명)(통계청, 2023b)에 가까운 수치이다.

〈표 3-4〉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청(2023a)의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된 국제순이동 가정을 적용한 분석 결과는 최종적으로 출현하는 정지인구의 규모가 308만 9천 명(중위 가정) 및 764만 명(고위 가정)으로 현 인구의 6%(중위 가정) 혹은 15%(고위 가정) 수준에 불과함을 보여 준다. 결국 현재의 저출산 상황에서 통계청(2023a)의 국제순이동 전망(근사치)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표 3-4〉에는 또한 현 수준의 국제순이동(기본 시나리오; 132,942명) 외에 25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수준의 국제순이동 조건하에 출현하는 정지인구의 규모를 보여 준다(출산율은 2021년 TFR 고정). 마찬가지로 현 수준의 국제순이동(기본 시나리오) 조건하에 합계 출산율이 1.3, 1.5, 1.7 수준으로 상승할 때의 정지인구와 함께 국제순이동 25만 명과 합계출산율 1.3 및 1.5의 조합 시나리오에 기초한 정지인구의 규모도 살펴볼 수 있다.

67) 참고로 통계청(2023a)의 국제이동 저위 가정은 2120년 기준으로 -11천 명으로 양(+)의 국제순이동 가정에 기초한 정지인구(SP-CI)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68) 물론 이러한 미래 전망치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수반되어 있는지를 가능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국제이동 전망에 수반된 불확실성은 출산력이나 사망력 전망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논의된다.

〈표 3-4〉 인구변동 요인 시나리오별 정지인구 지표

(단위: 천 명, 비, 가입 여성 인구 1명당 명)

유형	인구변동 요인 시나리오		정지인구 지표값($POP = 2021$ 년)			
	출산력 (TFR)	이동력 (국제순이동)	P	P/POP	M_R	TFR_{MadjR}
이민자 수용	2021년 출산율 (TFR=0.8)	통계청 중위 (36,496명)	3,089	0.0597	611	1.9941
		통계청 고위 (90,268명)	7,640	0.1477		1.8833
		기본 시나리오 (132,942명)	11,252	0.2175		1.7954
		250,000명	21,160	0.4089		1.5542
		500,000명	42,321	0.8179		1.0380
		1,000,000명	84,641	1.6357		0.0024
출산율 상승	TFR = 1.3	기본 시나리오 (132,942명)	18,434	0.3562	373	1.7954
	TFR = 1.5		24,901	0.4812	276	
	TFR = 1.7		38,374	0.7416	179	
이민자 수용 + 출산율 상승	TFR = 1.3	250,000명	34,665	0.6699	373	1.5542
	TFR = 1.5		46,826	0.9049	276	

주: 통계청(2023a) 장래인구추계의 가정은 연도별로 조정되지만, 수리인구학 모형에서는 장래인구추계 최종 연도인 2120년의 가정치를 사용함; 모든 시나리오에서 사망률은 2021년의 연령별 사망률로 고정됨.

자료: 저자 작성.

〈표 3-4〉에서 제시된 정지인구 지표는 앞의 인구 시뮬레이션 접근에서 인구추계 기간이 무한대로 확장될 때의 극한값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의 인구 시뮬레이션에서 이민자 수용 방식과 비교할 때 출산율 상승에 따른 장기 균형 상태(정지인구) 도달이 상당히 지연됨을 살펴보았는데, 〈표 3-4〉의 정지인구 지표값은 확정값의 성격을 띤다. 참고로 〈표 3-4〉의 대체이동(M_R)과 인구이동 조정 대체출산율(TFR_{MadjR}) 지표는 각각 주어진 합계출산율과 국제순이동에 기초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예컨대, 여섯 번째 열의 대체이동(M_R) 37만 3천 명은 합계출산율 1.3에 기초하여 산출된 값이며, 일곱 번째 열의 인구이동 조정 대체출산율(TFR_{MadjR}) 1.9941은 통계청의 국제순이동 증위 가정(2120년 기준 36,496명)에 기초하여 산출된 값이다. 특히 인구이동 조정 대체출산율(TFR_{MadjR})은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양(+의 국제순이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구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출산율이 전통적인 대체출산율(대략 2.1)에 비해 상당히 낮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 절의 인구 시뮬레이션에서는 현재의 출산율 수준(2021년 TFR = 0.808)을 전제로 국제순이동을 50만 명 혹은 10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정책 방안이라는 점에서 국제순이동 규모의 증가와 병행하여 출산율이 일정한 수준까지 회복되는 시나리오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살펴본 바 있다. 〈표 3-4〉의 분석 결과는 연간 국제순이동(장기)이 현 수준의 2배 정도인 25만 명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합계출산율이 1.3 수준으로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인구는 2021년 인구의 대략 67%인 3,466만 5천 명에 이를 것임을 보여 준다. 더 나아가 합계출산율이 1.5 수준까지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인구는 2021년 인구의 대략 90%인 4,682만 6천 명에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분석된다. 5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이민자 수용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지임을 전제한다면 출산율의 유의미한 회복 없이 이민을 통해 인구 변동의 안정성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제4절 종합 및 소결

이 장에서는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이민의 파급 효과를 인구 시뮬레이션과 수리인구학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최근 미국의 국제순이동 수준(100만 명)에 상응하는 대규모의 이민자를 수용하더라도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되돌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고령화의 추가적인 진행을 막는 것도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렇게 인구의 연령 구조 변화에 대한 이민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이민자 또한 이민 수용국에서 고령화된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민을 통해 인구 고령화의 추세를 되돌리거나 추가적 진행을 저지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이민자 규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Coleman(2008, p. 467)은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에 의존하는 것은 폰지 게임(Ponzi game)과 유사함을 지적한다.

인구 고령화와 비교할 때 이민자 수용은 인구 감소를 억제하는 데 잠재적으로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이 지속될 때 현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수리인구학 모형 기준 61만 1천 명)의 이민자를 지속해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대규모 이민 수용국들의 과거 경험이나 국제이동의 최근 동향을 고려할 때 이는 실현 개연성이 극히 희박한 논의이다. 더욱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우리

나라에서는 대규모 이민자 유입을 전제해야 하는 동시에 인구의 구성에서도 이민이 큰 파급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원주민의 출산율이 낮을수록 대규모 이민자 수용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걸쳐 인구의 인종·민족, 언어, 종교 등에서 큰 변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인구 구성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 감소가 초래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촉발할 수 있다(Teitelbaum and Winter, 1985, p. 150). 이러한 맥락에서 Coleman(2006, pp. 424-428)은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대규모 이민자 수용이 장기간 지속되면 이른바 ‘제3차 인구변천’(third demographic transition)이 전개될 가능성을 논의한다. 대규모 이민자 수용에 따라 우리나라가 경험하게 될 인구학적 변화는 원주민의 출산율이 상당히 높은 미국은 물론 최근 들어 초저출산 상황에서 벗어난 상당수 유럽 국가와도 큰 차이가 있다. 원주민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이민자가 지속해서 유입되면 이민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은 더욱 민감해질 개연성이 높다. 특히 이민자 집단의 절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민자가 원주민 사회에 적응할 유인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 Coleman(2008, p. 469)이 지적하는 것처럼 장기간 저출산 현상에 직면한 국가가 일정한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대규모 이민자 수용 방안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에서 중대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대규모의 ‘영구적’ 이민자 수용 대신에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처럼 ‘한시적’ 성격의 이민자를 수용하는 접근이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한시적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이민정책은 고령화되는 이민자를 이민 송출국으로 귀환시킨다는 점에서 인구 감소는 물론 인구 고령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한시적 성격의 이민

정책을 설계했던 국가들의 사례는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Espenshade, 1994, p. 764). 애초에 영구적 정착을 의도하지 않은 한시적 이민자의 상당수가 이민 수용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영구적 이민자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허가제 같은 한시적 성격의 이민정책은 이민 수용국이 이민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역량을 요구하지만, 우리나라의 현 상황처럼 원주민 인구가 지속해서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여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원주민의 인구학적 조건이 자체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전체 인구가 궁극적으로 이민자 배경 인구로 대체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민이 인종·민족, 종교, 언어 등 인구의 구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현재와 같은 세계화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국수주의적인 논의로 들릴 수 있지만, 이민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사안이다. 이민의 이러한 측면을 이해한다면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조절(통제)하는 수단으로 이민을 생각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참고로 이 연구의 인구 시뮬레이션에서는 현 수준의 ‘장기’ 국제이동에 기초하여 기본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는 이 연구가 인구변동의 장기적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관련되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대규모 이민을 고려하는 접근이 기본적으로 이민자의 영구적 정착을 전제하는 것과는 맥락을 같이 한다. 만일 고용허가제처럼 한시적 이민을 중심으로 국제순이동 규모를 확대하더라도 (인구동태율 등 기본 가정이 유지되는 한) 인구의 규모와 연령 구조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한시적 이민이 중심을 이룸으로써 영구적 이민 방식에 비해 (체류 기간의 만료로 인한) 유출 규모가 커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유입 규모도 커질 것이다(국제순이동 규모는 동일). 또한 원주민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한시적 이민자가 차지하는 구성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원주민 등 영구 정착 인구가 급감하는 조건에서 한시적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상당수를 구성하는 인구학적 상황이 도래하여 유지될 개연성은 높지 않다.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관한 이 장의 분석은 충분한 규모의 이민자가 언제든지 활용 가능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개발도상국의 출산율이 상당히 높고 인구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민자 후보군이 충분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같은 방식으로 대규모의 이민자를 주기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접근은 이민정책의 현실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민을 통해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면 이민자의 인적자원 같은 질적 측면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수용할 수 있는 이민자 후보군은 기본적으로 이민 수용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가 선택한 결과일 개연성이 높다. 고학력-고숙련 이민자 수용을 이민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군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직면하여 이민을 고려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이민 목적지로서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영구 정착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같은 한시적 이민에 초점을 맞추는 현재의 이민정책 기조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규모’의 고급 이민자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할 개연성이 높다.

최근 들어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적자원 수준이 높은 이민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접근일 수 있음이 지적되지만(Marois et al., 2020, p. 7690),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접근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민을 고려할 때 고학력 및 고숙련 이민자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에 모든 국가가 고학력 및 고숙련 중심의 이민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이민자의 구성과 특성은 국제이동의 전 세계적 구조에서 이민 수용국이 차지하는 위치와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이민 수용국이 선제적으로 이민자를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선하여 이루어지는 이민자의 이민 수용국 선택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그들을 수용할지를 결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둘째,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선별적 이민 기제의 사용을 제안하는 주장은 원주민과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스웨덴 수준으로 높일 것을 제안하지만, 이 또한 쉬운 과제가 아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향상은 경력 단절 문제의 해소 등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점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향상 문제 또한 쉬운 일이 아님을 시사한다. 한편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해 근로생애 연장이 강조되는 상황이지만,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근로생애 연장이 모든 고령층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기에 근로생애 연장의 세부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수 있음이 지적된다(Taylor, 2019, p. 102). 이러한 점에서 Phillipson(2019, p. 629)은 일자리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고령층의 근로생애를 연장하는 정책의 전제 조건임을 지적한다.

셋째, Marois et al.(2020, p. 7691)의 EU 28개 회원국 사례 분석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15년의 1.6에서 상승하여 2060년에는 1.8까지 상

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있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민자 수용과 함께 합계 출산율이 1.3 혹은 1.5 수준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1.3 혹은 1.5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는 것도 쉽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이민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민도 노동력 부족 문제의 완화 등 일정 수준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같은 인구학적 조건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의 이민정책은 타당성이나 실현 개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비록 인구학적 불균형이 현재와 미래에 국제 이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지만, 인구학적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이민정책의 중심에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민으로 인한 국내적 및 국제적 파급 효과는 인구학적 불균형이 초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인구학적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민정책이 아니라 해당 문제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영역별 접근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으로 제한적이더라도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여 이민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비전과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장

이민자의 혼인과 출산

- 제1절 서론
- 제2절 이민과 혼인
- 제3절 이민과 출산
- 제4절 종합 및 소결



제4장 이민자의 혼인과 출산

제1절 서론

저출산이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민자의 혼인과 출산 문제는, 첫째, 저출산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⁶⁹⁾ 이는 이민자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민자의 출산율이 원주민에 비해 높은 상황을 전제로 한 이민의 ‘간접적인’ 파급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상의 제약은 물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민자 흐름(구성)에서 나타나는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원주민과 이민자의 출산력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은 현재까지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⁷⁰⁾ 둘째, 이민자의 혼인과 출산은 이민 수용국에서 이민자의 적응 및 사회 통합을 보여 주는 지표의 의미를 지닌다. 비록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이 연구에서 검토하지는 못하지만, 이민자의 가족 해체 문제 또한 이민자의 적응과 사회 통합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물론 이민자의 적응과 사회 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장의 주제처럼 이민 수용국에서 나타나는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과 특징을 자세히 관찰할 필

69) UN(2022a)의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37개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추정치)이 대체출산율 미만이다.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추정치) 평균은 1.59 수준이다.

70) 국내에서는 이민자의 출산력이 원주민에 비해 낮거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는 연구(김두섭, 2008; 김현식, 2015)가 있는 반면에 원주민보다 출산력이 높음을 보고하는 상반된 연구(유정균, 2015)도 있다. 이민자의 코호트(완결) 출산율이 원주민에 비해 낮지만, 기간 합계출산율은 원주민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다(유삼현, 2017). 원주민과 이민자 출산력의 단순 비교를 넘어 최근에는 출신 국적 등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김현식, 2018).

요가 있다.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는 이 보고서에서는 인구학적 행동 관련 세부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대신에 이민자의 혼인과 출산 전반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결혼 이민자 같은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이민자의 혼인과 출산 패턴에 관한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이 장에서 검토하는 혼인과 출산은 물론이거니와 제5장의 국내이동과 공간적 분포(집중)에서도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을 분석하기에 세부적인 분석에 앞서 이민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민자(저량)의 정의에서 출생지(country of birth)와 국적(country of citizenship) 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출생지에 기초한 정의(foreign-born persons)가 이민자(저량)에 관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측정치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내 출생 이민자(native-born immigrants)가 제외되는 등 출생지 정보만으로 이민자를 엄밀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민자에 대한 정의에서는 부모의 국적 정보를 추가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선행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정보가 제공되면 원주민 부모가 외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출생지가 외국이더라도 원주민으로 분류하는 모습을 보인다(Lichter and Johnson, 2006, p. 116; Malone, Baluja, Costanzo, and Davis, 2003, pp. 1-2; Perry and Schachter, 2003, p. 2).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에서는 출생지와 부모의 국적 조건을 모두 적용하여 이민자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출생 시 국적이거나 현재의 국적이 외국일 때만 대한민국 입국 시점 정보를

조사하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는 기본적으로 ‘출생지’가 아니라 ‘국적’에 기초하여 국제이동을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적을 기준으로 현재 국적이 ‘외국’인 개인(외국인)을 이민자로 정의하되, 출생 시 국적이 외국이지만 귀화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개인(귀화인)을 이민자 범주에 추가로 포함한다.⁷¹⁾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적이 속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적에 기초한 접근이 부모의 국적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한편 출생지 기준에 부모의 국적을 비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접근(각주 71 참고)에 비해서도 조작적 정의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향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에서는

71) 참고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에서도 ‘출생지’ 정보는 제공된다. 비록 가구 정보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부부(Korean couple) 혹은 부/모(mixed-nationality couple)에 속한 국외 출생 자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에서 전체 국외 출생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국적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예컨대, 출생지 기준(국내/국외)으로 이민자를 정의하면 출생지가 외국이지만 출생 국적과 현재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인 표본 71,275명이 관측되는데, 이들의 과반은 1945년 이전에 출생한 고령자이다. 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의 설문 구조상 대한민국 입국 연월 정보는 출생 시 혹은 현재의 국적이 외국일 때만 수집되기에 이들의 경우 출생지가 외국임에도 입국 시점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비록 출생지가 외국이지만 출생 국적과 현재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인 사례(71,275명)는 부모(부/모)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개연성이 상당하다. 출생지(국내/국외)에 기초한 접근과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외국인과 귀화인의 합으로 이민자를 정의하는 접근이 일치하지 않는 또 다른 집단이 있는데, 이들은 국내 출생자이지만 출생 혹은 현재 국적이 외국인 개인들이다(7,964명). 이들의 대부분은 출생 국적이 대한민국이지만 현재 국적이 외국인 개인들이다(7,897명). 나머지 67명 중에서 66명은 출생 국적과 현재 국적이 모두 외국이며, 1명은 출생 국적이 외국이지만 현재 국적이 대한민국이다(귀화인). 우리나라가 국적 취득에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함을 고려할 때 출생 국적이 대한민국이지만 현재 국적이 외국인 개인들(7,897명)도, 출생지가 외국이지만 출생 국적과 현재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인 사례(71,275명)와 마찬가지로 부모(부 또는 모)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출생 국적이 외국인 67명은 부모의 국적이 모두 외국인 개인들의 자녀일 개연성이 높다. 참고로 외국인과 귀화인을 이민자로 정의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에서 이민자의 구성비(가중치 적용)는 3.76%이다(전체 표본 9,781,025명, 이민자 318,468명). 반면에 출생지 기준을 적용하면 이민자의 구성비는 4.27%이다. 만일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되 출생 국적과 현재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인 국외 출생자(71,275명)를 원주민으로 분류하고, 국내 출생자 중 출생 국적이 외국인 67명을 이민자로 분류하면 이민자의 구성비는 3.65%로 외국인과 귀화인의 합으로 이민자를 정의하는 접근과 큰 차이가 없다.

출생지와 함께 출생 당시 부모의 상주지(국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이민자에 대한 좀 더 엄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민의 인구학적 쟁점(제2장)에서 논의했듯이 이민과 혼인 및 출산 생애 분석에서는 이민 과정에서 작동하는 선별성(selectivity)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이민자 수용의 역사가 짧지만,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이민자도 국적 등에서 상당히 다양하다. 동일한 이민 송출국 출신 이민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민의 목적 등 그 구성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2005년에 42,356건(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30,719건, 한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 11,637건)으로 정점을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15,341건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2022년 현재 16,666건). 국제결혼 배우자의 출신 국적에서도 변화가 있다. 2005년을 중심으로 남녀 모두 중국 국적 배우자가 가장 많았지만, 2022년 현재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 외국인 남편의 출신 국적은 미국이 가장 많다(통계청, 2023j, 2023k). 여성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 ‘결혼 이민’(F-6)과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의 구성비가 높았지만,⁷²⁾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방문 취업’(H-2), 2010년대 초중반 이후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구성비가 크게 높아지는 패턴을 보인다(통계청, 2023l).⁷³⁾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제이동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위 분석에서 모든 시기에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인구학적 패턴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국제이동의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이 장에서는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20%) 자료를 활용하여 이민자의 혼인과 출산 패턴을 살

72) 결혼 이민은 2011년에 거주(F-21)에서 별도의 체류자격(F-6)으로 분리되었다.

73) 여성과 비교할 때 남성은 결혼 이민 대신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2010년대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통계청, 2023l).

펴본다. 참고로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에서 출산 경험은 만 15세 이상 기혼 여성에게만 질문이 이루어진다. 다만 아시아계 이민자가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원주민과 이민자 여성 모두에서 미혼 출산의 개연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주제에 따라 분석 대상자가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표 4-1>은 이 장의 기간(period) 및 코호트(cohort) 분석 대상자의 상당수를 아우르는 1950~2005년 출생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여 준다.⁷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은 15~70세에 해당한다.⁷⁵⁾ 전체적으로 이민자의 연령과 교육 수준이 원주민보다 낮다. 혼인 상태는 성별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민자 남성의 미혼 구성비가 원주민 남성보다 높지만, 여성은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고용 상태에서 이민자 남성은 원주민 남성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뚜렷이 높지만, 자영업과 비취업의 비중이 낮다. 반면에 이민자 여성은 원주민 여성에 비해 자영업의 비중이 낮지만, 임금근로자와 비취업의 비중이 다소 높다. 취업자의 종사 산업을 보면 이민자 남성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높으며, 이민자 여성은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의 비중이 높다. 거주 지역에서는 남녀 모두 이민자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구성비가 원주민보다 높다. 가구 형태에서는 이민자 남성에 비해 이민자 여성이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구성비가 높다. 세대 구성에서는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비가 낮은 반면에 1인 가구의 구성비가 높은 모습을 보인다. 이민자의 출신 국적은 한국계(조선족)를 포함

74) 혼인과 출산에 관한 이 장의 분석이 이산형 생존모형(discrete-time survival model)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실제 분석 대상은 개인 단위 자료(person-level data)가 아니라 개인-기간 자료(person-period data)이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절에서 설명한다.

7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에서는 조사 시점 기준으로 응답자의 연령 정보가 제공되지만, 출생 시점(연도-월)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연도)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연령을 역산하여 출생 연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러한 접근은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를 활용하는 제5장에서도 동일하다.

한 중국이 40% 전후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베트남, 태국 등의 순서를 보인다. 분석 대상자의 입국 연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집중되는데, 특히 남성은 2016~2020년 기간에 걸쳐 입국한 이민자의 구성비가 절반을 넘는다.

〈표 4-2〉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출신 국적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출신 국적은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을 보여 주는 핵심 준거 변수이다.⁷⁶⁾ 자료상의 한계로 원주민과 대비하여 이민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표 4-2〉는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이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 준다.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남성), 미국(여성) 출신자는 15~30세 연령대의 구성비가 40% 이상이다. 반면에 중국, 특히 한국계 중국 출신자는 고연령대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인다. 교육 수준에서는 미국과 베트남 출신자의 대졸 구성비가 상당히 높지만,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태국(남성), 베트남은 중졸 이하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미혼 구성비가 높지만, 미국 출신자는 남녀 모두 미혼이 50% 이상이다. 고용 상태에서도 출신 국적별 차이가 관측되지만, 성별 격차가 좀 더 뚜렷하다. 종사 산업은 성별 차이와 출신 국적별 차이가 모두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필리핀 남성 이민자는 제조업 종사자가 대략 85%이지만, 미국 남성 이민자는 교육 분야 종사자의 비중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다. 마지막으로 입국 연도에서는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출신 국가에서 최근 입국자의 구성비가 높은 패턴을 보인다. 특히 태국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2016~2020년 기간에 입국한 이민자의 구성비가 70% 이상이다.

76) 한편 이민자의 특성 분석과 관련하여 연령별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출신 국적 외에 추가로 귀화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표 4-1〉 원주민과 이민자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 1950~2005년 출생자

(단위: %, 명)

구분		원주민		이민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연령	15~30세	24.31	24.06	31.63	28.42
	31~40세	18.09	17.19	30.69	27.28
	41~50세	20.94	20.61	17.37	18.30
	51~60세	21.52	21.89	13.55	17.06
	61~70세	15.15	16.24	6.74	8.9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2.46	15.49	19.95	21.61
	고졸	42.36	42.52	57.67	52.11
	전문대졸	12.18	13.36	6.31	6.96
	대졸 이상	33.01	28.62	16.07	19.32
혼인 상태	미혼	38.68	30.45	44.02	23.23
	유배우	54.92	57.94	52.60	67.29
	사별/이혼	6.40	11.61	3.38	9.47
고용 상태	임금근로	56.30	44.02	75.95	45.95
	자영업/무급종사	16.82	11.48	4.09	6.33
	비취업	26.88	44.51	19.96	47.72
종사 산업	농림어업	3.54	3.05	6.21	5.70
	제조	22.64	11.30	47.24	27.59
	건설	10.06	2.03	16.96	2.67
	도소매	12.81	14.60	5.75	10.43
	운수/창고	7.89	1.80	2.27	1.16
	숙박/음식점	5.56	11.91	5.09	22.58
	금융/보험	2.93	4.48	0.79	1.85
	전문/과학/기술	4.92	4.06	1.44	2.01
	사업시설/임대	4.45	4.14	5.04	4.78
	공공행정	5.64	4.55	1.14	1.72
	교육	3.94	10.74	2.92	6.04
	보건/사회복지	2.70	15.45	0.60	5.45
	협회/단체/개인	3.49	4.46	1.25	3.21
	기타	9.42	7.43	3.32	4.80
거주 권역	수도권	50.10	51.39	60.02	61.77
	중부권	13.94	13.30	12.88	12.41
	호남권	9.62	9.30	7.12	7.80
	영남권	25.08	24.79	18.43	16.53
	제주도	1.26	1.23	1.55	1.49

140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구분		원주민		이민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구 형태	일반	98.52	98.89	16.40	45.88
	집단시설/집단	1.48	1.11	6.72	2.69
	외국인	0.00	0.00	76.88	51.43
세대 유형	부부	14.46	16.39	16.24	23.30
	부부+자녀	46.78	44.52	13.94	25.76
	부/모+자녀	9.07	12.65	2.62	5.61
	부부+자녀+부/모	3.22	3.37	3.16	8.20
	1인 가구	16.00	13.12	31.83	20.35
	기타	10.47	9.95	32.20	16.76
출생 시 국적	중국	-	-	11.23	18.65
	중국(한국계)	-	-	29.41	29.51
	필리핀	-	-	2.41	3.61
	태국	-	-	5.48	8.40
	베트남	-	-	10.66	16.16
	몽골	-	-	1.90	2.23
	우즈베키스탄	-	-	4.08	2.16
	미국	-	-	1.90	1.91
	기타/미상	-	-	32.93	17.38
입국 연도	1995년 이전	-	-	3.30	4.47
	1996~2000년	-	-	3.99	6.08
	2001~2005년	-	-	5.20	8.91
	2006~2010년	-	-	13.14	19.20
	2011~2015년	-	-	19.78	21.52
	2016~2020년	-	-	54.59	39.82
표본 규모		3,556,645	3,492,824	156,647	139,034

주: 권역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로 구분하며, 서울·인천·경기는 수도권,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은 중부권, 광주·전북·전남은 호남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은 영남권으로 분류함; 중사 산업은 취업자(임금근로/자영업/무급중사)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 유형은 집단시설/집단 가구를 제외함; 세대 유형에서 자녀는 미혼 자녀를 의미하며, 부부+자녀+부/모에서 부/모는 양친을 포함함;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구성비(%)는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분포임.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142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구분	남성										여성									
	중국	중국 (한국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미국	기타 미상	중국	중국 (한국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미국	기타 미상		
	농림어업	2.57	0.67	0.90	12.84	13.03	2.05	1.16	0.55	10.09	2.30	0.83	5.40	17.91	10.87	2.58	1.31	0.66	9.23	
제조	26.76	32.20	85.08	65.85	51.50	43.20	60.09	8.39	57.83	21.19	21.02	46.19	36.94	42.93	23.54	46.77	3.72	25.22		
건설	29.81	35.59	2.97	5.04	10.26	11.33	10.06	2.34	4.98	3.88	4.17	0.69	1.07	1.20	2.23	3.43	0.20	1.21		
도소매	8.21	6.34	2.26	3.28	4.11	8.85	5.35	10.45	5.50	14.92	10.28	6.92	7.49	8.57	11.94	8.98	7.55	10.78		
운수/창고	3.53	2.96	0.85	1.07	1.97	10.41	2.89	2.00	1.42	1.48	1.07	0.48	1.15	0.87	2.55	1.70	0.67	1.30		
숙박/음식점	10.10	6.76	0.80	2.25	7.01	3.68	3.24	3.75	3.10	25.50	34.13	12.39	13.97	17.99	17.44	12.88	4.87	11.01		
금융/보험	1.03	0.73	0.35	0.44	0.68	0.68	0.73	2.69	0.83	2.33	2.25	1.08	0.61	1.20	2.38	1.74	1.83	2.02		
전문/과학/기술	1.39	0.91	0.62	0.24	0.71	1.28	0.81	7.02	2.18	2.11	1.42	0.98	1.37	1.11	2.33	2.39	6.34	3.97		
사업시설/임대	7.94	7.59	1.00	4.13	4.02	8.28	7.34	1.94	2.71	5.10	6.04	3.36	4.50	2.46	11.03	7.13	1.59	3.71		
공공행정	1.42	1.03	0.96	1.31	1.63	1.76	1.57	2.01	0.91	2.00	1.35	1.97	1.46	1.76	2.48	2.04	2.14	2.12		
교육	1.52	0.40	0.97	0.34	1.09	1.41	1.40	42.58	4.92	5.00	1.92	8.26	1.47	2.33	7.65	2.76	58.02	15.04		
보건/사회복지	0.59	0.76	0.22	0.22	0.46	1.07	0.41	1.95	0.55	5.64	6.19	6.27	3.68	4.19	6.04	4.27	3.73	6.02		
협회/단체/개인	1.77	1.51	1.23	0.66	1.10	1.52	1.33	2.31	0.98	3.69	3.33	2.30	5.19	2.15	3.69	2.16	2.32	2.57		
기타	3.36	2.55	1.79	2.34	2.45	4.49	3.60	12.00	4.02	4.88	6.00	3.70	3.21	2.37	4.13	2.44	6.36	5.80		
수도권	64.12	82.74	56.26	43.31	34.59	68.06	40.71	68.27	51.08	66.55	84.33	41.12	39.44	36.31	68.04	52.47	70.77	56.45		
중부권	11.15	8.39	12.93	18.61	15.43	11.58	20.62	9.21	15.01	10.21	7.10	17.31	18.36	16.61	12.18	20.75	9.48	15.28		
호남권	7.22	1.81	6.85	13.71	13.43	6.81	11.63	4.26	8.33	6.69	1.93	14.52	14.36	14.95	7.47	8.06	4.09	8.15		
영남권	14.84	6.58	23.17	23.68	34.81	12.96	26.98	15.33	23.15	13.69	6.04	25.04	27.35	30.24	11.55	18.08	13.14	18.49		
제주도	2.67	0.48	0.79	0.69	1.74	0.59	0.06	2.93	2.42	2.86	0.61	2.01	0.49	1.87	0.76	0.65	2.51	1.63		
일반	28.85	13.57	11.12	5.04	17.34	7.79	5.72	53.85	16.33	54.60	25.37	80.75	43.50	71.24	27.48	22.78	49.24	46.53		
집단시설/집단	5.74	1.27	12.41	6.58	11.99	4.73	6.41	4.25	10.10	3.64	0.40	1.17	0.80	4.26	4.02	1.37	4.50	5.15		
외국인	65.41	85.16	76.47	88.38	70.66	87.49	87.87	41.90	73.57	41.76	74.23	18.08	55.70	24.51	68.51	75.86	46.26	48.33		

구분	남성						여성											
	중국 (한국계)	중국 (한국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미국	기타 미상	중국	중국 (한국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미국	기타 미상
부부	16.95	28.24	5.95	12.86	9.45	17.25	10.57	16.83	8.33	22.13	32.04	12.99	28.88	13.77	18.90	17.95	11.27	19.97
부부+자녀	16.68	18.45	5.74	1.20	7.05	20.61	14.34	35.13	11.75	26.15	19.55	41.09	15.79	30.64	28.66	29.33	32.09	32.02
세대 유형	4.39	4.49	0.52	0.08	0.38	1.57	2.54	5.47	1.37	6.19	7.16	6.20	1.39	3.69	5.03	8.48	6.38	5.66
부부+자녀+부/모	4.17	4.84	1.38	0.26	7.03	0.78	1.71	2.58	0.93	6.48	6.89	14.19	3.76	18.76	3.12	6.01	2.02	5.09
1인 가구	36.79	29.38	31.11	34.62	33.30	36.64	41.14	30.60	30.14	23.29	19.89	10.36	24.71	13.67	27.23	23.64	37.50	21.01
기타	21.02	14.60	55.30	50.97	42.79	23.14	29.70	9.39	47.49	15.75	14.47	15.17	25.48	19.48	17.06	14.60	10.75	16.24
1995년 이전	3.15	3.79	1.56	0.39	1.41	0.48	1.07	13.02	4.02	5.24	3.87	3.39	1.85	1.92	2.23	1.98	12.25	8.26
1996~2000년	4.97	7.58	1.60	0.80	1.44	1.80	1.22	7.10	2.27	8.58	8.50	9.33	2.76	1.52	3.76	1.68	7.10	5.21
2001~2005년	7.41	9.93	1.70	0.80	1.33	1.41	1.06	12.38	2.78	12.09	12.90	10.64	3.89	4.66	5.61	4.24	11.11	5.48
2006~2010년	17.69	26.60	5.84	1.45	6.98	7.55	6.28	16.18	5.04	22.07	27.54	21.73	4.83	19.84	13.73	11.28	10.80	10.36
2011~2015년	24.19	27.44	15.89	10.86	15.08	17.54	18.39	18.67	15.08	20.21	26.50	26.08	13.31	20.95	16.54	26.20	15.81	18.72
2016~2020년	42.59	24.65	73.42	85.70	73.76	71.24	71.98	32.65	70.80	31.79	20.69	28.83	73.36	51.11	58.12	54.62	42.92	51.97
표본 규모	23,290	41,836	4,113	5,685	19,499	2,259	7,019	3,132	49,814	33,110	38,259	4,942	3,583	24,976	2,548	3,496	2,971	25,149

주: 권역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로 구분하며, 서울 인천 경기는 수도권,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은 중부권, 광주·전남·전북·전남은 호남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은 영남권으로 분류함; 종사 산업은 취업자(임금근로/자영업/무급종사)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 유형은 집단시설/집단 가구를 제외함; 세대 유형에서 자녀는 미혼 자녀를 의미하며, 부부+자녀+부/모에서 부/모는 양친을 포함함;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구성비(%)는 인구 가족치를 적용한 분포임.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J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 서 원적 접근 서비스(RAS) 분석.

제2절 이민과 혼인

원주민과 이민자의 혼인 패턴에 관한 분석은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에서 수집된 초혼 연령 정보를 활용한다. 인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에 기초하여 혼인과 출산까지의 ‘기간’(duration)을 분석할 때는 특정 집단이 선택되거나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분석 대상의 선별성(selectivity) 문제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개인들을 조건으로) 관측 기간의 종료로 인해 조사 시점 이후의 혼인이나 출산 정보를 관측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료 절단(censoring)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다. 후자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생명표 모형(life table model)을 사용한다. 인구학에서 널리 활용되는 인구분석 도구인 생명표 모형은 관측 기간의 종료로 인한 자료의 절단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한 생존모형(survival model)의 특수화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⁷⁷⁾

이 연구의 생명표 모형에서는 ‘특정 집단’에 속한 인구학적 사건을 집단적으로 분석하는 코호트(cohort) 접근과 ‘특정 기간’에 속한 인구학적 사건을 횡단적으로 분석하는 기간(period) 접근을 모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코호트 접근은 혼인 생애를 완료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기에 장기간에 걸쳐 관측된 자료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계로 시의성 있는 분석 결과를 산출하는 목적으로는 기간 접근이 대안으로 활용된다. 다만, 기간 접근에서는 특정 기간에 걸쳐 다양한 출생 코호트의 생애 경험이 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 코호트’(real cohort)가 아닌 ‘가상 코호

77) 통계청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방법과 달리 생존모형을 통해 생명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생존모형은 전통적인 생명표 모형과 비교할 때 연령 외의 다른 요인들을 추가로 통제한 상태에서 사건 발생의 여부와 발생한 사건의 시간적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트'(synthetic cohort)의 생애 경험과 관련됨에 유의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회고적 자료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인 관측 대상의 선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관측된 '전체' 자료를 사용하는 대신에 미리 설정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 자료(sub-set)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⁷⁸⁾ 우선, 코호트 분석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준거 시점을 기준으로 49세까지의 혼인 생애를 완료한 동시에 사망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1951~1970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다.⁷⁹⁾⁸⁰⁾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진 2020년을 기준으로 이들 코호트는 50~69세에 해당한다. 한편 기간 분석에서는 '연도'를 기준으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2019년을 준거점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충분한 생애 사건 정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연도별 변이를 평활화하는 차원에서 2015~2019년의 5년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다.⁸¹⁾ 세부적인 분석 대상 자료(person-period data)의 구축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2015~2019년의 '기간' 조건과 10~49세의 '연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 집합(risk set)을 구성하는 한편 해당 위험 집합에서 발생한 사건(초혼)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코호트 분석과 기간 분석의 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4-1]의 렉시스 다이어그램(Lexis Diagram)처럼 표시

78)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Rindfuss, Palmore, and Bumpass(1982)와 Rodriguez and Hobcraft(1980)를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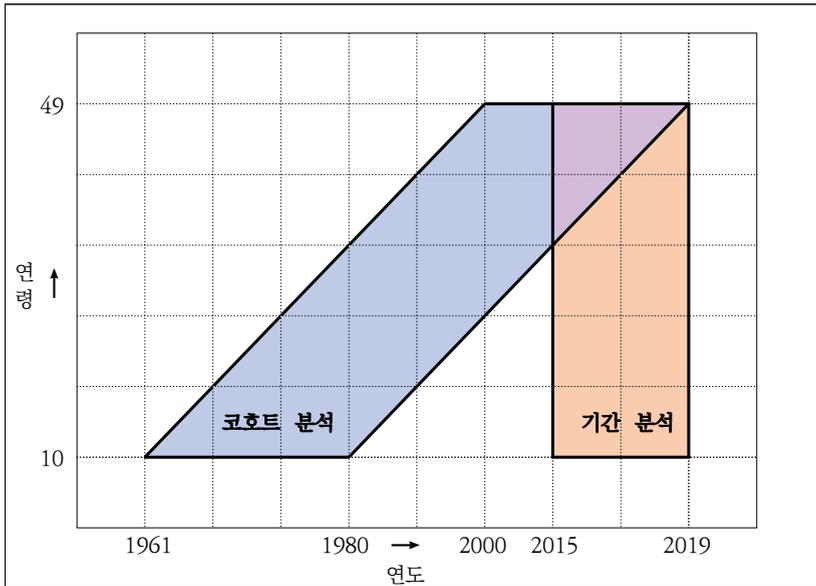
79) 코호트(1951~1970년생) 분석의 전체 표본은 2,859,292명이다. 원주민은 남성 1,376,991명, 여성 1,414,959명이며, 이민자는 남성 31,396명, 여성 35,946명이다.

80) 차별 사망력 문제는 회고적 자료에 기초한 기간 분석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분석 대상 연령대(15~49세)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큰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는다.

81) 기간 분석의 대상은 2015~2019년 기간에 15~49세에 해당하는 개인들인데,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는 11~54세이다. 개인 기준으로 분석 대상 전체 표본은 5,475,581명이다. 원주민은 남성 2,670,618명, 여성 2,551,979명이며, 이민자는 남성 136,883명, 여성 116,101명이다. 참고로 이 연구가 이산형 생존모형을 사용하기에 실제 분석 단위는 개인(person)이 아니라 개인-기간(person-period or person-year) 레코드임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할 수 있다. 참고로 세부적인 범위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다음 절에서 검토하는 이민과 출산에서도 분석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위에서 언급한 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림 4-1] 코호트 분석과 기간 분석 틀: 렉시스 다이어그램



혼인 생명표(nuptiality table)의 작성은 이산형 생존모형(discrete-time survival model)에 기초한다.⁸²⁾ 보 로그-로그 연계함수(complementary log-log link function)에 기초한 이산형 생존모형은 아래의 수식처럼 표시할 수 있다. 기본 모형에서 기준선 해저드 함수(baseline ha

82) 기술적인 측면이 강한 관계로 여기에서는 생존모형을 활용한 생명표 작성의 세부적인 설명은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생명표 작성 및 생명표와 생존모형의 관계에 대해서는 Preston, Heuveline, and Guillot(2001)을 참고하기 바란다(제3장). 생존모형을 활용한 생명표 작성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우해봉, 이지혜(2019)를 참고할 수 있다(제2장).

zard function)는 더미 변수 접근(dummy variable approach)을 사용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해저드 함수(hazard function)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49세까지 관측된 혼인 패턴을 분석한다. 비록 혼인이 생애의 어떤 단계에서도 가능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출산 패턴 분석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 49세를 상한으로 설정한다.

$$\log(-\log(1-h(t_j))) = \sum_{j=10}^{49} \alpha_j D_j$$

기본 모형에 추가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출신 국적별 혼인 패턴을 살펴본다. 사례 수가 줄어드는 출신 국적별 분석에서는 더미 변수 접근 대신에 함수형 접근(functional approach)을 통해 기준선 해저드를 표시한다. 더미 변수 접근에 기초한 모형화 결과([그림 4-2]의 q_x)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준선 해저드는 대체로 포물선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차함수 형태의 해저드 함수를 사용한다. 기본 모형과 마찬가지로 혼인(초혼) 위험을 측정하는 시간 변수로 연령을 사용하되 10세 기준으로 중심 이동(centering)을 한다.

$$\log(-\log(1-h(t_j))) = \alpha_0 + \alpha_1(Age_{ij} - 10) + \alpha_2(Age_{ij} - 10)^2$$

<표 4-3>과 <표 4-4>는 1951~1970년 기간에 출생한 원주민(전체)과 이민자(전체)의 혼인 생명표를 보여 주며, [그림 4-2]와 [그림 4-3]은 10년 단위로 정의된 출생 코호트별로 세분화된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표

4-5)는 전체 및 출생 코호트별 분석 결과 요약). 참고로 <표 4-3>과 <표 4-4>에서는 지면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생존 인년 수(L_x : number of person-years lived)와 총 생존 인년 수(T_x : total number of person-years lived) 지표를 생략하였지만, 통상적인 생명표 작성 절차에 따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표 4-3>과 <표 4-4>에서 미혼 인구(생명표 l_x 함수; number of single persons alive at the start of age x)의 연령별 패턴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49세 기준으로 정의된 생애 혼인율(never-married rate)에서 이민자의 생애 미혼율이 높은 패턴을 보이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예컨대, 49세까지 미혼으로 남아 있는 개인들의 구성비는 원주민 남성이 9.448%(9,448/100,000×100=9.448%), 이민자 남성이 9.530%로 그 차이가 미미하다. 한편 <표 4-3>과 <표 4-4>의 q_x 함수는 연령별 조건부 혼인 확률(해저드), 즉 해당 연령(exact age x)에 도달하기 이전에 혼인하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연령(x)에서 혼인할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을 의미하는데, 남녀 모두 이민자가 혼인을 일찍 시작하는 패턴을 보인다. 예컨대, 원주민 남성의 초혼 해저드가 29세에 정점을 찍지만, 이민자 남성은 26세의 초혼 해저드가 가장 높다. 비록 이민자가 일찍 혼인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20대 중후반 이후 원주민의 혼인 확률이 이민자를 넘어서는 모습이 관측된다. 30대 중후반 이후에는 이민자의 혼인 확률이 또다시 원주민보다 높은 모습이 관측된다. 성별을 구분해서 보면 원주민과 이민자 간 혼인 속도에서의 차이는 남성에서 더욱 뚜렷하다. 혼인자(d_x)의 분포 또한 남녀 모두 이민자의 혼인 분포가 낮은 연령에서 정점을 형성하지만, 원주민과 이민자의 차이는 남성에서 좀 더 명확히 관측된다. 미혼기대여명(e_x)은 단조적으로 감소하는 사망 생명표의 기대여명과 달리 상승 패턴을 보인 후 다시 감소하는데, 이민자가 선도하며 원주민이 뒤를 따르는 패턴이다.

(표 4-3) 원주민과 이민자의 혼인 생명표: 남성 1951~1970년생(코호트)

연령	원주민 남성				이민자 남성			
	q_x	l_x	d_x	e_x	q_x	l_x	d_x	e_x
10	0.00000	100,000	0	20.04	0.00000	100,000	0	19.23
11	0.00000	100,000	0	19.04	0.00000	100,000	0	18.23
12	0.00000	100,000	0	18.04	0.00000	100,000	0	17.23
13	0.00000	100,000	0	17.04	0.00000	100,000	0	16.23
14	0.00002	100,000	2	16.04	0.00013	100,000	13	15.23
15	0.00084	99,998	84	15.04	0.00198	99,987	197	14.23
16	0.00214	99,914	213	14.05	0.00386	99,790	385	13.26
17	0.00323	99,701	322	13.08	0.00570	99,404	567	12.31
18	0.00561	99,379	558	12.12	0.00844	98,837	835	11.38
19	0.01000	98,821	988	11.19	0.01502	98,003	1,472	10.47
20	0.01502	97,834	1,470	10.30	0.02478	96,531	2,392	9.62
21	0.02027	96,364	1,953	9.45	0.04419	94,139	4,160	8.85
22	0.03088	94,410	2,915	8.63	0.07310	89,980	6,577	8.24
23	0.05014	91,495	4,587	7.89	0.11312	83,402	9,434	7.85
24	0.08108	86,908	7,046	7.28	0.15218	73,968	11,256	7.79
25	0.11830	79,862	9,448	6.88	0.16771	62,712	10,517	8.09
26	0.15548	70,414	10,948	6.74	0.16806	52,195	8,772	8.62
27	0.18121	59,466	10,776	6.88	0.15807	43,423	6,864	9.26
28	0.19374	48,690	9,433	7.30	0.13574	36,559	4,962	9.91
29	0.20033	39,257	7,864	7.93	0.13155	31,596	4,157	10.39
30	0.18099	31,392	5,682	8.79	0.11376	27,440	3,121	10.88
31	0.15231	25,711	3,916	9.62	0.09090	24,318	2,210	11.22
32	0.12860	21,795	2,803	10.26	0.08010	22,108	1,771	11.29
33	0.10336	18,992	1,963	10.70	0.06782	20,337	1,379	11.23
34	0.08635	17,029	1,470	10.88	0.06015	18,958	1,140	11.01
35	0.07250	15,558	1,128	10.86	0.05989	17,818	1,067	10.68
36	0.06309	14,430	910	10.67	0.05229	16,751	876	10.33
37	0.05383	13,520	728	10.36	0.04555	15,875	723	9.87
38	0.04579	12,792	586	9.92	0.04856	15,152	736	9.32
39	0.04122	12,206	503	9.37	0.04242	14,416	612	8.77
40	0.03665	11,703	429	8.75	0.05007	13,804	691	8.14
41	0.03250	11,274	366	8.06	0.04566	13,113	599	7.54
42	0.02824	10,908	308	7.32	0.03996	12,514	500	6.87
43	0.02483	10,600	263	6.52	0.03791	12,014	455	6.14
44	0.02259	10,337	233	5.67	0.03610	11,559	417	5.36
45	0.01974	10,103	199	4.79	0.03945	11,142	440	4.54
46	0.01737	9,904	172	3.87	0.03750	10,702	401	3.71
47	0.01575	9,732	153	2.93	0.03494	10,301	360	2.84
48	0.01367	9,579	131	1.97	0.04133	9,941	411	1.92
49	0.01298	9,448	123	0.99	0.03743	9,530	357	0.98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150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표 4-4〉 원주민과 이민자의 혼인 생명표: 여성 1951~1970년생(코호트)

연령	원주민 여성				이민자 여성			
	q_x	l_x	d_x	e_x	q_x	l_x	d_x	e_x
10	0.00000	100,000	0	15.14	0.00000	100,000	0	15.95
11	0.00000	100,000	0	14.14	0.00000	100,000	0	14.95
12	0.00000	100,000	0	13.14	0.00000	100,000	0	13.95
13	0.00013	100,000	13	12.14	0.00006	100,000	6	12.95
14	0.00080	99,987	80	11.14	0.00050	99,994	50	11.95
15	0.00641	99,908	641	10.15	0.00406	99,944	406	10.96
16	0.01619	99,267	1,607	9.21	0.00967	99,538	963	10.00
17	0.02416	97,660	2,360	8.35	0.01507	98,576	1,486	9.09
18	0.03788	95,300	3,610	7.55	0.03476	97,090	3,375	8.23
19	0.05685	91,690	5,212	6.82	0.06231	93,716	5,839	7.50
20	0.07886	86,478	6,820	6.21	0.09076	87,876	7,976	6.97
21	0.10744	79,658	8,558	5.69	0.13558	79,900	10,833	6.62
22	0.14882	71,100	10,581	5.32	0.18713	69,067	12,925	6.57
23	0.18985	60,518	11,489	5.16	0.21129	56,143	11,862	6.97
24	0.22729	49,029	11,144	5.25	0.19935	44,280	8,827	7.71
25	0.25645	37,885	9,716	5.65	0.17616	35,453	6,245	8.50
26	0.25894	28,170	7,294	6.43	0.14478	29,208	4,229	9.21
27	0.23320	20,875	4,868	7.50	0.12518	24,979	3,127	9.69
28	0.19675	16,007	3,149	8.63	0.10579	21,852	2,312	10.00
29	0.16774	12,858	2,157	9.62	0.10265	19,540	2,006	10.13
30	0.13887	10,701	1,486	10.46	0.08996	17,535	1,577	10.23
31	0.11401	9,215	1,051	11.07	0.09048	15,957	1,444	10.19
32	0.10107	8,164	825	11.43	0.07514	14,513	1,091	10.15
33	0.08554	7,339	628	11.66	0.07523	13,423	1,010	9.94
34	0.07436	6,711	499	11.70	0.08046	12,413	999	9.70
35	0.06362	6,212	395	11.60	0.07044	11,414	804	9.51
36	0.05581	5,817	325	11.35	0.07656	10,610	812	9.19
37	0.04712	5,492	259	10.99	0.06814	9,798	668	8.91
38	0.03676	5,234	192	10.51	0.06490	9,130	593	8.53
39	0.02909	5,041	147	9.90	0.06158	8,538	526	8.08
40	0.02520	4,895	123	9.18	0.05521	8,012	442	7.58
41	0.02020	4,771	96	8.40	0.06358	7,570	481	7.00
42	0.01767	4,675	83	7.56	0.04827	7,088	342	6.44
43	0.01661	4,592	76	6.69	0.04619	6,746	312	5.74
44	0.01376	4,516	62	5.80	0.06226	6,435	401	4.99
45	0.01238	4,454	55	4.87	0.06408	6,034	387	4.29
46	0.01035	4,399	46	3.92	0.06158	5,647	348	3.55
47	0.00953	4,353	41	2.96	0.05774	5,300	306	2.75
48	0.00857	4,312	37	1.98	0.05738	4,994	287	1.89
49	0.00719	4,275	31	1.00	0.05792	4,707	273	0.97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전체 출생 코호트에 대한 분석에 이어 [그림 4-2]와 [그림 4-3]은 1951~1970년 출생자를 10년 단위의 하위 출생 코호트로 구분하여 산출한 혼인 생명표의 주요 지표를 보여 준다. [그림 4-2]의 연령별 혼인 확률(q_x ; 해저드)을 살펴보면 1951~1960년생 이민자 남성(qx_5160_Foreign)과 원주민 남성(qx_5160_Native) 간에 혼인 속도에서의 차이가 관측되지만, 전반적인 패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⁸³⁾ 이런 모습은 생존곡선(l_x)에서도 확인된다. 반면에 1961~1970년 출생자는 1951~1960년 출생자와 비교할 때 혼인이 지연되는 한편 49세 기준 생애 혼인율도 이전 출생 코호트에 비해 낮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61~1970년 출생 이민자 남성의 경우 20대 초중반까지 기존 출생 코호트(1951~1960년생)와 유사한 혼인 패턴을 보이지만, 20대 중후반부터 혼인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작지만, 원주민 남성도 출생 코호트를 가로질러 혼인의 지연 현상이 관측되는 동시에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혼인 확률 또한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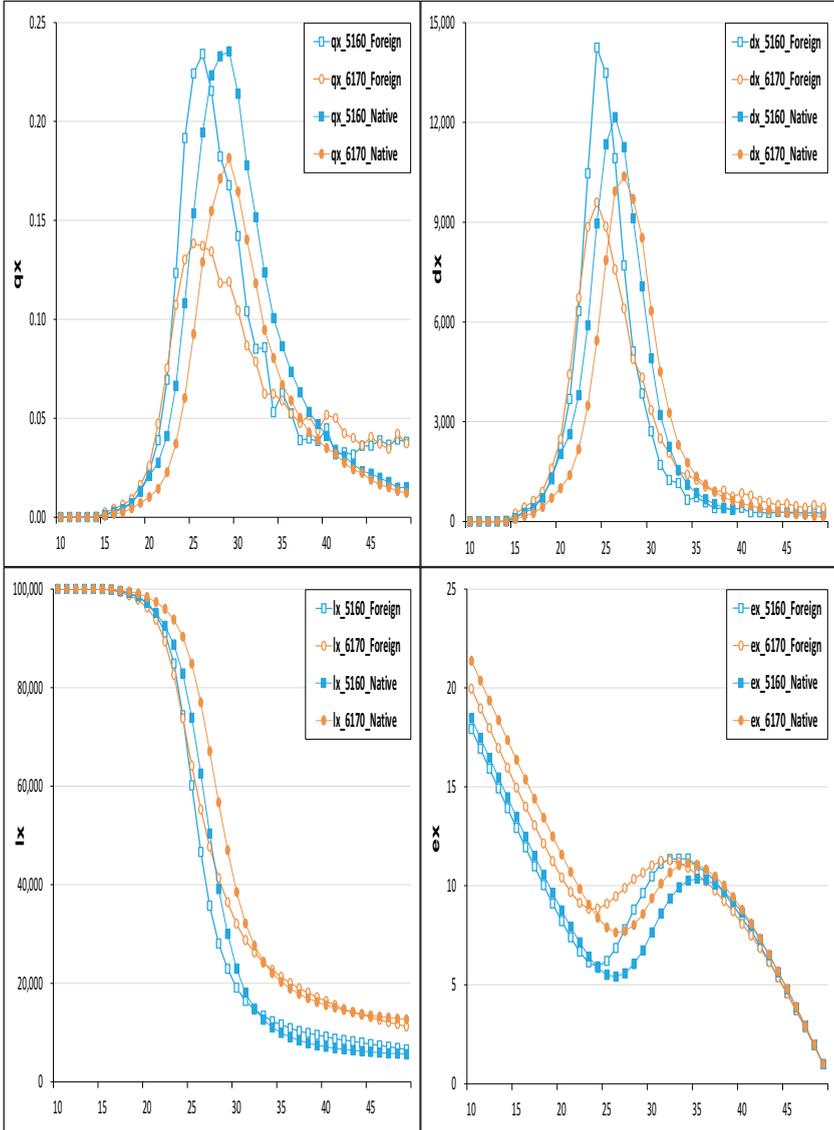
여성의 경우 1951~1960년 출생 코호트에서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원주민과 이민자 여성의 혼인 속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패턴에서 큰 차이가 관측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1961~1970년 출생 여성에서는 원주민과 이민자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된다. 그럼에도 남성과 비교할 때 49세 기준 생애 혼인율에서 출생 코호트 간 차이는 크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l_x 함수). 다만 49세 기준의 생애 혼인율이 유사함에도 1961~1970년 출생 이민자 여성은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 기존 출생 코호트는 물론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원주민 여성에 비해서도

83) 참고로 4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이민자의 혼인 확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해당 시점까지 혼인하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한 확률(해저드)이기에 '혼인 건수'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상대적으로 혼인이 지연되는 패턴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혼인 생애를 대체로 완료한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원주민 집단에서는 남성, 이민자 집단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출생 코호트에 따른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됨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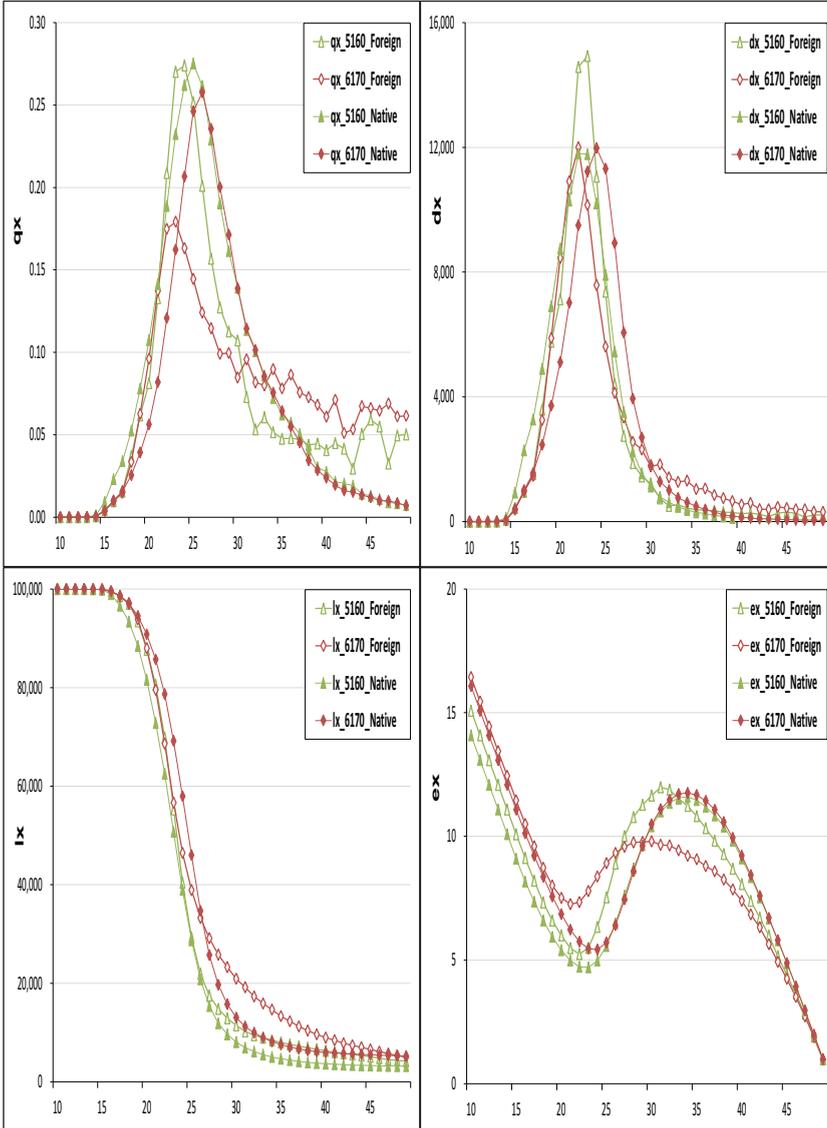
〈표 4-5〉는 앞의 분석을 종합하여 전체 및 출생 코호트별로 구분하여 원주민과 이민자 남녀의 연령별(20세, 30세, 40세, 49세) 미혼율(%)과 미혼 기간의 중앙값(median survival time)을 보여 준다. 분석 대상 사건(혼인)을 관측하는 과정에서 중도 절단(right censoring)이 발생하기에 혼인(초혼)까지의 기간, 즉 미혼 기간 분포의 중심(center)을 측정하는 지표로 여기에서는 통상적인 평균값 대신에 중앙값을 사용한다(선형보간법). 미혼 기간의 중앙값은 원주민 내의 성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이는 원주민 남성의 혼인(초혼)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반영한다. 남성의 경우 원주민과 이민자 모두 기존 출생 코호트(1951~1960년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출생한 코호트(1961~1970년생)의 49세 기준 생애 미혼율이 10% 이상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혼인의 지연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49세 기준 생애 미혼율은 원주민과 이민자를 아울러 3~5%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다만 49세 기준의 생애 혼인율(미혼율)에서 큰 차이가 없더라도 혼인의 지연 현상 자체가 후속적으로 출산에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1961~1970년 출생 이민자 여성은 원주민 여성에 비해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 혼인이 지연되는 패턴이 관측되는데, 이는 후속적으로 출산의 지연 혹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로 다음 절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민과 출산 분석에서는 원주민 여성과 비교할 때 이민자 여성의 코호트(1950~1974년생) 출산율이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인다.

[그림 4-2] 원주민과 이민자의 코호트 혼인 생명표 지표: 남성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그림 4-3] 원주민과 이민자의 코호트 혼인 생명표 지표: 여성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표 4-5) 원주민과 이민자의 미혼율과 미혼 기간 중앙값: 1951~1970년생(코호트)

구분			미혼율(%)				중앙값 (세)
			20세	30세	40세	49세	
원주민	남성	전체	97.83	31.39	11.70	9.45	27.88
		1951~1960년생	97.20	22.95	7.10	5.62	27.03
		1961~1970년생	98.37	38.48	15.57	12.66	28.69
	여성	전체	86.48	10.70	4.89	4.27	23.92
		1951~1960년생	81.58	8.06	3.66	3.16	23.06
		1961~1970년생	90.82	13.04	5.99	5.26	24.66
이민자	남성	전체	96.53	27.44	13.80	9.53	26.25
		1951~1960년생	97.09	19.08	9.16	6.56	25.75
		1961~1970년생	96.22	32.08	16.39	11.18	26.70
	여성	전체	87.88	17.53	8.01	4.71	23.52
		1951~1960년생	87.66	11.44	6.31	4.17	23.35
		1961~1970년생	87.99	20.94	8.97	5.01	23.65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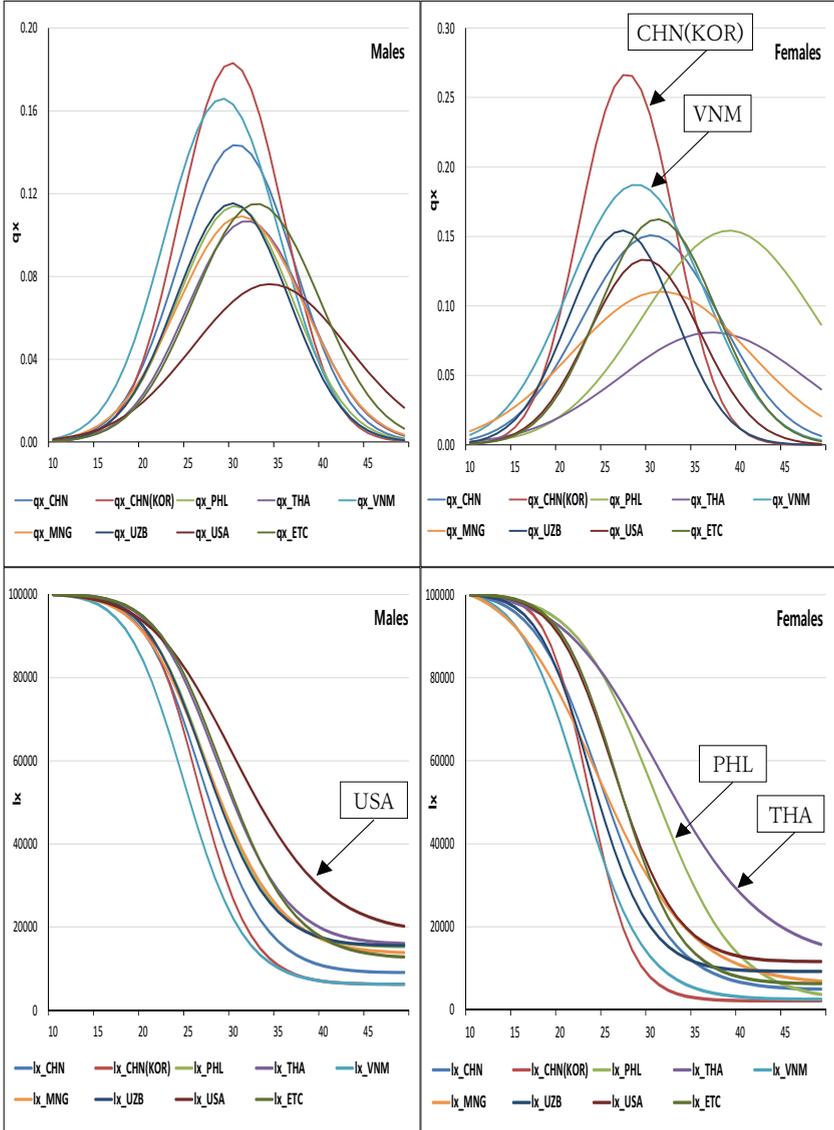
이민자 전체 및 출생 코호트별 분석에 이어 아래에서는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이민자를 출신 국적별로 구분하여 혼인 패턴을 살펴본다. [그림 4-4]의 윗부분은 출신 국적별로 이민자 남녀의 연령별 혼인 확률(q_x)의 패턴을 보여 준다. 참고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그림의 크기를 조정했지만, 세로축(q_x)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이민자 남성의 경우 베트남 출신자(qx_VNM)의 혼인 확률이 가장 이른 시기에 상승하며, 미국 출신자(qx_USA)의 혼인 확률이 전반적으로 가장 완만한 기울기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한국계 중국 출신자는 베트남 출신자에 비해 혼인 확률이 늦게 상승하지만, 20대 후반에 이르러 베트남 출신자를 추월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베트남과 중국(한국계)은 남

성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태국과 필리핀 출신 여성의 혼인 패턴이 다른 출신 국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4-4]의 아랫부분은 혼인 확률에 기초하여 도출한 미혼 생존곡선이며, <표 4-6>은 미혼 생존곡선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령별(20세, 30세, 40세, 49세) 미혼율(%)과 미혼 기간의 중앙값(세)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미혼 기간의 중앙값(세)은 미혼 생존곡선에서 기수(基數: $l_0=100,000$ 명)의 절반이 혼인하고 절반이 미혼 상태로 남아 있는 연령을 의미한다. 미혼 기간의 중앙값은 베트남 출신 남성이 25.22세로 가장 낮고, 미국(32.81세)과 태국(30.01세) 출신 남성이 30세 이상이다. 여성도 베트남(22.75세) 출신자의 미혼 기간 중앙값이 가장 낮고, 태국(33.01세)과 필리핀(30.90세) 출신 여성의 미혼 기간 중앙값이 30세 이상이다.

베트남과 중국(한국계) 출신 남성은 혼인 속도에서 관측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49세 기준의 생애 미혼율이 6.26%로 가장 낮다.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출신 남성의 생애 미혼율은 15% 이상이며, 미국 출신 남성은 생애 미혼율이 20.17%로 분석 대상 출신 국가 중 가장 높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혼인 속도에서 출신 국가별 차이가 관측되지만, 49세 기준의 생애 미혼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미국 출신 여성의 49세 기준 생애 미혼율이 11.65%, 태국 출신 여성의 생애 미혼율이 15.72%로 다른 출신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49세 기준의 생애 미혼율이 3.71%이지만, 필리핀 출신 여성의 혼인 속도는 생애 미혼율이 낮은 다른 출신 국적 여성들과 비교해 상당히 늦은 모습이 관측된다([그림 4-4] 참고). 필리핀 출신 여성의 혼인 지연 현상은 미혼 기간의 중앙값이 30세 이상으로 상당히 높지만, 49세 기준 생애 미혼율이 상당히 낮은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4] 이민자의 출신 국적별 혼인 확률과 생존곡선: 1951~1970년생(코호트)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표 4-6〉 이민자의 출신 국적별 미혼율과 미혼 기간 중앙값: 1951~1970년생(코호트)

구분		미혼율(%)				미혼 기간 중앙값(세)
		20세	30세	40세	49세	
남성	중국	91.09	34.45	10.69	9.07	27.44
	중국(한국계)	92.26	26.76	6.95	6.26	26.66
	필리핀	92.54	42.65	17.30	15.30	28.66
	태국	94.39	50.05	19.48	16.05	30.01
	베트남	84.09	22.10	6.98	6.26	25.22
	몽골	90.94	43.41	16.90	13.89	28.73
	우즈베키스탄	92.46	41.56	17.29	15.58	28.47
	미국	93.56	61.46	29.05	20.17	32.81
	기타/미상	94.77	51.20	17.29	12.82	30.22
여성	중국	80.46	24.68	6.66	4.98	25.24
	중국(한국계)	81.61	7.88	2.23	2.17	23.46
	필리핀	93.60	54.96	12.94	3.71	30.90
	태국	92.26	61.87	28.12	15.72	33.01
	베트남	69.05	12.85	3.13	2.53	22.75
	몽골	75.79	31.01	10.75	6.91	25.52
	우즈베키스탄	80.00	20.05	9.57	9.28	24.33
	미국	90.03	33.60	12.83	11.65	27.14
	기타/미상	90.99	31.61	7.87	6.33	27.14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표 4-7〉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혼인 생애를 대체로 완료한 1951~1970년 출생 코호트의 성별 및 출신 국적별 혼인 여부 및 시점을 보여 준다. 코호트 분석에서 남성은 대체로 입국 전에 혼인한 경우가 80% 이상이다. 다만 출신 국적별 차이가 관측된다. 베트남 출신 남성의 91.31%가 혼인(초혼) 후에 입국하였지만, 미국 출신 남성은 60% 정도만이 혼인 후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입국 연도와 혼인 연도가 겹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반면에 일부 출신 국가의 경우 입국 후에 혼인한 사례의 구성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미국이 대표적인

다. 미국 출신 남성은 입국 후에 혼인한 사례가 많은 동시에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준 시점까지 미혼 상태를 유지한 사례의 구성비 또한 16.27%로 상당히 높다. 태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몽골 출신 이민자 남성도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준 시점까지 혼인하지 않은 개인들의 구성비가 10% 이상이다.

〈표 4-7〉 이민자의 출신 국적별 입국-혼인 패턴: 1951~1970년생(코호트)

구분	혼인 여부/시점 패턴				
	입국 전 혼인	입국 연령 = 혼인 연령	입국 후 혼인	현재 미혼	
남성	중국	83.02	1.59	7.94	7.45
	중국(한국계)	88.76	0.76	4.97	5.52
	필리핀	80.22	0.70	7.60	11.48
	태국	81.60	0.52	1.50	16.38
	베트남	91.31	0.33	3.17	5.18
	몽골	81.20	2.14	5.56	11.11
	우즈베키스탄	83.69	1.09	1.97	13.25
	미국	59.54	2.30	21.89	16.27
	기타/미상	63.25	3.04	23.29	10.42
여성	중국	80.18	6.39	10.16	3.27
	중국(한국계)	92.92	1.20	3.53	2.35
	필리핀	57.51	25.05	13.78	3.66
	태국	54.45	19.69	9.77	16.09
	베트남	91.25	3.21	4.00	1.54
	몽골	74.13	8.97	12.19	4.71
	우즈베키스탄	88.31	1.60	2.46	7.64
	미국	77.21	1.67	9.76	11.37
	기타/미상	71.63	9.52	13.26	5.59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남성과 비교할 때 이민자 여성은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인다. 이민자 여성의 경우에는 입국 시점(연도)과 혼인 시점(연도)이 겹치는 집단의 구

성비가 이민자 남성에 비해 높은 모습을 보인다. 특히 필리핀 출신 여성은 입국 연도와 혼인 연도가 일치하는 경우가 분석 대상자의 대략 1/4이다. 태국 출신 여성의 대략 20%도 입국한 연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이민자 여성은 입국한 후에 혼인한 사례의 구성비가 이민자 남성에 비해 높은 패턴을 보인다. 이민자 여성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시점까지 미혼 상태를 유지한 비중이 남성에 비해 낮지만, 태국 출신 여성의 미혼 구성비는 태국 출신 남성과 비슷한 16% 수준이다. 미국 출신 여성도 인구주택총조사 시점까지 혼인 상태가 미혼인 개인들의 구성비가 10%를 넘어선다.

앞의 코호트 분석에서는 출생 코호트를 거치면서 혼인 패턴에서 변화가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특히 남성 집단에서만 상대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관측된 원주민과 비교할 때 이민자 집단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출생 코호트별 차이가 상당히 크게 관측되었다. 그럼에도 앞의 분석 결과는 혼인 생애를 대체로 완료한 출생 코호트에 한정된 분석 결과이기에 현재까지 혼인 생애를 완료하지 않은 1970년대 이후 출생자의 혼인 패턴을 보여 주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원주민과 이민자의 혼인 패턴에서 관측되는 최근 동향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아래에서는 2015~2019년 기간에 걸친 초혼 패턴을 분석한다. 물론 이는 앞의 코호트 분석과 달리 분석 대상 '기간'에 걸쳐 관측된 연령별 혼인 패턴을 생애 동안에 경험하는 가상 코호트의 혼인 생애를 보여 주는 차이가 있다. [그림 4-5]를 보면 앞의 코호트 분석([그림 4-2] 및 [그림 4-3])에 비해 전반적으로 연령별 혼인 확률(q_x)이 낮아지는 한편 하위 집단별 차이 또한 뚜렷한 모습을 보인다. 남성에서도 원주민과 이민자 간 혼인 패턴에서 차이가 관측되지만,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뚜렷하다. 특히 혼인 생애를 완료하지 않은 현 가임기 세대에서는 이민자 여성에 비해 원주민 여성의 연령별 혼인 확률이 두드

러지게 낮은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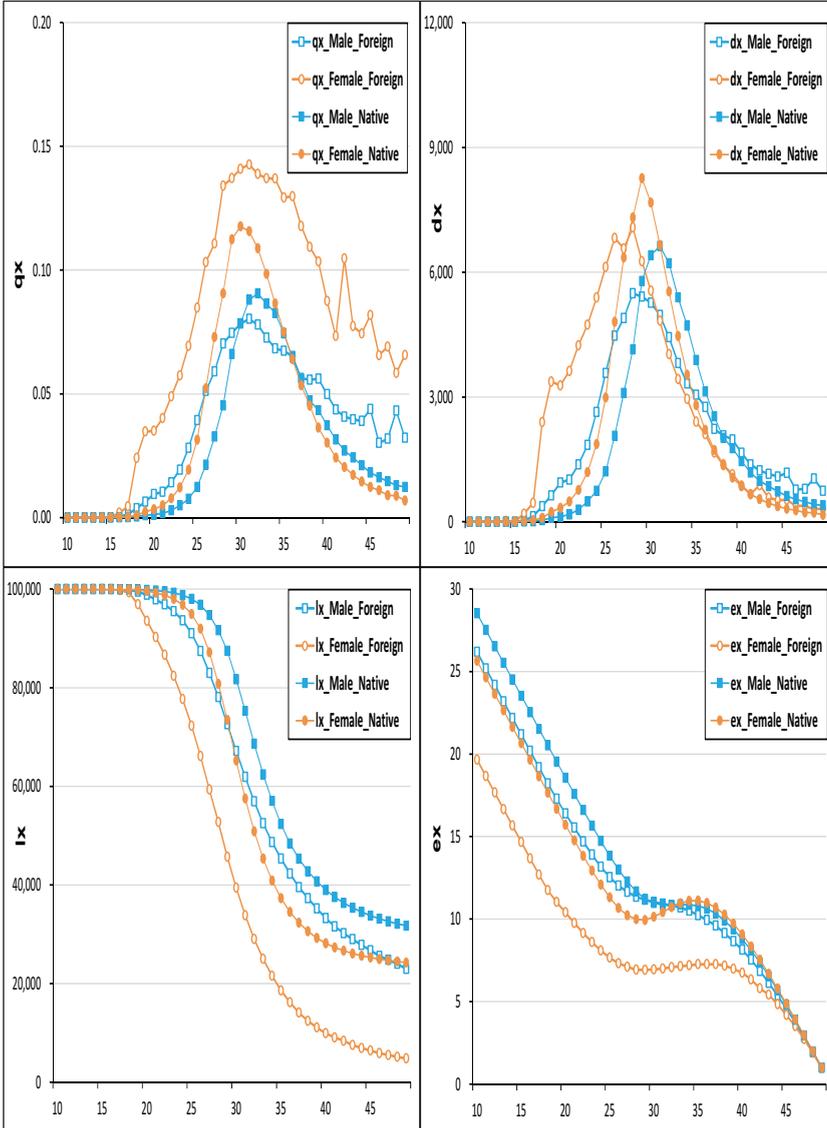
〈표 4-8〉의 기간(2015~2019년) 분석 결과를 보면 이민자 여성의 49세 기준 생애 미혼율이 5% 미만임에 비해 원주민 여성의 생애 미혼율은 이보다 대략 5배 높은 24.26%이다. 앞의 코호트 분석과 비교할 때 남성의 49세 기준 생애 미혼율이 원주민과 이민자 집단 모두에서 높은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원주민 남성의 49세 기준 미혼율은 30%를 넘어선다. 코호트 분석과 기간 분석을 비교할 때 원주민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민자 여성에서도 혼인의 지연 현상이 관측되지만, 49세 기준의 생애 미혼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이민자 여성의 출생 코호트별 혼인력 변화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이민의 선택성을 반영하는지는 불명확하다. 전반적으로 현 가임기 세대에서 관측되는 낮은 혼인율, 특히 원주민 여성의 낮은 혼인율은 후속적으로 원주민과 이민자의 출산율에도 일정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의 코호트 분석과 비교할 때 미혼 기간의 중앙값도 상당히 높다. 성별이나 이민자 지위와 관계없이 미혼 기간의 중앙값이 높지만, 이민자 여성과 비교할 때 원주민 여성에서 코호트 분석과 기간 분석 간 차이가 더 크게 관측된다.

〈표 4-8〉 원주민과 이민자의 미혼율과 미혼 기간 중앙값: 2015~2019년(기간)

구분		원주민		이민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미혼율(%)	20세	99.85	99.61	98.83	93.56
	30세	81.71	65.23	67.17	39.42
	40세	39.00	28.17	33.26	9.94
	49세	31.73	24.26	22.98	4.83
미혼 기간 중앙값(세)		35.60	32.16	33.66	28.39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그림 4-5] 원주민과 이민자의 기간 혼인 생명표 지표: 2015~2019년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이민자와 원주민을 통합적으로 비교한 데 이어 아래에서는 <표 4-9>와 [그림 4-6]을 통해 2015~2019년 기간에 걸친 이민자의 혼인 패턴에서 관측되는 출신 국가별 차이를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코호트 분석(<표 4-6>)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이민자 남성의 혼인 시기가 지연되는 동시에 49세 기준의 생애 미혼율도 상당히 높은 패턴임을 살펴볼 수 있다. 미혼 기간 중앙값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앞의 코호트(1951~1970년생) 분석에서 이민자 남성의 49세 기준 생애 미혼율이 최대 20% 수준이었지만, 기간 분석 결과는 2015~2019년 기간에 걸친 연령별 혼인 패턴이 지속되면 생애 미혼율은 20~40% 수준까지 상승할 것임을 시사한다. 예외적으로 미국 출신 남성은 20대까지 혼인이 지연되지만, 30대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혼인이 이루어짐으로써 49세 기준의 생애 미혼율에서 앞의 코호트 분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민자 남성과 비교할 때 이민자 여성의 49세 기준 생애 미혼율과 미혼 기간의 중앙값은 앞의 코호트 분석과 비교해 일률적인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다. 코호트 분석과 비교할 때 미국과 몽골처럼 2015~2019년 기간에 관측된 혼인 패턴에 기초하여 산출된 생애 미혼율이 높은 국가가 있는 반면에 태국처럼 낮은 사례도 관측된다. 또한 코호트 분석과 비교할 때 기간 분석에서는 출신 국가별 차이가 관측되는 연령 구간이 확대되는 모습도 관측된다([그림 4-6] 참고). 이는 대체로 1951~1970년 출생자에 비해 현재까지 혼인 생애를 완료하지 않은 세대에서 20대를 중심으로 혼인의 지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기간 분석에서는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에서 출신 국적별 차이가 더욱 크게 관측된다.

앞의 <표 4-8>에서 2015~2019년 기간에 걸친 원주민 여성의 40세 기준 미혼율이 28.17%, 49세 기준 미혼율이 24.26%로 나타났는데, 이민자의 출신 국적을 세분화한 <표 4-9>는 미국 출신 여성만이 원주민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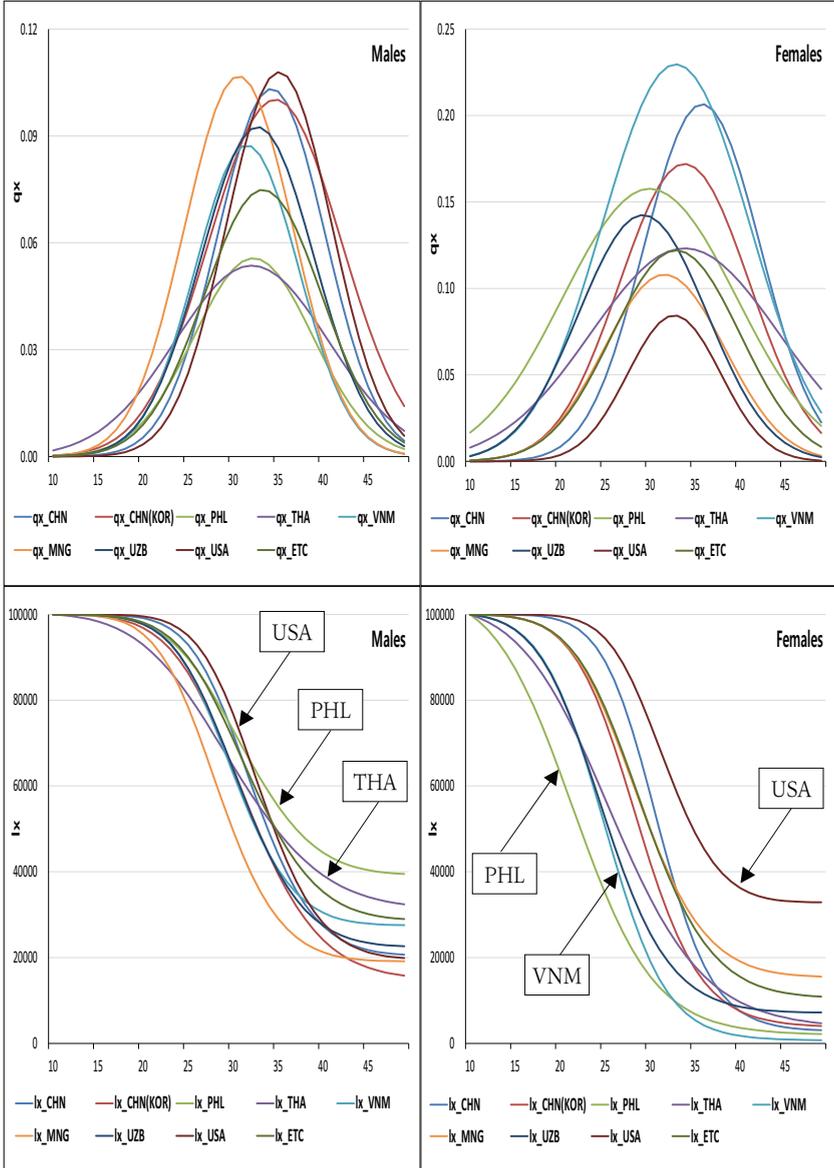
성보다 생애 미혼율이 높은 수준임을 보여 준다. 한편 <표 4-6>의 코호트 분석과 비교할 때 <표 4-9>의 기간 분석에서는 미국이나 몽골처럼 생애 미혼율이 높은 사례도 있지만, 반대의 패턴을 보인 출신 국적도 5개국에 이른다. 출신 국적을 모두 아우른 이민자와 원주민을 비교할 때와 마찬가지로 코호트 분석과 기간 분석에서 관측되는 두드러지는 차이는 원주민 여성의 혼인 패턴 변화임을 살펴볼 수 있다.

<표 4-9> 이민자의 출신 국적별 미혼율과 미혼 기간 중앙값: 2015~2019년(기간)

구분	미혼율(%)				미혼 기간 중앙값(세)	
	20세	30세	40세	49세		
남성	중국	99.13	72.08	27.33	20.66	33.84
	중국(한국계)	96.85	64.03	24.11	15.79	32.71
	필리핀	97.71	73.04	44.43	39.47	36.97
	태국	92.91	64.67	39.16	32.40	34.74
	베트남	97.94	62.94	30.44	27.57	32.57
	몽골	95.42	49.56	21.24	19.13	29.92
	우즈베키스탄	97.72	63.93	27.45	22.63	32.68
	미국	99.51	76.75	28.02	19.88	34.54
	기타/미상	98.10	70.90	35.31	28.96	34.71
여성	중국	98.61	58.14	7.51	3.05	31.02
	중국(한국계)	94.18	42.24	7.50	4.06	28.85
	필리핀	63.09	15.60	3.60	2.16	22.25
	태국	79.30	33.86	9.60	4.70	26.43
	베트남	82.02	19.17	1.76	0.74	25.06
	몽골	94.34	49.80	19.06	15.58	29.96
	우즈베키스탄	81.74	25.64	8.54	7.21	25.39
	미국	99.51	74.56	36.21	32.88	34.76
	기타/미상	94.53	49.94	15.50	10.90	29.99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그림 4-6] 이민자의 출신 국적별 혼인 확률 및 생존곡선: 2015~2019년(기간)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혼인 분석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아래에서는 출신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민자의 입국과 혼인이 시간상으로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2015~2019년 기간에 연령이 10~49세인 개인들이 분석 대상이기에 남녀 모두 대부분 입국 전에 혼인한 비중이 50% 아래이다. 중국(한국계)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이 예외적으로 과반이 입국 전에 혼인한 모습을 보인다. 남성의 경우 입국 연도와 혼인 연도가 겹치는 사례는 2~3% 수준에 불과하다.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은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입국과 혼인이 같은 연도에 이루어진 개인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인다. 중국과 태국 출신 여성의 10% 이상,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 여성의 20% 이상이 입국 연도와 혼인 연도가 같다. 입국과 혼인이 동일한 연도에 이루어진 사례는 결혼 이민자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다. 참고로 앞의 1951~1970년 출생 코호트 분석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의 90% 이상이 입국 전에 혼인했으며, 입국과 혼인이 같은 연도에 이루어진 사례는 3%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5~2019년 기간에 연령이 10~49세 구간에 속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필리핀과 태국 외에도 베트남 출신 여성에서 입국 연도에 혼인한 사례의 구성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참고로 최근의 국제결혼 통계에서도 베트남 출신 여성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 비록 이 연구처럼 전체 이민자 대비 국제결혼자의 구성비 정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국제결혼자(외국인 아내)의 절대 규모에서 베트남은 주목받는 집단이다. 참고로 통계청(2023j)의 국제결혼 통계를 보면 자료가 제공되는 1993년부터 2014년까지는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한국계(조선족)를 포함한 중국인 아내(외국인)가 가장 많지만,⁸⁴⁾ 2015~2020년 기간에는 베트남 출신 아내가 가장 많은 모습을 보인다.

84) 2010년에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 아내(외국인)가 9,623명으로 동일하며, 2011년에는 중국 7,549명, 베트남 7,636명으로 베트남 아내의 수가 더 많다.

〈표 4-10〉 이민자의 출신 국적별 입국-혼인 패턴: 2015~2019년(기간)

구분	혼인 여부/시점 패턴(%)				국제결혼 (유배우 인구 대비 %)	
	입국 전 혼인	입국 연령 = 혼인 연령	입국 후 혼인	현재 미혼		
남성	중국	31.34	2.36	17.06	49.24	6.55
	중국(한국계)	43.14	2.65	22.53	31.68	2.30
	필리핀	34.87	2.85	8.74	53.54	2.71
	태국	35.13	2.96	5.35	56.56	1.18
	베트남	25.74	2.72	12.86	58.68	2.28
	몽골	38.64	3.50	13.23	44.64	2.16
	우즈베키스탄	33.53	2.66	9.19	54.62	1.13
	미국	13.12	2.06	17.04	67.77	59.74
기타/미상	25.03	2.74	12.59	59.64	14.99	
여성	중국	35.72	11.70	19.71	32.87	47.53
	중국(한국계)	52.91	5.64	22.97	18.47	17.16
	필리핀	45.90	27.35	14.59	12.16	75.30
	태국	38.83	14.92	12.00	34.25	54.26
	베트남	40.59	24.35	12.49	22.57	68.30
	몽골	39.77	8.18	14.80	37.25	29.98
	우즈베키스탄	51.47	8.78	11.55	28.20	21.83
	미국	9.91	1.83	11.49	76.77	54.59
기타/미상	35.87	12.29	14.57	37.28	49.07	

주: 2015~2019년 기간에 연령이 10~49세 구간에 해당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임; 유배우자 인구 대비 국제결혼자(동거)의 구성비는 결측치(18명)을 제외하고 산출함.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입국과 혼인 시점의 조합에서 입국 후에 혼인한 사례의 구성비는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미국 출신 남성도 입국 후 혼인하는 구성비가 다른 출신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인다. 한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시점까지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에서 성별 차이가 관측되는데, 전반적으로 여성 이민자의 미혼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미국 출신자는 남녀 모두 미혼자의 구성비가 70% 전후로 매우 높은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다른 출신 국가에 비해 필리핀 출신 여성의 미혼 구성비가 낮으며, 남녀 모두 중국(한국계) 출신자의 미혼 구성비도 상대적으로 낮다.

〈표 4-10〉에는 또한 참고용 자료로 유배우 인구 중에서 국제결혼자의 구성비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 ‘국제결혼자’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정보(가주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남편과 아내의 출신 국적이 다른 개인을 지칭한다. 다만,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남편과 아내의 출신 국적이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에서 동거하지 않으면 국제결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자료상의 한계가 있지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입국 연도와 혼인 연도가 겹치는 이민자(여성)의 구성비가 높은 국가에서 유배우 인구 대비 국제결혼자의 구성비 또한 높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혼인 여부와 그 시점에 관한 정보가 전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분포임에 비해 국제결혼은 성별 및 출신 국적별로 유배우 이민자 대비(동일한 가구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민자의 구성비를 의미하기에 엄밀한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유배우 이민자 남성 중에서 국제결혼자의 구성비(%)는 유배우 이민자 여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미국 출신 유배우 이민자 남성의 대략 60%가 국제결혼자에 해당한다. 유배우 이민자 남성에 비해 국제결혼자의 구성비가 상당히 높지만, 유배우 이민자 여성의 국제결혼 구성비도 출신 국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중국(한국계) 출신 유배우 이민자 여성의 20% 미만이 국제결혼자이지만, 필리핀 출신 유배우 이민자 여성의 대략 3/4이 국제결혼자로 분류된다(75.30%). 베트남(68.30%), 미국(54.59%), 태국(54.26%) 출신 유배우 이민자 여성의 국제결혼 구성비도 50%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제3절 이민과 출산

원주민과 이민자의 출산력 수준에 관한 일련의 인구학적 연구가 진행된 바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민과 출산에 관한 이해의 수준은 높지 않다. 이민과 출산의 관계를 규명할 체계적인 자료의 구축이 쉽지 않은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민자의 구성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민자의 출산 행위에 관한 연구는 중장기적인 안목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절에서는 이민자 출산력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 대신에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 여성의 전반적인 출산 패턴 및 원주민 여성과의 차이를 개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민과 출산 분석에서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를 사용한다. 앞 절과 비슷하게 출산 생애를 완료한 세대의 출산력과 현 가임기 세대의 출산력을 동시에 살펴본다. 출산 생애를 완료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출산력 분석에서는 기존의 인구학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출산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 PPR)와 이에 기초하여 산출한 코호트 출산율(Cohort Fertility Rate: CFR) 지표를 사용한다. 한편 현 가임기 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간 출산력 분석에서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제공하는 ‘마지막 자녀 출생 시점’ 정보를 활용하여 기간 출산력 측정치(recent fertility measure)를 직접 산출한다. 비록 현재까지 국내 인구학계에서 이 측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지만,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측정치를 산출할 필요성은 높다. 아래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하여 출산율을 직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과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출산력에 관한

두 가지의 핵심 정보(측정치)를 수집한다. 첫째, 출산 후 사망한 자녀를 포함한 총 출산 자녀 수(children ever born alive) 정보이다. 이 측정치는 '생애 출산력'(lifetime fertility)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둘째, 대부분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마지막 자녀의 출산 시점(date of birth of last child born alive)에 관한 정보를 통해 '최근 출산력'(recent fertility)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두 출산력 측정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출산율을 산출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direct estimates)(United Nations, 2017b, p. 214).

참고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해 '최근 출산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동안에 출산한 출생아 수(total number of children born alive in the 12-month period prior to census reference date)를 질문하는 방식도 있지만, 마지막 자녀의 출산 시점을 질문하는 접근이 '최근 출산력' 수준에 관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이 지적된다(United Nations, 2017b, p. 214). 이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준거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동안의 출생아 수를 묻는 접근이 직관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출산이 설정된 준거 기간(12개월)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과 관련된다. 반면에 마지막 자녀의 출산 시점을 질문하는 접근은 정보의 정확성이 높은 동시에 별도의 자료 처리 과정을 거쳐 지난 12개월 동안의 출생아 수를 사후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접근은 12개월 동안의 출생 건수가 아니라 12개월 동안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수의 여성만이 1년에 2명 이상을 출산하기에 이에 기초한 출산율 측정치의 오차는 크지 않음이 지적된다(United Nations, 2017b, p. 214).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마지막 자녀의 출산 시점과 함께, 첫째 자녀의 출산 시점 정보가 동시에 수집되기에 정보의 정확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⁸⁵⁾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마지막 자녀 출산 시점’ 정보를 활용하여 출산율 지표를 산출한 인구학적 연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⁸⁶⁾ 비록 출생 통계의 정확성이 높은 선진국에서 표본조사에 기초한 출산율 측정치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출생 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선진국에서도 표본조사에 기초한 측정치는 사회경제적 지위(SES) 등 인구 집단의 다양한 속성별 출산율을 비교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주민과 이민자 여성의 기간 합계출산율(period TFR)을 직접 산출하는 목적으로 이 접근을 사용한다.

이민자의 출산 행위와 관련하여, 우선, 출산 생애를 대체로 완료한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출생아 수와 출산진도비(PPR)를 분석한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가 15세 이상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경험을 조사하기에 이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ever-married women)을 대상으로 출산진도비를 산출한다. 출산진도비는 특정 순위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추가로 후속 순위의 자녀를 출산할 구성비 혹은 확률을 의미한다. 특히 출산진도비는 코호트 출산율의 ‘분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측정치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진 2020년 기준 46세 이상으로 출산 생애를 대체로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1974년 이전 출생 코호트를 분석한다.⁸⁷⁾ 다만, 활용할 수 있는 표본의 규모를 고려

85)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첫째 출산과 마지막 출산 정보를 구분하여 수집하며, 출산 자녀가 1명일 때는 첫째 출산 항목에 해당 정보가 기재된다. 만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첫째 출산 시점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마지막 출산 시점 정보만 수집하면 1명만 출산한 여성의 출산 정보는 마지막 출산 항목에 기재될 것이다.

86) 이 연구와 비슷하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 표본)를 활용하여 원주민과 이민자 여성의 출산력 수준을 비교 분석한 유삼현(2017)은 적생아 방법(嫡生兒 方法: own-children method)을 사용하였다.

87) 비록 앞의 이민과 혼인 분석과는 분석 대상자가 다소 다르지만, 출생 코호트별 변이를

하는 한편 사망력의 영향과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의 수집에 따른 오류(recall errors)를 줄이고자 1950년생을 분석 대상 출생 코호트의 상한으로 설정한 후 5년 단위로 총 5개의 출생 코호트를 구성하였다.⁸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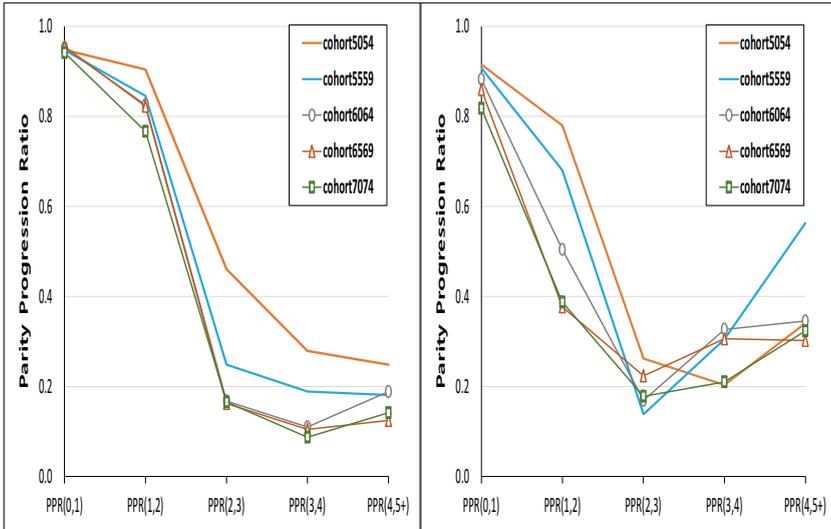
〈표 4-11〉과 [그림 4-7]에서 볼 수 있듯이 원주민 여성과 이민자 여성의 출산진도비는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인다. 원주민 여성의 출산진도비에서는 모든 출생 코호트를 아울러 공통적으로 제1 출산진도비($PPR_{1,2}$) 대비 제2 출산진도비($PPR_{2,3}$), 즉 둘째를 출산한 여성이 셋째를 출산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의 좌측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1960~1974년 출생 원주민 여성의 출산진도비 패턴은 상당히 유사하다. 반면에 1960~1974년 출생자와 1950~1954년 및 1955~1959년 출생자 간 차이는 상당히 크다. 특히 둘째 출산에서 셋째 출산, 그리고 셋째 출산에서 넷째 출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측되는 출생 코호트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한편 이민자 여성의 출산진도비는 원주민 여성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원주민과 마찬가지로 제2 출산진도비($PPR_{2,3}$)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하였지만, 1965년 이후 출생자를 중심으로 제1 출산진도비($PPR_{1,2}$)도 크게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965~1969년생과 1970~1974년생 이민자는 첫째 출산 후 둘째 출산으로 이행하는 확률이 0.4 미만이다. 원주민 여성과 비교할 때 이민자 여성의 경우 제1 출산진도비에서 관측되는 출생 코호트별 차이가 가장 뚜렷하다. 원주민 여성의 일부 출생 코호트에서도 관측되지만, 이민자 여성의 경우 제2 출산진도비에서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불규칙한 패턴이 좀 더 두드러진 모습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 절에서는 분석 대상 출생 코호트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88) 분석 대상 전체 기혼 여성 표본은 1,708,679명이며, 원주민 여성이 1,664,259명, 이민자 여성이 44,420명이다.

을 보인다.

[그림 4-7] 원주민(좌)/이민자(우) 기혼 여성의 출생 코호트별 출산진도비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출산진도비에 기초하여 코호트 출산율(CFS)을 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20%)에 기초하여 산출한 코호트 출산율은 출산 생애를 완료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망이나 국제이동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엄밀한 의미의 코호트 출산율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 여성의 출산 생애를 요약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다만, 원주민과 비교할 때 국제이동의 선택성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기에 코호트 출산율 측정치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i 를 출생 순위, 자료에서 관측된 최고 출생 순위를 j 라고 할 때 출산진도비에 기초한 코호트 출산율(CFR)은 아

래의 수식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CFR &= \sum_j CFR_j \\
 &= \sum_j \prod_{i=1}^j PPR_{i-1,i} \\
 &= PPR_{0,1} + PPR_{0,1} \times PPR_{1,2} + PPR_{0,1} \times PPR_{1,2} \times PPR_{2,3} + \dots
 \end{aligned}$$

〈표 4-11〉은 출산진도비에 기초하여 산출한 원주민과 이민자 여성(기혼)의 출생 코호트별 출산율(CFR)을 보여 준다. 원주민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은 1950~1954년생의 2.344에서 감소하여 1960~1974년 출생자에서는 1.8~1.9 수준을 보인다. 이민자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은 원주민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이는데, 1960년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코호트 출산율은 1.5 미만으로 떨어진다. 더욱이 1965~1974년 출생자의 코호트 출산율은 1.2~1.3 수준에 그친다. 1960년 이후 출생한 이민자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이 매우 낮은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2 출산진도비는 물론 제1 출산진도비가 크게 떨어진 점에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비록 자료상의 한계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앞의 이민과 혼인 분석(1951~1970년 출생 코호트)에서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혼인한 비중(예컨대, 중국 80.18%, 중국(한국계) 92.92%)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과 함께 여성의 경우 자녀의 존재가 이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출생아 수가 적은 여성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이민이 이루어진 결과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로 UN(2022a)의 인구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주요 출신 국가(7개국; 중국(한국계)은 중국에 포함)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선택적 이민이 작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

의 코호트 출산율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⁸⁹⁾

〈표 4-11〉 원주민/이민자 기혼 여성의 출생 코호트별 출산진도비와 코호트 출산율

(단위: 비, 여성 1명당 명)

구분		PPR _{0,1}	PPR _{1,2}	PPR _{2,3}	PPR _{3,4}	PPR _{4,5+}	CFR
원주민	1950~1954년생	.9474	.9038	.4606	.2789	.2485	2.344
	1955~1959년생	.9472	.8453	.2485	.1888	.1806	1.993
	1960~1964년생	.9525	.8256	.1676	.1102	.1886	1.889
	1965~1969년생	.9550	.8223	.1622	.1046	.1243	1.883
	1970~1974년생	.9414	.7668	.1652	.0870	.1413	1.795
이민자	1950~1954년생	.9152	.7799	.2617	.2033	.3409	1.881
	1955~1959년생	.9071	.6801	.1384	.3050	.5626	1.662
	1960~1964년생	.8822	.5041	.1691	.3266	.3456	1.439
	1965~1969년생	.8600	.3768	.2235	.3060	.3025	1.289
	1970~1974년생	.8177	.3874	.1780	.2100	.3234	1.209

주: 코호트 출산율(CFR)은 출산진도비 산출에서 사용된 상한(5명 이상)을 적용하는 대신에 전체 출생아 분포에 기초하여 산출함.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이민 과정의 선택성과도 관련되지만, 이민자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은 출신 국적 등 이민자 내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표 4-12〉는 출신 국적과 현 국적 상태별로 출산진도비와 코호트 출산율을 산출한 결과이다.⁹⁰⁾ 출신

89) UN(2022a)의 인구통계에 의하면 최근 들어 중국과 태국의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1950~1974년 출생자가 핵심 출산 연령(25~34세)이었던 시기의 출산율은 상당히 높다. 예컨대, 1965~1974년 출생자가 25~34세였던 1990~2008년의 합계출산율(산술 평균)을 살펴보면 중국이 1.68로 7개국 중 가장 낮고, 다음으로 태국이 1.76이다.

90) 출신 국가 중 태국(394명), 몽골(254명), 미국(367명)은 코호트(1950~1974년생)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에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분석에서는 출생 코호트를 구분하지 않고 1950~1974년 출생자 전체를 하나로 포괄하여 출산진도비와 코호트 출산율을 산출하였다. 앞의 분석에서 원주민 여성에 비해 이민자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이 상당히 낮지만, 출신 국가별 분석 결과는 코호트 출산율에서 이민자 내부의 변이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 준다. 출신 국적이 베트남인 기혼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이 2.0을 넘어서며, 필리핀 출신 기혼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도 1.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1950~1974년 출생 이민자 여성(기혼)의 절반 이상(55.15%)을 차지하는 중국(한국계) 출신자의 출산율은 1.3 수준에 그치며, 출신 국적이 중국(19.20%)인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1.2 미만으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원주민 여성에 비해 이민자 여성의 낮은 코호트 출산율은 전체 분석 대상 여성의 대략 3/4을 차지하는 중국(한국계 포함) 출신 여성이 보여 주는 출산 패턴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2〉는 추가로 현재의 국적 상태별 출산진도비와 코호트 출산율을 보여 준다. 국내 거주자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귀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높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분석 결과는 귀화인의 출산율이 오히려 외국인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보여 준다. 이렇게 외국인에 비해 귀화인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출신 국적이 중국인 기혼 여성의 출산 패턴과 관련이 있다. 1950~1974년 출생 여성(기혼)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인의 절반 이상(54.46%)이 중국 출신 여성인데(중국(한국계) 30.20%),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출

고 이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를 기타-미상 범주로 분류하는 대신에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지표를 산출하는 것이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별도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의 경우 뒤에서 검토하는 기간 합계출산율 산출 과정에서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관계로) 별도로 구분하여 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호트 분석과 기간 분석의 조응성도 고려하였다.

신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인다.

〈표 4-12〉 이민자 기혼 여성의 출산 국적 및 국적 상태별 출산진도비와 코호트 출산율
(단위: 비, 여성 1명당 명)

구분		PPR _{0,1}	PPR _{1,2}	PPR _{2,3}	PPR _{3,4}	PPR _{4,5+}	CFR
출신 국적	중국	.8027	.4230	.1024	.1371	.2247	1.183
	중국(한국계)	.8972	.4397	.0914	.1182	.1735	1.333
	필리핀	.8462	.6506	.3982	.4545	.5814	1.826
	태국	.7078	.5826	.2357	.1130	.2667	1.234
	베트남	.8999	.7472	.5549	.4518	.3986	2.236
	몽골	.7847	.5744	.2530	.3412	.6040	1.427
	우즈베키스탄	.8848	.5913	.2086	.1274	.2167	1.535
	미국	.7834	.6579	.2742	.3103	.5309	1.517
	기타/미상	.8565	.7116	.2932	.2564	.3567	1.711
현재 국적	귀화인	.8268	.4927	.1511	.1753	.2554	1.311
	외국인	.8765	.5023	.1949	.2886	.3865	1.443

주: 코호트 출산율(CFR)은 출산진도비 산출에서 사용된 상한(5명 이상)을 적용하는 대신에 전체 출생아 분포에 기초하여 산출함.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코호트 출산율에 이어 아래에서는 기간 출산율 측정치를 사용하여 원주민과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을 비교 분석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마지막 자녀 출산 시점'(date of birth of last child born alive) 정보를 활용하여 전체 및 원주민과 이민자의 최근 출산율을 직접 산출한다. 앞의 코호트 출산율과 달리 기간 출산율 분석에서는 통상적인 접근을 따라 미혼 여성을 포함하여 지표를 산출하되 미혼자는 출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만 15세 이상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마지막 자녀의 출산 시기(년/

월)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⁹¹⁾ 다만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출산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마지막 자녀의 출산 시기와 함께 첫째 자녀의 출산 시기에 관한 정보를 병행하여 수집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설문 구조의 장점은 마지막 자녀의 출산 시점 정보만을 수집하는 방식에 비해 다태아 출생의 과소 보고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첫째 자녀와 마지막 자녀의 출산 시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삼태아 이상의 출생에서 과소 보고의 문제가 지속되지만, 다태아 출생에서 삼태아 이상의 구성비는 높지 않다. 예컨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의 구성비는 4.6%이며, 다태아 중에서는 97% 이상이 쌍태아이다(통계청, 2019, p. 11).

‘마지막 자녀 출산 시점’ 정보에 기초하여 출산율을 직접 산출하는 최적의 준거 기간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준거 시점’(11월 1일 0시)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간의 출산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장 최근의 출산(마지막 출산)이 이루어진 ‘연도’와 ‘월’ 정보가 수집되기에 ‘준거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2개월 동안의 출산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출산 시점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에 해당하는 출생 건수를 확인하여 해당 기간의 합계 출산율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에서는 출산이 이루어진 ‘연도’ 정보만이 공개되고 ‘월’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⁹²⁾ 인구주택총조사의 ‘준거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을

91) 분석 대상자 중에서 첫째 자녀 출산 연령이 미취학 연령대에 해당하는 출생(1 사례)은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마지막 자녀 출산 연령을 연도로 환산할 때 출산 연도가 2025년 이후가 되는 출생(3 사례)도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92) 출생 ‘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준거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을 소급하여 출생 건수를 산출하기 위해 통계청의 월별 통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산출한다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의 2019년 출생 건수에 통계청의 2019년 전체 출생에서 11월~12월 출생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

소급하여 출산율을 산출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과 ‘준거 시점’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준거 시점이 2020년 11월 1일 0시이지만, 표본조사(20%)의 인터넷 조사는 10월 15일부터(10월 15일 ~ 10월 31일), 방문(현장) 조사는 11월 1일부터 진행되었다(11월 1일 ~ 11월 18일)(통계청, 2023m). 한편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시점에서 임신-출산이 예정된 가구(개인)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으로써 해당 기간의 실제 출생 건수를 과소 추정할 개연성도 있다. 실제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에서 수집된 첫째 자녀와 마지막 자녀의 출산 정보에 기초하여 연도별 출생 건수를 산출하면 2020년(1월~10월)의 출생 건수는 이전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준거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12개월을 소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자녀 출산 시점’ 정보의 특징을 고려할 때 ‘준거 시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회고적 정보에 따른 오류의 개연성은 물론 출생 정보가 누락될 개연성도 높아진다(Moultrie, 2013, pp. 48-49). 이는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가 전체 자녀를 모두 포괄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대신에 ‘최근’ 출산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준거 시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추가적인 출산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아지며, 마지막 출산 이외의 출산이 이루어지면 해당 정보가 누락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역년(calendar year) 단위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9년의 합계출산율을 산출한다.⁹³⁾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의

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계청의 월별 출생 통계가 내국인의 출생 패턴에 기초한 것으로 이민자 여성도 동일한 패턴을 보일 것인지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93) 출산 장소가 중요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국내-국의 출산을 구분하지 않고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을 산출한다(원주민 여성도 동일). 전체 분석 대상(2019년 기준 15~49세) 이민자 여성 중 2019년에 출산을 하고 2020년에 입국한 여성의 구성비는 0.17%

‘마지막 자녀 출산’ 정보에 기초하여 2019년의 출생 건수를 산출한 후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분모에 해당하는 연령별 여성 인구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준거 시점’의 연령별 인구를 기준으로 2019년의 연령별 인구를 역산하여 재구성한다. 생명표의 생존확률을 역산하여 연령별 여성 인구를 산출하는 방법(reverse survival method)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인구주택총조사 준거 시점의 직전 연도라는 점에서 별도의 보정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다.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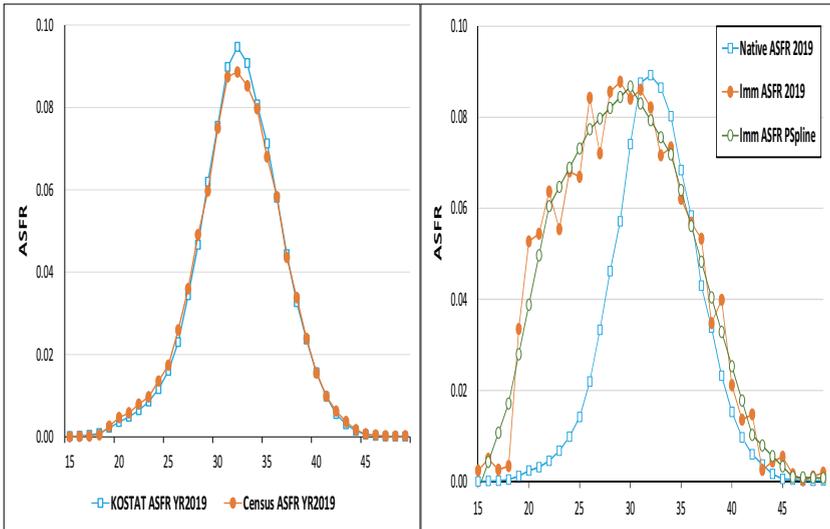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표 4-13>은 2019년 기준으로 산출된 전체 및 원주민과 이민자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ASFR)과 합계출산율(TFR)을 보여 준다. 원주민과 이민자를 모두 아우른 전체 여성의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915로 추정되는데, 이는 통계청(2023i)의 2019년 합계출산율 0.918과 상당히 유사한 수준이다. [그림 4-8]의 좌측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연령별 출산율의 패턴 또한 상당히 유사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출생 신고와 주민등록(연양)인구에 기초한 통계청의 공표 통계와 비교할 때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은 상주인구에 기초하여 산출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산출 과정에서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원주민과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이민자의 합계출산율이 1.448로 원주민의 0.88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4-8]의 우측에는 원주민(Native ASFR 2019)과 이민자(Imm ASFR 2019)의 연령별 출산율 추정치와 함께 이민자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평활화한 값을 추가로 보여 준다(penalized spline 추정치; Imm ASFR PSpline). 원주민과 이민자의 연령별 출산율을 비교하면

이다(2019년 입국자 포함 시 0.76%). 참고로 앞의 코호트 출산율 산출 과정에서도 자료의 한계로 이민자 여성의 출산 장소(국내-국외)를 확인할 수 없다.

94) 2019년 기준으로 기간 합계출산율을 산출하는 데 사용된 표본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16~50세의 여성이다(2019년 기준 15~49세). 전체 표본은 2,170,768명이며, 원주민 여성 2,066,026명, 이민자 여성 104,742명이다.

이민자의 20대 출산율이 원주민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3>에서 볼 수 있듯이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의 합계출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 합계출산율에 대한 이민자의 기여는 절대치 기준으로 0.03 수준에 그친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체 여성 인구 대비 이민자 여성 인구의 구성비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2019년 기준 15~49세 전체 여성 중에서 이민자 여성의 구성비는 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출생아 수에서 이민자 여성의 출생아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10% 수준으로 그 비중이 작지 않다.

[그림 4-8] 전체(통계청)/표본(20%) 및 원주민/이민자의 연령별 출산율: 2019년



주: 14세 이하의 출생은 15세의 출생, 50세 이상의 출생은 49세의 출생에 포함함.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통계청. (2023i). 국가통계포털: 온라인간행물(주제별)-인구-인구동태(출생, 사망) [데이터파일].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에서 2023. 6. 12. 인출.

182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표 4-13〉 인구주택총조사(표본 20%)에 기초한 연령별 출생과 출산율: 2019년

(단위: 명, 율)

연령	전체 여성		원주민 여성		이민자 여성	
	출생	출산율	출생	출산율	출생	출산율
15	5	0.00002	0	0.00000	5	0.00237
16	28	0.00012	18	0.00008	10	0.00495
17	43	0.00018	33	0.00014	10	0.00257
18	131	0.00047	100	0.00037	31	0.00335
19	814	0.00257	356	0.00117	458	0.03346
20	1,438	0.00469	689	0.00235	749	0.05273
21	1,854	0.00580	939	0.00310	915	0.05441
22	2,589	0.00794	1,388	0.00452	1,201	0.06368
23	3,215	0.00972	2,097	0.00675	1,118	0.05538
24	4,592	0.01351	3,117	0.00980	1,475	0.06808
25	5,885	0.01738	4,487	0.01412	1,398	0.06689
26	8,846	0.02595	6,995	0.02193	1,851	0.08430
27	12,732	0.03592	11,005	0.03330	1,727	0.07206
28	16,321	0.04910	14,225	0.04620	2,096	0.08563
29	19,075	0.05969	16,759	0.05716	2,316	0.08782
30	23,140	0.07494	20,982	0.07411	2,158	0.08407
31	26,618	0.08745	24,288	0.08758	2,330	0.08607
32	27,631	0.08859	25,342	0.08923	2,289	0.08212
33	26,718	0.08523	24,814	0.08649	1,904	0.07164
34	25,575	0.07966	23,667	0.08021	1,908	0.07335
35	22,767	0.06797	21,374	0.06840	1,393	0.06211
36	21,637	0.05830	20,447	0.05838	1,190	0.05686
37	17,622	0.04353	16,526	0.04301	1,096	0.05334
38	13,632	0.03383	13,010	0.03379	622	0.03474
39	10,018	0.02390	9,301	0.02318	717	0.03988
40	6,104	0.01551	5,734	0.01525	370	0.02113
41	3,553	0.00983	3,337	0.00966	216	0.01352
42	2,338	0.00625	2,140	0.00594	198	0.01470
43	1,322	0.00367	1,287	0.00372	35	0.00252
44	669	0.00173	608	0.00163	61	0.00435
45	299	0.00071	220	0.00054	79	0.00538
46	182	0.00042	158	0.00038	24	0.00157
47	92	0.00021	88	0.00021	4	0.00025
48	71	0.00016	52	0.00012	19	0.00109
49	104	0.00023	70	0.00016	34	0.00191
전체	307,660	0.91517	275,653	0.88297	32,007	1.44828

주: 14세 이하의 출생은 15세의 출생, 50세 이상의 출생은 49세의 출생에 포함함.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표 4-14〉는 이민자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을 출신 국적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결과를 보여 준다. 출신 국적별 출산율에서는 1세대 단위 대신에 5세 단위로 구분하여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을 산출하였다.⁹⁵⁾ 출신 국적별 출산율의 연령별 패턴을 시각화한 [그림 4-9]에는 비교 차원에서 원주민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함께 제시하였다. 앞의 코호트 출산율과 마찬가지로 기간 출산율에서도 출신 국적별 차이는 상당한 수준이다. 필리핀(2.357)과 베트남(2.003) 출신자의 합계출산율이 2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반면에 미국(0.757)과 중국(0.958) 출신자의 합계출산율은 1 미만이다. 한국계 중국 출신자의 합계출산율도 1.2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그림 4-8]과 마찬가지로 출신 국적을 세분화한 [그림 4-9]에서도 원주민과 비교한 이민자 여성의 높은 출산율은 대체로 20대 이하 연령 구간의 출산율 격차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앞의 출산 생애를 완료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출산율 분석에서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원주민에 비해 낮았지만, 현 가임기 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간 분석 결과는 반대로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원주민에 비해 높은 상반된 패턴을 보여 준다.⁹⁶⁾ 자료 제약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일견 상충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결과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쉽

95) 출신 국적별 이민자의 연령별 출산율 패턴에서 필리핀 여성의 20~24세 구간의 출산율이 다른 출신 국적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인다. 연령별 출산율에서 필리핀 여성은 20~24세 연령 구간의 인구(분모: 1,519명)가 다른 출신 국적자에 비해 적지만(전체 15~49세 필리핀 이민자 여성 = 27,660명), 해당 연령 구간의 출생아 수(265명)는 중국, 중국(한국계), 몽골, 우즈베키스탄, 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96)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간 분석과 달리 코호트 분석이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혼율 차이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이민자 여성(3.87%)에 비해 원주민 여성(4.52%)의 생애 미혼율이 다소 높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1950~1969년 출생자에서 이민자(3.09%)와 원주민(3.23%) 간 미혼율 차이는 미미하다. 또한 1950~1974년 출생 이민자 기혼 여성의 대략 3/4이 중국(한국계 포함)이고 나머지도 동아시아 출신자의 구성비가 높다는 점에서 미혼 출산의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호트 및 기간 분석에서 관측되는 원주민과 이민자의 상반된 출산율 패턴을 미혼율 차이에서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코호트 분석과 기간 분석의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선, 이민자 여성의 구성에서 나타난 변화이다. 앞의 코호트 분석에서 중국(한국계) 출신자가 절반 이상이며, 한국계를 포함한 전체 중국 출신자가 분석 대상자(1950~1974년 출생 기혼 여성)의 대략 75%를 차지한다. 반면에 기간 분석에서 사용한 표본, 즉 2019년 기준의 가임 세대(15~49세)에 속한 인구에서는 중국(19.35%) 및 중국(한국계; 18.89%)의 구성비가 크게 감소한 반면, 베트남 출신 여성의 구성비(20.02%)가 분석 대상 출신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중국 및 중국(한국계) 출신 국적 여성의 구성비가 줄어들고 베트남, 필리핀 등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의 구성비가 높아짐으로써 전체적으로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높아지는 현상의 기초가 된다.⁹⁷⁾

위의 논의는 원주민과 이민자 여성의 코호트 및 기간 출산율에서 관측되는 상이한 패턴의 원인을 이민자 내부(구성)에서 찾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원주민-이민자의 코호트 출산율과 기간 출산율이 상반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원주민 집단의 인구학적 행동(혼인) 변화에서도 일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앞의 1951~1970년 출생 여성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혼인 생명표 분석에서 원주민(4.27%)과 이민자(4.71%)의 49세 기준 생애 미혼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표 4-5〉 참고). 더욱이 상대적으로 최근 출생 코호트인 1961~1970년 출생자에서는 20대 초중반부터 30대 초중반에 걸쳐 이민자 여성의 혼인이 원주민 여성에 비해 지연되는 현상까지 관측된 바 있다.

97) 2019년 기준의 출신 국적별 이민자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이민자 본국의 합계출산율보다 낮은 사례가 많지만, 태국이나 베트남처럼 예외도 있다. 참고로 UN(2022a)의 인구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의 합계출산율은 중국 1.50, 필리핀 2.81, 태국 1.35, 베트남 1.95, 몽골 2.94, 우즈베키스탄 2.80, 미국 1.69 수준이다.

그러나 현 가임기 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간 혼인 생명표 분석 결과는 2015~2019년에 걸친 연령별 혼인율 패턴이 혼인 생애 동안 지속되면 원주민 여성의 49세 기준 미혼율(24.26%)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코호트 혼인 생명표와 기간 혼인 생명표를 모두 아울러 생애 미혼율에서 큰 차이가 없는 이민자 여성과 대비되는 모습이다(〈표 4-8〉참고). 잘 알려져 있듯이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 관계에 기초하는 한국 사회에서 생애 혼인율의 감소는 출산율 감소와 직결되며, 이는 현 가임기 세대에서 이민자 여성과 비교하여 원주민 여성의 출산율(기간)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표 4-14〉 출산 국적별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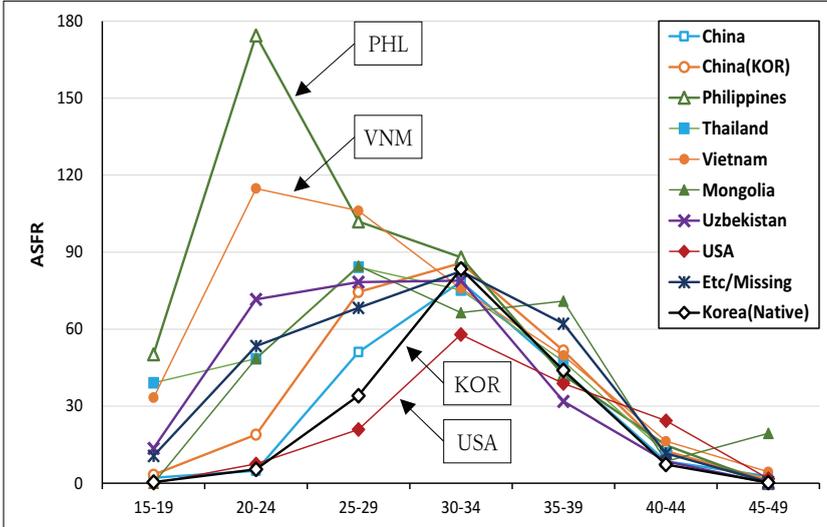
(단위: 연령별 여성 인구 천 명당 명, 여성 인구 1명당 명)

연령	ASFR							TFR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중국	2.1	4.9	51.1	78.5	44.0	8.5	2.6	0.958
중국(한국계)	3.3	18.9	74.5	85.8	51.7	12.6	1.3	1.240
필리핀	50.2	174.5	102.0	88.0	42.0	14.8	0.0	2.357
태국	39.1	48.5	84.2	75.2	47.5	11.8	0.0	1.531
베트남	33.3	114.8	106.1	75.9	49.7	16.3	4.4	2.003
몽골	0.0	48.6	84.6	66.4	70.9	8.6	19.4	1.493
우즈베키스탄	13.6	71.7	78.4	78.9	31.9	8.5	0.0	1.415
미국	0.0	7.5	20.9	58.0	38.9	24.3	1.7	0.757
기타/미상	10.6	53.4	68.3	82.6	62.2	11.7	0.5	1.447

주: 14세 이하의 출생은 15세의 출생, 50세 이상의 출생은 49세의 출생에 포함함.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그림 4-9] 출신 국적별 연령별 출산율: 2019년



주: 14세 이하의 출생은 15세의 출생, 50세 이상의 출생은 49세의 출생에 포함함.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제4절 종합 및 소결

국제이동은 이민자 유입을 통해 전체 및 성별-연령별 인구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지만,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국내 인구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은 이민자의 출산력에 관한 논의도 이민의 간접적 파급 효과와 관련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인구학적 논의가 ‘결혼 이민’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이 연구에서는 이민의 목적 혹은 이민자의 구성과 관계없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이민자’를 대상으로 혼인과 출산 패턴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록

현시점에서 이민자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 자료를 사용하였지만, 이 연구의 분석 결과가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준 시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에 한정된 논의이기에 다른 시공간으로 확대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코호트 분석 대 기간 분석)에서도 일부 살펴볼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민자의 구성과 특성에는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민자 수용의 역사가 짧고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에 전개될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혼인, 출산)이 현재와 얼마나 다를지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 결과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에 한정된 논의이기에 조사 시점 이전에 송출국으로 귀환한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⁹⁸⁾ 이민자의 출산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자가 선택되는 과정과 이민자-비이민자의 출산력 차이, 이민 과정에서 나타나는 출산력의 조정(예컨대, 출산 연기), 이민 후 이민 수용국 내에서의 적응 과정과 원주민-이민자의 출산력 차이를 모두 아우르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듯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에 관한 분석 방향과 세부 내용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료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민과 혼인-출산에 관한 이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자료상의 한계로 기존의 많은

98) 예컨대, 현 가임기 세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의 확산 등에 따라 국내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시적 이민자의 본국 귀환이 이러한 분석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다만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 자료를 분석한 유삼현(2017)의 연구에서도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민자 여성은 원주민에 비해 낮은 코호트 출산율을 보이지만, 기간 출산율은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연구는 이민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거나 특정 유형(예컨대, 결혼 이민)의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원주민과 이민자(통합) 간 차이보다는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이 더욱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출신 국적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자료가 활용 가능하다면 체류자격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민과 혼인-출산 분석 결과는 또한 출생 코호트별 차이가 상당히 큼을 보여 준다. 출산 생애를 대체로 완료한 세대에서는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 여성(기혼)의 출산율이 낮았지만, 현 가임기(15~49세) 세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상반된 패턴을 보여 주었다. 이는 이민자 내부의 출신 국적별 출산력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출산율이 낮은 중국(한국계 포함) 출신 이민자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높은 베트남 출신 이민자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이민자 내부의 구성 변화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 가임기 세대에서 이민자에 비해 원주민 여성의 출산율이 낮은 현상이 원주민 여성의 출생 코호트별 혼인 패턴 변화와도 관련됨을 시사한다. 이민자 여성의 혼인 패턴이 코호트 분석과 기간 분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원주민의 경우 과거와 달리 최근의 혼인 패턴이 지속되면 혼인이 지연되고 생애 미혼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혼인 패턴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가 현재 가임기에 속한 원주민 여성의 출산율이 이민자 여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현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기간 혼인력과 출산력 분석 대상 기간인 2015~2019년은 2000년 초반 이후 시작된 초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진입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혼인 건수나 혼인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우해봉, 2022, p. 21, 43).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전체 출생아 중에서 이민자 여성이 출산한 출생아의 구성비가 10% 수준에 이르지만,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임을 보여 준다. 이는 현재까지 전체 가입 여성 중에서 이민자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에 기인한다. 만일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여 이민자 수용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한다면 출산율에서도 이민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민의 영향이 커지더라도 출산율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이민자 내부의 구성, 특히 출신 국적별 이민자의 구성과 관련이 있다. UN(2022a)에 의하면 현시점에서 국내 이민자의 상당수를 배출한 중국의 2021년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1.16으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초저출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우즈베키스탄(2.86), 몽골(2.84), 필리핀(2.75), 베트남(1.94) 등의 합계출산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비록 이민 과정의 선택성으로 인해 이민자의 출산율이 이민 송출국에 남아 있는 비이민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출신 국적 등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민자의 구성에 따라 출산에 대한 이민의 파급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국가별 출산력 동향을 고려할 때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국 출신 이민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면,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출산에 대한 이민의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이민과 출산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는 이민의 목적 혹은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임신-출산의 계획과 실행은 미래에 대한 장기적 설계가 가능해야 그 실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민자의 높은 출산력에 기초한 저출산 문제의 완화는 이민자의 영구 정착을 전제로 한 접근임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의 산업연수생이나 현재의 고용허가제처럼 한시적 체류를 전제로 한 이민정책을 통해서도 이민자의 출산력에 기초한 저출산 문제의 완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에 한정된 논의이기에 분석 결과의 확대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현 가임기 세대에서 국내 거주 이민자의 출산율이 원주민 여성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이민의 증가가 저출산 현상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 가임기 세대의 이민자 또한 한국 사회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완결 출산율이 어떠한 수준을 보일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고출산 국가 출신 이민자도 국내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출산 패턴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이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원주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민자의 출산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아무리 고출산 국가 출신의 이민자라도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신 국가의 (고)출산 패턴을 지속해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대규모 이민자 수용을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제5장

이민자의 국내이동과 공간적 분포

제1절 서론

제2절 이민자의 국내이동 현황과 특징

제3절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와 집중

제4절 종합 및 소결



제 5 장 이민자의 국내이동과 공간적 분포

제1절 서론

이민자의 공간 이동과 지역적 분포는, 첫째,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민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 주는 측면이 있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의 절대 규모가 감소함과 함께 노동력의 고령화로 국내 근로자의 이동력(국내이동) 또한 감소함으로써 인해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선진국이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이민자 노동력의 활용이다. 그러나 이민자가 이민 수용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원주민과 마찬가지로 대도시 등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여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질 개연성도 있다. 이민자 수용이 비록 지역사회가 당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이민의 혜택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동시에 1)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2)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어촌 간 격차를 확대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민자의 공간 이동과 지역 분포는 이민자의 적응과 사회 통합 지표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인적자원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이민자는 이민 수용국(선진국)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이민자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기 침체 및 산업 구조 조정 단계에서는 이민자의 적응과 사회 통합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비록 이민자의 국내이동과 지역적 분포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지만, 이

장에서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국내이동과 공간적 집중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민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먼저 원주민과 비교한 이민자의 국내이동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민자의 인구이동 연구에서는 ‘국제이동’과 ‘국내이동’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이 연구에서도 국제이동과 국내이동의 연계 분석 대신에 우리나라 전체 국내이동의 일환으로 원주민과 비교한 이민자의 국내이동 패턴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러한 국내이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과 분포의 문제를 검토한다.

제2절 이민자의 국내이동 현황과 특징

앞에서 살펴본 이민자의 혼인-출산 패턴과 마찬가지로 이민자의 국내이동 현황과 특징 분석에서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을 활용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는 어떤 두 시점의 거주지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이동 정보를 제공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제공되는 국내이동은 2가지 형식으로 제공된다. 첫째, 생애 이동(lifetime migration) 정보이다. 이는 현 거주지와 출생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둘째, 고정된 기간에 걸친 인구이동인데, 현 거주지와 과거 특정 시점의 거주지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고정된 기간에 걸친 이동을 측정하는 준거 시점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시점의 거주지(시군구, 시도)와 함께

1년 전 및 5년 전의 거주지 정보가 제공되는데, 이를 통해 이민자의 국내 이동을 분석할 수 있다. 현 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를 비교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우리나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1년 전과 5년 전 거주지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 특히 등록센서스 방식에 기초한 현 인구주택총조사의 1년 전 및 5년 전 거주지 정보는 현장(방문) 조사 대신에 행정 자료를 활용하기에 일반 사회조사에 비해 정확성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생애 이동과 고정된 기간에 걸친 이동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만, (현 거주지 대비) 직전 거주지(place of previous residence)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직전 거주지 정보는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 기간에 관한 질문과 연계하여 수집되는 경향이 있다.⁹⁹⁾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한 국내이동 측정치들을 비교한 연구(Bell, Charles-Edwards, Kupiszewska, Kupiszewski, Stillwell, and Zhu, 2015, p. 15)는 고정 기간(1년 혹은 5년)에 기초하여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이동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고정된 기간에 기초한 방식 중 과거 1년 혹은 5년 기간에 걸친 국내

99) 이민자의 국내이동을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자료원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패널데이터(센서스패널)가 있다. 센서스패널(통계청, 2023d)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약 2%의 표본(2015년 기준 953,430명, 382,218가구)을 추출하여 패널을 구축하였다. 센서스패널에서는 국적 기준(출생 시 혹은 현재 국적이 외국)의 이민자 정보가 제공되며, 출생지(국가)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모두 제외된다(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 이러한 조건에서 2015~2020년의 5년에 걸친 정보가 모두 제공되는 이민자 표본은 3,891명에 불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이민자임에도 입국 연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초적인 개인-가구 정보만이 연계되어 제공됨으로써 이민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반면에 센서스패널이 갖는 장점은 반복 이동(multiple migration)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센서스패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인 시군구 단위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을 국내이동으로 정의할 때 분석 대상 이민자 중 1번 이상 이동을 경험한 이민자는 27.64%이며, 2번 이상 이동한 이민자는 전체 이민자의 8.61%로 나타난다(1번 이상 이동한 이민자의 31.15%).

이동 측정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1년 기간에 걸친 국내이동 측정치는 ‘이동률’을 측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비록 1년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를 비교하는 접근이 이동하는 개인(mover)에 기초하지만, 인구 이동 사건(move)과 연앙인구(mid-year population)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이동률’ 측정치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주택 총조사의 ‘기준 시점’ 즈음에 이루어진 이동을 측정하기에 이동 시점의 이동자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며, 결과적으로 국내이동의 선별성을 포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반면에 과거 5년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를 비교하는 방식은 5년 동안 이동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한편 5년 기간에 걸친 반복 이동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동률 측정치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또한 5세 미만 인구, 사망자, 유출 인구(해외; emigration)의 국내이동 정보가 소실되는 한계도 있다. 반면에 5년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를 비교하는 접근은 국내이동에 따른 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이 지적된다. 또한 현 거주지와 1년 전 거주지를 비교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 왜곡 현상을 교정할 수 있다. 회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오류(recall error)의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지만(현장 조사), 일반적으로 인구의 재분배 패턴과 관련하여 5년 기간에 걸친 이동이 더욱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다(Bell et al., 2015, p. 12; Bell and Muhidin, 2009, pp. 5-7).¹⁰⁰⁾

기본적으로 이 연구가 이민자의 국내이동 패턴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구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5년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회고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100) 참고로 5년 전 거주지와 1년 전 거주지에 기초한 접근이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반복적인 이동 패턴을 보이는 집단의 비중이 클수록 5년 기간에 걸친 이동률은 1년 기간에 기초한 이동률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편 인구 이동이 측정되는 기간의 차이는 단순히 이동률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인구의 재분배 패턴에서도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Bell and Muhidin, 2009, p. 6).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가 사용하는 거주지 정보가 행정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정확성 확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과거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비교할 때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반영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변동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도 5년 전 거주지 정보에 기초한 인구이동 분석이 더욱 타당한 측면이 있다. 참고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되는 국내이동 통계가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변경하는 인구이동을 대상으로 하지만,¹⁰¹⁾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에서 제공되는 5년 전 거주지 유형은 1) 현재 사는 집, 2)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3) 다른 시군구 소재 집으로 구분됨으로써 읍면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구이동도 포착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통계청의 국내이동 통계가 읍면동에 접수된 전입신고서에 기초하여 작성되지만,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에서 제공되는 국내이동 정보는 단순히 두 시점의 거주지(행정 데이터)를 비교하여 인구이동을 파악한다. 이에 따라 통계청의 국내이동 통계와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20%)에서 제공되는 국내이동 정보에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5년 전 거주지 정보에 기초한 국내이동 분석에서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준거 시점(2020년 11월 1일 0시)으로부터 5년 전에 출생하여 국내에 거주한 개인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준거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출생하지 않았거나 해당 시점에서 외국에 거주한 개인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분석 표본 전체 9,185,437명, 원주민 9,065,633명, 이민자 119,804명).¹⁰²⁾ 다만 ‘국내이동’ 분석(2절)의 대상자는 아니지

101) 물론 통계청의 국내이동 공표 통계(KOSIS) 대신에 국내이동 원자료를 분석하면 읍면동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구이동도 분석할 수 있다.

102)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준거 시점(11월 1일 0시)으로부터 5년 전의 거주지가 국내

만,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집중’에 관한 분석(3절)에서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준거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에 국내에 거주한 이민자(past immigrants)의 공간 분포(집중)가 ‘최근 5년 내’에 국내에 입국한 이민자(recent immigrants)의 공간 분포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입국한 이민자의 정보를 부분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입국한 이민자 중에는 인구주택총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 기간에 입국한 경험이 있는 이민자도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5년 내에 새롭게 입국한 이민자를 좀 더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공간적 분포-집중’ 분석(3절)에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5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기간에 입국한 경험이 있는 이민자를 제외한다.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구분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준거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에 국내에 거주한 이민자를 ‘기존 이민자’ 혹은 ‘이민자(기존)’로 명명하며,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준거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의 기간에 입국한 (기존 입국 경험이 없는) 이민자를 ‘최근 이민자’ 혹은 ‘이민자(최근)’로 명명하여 구분한다. 참고로 <표 5-1>은 분석 대상 원주민과 이민자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5-2>는 이민자(기존)의 입국 코호트별 출신 국적의 분포를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최근 이민자’는 ‘기존 이민자’에 비해 20대 미혼 남성의 비중이 높은 패턴을 보이는데, 출신 국적별로는 상대적으로 태국이나 베트남 출신자의 비중이 높다.

이지만, 입국 시점이 2015년 11월 이후인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의 입국 시점(연월) 정보가 장기 거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행 등 단기 거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이들의 5년 전 거주지가 대한민국이지만,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전에 출국한 후 재입국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국내이동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표 5-1) 분석 대상 원주민과 이민자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원주민	이민자(기존)			이민자 (최근)	
		귀화인	외국인	전체		
연령	20대 미만	14.34	10.69	3.21	4.82	5.17
	20대	13.00	6.64	7.49	7.31	38.57
	30대	13.67	24.48	27.85	27.12	29.24
	40대	16.51	23.52	21.46	21.91	13.12
	50대	17.35	18.49	23.24	22.22	8.58
	60대	13.53	9.37	13.93	12.95	4.01
	70대 이상	11.60	6.81	2.83	3.68	1.31
성별	남성	49.43	25.17	50.30	44.90	59.42
	여성	50.57	74.83	49.70	55.10	40.5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8.28	34.43	26.59	28.27	20.37
	고졸	35.98	48.38	48.64	48.59	57.01
	전문대졸	10.38	6.10	6.47	6.35	6.10
	대졸 이상	25.36	11.09	18.30	16.75	16.52
혼인 상태	미혼	37.01	20.07	19.33	19.49	51.28
	유배우	51.23	63.90	71.89	70.17	44.68
	사별/이혼	11.76	16.03	8.78	10.33	4.04
고용 상태	임금근로	41.06	46.08	60.74	57.59	60.36
	자영업/무급종사	12.24	9.64	6.46	7.15	2.65
	비취업	46.69	44.28	32.79	35.26	36.98
종사 산업	농림어업	4.27	4.01	2.52	2.79	9.37
	제조	17.41	28.26	32.08	31.38	48.72
	건설	6.45	9.17	15.69	14.48	8.60
	도소매	13.40	10.28	8.55	8.87	5.84
	운수/창고	5.27	2.17	2.13	2.14	1.54
	숙박/음식점	8.12	17.31	14.45	14.98	8.13
	금융/보험	3.50	1.51	1.41	1.43	0.87
	전문/과학/기술	4.42	1.91	1.92	1.92	1.33
	사업시설/임대	4.35	4.86	5.56	5.43	4.42
	공공행정	5.38	2.07	1.38	1.50	1.28
	교육	6.69	4.17	4.67	4.58	3.78
	보건/사회복지	8.34	6.66	2.99	3.67	1.34
	협회/단체/개인	3.87	3.36	2.28	2.48	1.47
	기타	8.51	4.27	4.37	4.35	3.30
가구 형태	일반	98.28	99.14	28.29	43.51	18.86
	집단시설/집단	1.72	0.86	1.68	1.50	8.19
	외국인	0.00	0.00	70.04	54.99	72.95

200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구분		원주민	이민자(기존)			이민자 (최근)
			귀화인	외국인	전체	
세대 유형	부부	16.32	17.58	25.48	23.77	14.80
	부부+자녀	44.80	38.27	25.88	28.56	12.06
	부/모+자녀	10.39	10.12	4.70	5.87	2.62
	부부+자녀+부/모	3.90	8.59	6.60	7.03	4.37
	1인 가구	13.99	12.95	21.86	19.93	30.97
	기타	10.61	12.49	15.47	14.83	35.17
출신 국적	중국	-	38.00	12.73	18.16	11.39
	중국(한국계)	-	19.89	51.66	44.83	14.82
	필리핀	-	5.02	2.39	2.95	2.92
	태국	-	0.65	2.61	2.19	10.94
	베트남	-	13.50	6.72	8.18	16.34
	몽골	-	0.73	1.38	1.24	2.80
	우즈베키스탄	-	0.69	1.96	1.69	4.44
	캄보디아	-	1.40	1.20	1.24	3.51
	미국	-	8.87	2.05	3.51	1.92
기타/미상	-	11.27	17.30	16.00	30.91	
입국 연도	1995년 이전	-	13.43	6.29	7.82	0.00
	1996~2000년	-	16.61	7.70	9.61	0.00
	2001~2005년	-	23.61	11.56	14.14	0.00
	2006~2010년	-	31.89	31.75	31.78	0.00
	2011~2015년	-	14.46	42.70	36.63	1.98
	2016~2020년	-	0.00	0.00	0.00	98.02
표본 규모		9,065,633	31,961	87,843	119,804	158,255

주: 종사 산업은 취업자(임금근로/자영업/무급종사)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 유형은 집단시설/집단 가구를 제외함; 세대 유형에서 자녀는 미혼 자녀를 의미하며, 부부+자녀+부/모에서 부/모는 양친을 포함함; 이민자(기존)는 2015년 10월 이전에 처음 입국한 이민자이며, 이민자(최근)는 2015년 11월 이후 처음 입국한 이민자를 의미함;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구성비는 인구가중치를 적용한 분포임.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표 5-2〉 이민자(기존)의 입국 코호트별 출신 국적의 분포

구분	출신 국적										
	중국	중국 (한국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 키스탄	캄보 디아	미국	기타 미상	
입국 연도	1995년 이전	7.36	4.93	4.62	5.10	3.60	2.78	2.04	2.55	13.32	19.80
	1996~2000년	11.72	10.63	13.44	8.34	2.58	8.05	3.04	1.44	7.45	9.38
	2001~2005년	17.10	15.35	14.70	14.60	10.73	11.51	6.36	2.27	12.98	11.21
	2006~2010년	31.04	36.11	28.24	20.34	41.78	32.90	24.52	31.21	29.26	18.90
	2011~2015년	32.79	32.99	39.01	51.62	41.31	44.75	64.03	62.52	36.99	40.71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이민자의 국내이동과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원주민과 이민자의 이동률 패턴과 특징을 살펴본다.¹⁰³⁾ 〈표 5-3〉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하여 산출한 5년간 이동률(%)은 원주민이 37.52%, 이민자가 51.31%로 이민자가 13.79%포인트 높다. 이동의 공간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국내이동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이동의 하위 유형을 1) 시군구 내 이동, 2) 동일 시도 내의 시군구 간 이동, 3) 동일 권역 내의 시도 간 이동, 4) 권역 간 이동의 상호배타적 범주로 구분한다. 비록 작위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권역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도로 구분한다. 하위 이동 유형을 모두 아울러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의

103)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제공되는 1년 전 혹은 5년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를 비교하여 산출한 국내이동 측정치를 선행 연구에서는 관례적으로 '이동률'로 표현한다(Kaplan and Schulhofer-Wohl, 2012, p. p. 1062; Molloy, Smith, and Wozniak, 2011, p. 174; Newbold, 1999, p. 262; Wolf and Longino, 2005, p. 7).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이동률' 개념을 사용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측정치는 구성비 또는 백분비(%)에 해당한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뒤에서 논의되는 유출률이나 유입률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이동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시도 간 경계 이상을 가로지른 이동률에서 원주민과 이민자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된다. 이렇게 시도(권역) 간 이동에서 원주민과 이민자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되는 점은 이민자의 높은 이동률이 주거 목적보다는 고용이나 가족 목적에 기초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¹⁰⁴⁾ 성별 이동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원주민보다 이민자 내부의 성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민자 남성과 여성 간 이동률 차이는 권역 간 이동에서 가장 크게 관측된다.

〈표 5-3〉 원주민과 이민자의 이동률: 2015년 → 2020년

(단위: %)

구분	체류	이동 유형					계	
		시군구 내	시도 내 시군구 간	권역 내 시도 간	권역 간	전체		
전체	원주민	62.48	15.85	10.11	6.36	5.21	37.52	100.00
	이민자	48.69	18.80	13.32	10.76	8.42	51.31	100.00
남성	원주민	62.21	15.82	10.14	6.42	5.40	37.79	100.00
	이민자	45.72	18.92	13.98	11.56	9.82	54.28	100.00
여성	원주민	62.74	15.87	10.07	6.29	5.03	37.26	100.00
	이민자	51.12	18.71	12.79	10.11	7.27	48.88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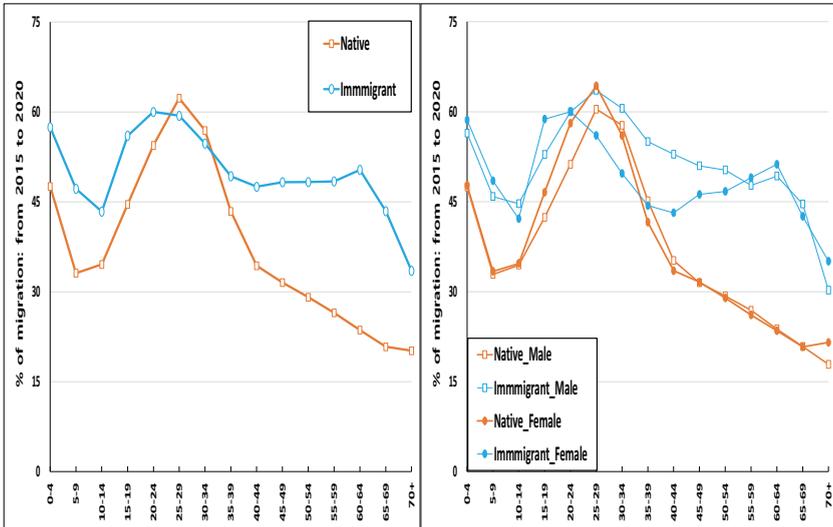
주: 권역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로 구분하며, 서울·인천·경기는 수도권,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은 중부권, 광주·전북·전남은 호남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은 영남권으로 분류함.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104) 프랑스의 국립인구연구소(INED)가 1981년에 조사한 FTB(French Triple Biography Survey of Family, Employment, and Migration) 조사는 이동 거리(km)와 이동 목적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근거리 이동에서 주거 관련 목적이 주도하는 반면에 원거리 이동에서는 고용 혹은 가족 관련 목적이 주도함을 보여 준다 (Courgeau and Lelièvre, 2006, p. 348). 우리나라의 전입 사유별 인구이동 자료에서도 시도 간 이동은 직업, 시도 내 이동은 주택 관련 전입 사유의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우해봉, 2022, pp. 90-91).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인구이동의 연령별 패턴에서는 20대에 이동률이 정점을 이루는 등 일련의 규칙성이 존재함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림 5-1]은 원주민과 이민자의 연령별 이동률을 보여 준다. 원주민의 경우 잘 알려진 연령별 이동 스케줄(Rogers, 1988; Rogers and Castro, 1981) 처럼 25~29세 구간에서 정점을 형성하는 패턴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민자는 20대에 이동률이 정점에 이르지만 40대 이상에서 60대 전반까지도 원주민에 비해 상당히 높은 독특한 패턴을 보인다. 성별로 구분하여 원주민과 이민자의 연령별 이동률 패턴을 살펴보면 원주민의 경우 20대 후반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측되지 않지만, 이민자 집단에서는 2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남성의 이동률이 여성의 이동률을 크게 넘어서는 패턴이 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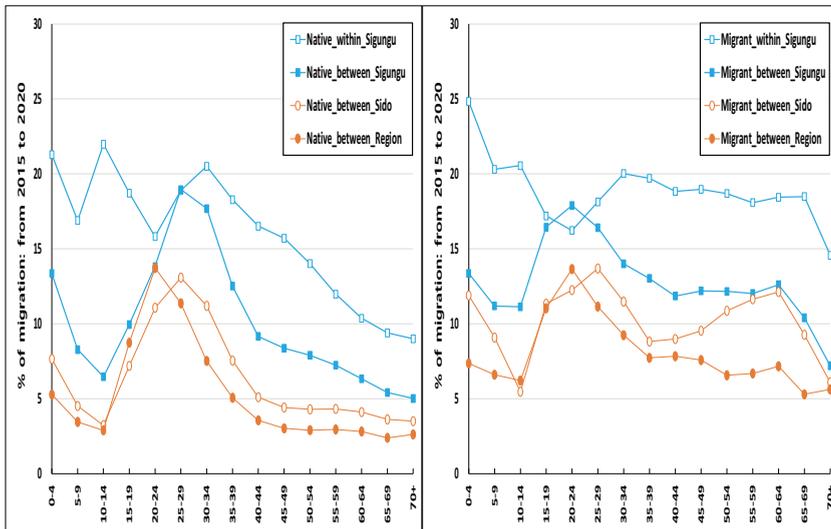
[그림 5-1] 원주민/이민자의 연령별 이동률(%): 2015년 → 2020년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그림 5-2]는 전체 국내이동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동률(%)의 연령별 패턴을 보여 준다. 전체 이동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더라도 40~60대 연령 구간에서 이민자의 이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이 지속해서 관측된다. 또한 원주민과 이민자 모두 동일 시군구 내의 이동률이 가장 높고, 권역 간 이동률이 가장 낮다. [그림 5-1]과 [그림 5-2]를 비교하면, 이민자의 연령별 이동률 패턴이 단일의 정점을 보유한 통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동일 시군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주지 이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함을 시사하지만, 40~60대 연령 구간에서 나타나는 이민자의 높은 이동률은 다른 이동 유형에서도 여전히 관측된다. 한편 원주민과 이민자 모두 동일 시군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에서 10대 이하 연령대의 이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 원주민(좌)과 이민자(우)의 이동 유형별 및 연령별 이동률(%)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다양한 수준별로 이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동 패턴의 간명성을 높이고자 가장 상위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권역 단위를 대상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이동-체류 패턴을 살펴본다. 권역 단위 이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권역 단위 이동이 우리나라 국내이동의 전반적 특징과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표 5-4>는 2015년 거주지를 출발지(행), 2020년 거주지를 목적지(열)로 하여 5년(2015년 → 2020년)에 걸친 원주민과 이민자의 전체 및 성별 이동 패턴을 보여 준다. 원주민과 이민자 모두 2015년에 수도권에 거주하면 5년이 지난 2020년에도 수도권에 체류하는 경우가 대략 96%로 매우 높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부권으로 이동한 비중이 높다. 한편 초기 시점인 2015년에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 일관되게 이민자가 원주민에 비해 동일 권역에 체류하는 비중이 낮다. 예컨대, 2015년에 중부권에 거주한 원주민이 2020년에도 중부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비중이 90%를 넘어서지만, 이민자의 경우 5년 기간에 걸쳐 중부권에 그대로 체류하는 비중은 80% 정도에 그친다. 2015년에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한 개인 중 5년 기간에 걸쳐 권역 간 이동을 한 개인의 목적지로는 원주민과 이민자 모두 수도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민자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측된다. <표 5-4>에는 원주민과 이민자의 전체 이동과 함께 성별로 구분한 이동 패턴도 제시되어 있다. 원주민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5년 기간에 걸친 이동 패턴이 상당히 유사하다. 반면에 이민자 집단에서는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남녀 이민자 모두 2015년에 수도권에 거주하면 5년 후에도 수도권에 그대로 체류하는 비중이 높지만, 비수도권 지역 거주 시 남성 이민자의 이동력 수준이 높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할 때 남성 이민자가 보여주는 높은 이동력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과 관련된다.

206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표 5-4〉 원주민/이민자의 권역 단위 이동/체류 패턴: 2015년 → 2020년

(단위: %)

원주민			2020년(목적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계
2015년 (출발지)	전체	수도권	96.31	1.88	0.65	0.94	0.23	100.00
		중부권	7.22	90.67	0.72	1.24	0.14	100.00
		호남권	4.64	1.54	92.73	0.95	0.14	100.00
		영남권	3.34	1.09	0.39	95.04	0.15	100.00
		제주도	4.79	1.01	0.79	1.54	91.87	100.00
	남성	수도권	96.15	1.96	0.68	0.99	0.23	100.00
		중부권	7.34	90.46	0.76	1.30	0.14	100.00
		호남권	4.61	1.61	92.65	0.99	0.15	100.00
		영남권	3.43	1.18	0.43	94.80	0.15	100.00
		제주도	4.68	1.06	0.86	1.54	91.86	100.00
	여성	수도권	96.47	1.80	0.62	0.89	0.22	100.00
		중부권	7.10	90.89	0.68	1.19	0.14	100.00
		호남권	4.68	1.47	92.81	0.91	0.13	100.00
		영남권	3.24	0.99	0.35	95.26	0.15	100.00
		제주도	4.91	0.96	0.72	1.53	91.87	100.00
이민자			2020년(목적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계
2015년 (출발지)	전체	수도권	95.75	2.33	0.48	1.21	0.23	100.00
		중부권	16.99	79.52	0.72	2.50	0.28	100.00
		호남권	9.93	2.35	84.34	3.35	0.03	100.00
		영남권	12.01	2.64	0.91	84.24	0.20	100.00
		제주도	12.99	1.72	0.81	2.75	81.73	100.00
	남성	수도권	95.53	2.56	0.44	1.23	0.24	100.00
		중부권	21.41	74.68	0.67	2.95	0.30	100.00
		호남권	14.28	4.13	76.42	5.16	0.00	100.00
		영남권	15.16	3.66	1.25	79.71	0.21	100.00
		제주도	15.80	2.07	1.07	4.32	76.74	100.00
	여성	수도권	95.94	2.14	0.52	1.18	0.22	100.00
		중부권	13.76	83.05	0.76	2.17	0.27	100.00
		호남권	7.68	1.44	88.42	2.42	0.04	100.00
		영남권	9.41	1.80	0.63	87.97	0.19	100.00
		제주도	11.38	1.53	0.65	1.85	84.58	100.00

주: 서울·인천·경기는 수도권,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은 중부권, 광주·전북·전남은 호남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은 영남권으로 분류함.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전반적으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준거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기간에 걸친 거주지 이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원주민과 마찬가지로 이민자도 수도권에 체류 시 지속해서 수도권에 체류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비수도권에 체류 시 원주민에 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원주민과 이민자의 권역 간 체류-이동 패턴은 과거 5년에 걸쳐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가 더욱 집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주민과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집중)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며, 아래에서는 이동자와 체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간략히 정리한다.

〈표 5-5〉를 통해 원주민과 이민자의 이동 여부 및 이동 유형별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이민자는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30~50대 연령 구간의 구성비가 높은 포물선의 형태를 일관되게 보여준다. 반면에 원주민은 이동 여부에 따라 연령 구성에서 상당히 큰 변이가 관측된다. 예컨대, 5년 기간(2015년 → 2020년)에 걸쳐 거주지를 이동한 원주민 집단에서는 20~30대의 구성비가 높고, 고령층의 구성비가 낮다(특히 권역 간 이동자). 반면에 5년 전 거주지에서 그대로 체류한 원주민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구성비가 낮고 고령층의 구성비가 높은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원주민과 비교할 때 이민자 집단의 체류-이동 패턴에서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되는데, 체류자에 비해 이동자(특히 권역 간 이동자) 집단에서 남성의 구성비가 높다. 예컨대, 이민자 중에서 5년 전 거주지에 그대로 체류하는 집단에서 남성의 구성비가 42.16%이지만, 권역 간 이동을 경험한 이민자 집단에서 남성의 구성비는 52.41%에 이른다. 전반적으로 체류자에 비해 이동자의 교육 수준이 높지만, 교육 수준별 체류-이동 패턴은 이민자에 비해 원주민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관측된다. 원주민은 권역 간 이동을 한 집단에서 대졸 이상자의 구성비(40.02%)가 가장 높지만, 이민자는 동일 시도 내의 시군구 간 이동을 경험한 집단에서 대졸 이상자의 구성비(22.48%)가 가장 높다.

혼인 상태는 원주민과 이민자 모두 미혼 대비 유배우의 구성비가 높지만, 이민자 집단에서 더욱 뚜렷한 패턴을 보인다. 원주민과 이민자 모두 이동자 집단에서 미혼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고용 상태의 경우 이민자는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근로의 구성비가 가장 높다. 반면에 원주민의 경우 체류자는 비취업, 이동자는 임금근로의 구성비가 가장 높다. 산업별 체류-이동 패턴을 보면 원주민과 이민자 모두 체류자 집단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원주민의 경우 이동자 집단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이민자의 경우 이동자 집단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패턴을 보이는데, 특히 동일 권역 내의 시도 간 이동에서 건설업의 구성비(19.60%)가 상대적으로 높다.

가구 형태(이민자)의 경우 체류자 집단에서는 일반 가구(49.12%)와 외국인 가구(49.54%)의 구성비가 비슷하지만, 이동자 집단에서는 외국인 가구의 구성비가 높다. 예컨대, 이동의 하위 유형 중 권역 단위의 이동을 한 이민자의 경우 외국인 가구의 구성비가 65.01%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세대 유형에서는 원주민과 이민자 모두 5년 전 거주지에 그대로 체류하는 집단에서 부부 혹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원주민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이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1인 가구의 구성비가 높은데, 원주민(31.24%)과 이민자(27.52%) 모두 권역 간 이동을 경험한 집단에서 1인 가구의 구성비가 높게 관측된다.

〈표 5-5〉 원주민과 이민자의 이동 여부 및 이동 유형별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원주민				이민자							
	체류	이동			체류	이동						
		전체	시군구 내	시도 내 시군구 간		권역 내 시도 간	권역 간					
연령	20대 미만	14.16	14.65	18.17	13.19	11.49	10.60	4.97	5.63	4.32	4.07	3.87
	20대	10.43	17.27	14.07	15.47	18.95	28.46	6.13	6.39	9.63	8.18	11.35
	30대	8.89	21.62	17.05	24.70	25.91	24.31	23.91	23.91	27.50	30.99	31.73
	40대	16.22	16.99	18.07	17.54	16.25	13.55	23.23	20.65	22.43	20.41	18.13
	50대	19.34	14.03	16.28	13.97	11.91	9.88	23.59	20.91	22.26	20.30	21.04
	60대	16.18	9.13	9.66	9.19	9.00	7.54	13.53	12.40	12.54	11.89	14.21
성별	70대 이상	14.78	6.31	6.70	5.93	6.48	5.66	4.63	3.25	2.45	2.65	2.39
	남성	49.21	49.78	49.35	49.62	49.93	51.22	42.16	47.51	47.10	48.25	52.41
	여성	50.79	50.22	50.65	50.38	50.07	48.78	57.84	52.49	54.81	52.90	51.75
	중졸 이하	31.92	22.23	26.39	20.43	18.73	17.31	29.66	26.96	29.36	25.00	26.08
	고졸	37.26	33.84	37.16	31.80	30.65	31.63	49.46	47.76	48.64	46.18	48.27
	전문대졸	9.54	11.77	11.60	12.07	12.33	11.04	6.20	6.57	6.50	6.33	6.91
혼인 상태	대졸 이상	21.28	32.16	24.85	35.70	38.30	40.02	14.69	18.71	15.51	22.48	19.83
	미혼	33.96	42.09	40.70	39.59	41.82	51.45	17.46	21.42	19.16	23.19	25.10
	유배우	53.49	47.47	47.91	50.07	48.56	39.75	72.79	67.69	69.80	65.22	65.69
	사별/이혼	12.55	10.44	11.38	10.34	9.61	8.80	9.74	10.89	11.03	11.59	9.21

구분	원주민				이민자								
	체류	이동			체류	이동							
		전체	시군구 내	시도 내 시군구 간		권역 내 시도 간	전체	시군구 내	시도 내 시군구 간	권역 내 시도 간			
고용 상태	임금근로	37.55	46.92	43.53	48.75	49.33	50.72	56.90	58.26	57.36	59.01	57.26	60.36
	자영업/무급종사	13.38	10.35	10.80	10.64	10.11	8.72	7.53	6.78	6.67	7.14	6.80	6.44
	비취업	49.07	42.73	45.67	40.61	40.57	40.56	35.57	34.96	35.98	33.85	35.94	33.20
	농림어업	6.21	1.39	1.21	0.93	1.45	2.72	4.38	1.30	1.48	0.84	0.70	2.37
	제조	17.33	17.52	18.71	16.69	16.40	17.19	32.78	30.06	32.21	26.92	26.22	35.06
	건설	6.65	6.15	6.71	5.79	5.72	5.82	12.84	16.03	14.95	15.48	19.60	14.82
	도소매	13.34	13.49	13.73	14.27	13.86	10.88	8.24	9.46	8.82	10.66	9.72	8.62
	운수/창고	5.57	4.81	5.25	4.76	4.68	3.88	1.89	2.37	1.93	2.48	2.82	2.61
	숙박/음식점	8.14	8.10	8.58	7.62	7.56	8.38	15.40	14.57	15.27	15.27	14.68	11.85
	금융/보험	3.25	3.88	3.65	4.57	4.02	3.04	1.29	1.56	1.43	1.94	1.65	1.10
	전문/과학/기술	3.66	5.54	4.28	6.12	6.59	6.63	1.66	2.16	1.88	2.89	1.97	1.85
	사업시설/임대	4.43	4.25	4.48	4.24	4.19	3.66	5.13	5.72	5.51	5.30	6.06	6.40
	공공행정	5.09	5.81	5.20	5.36	5.72	8.53	1.57	1.44	1.64	1.28	1.32	1.39
	교육	6.23	7.39	7.17	7.92	7.27	7.12	4.42	4.73	4.84	5.23	3.93	4.71
보건/사회복지	8.35	8.34	8.53	7.98	8.00	8.90	3.93	3.41	3.38	3.44	3.92	2.83	
협회/단체/개인	3.89	3.85	4.01	3.80	3.75	3.59	2.41	2.55	2.59	2.81	2.46	2.19	
기타	7.86	9.47	8.48	9.95	10.80	9.68	4.05	4.64	4.07	5.44	4.95	4.20	
일반	98.87	97.29	96.11	98.69	98.23	97.04	49.12	38.18	42.04	37.23	36.98	32.58	
가구 형태	집단시설/집단	1.13	2.71	3.89	1.31	1.77	1.34	1.66	2.25	0.91	0.97	2.41	
	외국인	0.00	0.00	0.00	0.00	0.00	49.54	60.16	55.71	61.86	62.05	65.01	

구분	원주민					이민자						
	체류	이동				체류	이동					
		전체	시군구 내	시도 내 시군구 간	권역 내 시도 간		권역 간	전체	시군구 내	시도 내 시군구 간	권역 내 시도 간	권역 간
부부	18.05	13.39	12.10	14.40	15.09	13.16	23.88	23.67	23.80	23.26	23.95	23.70
부부+자녀	45.95	42.83	48.47	43.22	38.77	30.12	29.97	27.22	30.77	25.97	26.31	22.48
부/모+자녀	10.37	10.42	12.07	9.87	8.70	8.65	5.64	6.09	6.62	6.05	5.95	5.17
부부+자녀+부/모	4.27	3.27	3.47	3.36	3.24	2.50	8.00	6.11	6.58	5.43	6.82	5.25
1인 가구	11.16	18.79	13.87	18.03	21.91	31.24	17.41	22.33	19.04	24.55	21.26	27.52
기타	10.20	11.31	10.03	11.12	12.28	14.33	15.10	14.56	13.19	14.73	15.72	15.88

주: 권역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제주도로 구분하며, 서울·인천·경기는 수도권,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은 중부권, 광주·전북·전남은 호남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은 영남권으로 분류함; 중사 산업은 취업자(임금근로/자영업/무급종사)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 유형은 집단시설/집단 가구를 제외함; 세대 유형에서 자녀는 미혼 자녀를 의미하며, 부부+자녀+부/모에서 부/모는 양친을 포함함;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구성비는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분포임(전체 표본 9,185,437명, 원주민 9,065,633, 이민자 119,804명).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 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제3절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와 집중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5년에 걸친 원주민과 이민자의 국내이동 패턴을 살펴본 데 이어 이 절에서는 이러한 국내이동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집중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 절에서 검토하는 자료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출생하여 국내에 체류한 개인(원주민, 이민자)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기존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집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 내에 새롭게 입국한 ‘최근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집중)를 비교 분석 차원에서 추가로 살펴본다. 원주민 및 기존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최근 이민자도 분석 대상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준거 시점을 기준으로 5세 이상이다(2015년 기준 출생자). 이들 최근 이민자에는 외국에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시점의 상주지로 직접 이동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으로 먼저 국제이동한 후에 현 상주지로 국내이동을 한 개인이 포함될 수 있다.

우선, 광역시도와 권역(수도권-비수도권)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 이민자(기존)의 공간적 분포가 원주민의 분포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표 5-6>에서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구성비는 49.66%(서울 18.36%, 인천 5.67%, 경기 25.63%)이지만, 이민자(기존) 중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구성비는 69.49%(서울 26.67%, 인천 6.30%, 경기 36.52%)에 달한다. 이민자(기존)를 귀화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수도권 거주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외국인 중 수도권 거주자의 구성비가 71.23%로 국적 보유자(63.13%)에 비해 국적 미보유 이민자의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다. 원주민과 이민자(기존)의 2015년 대비 2020년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하면 원주민과 이민자를 모두 아울러 수도권 거주자의 구

성비가 다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내부의 인구이동을 보면 원주민과 이민자 모두 서울 거주자의 구성비가 감소한 반면에 인천과 경기도 거주자의 구성비가 증가하였다. 행정 단위를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2020년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원주민(8.26%)과 비교할 때 이민자(기존; 7.27%)는 군 지역 거주자의 구성비가 다소 낮다. 그러나 이민자를 귀화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면 귀화인(9.28%)은 군 지역 거주자의 구성비가 원주민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 준다.

한편 최근 5년 내에 새롭게 국내에 입국한 이민자(최근)의 2020년 기준 광역시도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거주자의 구성비는 53.08%로 원주민(49.66%)보다 다소 높지만, 기존 이민자(69.49%)보다는 16.41%포인트 낮다. 최근 이민자는 또한 군 지역 거주자의 구성비가 11.37%로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인다. 자료상의 한계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지만, 기존 이민자 집단과 비교할 때 최근 이민자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 가구(18.86%)의 구성비가 낮은 대신에 외국인 가구(72.95%)와 집단(시설)가구(8.19%)의 구성비가 높다는 점에서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E-9)하에 국내에 입국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이러한 분석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표 5-1〉 참고). 물론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내에 지속해서 거주하는 ‘최근’ 이민자 집단(귀환자 제외)이 현재와 같은 공간적 분포를 보일 것인지, 혹은 ‘기존’ 이민자 집단처럼 수도권에 집중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에서 출신 국적과 입국 코호트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앞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민자(기존)의 구성비가 원주민에 비해 높은 모습을 살펴보았지만, 이민자의 출신 국적을 추가로 고려하여 살펴보면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 또한 상당

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5-7〉 참고). 2020년 기준으로 출신 국적이 미국(42.31%), 몽골(38.53%), 중국(한국계)(32.27%), 중국(27.55%)인 이민자의 서울 거주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출신 국적이 필리핀(9.54%), 태국(9.41%), 베트남(7.46%), 우즈베키스탄(7.14%), 캄보디아(4.32%)인 이민자의 서울 거주 구성비는 원주민(18.36%)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서울에 비해 경기도 거주 이민자의 구성비가 높지만, 출신 국적이 미국과 몽골인 이민자는 서울 거주자의 구성비가 경기도보다 높다. 일부 예외(미국이나 우즈베키스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2015년과 비교할 때 서울 거주자의 구성비가 감소하고 경기도 거주 이민자의 구성비가 증가한 패턴이 관측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면 2020년 기준으로 중국(한국계) 출신 국적자의 수도권 거주 구성비가 83.11%로 가장 높으며, 몽골과 미국 출신 국적자의 수도권 거주 구성비도 70% 이상이다. 반면에 베트남 출신자의 수도권 거주 구성비는 34.11%이며, 캄보디아와 필리핀 출신자도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인다.

입국자의 규모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입국자로 한정하여 입국 코호트별 광역시도 분포(〈표 5-8〉 참고)를 살펴보면 최근의 입국 코호트로 올수록 서울 거주 이민자의 구성비가 감소하는 반면에 경기도 거주 이민자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한편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출신 국적별 패턴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입국한 코호트로 올수록 서울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구성비가 감소하는 반면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면 1990년대 후반 입국자까지 수도권 거주 구성비가 증가한 후 감소세를 보인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입국자에서 베트남, 태국 등 중국(한국계 포함) 이외 출신 국적 이민자의 구성비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표 5-6) 원주민/이민자의 광역시도, 권역(수도권-비수도권) 및 시군 분포

(단위: %)

구분	2015년					2020년				
	원주민	이민자(기존)			원주민	이민자(기존)			이민자 (최근)	
		전체	귀화인	외국인		전체	귀화인	외국인		
광역 시도	서울	19.27	30.20	27.26	31.00	18.36	26.67	24.20	27.34	16.44
	부산	6.86	2.98	3.76	2.76	6.63	2.88	3.60	2.68	3.82
	대구	4.90	1.77	2.32	1.62	4.77	1.75	2.29	1.60	2.72
	인천	5.61	4.77	5.63	4.54	5.67	6.30	7.03	6.10	5.43
	광주	2.98	1.32	1.53	1.26	2.90	1.24	1.50	1.17	2.38
	대전	3.11	1.40	1.93	1.26	2.94	1.34	1.86	1.20	1.51
	울산	2.29	2.18	1.86	2.27	2.21	1.75	1.66	1.77	1.53
	세종	0.43	0.30	0.28	0.30	0.67	0.31	0.34	0.30	0.53
	경기	24.20	33.20	29.74	34.14	25.63	36.52	31.90	37.79	31.21
	강원	3.02	1.29	2.02	1.09	3.00	1.26	1.99	1.06	1.83
	충북	3.16	2.67	2.81	2.63	3.15	2.66	2.82	2.61	4.10
	충남	4.12	4.59	4.46	4.63	4.15	4.72	4.56	4.76	6.90
	전북	3.63	2.14	3.12	1.87	3.53	1.97	3.08	1.66	3.33
	전남	3.50	2.34	3.34	2.07	3.47	2.23	3.28	1.94	3.47
	경북	5.28	3.24	3.96	3.05	5.16	3.07	3.83	2.86	5.75
	경남	6.46	4.66	5.03	4.56	6.48	4.35	4.99	4.18	7.03
제주	1.19	0.95	0.97	0.94	1.27	0.99	1.06	0.97	2.01	
권역	수도권	49.08	68.17	62.63	69.68	49.66	69.49	63.13	71.23	53.08
	비수도권	50.93	31.83	37.39	30.31	50.33	30.52	36.86	28.76	46.91
시군	시부	91.80	92.35	90.62	92.82	91.74	92.73	90.72	93.28	88.63
	군부	8.20	7.65	9.38	7.18	8.26	7.27	9.28	6.72	11.37

주: 최근 이민자는 2015년 11월부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시점까지 국내에 처음 입국한 이민자를 의미함(표본 158,255명: 귀화인(4,600명)+외국인(153,655명)).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표 5-7〉 이민자(기준)의 출신 국적별 광역시도 및 권역(수도권-비수도권) 분포

(단위: %)

구분	2015년										2020년									
	중국	중국 (한민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미국	기타 미상	중국	중국 (한민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미국	기타 미상
서울	30.86	37.53	10.34	12.19	8.90	40.07	9.82	6.97	42.14	26.48	27.55	32.27	9.54	9.41	7.46	38.53	7.14	4.32	42.31	24.72
부산	3.80	1.02	4.69	2.67	5.72	1.15	2.73	3.42	4.30	5.69	3.66	0.82	4.53	2.68	5.67	1.51	3.01	2.92	4.16	5.87
대구	2.01	0.74	2.63	1.62	3.60	1.61	3.26	2.07	2.35	3.02	1.97	0.65	2.77	1.77	3.85	1.61	3.37	2.75	2.31	2.96
인천	6.14	4.02	4.51	5.40	3.99	4.80	5.48	2.85	3.96	5.94	8.27	6.35	4.39	4.77	4.21	5.26	6.55	2.56	4.32	6.35
광주	1.55	0.57	2.55	1.74	2.42	1.90	3.94	2.41	1.33	1.90	1.41	0.51	2.61	1.61	2.29	1.86	4.09	2.75	1.15	1.80
대전	1.85	0.55	1.81	1.08	2.15	2.46	0.50	2.27	4.37	2.17	1.67	0.50	1.92	1.22	2.32	2.36	0.47	1.85	3.95	2.16
울산	1.94	2.39	2.55	2.66	2.61	1.86	2.30	2.63	1.38	1.70	1.71	1.71	2.64	2.74	2.53	1.89	2.27	2.32	0.67	1.34
세종	0.24	0.16	0.13	0.28	0.70	0.29	0.81	0.35	0.84	0.39	0.22	0.18	0.29	0.00	0.64	0.27	0.48	0.45	1.16	0.41
광역 수도	30.80	39.33	26.93	30.51	21.63	30.20	35.00	29.11	26.29	28.05	33.39	44.49	27.90	31.27	22.44	31.59	34.21	31.68	26.98	30.36
강원	1.29	0.39	3.93	3.52	2.72	1.58	1.36	3.03	1.27	2.13	1.29	0.43	3.69	3.90	2.55	1.30	1.53	2.49	1.41	1.92
충북	2.61	2.20	4.48	4.06	3.73	2.12	7.05	3.61	1.12	2.83	2.50	2.12	4.35	3.77	3.86	2.35	8.45	3.85	1.19	2.89
충남	4.06	4.28	7.24	6.90	6.74	2.59	8.28	7.27	2.22	4.24	4.08	4.35	7.67	7.40	6.88	3.06	10.14	8.36	1.90	4.37
전북	2.51	0.94	5.31	4.97	5.16	2.43	2.25	6.76	1.83	2.21	2.36	0.76	5.32	5.78	4.94	1.88	2.02	6.06	1.59	2.01
전남	2.17	0.94	6.91	6.26	7.20	2.32	1.91	8.49	0.80	2.52	2.07	0.79	6.93	6.88	7.07	2.25	1.39	8.62	0.79	2.37
경북	2.92	1.63	6.67	6.93	9.00	1.42	5.06	6.38	2.58	3.92	2.75	1.29	6.36	7.80	9.22	1.67	4.50	7.39	2.36	3.80
경남	3.75	2.85	7.48	8.83	12.24	2.84	9.96	11.86	1.98	5.43	3.50	2.26	7.19	9.01	12.71	2.48	10.16	11.23	2.03	5.27
제주	1.49	0.48	1.85	0.39	1.49	0.35	0.27	0.52	1.24	1.38	1.59	0.54	1.92	0.00	1.37	0.15	0.23	0.41	1.72	1.39
수도권	67.80	80.88	41.78	48.10	34.52	75.07	50.30	38.93	72.39	60.47	69.21	83.11	41.83	45.45	34.11	75.38	47.90	38.56	73.61	61.43
비수도권	32.19	19.14	58.23	51.91	65.48	24.92	49.68	61.07	27.61	39.53	30.78	16.91	58.19	54.56	65.90	24.64	52.11	61.45	26.39	38.56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
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표 5-8〉 이민자(기준)의 입국 코호트별 광역시도 및 권역(수도권-비수도권) 분포

(단위: %)

구분	2015년					2020년					
	1995년 이전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	1995년 이전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	
광역 시도	서울	34.32	36.35	33.09	29.72	27.00	30.96	32.35	29.55	26.32	23.44
	부산	4.57	2.31	2.87	2.71	3.08	4.58	2.26	2.84	2.52	3.01
	대구	2.59	1.47	1.63	1.69	1.80	2.38	1.39	1.49	1.69	1.86
	인천	6.09	5.44	5.09	4.64	4.31	7.46	6.85	6.78	6.19	5.82
	광주	1.49	0.76	1.10	1.17	1.64	1.41	0.70	1.08	1.10	1.52
	대전	1.70	1.05	1.34	1.33	1.53	1.47	0.95	1.40	1.34	1.40
	울산	1.87	1.51	1.88	2.19	2.54	1.60	1.25	1.51	1.76	2.00
	세종	0.28	0.31	0.21	0.32	0.31	0.45	0.37	0.22	0.32	0.28
	경기	27.79	32.97	34.05	34.04	33.35	30.42	36.19	36.50	37.19	37.34
	강원	2.09	1.42	1.25	1.11	1.26	2.11	1.48	1.22	1.13	1.15
	충북	2.44	2.20	2.26	2.68	2.99	2.28	2.34	2.33	2.63	2.97
	충남	3.21	3.33	3.68	4.75	5.43	3.46	3.34	3.76	4.93	5.54
	전북	2.20	2.00	2.04	2.26	2.09	2.13	1.97	2.02	2.04	1.85
	전남	1.76	2.52	2.10	2.37	2.49	1.65	2.39	1.94	2.27	2.38
	경북	2.78	2.45	3.07	3.01	3.82	2.91	2.49	2.95	2.74	3.58
경남	3.85	3.32	3.71	5.08	5.19	3.86	3.03	3.72	4.75	4.70	
제주	0.96	0.58	0.63	0.94	1.18	0.88	0.64	0.69	1.07	1.16	
수도권	68.20	74.76	72.23	68.40	64.66	68.84	75.39	72.83	69.70	66.60	
비수도권	31.79	25.23	27.77	31.61	35.35	31.17	24.60	27.17	30.29	33.40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
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앞에서는 광역시도와 권역(수도권-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원주민과 이민자의 2015년과 2020년의 공간적 분포 및 5년 기간에 걸친 공간적 재분배 패턴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구성비가 감소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구성비가 증가한 패턴 외에 5년에 걸친 국내이동에서 다른 뚜렷한 패턴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분포의 변화 양상이 높은 수준의 유출률과 유입률이 상쇄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에서는 2015~2020년의 5년 기간에 걸친 국내이동을 유출률(out-migration rate)과 유입률(in-migration rate)로 구분하여 이민자의 국내이동(시도 간 이동) 패턴을 살펴본다. 선행 연구(Newbold, 1999, p. 262)를 따라 이 연구에서도 유출률은 관측 기간의 시작인 2015년의 이민자 인구(origin), 유입률은 종착 시점인 2020년의 이민자 인구(destination)에 기초하여 계산하였다.

〈표 5-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 이민자의 대략 19%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시도 간 이동을 경험했지만, 광역시도별로 보면 유입률과 유출률에서 큰 변이가 관측된다. 이민자의 유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33.82%)이며, 울산(30.38%), 대전(24.98%), 충남(23.98%), 강원(23.20%), 서울(23.02%) 등의 순서를 보인다. 경기도의 유출률이 13.08%로 가장 낮으며, 그다음으로 부산(17.46%)의 유출률이 낮다. 유입률은 인천이 39.59%로 가장 높고, 세종도 35.51%로 높은 모습을 보인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세종은 이민자의 유출률(33.82%)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유입률 또한 3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유입률은 전북이 12.04%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며, 그다음으로 서울이 12.83%로 낮다.

순이동을 살펴보면 서울의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크며(-26,757명), 울산

(-3,286명), 경남(-2,352명), 경북(-1,341명), 전북(-1,269명)의 순서를 보인다. 순유입은 경기도(25,209명)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인천(11,585명), 충남(983명)이 뒤를 잇는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경기, 인천, 세종, 충남, 제주가 순유입을, 나머지 12개 광역 시도가 순유출을 경험하였다. 참고로 2015년에 서울에 거주한 이민자 중에서 2020년에 다른 광역 시도로 거주지를 이동한 이민자의 대략 84%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순유출 현상이 대체로 수도권 내부의 인구 재분배에 그침을 보여 준다. 이민자를 귀화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유입률과 유출률을 살펴보면 광역 시도별 패턴은 유사하지만, 귀화인에 비해 외국인의 유입률과 유출률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표 5-10〉은 출신 국적을 구분한 유입률-유출률과 순이동 패턴을 보여 준다. 이민자를 출신 국적별로 세분화함에 따라 광역 시도 대신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유입률-유출률 및 순이동을 산출하였다. 전체 이민자의 이동 패턴에서는 분석 대상 이민자의 대략 63%를 차지하는 중국 출신자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만, 출신 국적별로 구분하여 이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이민자 내부의 차이 또한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 앞에서 충남, 세종,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이 순유출을 경험하는 반면에 경기도와 인천을 중심으로 순유입이 이루어졌음을 살펴보았지만, 이민자의 출신 국적을 세분화한 결과는 이민자 내부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이질성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한국계(조선족)를 포함하여 출신 국적이 중국인 이민자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하는 패턴을 보여 준다. 출신 국적이 미국인 이민자도 수도권으로 순유입하는 현상이 관측된다. 반면에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출신 국적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순유출하는 패턴을 보인다.

〈표 5-9〉 광역시도별 이민자(기준)의 유입률-유출률과 순이동: 2015~2020년

구분	전체			귀화인			외국인		
	유입률(%)	유출률(%)	순이동(명)	유입률(%)	유출률(%)	순이동(명)	유입률(%)	유출률(%)	순이동(명)
서울	12.83	23.02	-26,757	8.32	18.59	-4,971	13.92	24.09	-21,786
부산	14.72	17.46	-725	8.12	11.89	-251	17.15	19.54	-474
대구	17.88	18.94	-173	10.81	11.92	-47	20.66	21.70	-126
인천	39.59	20.23	11,585	30.38	13.02	2,283	42.49	22.68	9,302
광주	13.80	18.82	-581	8.14	9.54	-38	15.80	21.90	-543
대전	21.66	24.98	-451	13.06	16.00	-106	25.30	28.74	-345
울산	13.13	30.38	-3,286	8.02	17.62	-315	14.44	33.23	-2,971
세종	35.51	33.82	59	34.89	20.96	98	35.70	37.10	-39
경기	21.00	13.08	25,209	15.75	9.64	3,511	22.21	13.90	21,698
강원	21.50	23.20	-211	9.69	10.85	-42	27.56	29.44	-169
충북	22.17	22.56	-102	13.59	13.38	11	24.71	25.25	-113
충남	26.07	23.98	983	14.59	12.61	168	29.07	26.97	815
전북	12.04	18.93	-1,269	6.08	7.10	-55	15.06	24.34	-1,214
전남	13.16	17.53	-893	7.45	9.35	-112	15.80	21.14	-781
경북	18.28	22.74	-1,341	8.27	11.29	-212	21.95	26.81	-1,129
경남	15.23	20.87	-2,352	8.08	8.83	-67	17.56	24.50	-2,285
제주	21.59	18.27	305	17.50	9.93	145	22.81	20.61	160
계	19.18	19.18	0	12.91	12.91	0	20.89	20.89	0

주: 유입률은 2015년 이민자 인구 대비 시도 간 이동 이민자의 구성비, 유출률은 2020년 이민자 인구 대비 시도 간 이동 이민자의 구성비를 의미함(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 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표 5-10〉 출신 국적별 이민자의 유입률-유출률과 순이동: 2015~2020년

(단위: %, 명)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유입률	유출률	순이동	유입률	유출률	순이동
중국	5.74	3.77	1,949	8.29	12.33	-1,949
중국(한국계)	6.09	3.50	7,587	16.75	26.47	-7,587
필리핀	4.87	4.74	13	3.40	3.50	-13
태국	5.36	10.57	-439	9.32	4.69	439
베트남	7.04	8.15	-256	4.27	3.67	256
몽골	4.68	4.29	29	13.07	14.15	-29
우즈베키스탄	8.99	13.32	-306	12.86	8.66	306
캄보디아	10.33	11.16	-34	7.07	6.52	34
미국	5.38	3.78	327	10.37	14.36	-327
기타/미상	6.28	4.78	1,167	7.50	9.75	-1,167
계	6.08	4.25	10,037	9.50	13.26	-10,037

주: 유입률은 2015년 이민자 인구 대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 이민자의 구성비, 유출률은 2020년 이민자 인구 대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 이민자의 구성비를 의미함(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구성비를 중심으로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와 5년 기간에 걸친 변화를 분석한 데 이어 아래에서는 인구의 구성 혹은 분포에 관한 요약 지표를 사용하여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의 문제를 살펴본다. 원주민과 비교한 이민자 전체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봄과 함께 이민자 내부에서 관측되는 차이도 살펴본다.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과 관련하여 귀화인과 외국인 간 차이와 함께 출신 국적별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준거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새롭게 입국한 ‘최근’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준거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에 국내에 거주한 ‘기존’ 이민자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추가로 살펴본다.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는 상이성 지수(Index of Dissimilarity: D)를 통해 분석한다. 상이성 지수는 공간적 집중 혹은 격리 분야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지수이다(Duncan, 1957, p. 30; Massey and Denton, 1988, p. 284; OECD, 2021, p. 235). 기본적으로 상이성 지수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정의되는데, 두 구성비(x_i/X , y_i/Y) 분포에서 중첩되지 않는 부분의 크기를 측정한다.

$$D = 0.5 \times \sum_{i=1}^n \left| \frac{x_i}{X} - \frac{y_i}{Y} \right|$$

상이성 지수(D)는 완전한 균등 분포인 0에서 완전한 집중(격리)인 1 사이의 값을 지닌다. 기하학적으로 상이성 지수는 두 구성비(누적)의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간 수직 거리의 최댓값에 해당한다(Duncan, 1957, p. 30). 상이성 지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2015년과 2020년 기준으로 원주민과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spatial concentration)의 정도를 비교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상이성 지수는 ‘인구’(원주민, 이민자)와 ‘공간 면적’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의 상이성 지수는 흔히 집중 지수(Index of Concentration: C) 혹은 델타 지수(Index of Delta: Δ)로 명명된다. 집중(델타) 지수로 사용될 때 위 수식의 x_i/X 는 전체 인구(X) 대비 i 지역(시군구, 광역시도) 인구(x_i)의 구성비, y_i/Y 는 전체 면적(Y) 대비 i 지역(시군구, 광역시도) 면적(y_i)의 구성비를 나타낸다.¹⁰⁵⁾

105) 상이성 지수는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구의 재분배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이성 지수를 재분배 지수(Index of Redistribution)로 명명하기도 한다(Rowland, 2003, p. 361; Yusuf, Martins, and Swanson, 2014, p. 74). 인구 재분배 수준의 측정 목적으로 상이성 지수를 산출할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상이성 지수를 측정하지만, 이민자의 출신 국적에 따른 공간적 집중과 관련해서는 광역시 단위의 상이성 지수를 측정한다. 이는 시군구에 기초하여 출신 국적별로 상이성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표본이 충분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표 5-11>의 분석 결과를 보면 시군구 기준으로 2020년의 공간적 집중도(집중/델타 지수)는 원주민이 0.63315, 이민자(기존, 전체)가 0.69663으로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이민자(기존) 중 외국인의 집중 지수는 0.7 이상이다. 이는 시군구별로 외국인 이민자의 인구 밀도를 같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대략 70%를 다른 시군구로 이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최근’ 이민자의 집중 지수는 0.6 수준으로 ‘기존’ 이민자는 물론 원주민보다 공간적 집중도가 낮다. 광역 시도 기준의 공간적 집중 분석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 준다. 출신 국적별 차이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광역 시도 분포에서도 ‘최근’ 이민자에 비해 ‘기존’ 이민자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음을 이미 살펴본 바 있다(<표 5-6> 참고). 비록 동일한 개인을 추적 관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최근’ 이민자 또한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혹은 국적(영주권) 취득 등을 통해 장기 거주가 가능함에 따라 국내 이동을 통해 공간적으로 거주지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을 시사한다.

한편 2015년과 2020년의 원주민과 이민자(기존)의 공간적 집중도 변화(시군구 기준)를 살펴보면 미세한 수준이지만 원주민은 공간적 집중도

때 두 구성비(x_i/X , y_i/Y)는 앞의 집중(델타) 지수와 달리 2015년의 전체 인구 대비 지역 i 인구의 구성비와 2020년의 전체 인구 대비 지역 i 인구의 구성비가 사용된다. 한편 상이성 지수의 또 다른 변용인 격리 지수(Index of Segregation)는 두 집단을 비교하여 지수를 산출한다. 격리 지수로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지숫값이 0.3 미만이면 낮은 수준의 격리, 0.3~0.6 사이이면 중간 수준의 격리, 0.6을 초과하면 높은 수준의 격리로 해석한다(Scopilliti and Iceland, 2008, p. 557).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이민자(기존)는 귀화인과 외국인을 모두 아울러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공간적 집중도가 증가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⁶⁾ <표 5-11>에서는 또한 ‘기존’ 이민자를 대상으로 출신 국적별 공간적 집중도를 보여 준다. 광역시도 기준(2020년)으로 이민자(기존) 전체의 집중 지수가 0.62895이지만, 출신 국적별 변이가 크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한국계)과 미국 출신 이민자의 집중 지수가 0.7 이상이며, 몽골 출신자의 집중 지수도 0.69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출신 이민자의 집중 지수는 0.4 전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며, 우즈베키스탄 출신 국적자의 집중도(0.48632)도 원주민보다 낮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표 5-11>에서는 교육 수준별로 산출된 집중(델타) 지숫값을 추가로 보여 준다. 고졸 이하와 대졸(2~3년제 포함) 이상을 구분한 교육 수준별 집중 지수는 2015년 기준으로 대체로 교육 과정을 완료하고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25~5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2020년 기준 30~64세). 2020년 기준으로 대졸 이상 이민자의 집중 지숫값이 0.63681, 고졸 이하가 0.61702로 고학력 이민자의 공간 집중도가 다소 높다. 2015년과 2020년의 집중 지숫값을 비교하면 전체 이민자(기존)와 마찬가지로 5년 기간에 걸쳐 교육 수준별 공간 집중도 또한 다소 높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분석 표본에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간적 집중 현상에서는 출신 국적별 변이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나타난다.

106) 측정 단위에서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미국의 1990년과 2000년 센서스 카운티(3,141개) 자료를 사용하여 집중 지수를 산출한 Lichter and Johnson(2006, p. 120)의 연구에서도 이민자의 집중 지수는 원주민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예컨대, 2000년 기준의 집중 지수는 원주민이 0.6124임에 비해 이민자는 이보다 훨씬 높은 0.8071로 나타난다. 다만, 1990년 대비 2000년의 집중 지수 감소 폭이 원주민(0.6155 → 0.6124)에 비해 이민자(0.8209 → 0.8071) 집단에서 더 크게 관측된다.

〈표 5-11〉 원주민과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

구분		집중 지수(델타 지수)		
		2015년	2020년	
시군구 기준	원주민		0.63329	0.63315
	이민자 (기준)	전체	0.68805	0.69663
		귀화인	0.65134	0.65288
		외국인	0.70020	0.70980
	이민자(최근)		-	0.60704
광역시도 기준	원주민		0.53658	0.53761
	이민자 (기준)	전체	0.62259	0.62895
		귀화인	0.58454	0.58495
		외국인	0.63300	0.64099
	이민자(최근)		-	0.49730
	이민자 (기준) 출신 국적	중국	0.63390	0.64086
		중국(한국계)	0.70725	0.72008
		필리핀	0.40438	0.40818
		태국	0.42305	0.39905
		베트남	0.37440	0.37601
		몽골	0.68498	0.69050
		우즈베키스탄	0.47931	0.48632
		캄보디아	0.37538	0.36475
		미국	0.70938	0.71380
		기타/미상	0.59388	0.60007
이민자 (기준) 교육 수준	고졸 이하	0.60993	0.61702	
	대졸 이상	0.63153	0.63681	

주: 시군구 기준 상이성 지수는 229개 시군구에 기초하여 산출되었으며, 광역시도 기준 상이성 지수는 17개 광역시도에 기초하여 산출됨(가중치 적용); 교육 수준별 상이성 지수는 2015년 기준으로 25~59세(2020년 기준으로 30~64세) 연령대를 대상으로 산출됨(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제4절 종합 및 소결

이 장은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원주민과 이민자의 국내이동 현황과 공간적 분포-집중을 살펴보았다. 상주 국가를 이동한 이민자의 기본 특성에서 추론해 볼 수 있듯이 분석 결과는 원주민과 비교할 때 이민자의 이동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일반적인 이동의 연령별 패턴과 마찬가지로 20대 후반에 이동력이 정점을 이루지만, 이민자의 이동률은 60대 전반까지도 상당히 높은 패턴을 보인다. 이민자의 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의 목적을 파악해야 하지만, 원주민과 이민자 간 이동률 차이가 시도(권역) 간 이동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됨을 고려할 때 주거 관련 목적보다는 직업이나 가족 관련 사유가 이동에서 더욱 중요할 개연성을 시사한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준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2015년→2020년)에 걸친 권역 단위의 이동-체류 패턴을 보면 원주민과 이민자 모두 2015년에 수도권에 거주할 때 5년이 지난 2020년에도 수도권에 체류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비수도권 지역(2015년)에 거주할 때는 일관되게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의 권역 간 이동률이 높게 나타나며, 5년 기간에 걸쳐 권역 간 이동을 경험한 이민자들의 목적지로는 수도권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원주민과 이민자의 권역 간 체류-이동 패턴은 과거 5년에 걸쳐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가 더욱 집중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이동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관련하여 분석 결과는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도가 더 높음을 보여 준다. 이민자 중에는 귀화인에 비해 외국인의 공간적 집중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더욱이 5년 기간에 걸쳐 미미하지만 공간적 집중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 원주민과 반대로 이민자는 공간적 집중도가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장의 분석 결과는 기존 이민자 집단에 비해 최근 이민자 집단에서 관측되는 공간적 집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은 이민자 내부에서 관측되는 이질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도가 높지만, 출신 국적별 분석 결과는 내부적 이질성이 상당히 큼을 보여 준다. 예컨대, 한국계 중국이나 미국 출신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도가 상당히 높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출신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도는 원주민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지역 인구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이민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호주의 SSRM 프로그램처럼 이민자의 지역적 분산을 촉진하는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민이 공간적 집중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어 능력 등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계 중국 출신 이민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하는 상황은 이민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역 인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무조건적인 특효약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특히 인구 변동의 파급 효과가 지역별 및 인구 집단별로 다르게 전개되기에 이민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인구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의 일환으로 이민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가 원주민과 이민자의 이동력 수준과 패턴,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초점을 맞춘 관계로 이민자의 국내이동을 초래하는 원인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특히 이 장

의 분석 결과는 ‘기존’ 이민자와 ‘최근’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내이동이 일정한 역할을 할 개연성을 시사한다. 물론 이민 과정의 선택성으로 인해 ‘기존’ 이민자와 ‘최근’ 이민자가 상당히 다른 속성을 보유한 개인들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향후 자료가 활용 가능해지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민자의 국내이동 패턴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수집되는 1년 혹은 5년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민자의 국내이동과 공간적 분포(집중)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공간적 분포가 국제이동 후 이민자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국내이동의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민자의 인구이동 경로와 패턴에 관한 종단적 방식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민자의 국내이동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공간적 분포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정치)의 파급 효과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민자의 공간적 이동이 적응 과정의 일환임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민자의 전반적인 국내이동 패턴과 출신 국적 등 내부적 이질성이 매우 크을 고려할 때 지역 인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공간적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인구이동의 특징과 이민의 파급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까지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의 구성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적 수준의 인구 규모와 구조에 대한 이민의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소규모 공간 단위에서는 이민의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에 소규모 공간 단위에 기초한 파급 효과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제6장

종합 및 정책 과제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국제이동 통계의 현황과 과제

제3절 인구변동 대응 정책과 이민의 역할

제4절 인구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한 정책 방향과 과제



제 6 장 종합 및 정책 과제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이 연구가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에 관한 다양하고도 복잡한 이슈들을 검토하기에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 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압축적으로 종합한다.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이민이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미시적 차원에서 원주민과 비교한 이민자의 혼인-출산과 국내이동 같은 인구학적 행동을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 시뮬레이션과 수리인구학 모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미치는 이민의 파급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기본 모형에 해당하는 현재(2021년)의 출산율과 사망률 조건에서 2016~2020년 기간의 국제순이동(평균) 패턴이 지속되면 장기 균형 상태의 인구(정지인구)는 2020년 인구의 대략 22%에 불과할 정도로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한편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나 노년부양비가 2020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인구의 고령화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순이동 규모를 25만 명이나 50만 명으로 확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인구는 기준 인구(2021년)의 41%(25만 명 기준) 및 82%(50만 명 기준)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극단적 사례로 볼 수 있는 최근 미국의 국제순이동 규모에 해당하는 100만 명으로 이민자를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인구는 기준 인구(2021년)의 1.6배 수준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구 고령화의 가파른 진행은 불가피하다. 수리인구학 모형은 현재의 출산율-사망률 조건에서 장기적으로 기준 인구(2021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용해야 하는 국제순이동 규모가 61만 1천 명에 달함을 보여 준다. 비록 대규모 이민자 수용을 통해 인구 감소 폭을 일정 수준까지 줄일 수 있지만,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이민자 수용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인구 구성(원주민 대 이민자)에서 가파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민자 수용 접근과 비교할 때 출산율 상승은 상대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를 억제하는 한편 이행기 동안에 경험하는 인구변동의 폭을 줄임으로써 적응의 수월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비교우위를 보인다. 한편 최근(2016~2020년)의 국제순이동 규모가 지속될 때 장기적으로 출현하는 인구가 기준 인구(2021년)에 수렴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즉 인구이동 조정 대체출산율은 1.8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민을 통해서도 인구 고령화는 물론이거니와 인구 감소를 막기도 매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인구학적 목표 대신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이민자를 수용하여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고 고령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자 한다면 출산율이 일정한 수준까지 회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관련하여 원주민과 이민자의 출산력을 비교하는 한편 그 기초가 되는 혼인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출산력 분석은 인구주택총조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대체로 출산 생애를 완료한 출생 코호트(1950~1974년 출생 기혼 여성)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분석과 출산 생애를 완료하지 않은 현 가임기 세대(2019년 기준 15~49세)를 대상으로 한 기간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출산진도비에 기초한 코호트 출산율 분석 결과는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상당히 낮지만, 중국(CFR=1.183)이나 베트남(CFR=2.236) 등 이민자 내부의 출신 국적별 출산율 차이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 주었다. 기간 출산력 분석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수집되는 '마지막 자녀 출산 시점' 정보에 기초하여 원주민과 이민자 여성의 최근 출산율(2019년)을 직접 산출

하였다. 코호트 출산율 분석 결과와 반대로 기간 출산율 분석 결과는 원주민(TFR=0.883)에 비해 이민자(TFR=1.448) 여성의 출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 준다. 코호트 출산율과 기간 출산율에서 관측되는 상반된 패턴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민자 내부의 구성 변화와 원주민-이민자 여성의 혼인 패턴 변화에서 일정 부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민자의 구성과 관련하여 코호트 출산율 분석(1950~1974년 출생자)에서 출산율이 낮은 중국(한국계 포함) 출신자의 구성비가 대략 3/4을 차지하는 반면에 기간 출산율 분석(2019년 기준 15~49세)에서는 중국(한국계 포함) 출신자의 구성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베트남 등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많아졌다. 다른 한편으로 코호트 분석과 기간 분석에서 생애 미혼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민자 여성과 비교할 때 원주민 여성은 과거 출생 코호트와 달리 현재의 혼인 패턴이 지속될 때 현 가임기 세대의 생애 미혼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점이 이민자와 비교한 원주민 여성의 합계출산율을 상대적으로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현 가임기 세대에서 이민자의 출산율이 원주민에 비해 상당히 높지만, 전체 인구(여성) 대비 이민자 여성의 비중이 낮은 관계로 전체 합계출산율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 않다. 다만 이민자 여성의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 중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0% 수준에 이른다. 현 가임기 세대에서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원주민 여성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이민 증가 현상이 저출산 현상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출산에 대한 이민의 파급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민의 목적이나 이민자 구성에서의 변화, 국내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적응 양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이민자의 높은 출산력에 기초한 저출산 문제의 완화는 이민자의 영구 정착을 전제로 한 접근이기에 현재의 고용허가제처럼 한시적 체류를 전제로 한 이민정책을 통해서서는 이민자의

높은 출산력에 기초한 저출산 문제의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셋째,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관련하여 이민자의 국내이동 현황과 패턴, 그리고 국내이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과 분포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수집하는 5년 기간에 걸친 이동률(5-year migration rate) 지표를 분석한 결과는 원주민(37.52%)에 비해 이민자(51.31%)의 이동률이 높음을 보여 준다. 원주민과 마찬가지로 이민자의 이동률은 20대 후반에 정점을 이루지만 40대 이상에서 60대 전반까지도 원주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패턴을 보인다. 권역을 기준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동시에 살펴보면 원주민과 이민자 모두 최초(2015년) 수도권에 거주할 때 5년 후에도 수도권에 체류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최초에 비수도권에 거주할 때는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의 이동률이 높게 나타나며, 이동의 목적지로는 수도권의 비중이 높다. 국내이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공간적 집중과 분포에서는 원주민과 이민자의 광역시도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상이성 지수를 통해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도를 분석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구성비가 49.66%임에 비해 이민자(기존)의 수도권 거주자 비중은 69.49%에 달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새롭게 국내에 입국한 이민자(최근)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3.08%로 원주민에 비해 높지만 기존 이민자보다는 크게 낮은 패턴을 보인다. 비록 전체적으로 이민자(기존)의 수도권 거주 구성비가 높지만, 출신 국적별 변이가 상당히 크다. 집중(델타) 지수에 기초한 공간적 집중도 분석 결과는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도가 높음을 보여 준다.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난 5년 기간에 걸쳐 원주민의 공간적 집중도가 감소하였지만,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도는 반대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집중(델타) 지수 또한 공간적 집중도에서 출신 국적별 변이가 상당히 크게 관측됨을 보여 준다. 미국, 중국(한국계

포함), 몽골 출신자의 공간적 집중도가 높은 반면 다른 국가 출신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도는 원주민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인다. 지역 인구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이민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민자의 지역적 분산을 촉진하는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 적응할수록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 패턴이 더욱 강화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2절 국제이동 통계의 현황과 과제

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국제이동 통계(자료)의 구축과 관련한 문제를 먼저 살펴본다. 이 연구의 4~5장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민 관련 연구의 상당 부분은 자료의 활용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연구 분야와 비교할 때 이민 관련 연구에서 통계 자료의 구축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이슈 중의 하나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이동 통계(자료)의 체계화는 단순히 인구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뒤에서 논의하는 이민자와 이민자 배경 세대의 사회 통합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 통합 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인적자원 활용이 중요하며, 그 전제가 이민자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이라는 점에서 국제이동 관련 통계(자료)의 체계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에서는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이민의 역할과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국제이동 관련 통계(자료)의 구축 현황과 과제를 검토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민 행정이나 이민정책 차원이 아닌 인구통계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를 진행한다.

첫째, 국제이동(이민) 유량-저량 통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현재 통계청의 국제이동 유량 통계는 체류 기간 90일을 초과한 국적(내국인, 외국인) 기준의 통계만을 제시한다. 특히 통계청의 국제이동 통계가 체류 기간 90일을 기준으로 국적이거나 체류자격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에 UN이 권고하는 체류 기간 1년 기준의 통계(장기 국제이동)는 성별, 연령, 국적(내외국인)을 구분하는 수준의 통계 제공에 그치는 상황이다. 법무부(2023)의 ‘출입국 통계’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이동 통계와는 구분된다. 통계청이나 법무부가 보고하는 1년 이하 기간의 이동에는 인구변동에 단기적 효과만을 갖는 이동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민의 중장기적 파급 효과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이민자 통계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제공되는 통계와 함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이동 통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계청의 현 국제이동 통계는 분류 기준으로 국적(내국인-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다. 국제이동 통계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적 외에도 출생국에 기초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추가로 국제이동 통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외국인과 입출국자를 모두 아울러 국제이동자의 입국과 출국 목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나 일반인들의 용어 사용과 다르지만, 엄밀한 개념 정의상 국내에서 출생한 시민권자(native-born citizens)도 국제이동자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입출국 정보의 구축은 이민정책 측면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국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외로 상주지를 옮긴 개인들의 규모, 이동 사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 구축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직면하여 인적자원의 국외 유출(brain drain)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민자 저량 통계의 경우 현재까지 전체 이민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 정도만이 활용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출생 및 현재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인 개인의 국제이동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등 상주지 변화에 기초하여 이민자를 정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2023)의 ‘체류외국인 통계’는 기본적으로 단기 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귀화인)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행정 통계이다. 또 다른 자료원인 행정안전부(2022, pp. 4-5)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행정 통계이지만, 외국인에 대해 또 다른 정의를 사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는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지만, 세부 유형 중에 외국인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3조(인지) 및 제4조(귀화))를 포함한다(대한민국 국민이 국적 상실 후 국적을 회복한 경우와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 자녀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의 미성년 자녀도 포함한다(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¹⁰⁷⁾

이렇듯 다양한 자료원에 기초한 이민자 유량-저량 관련 통계가 제시되고 있지만, 통계 생산 기관별로 이질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인구가동의 현

107) 행정 자료 외에도 이민자에 관한 표본조사로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최윤정 외, 2022)가 있지만,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와 달리 이 자료는 결혼이민자(귀화자)와 한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과 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이민자 저량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 다른 표본조사로 통계청, 법무부(2022)가 주관하는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상주 인구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외국인(일부 체류자격 등 제외)과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사는 국적에 기초한 이민자 정의와 표본 규모상의 한계는 있지만, 이민자의 생활 실태와 고용 현황에 대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에 비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혼인, 출산, 국내이동 등 인구학적 정보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비해 제한적이다. 또한 표본조사의 특성상 이민자의 하위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황과 이동자의 특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국제이동과 이민자를 둘러싼 부정확한 이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통계청이 제공하는 자료와 달리 법무부나 행정안전부가 생산하는 통계는 순수한 통계적 목적이 아니라 법적 및 행정적 목적으로 작성된다. 그러나 인구이동 통계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이민 행정과 이민정책의 기초 자료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이동(이민자)의 정의와 분류에서 일관된 틀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주택총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의 기획과 설계가 필요하다. 다양한 자료원이 등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국제이동 ‘저량’ 통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자료원은 인구주택총조사이다. 특히 적용의 보편성(universal coverage)은 다른 자료원과 비교할 때 인구주택총조사가 갖는 중요한 장점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원칙적으로 상주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포괄하며, 이민자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 비록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누락되는 일부 이민자 집단(예컨대, 미등록 이민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최고의 자료원임에는 의문이 없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20%)는 소지역 단위로 혹은 사례 수가 적은 이민자 집단(예컨대, 특정 국적)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인구주택총조사는 다양한 유형의 국제이동자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제이동 관련 인구주택총조사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 수준을 넘어 다양한 국제이동자 및 관련 집단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설문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현 인구주택총조사의 설문 중에는 일반 사회조사를 통해서도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이동 관련 정보를 추가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108)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 인구주택총조사가 출생지(출생국)와 국적 정보를 제공하기에 국제이동자 유형 중에서 조사 시점 기준으로 ‘국외 출생 인구’와 ‘외국인 인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귀환이동자(return migrant)를 식별할 수 없다. 귀환이동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출생지나 국적 정보 외에 설정된 준거 기간(예컨대, UN 기준의 12개월) 이상으로 해외에 체류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참고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입국 시점(year/month of entry) 정보는 출생 국적이거나 현재 국적이 외국인 경우에만 수집되었다. 이에 따라 출생 국적과 현재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이면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국내 출생 후에 외국으로 상주지를 옮긴 후 국내로 귀환한 개인의 입국 시점 정보는 수집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귀환이동자의 규모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생지나 국적과 관계없이 국외로의 상주지 이동 여부와 상주지(국가), 국내 입국(귀환) 시점과 귀환 사유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입국 시점은 ‘최초’ 입국 시점을 측정하는데, 귀환(순환)이동의 비중이 커지면 ‘최초’ 입국 시점보다는 ‘가장 최근’의 입국 시점 정보가 더 적절할 수 있다.

귀환이동자와 함께 현 인구주택총조사가 파악하지 못하는 또 다른 국제이동자(저량) 관련 집단이 이민 2세대(second-generation migrant)이다. 이민 2세대 집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출생지 정보와 함께 부(父)와 모(母)의 출생지 정보가 필요하다. 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부

108) 물론 자료 사용자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인구주택총조사는 횡단면 정보로 심층적인 분석 목적의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일반 사회조사나 패널조사에서 관련 정보가 수집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일반 사회조사나 패널조사에서 국제이동 관련 정보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수집되고 있다.

모가 모두 생존하여 가구에 동거할 때만 이민 2세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조사 대상자가 출생했을 때 부모(특히 모)의 상주지 정보를 파악하면 이민자 정의의 정확성 제고와 이민자의 세부적인 특성 파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다양한 국제이동 관련 집단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유출(이출)(emigration) 및 유출자(이출자)(emigrants)에 관한 정보 파악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귀환이동자 사안과도 관련된다.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유출자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부재하기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수집할 수는 없다. 비록 유출자가 구성원으로 있었던 가구의 가구주나 가구원이 국내에 상주하면 이들을 통해 유출자에 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지만, 전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처럼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모든 유출(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United Nations, 2017c, p. 74). 그럼에도 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출국의 시점, 목적지, 사유, 인적 특성 같은 유출(자)에 관한 정보는 유입(자)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이민이 인구변동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초래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원이다.¹⁰⁹⁾

셋째, 혼인, 출생, 사망, 이동 같은 인구동태통계(사건) 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 등 다양한 자료원을 연계하여 이민자 통계를 추가로 생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의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에 사망 여부(시점), 송출국(출생국)으로의 귀환 여부(시점) 등과 관련한 정보를 추가하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민자의 사망력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귀중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109) 통계청(2023c)에 의하면 2020년의 장기 국제이동 출국자는 326,272명으로 입국자(459,254명)의 71.04%이다. 2015~2020년의 5년에 걸친 장기 국제이동 출국자(평균)도 264,622명으로 입국자(평균: 389,995명)의 67.85%에 달한다.

주택총조사(표본조사) 자료만을 활용했지만, 혼인-출생 통계와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를 연계하면 일반 사회조사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이민자의 혼인과 출산 행동에 관한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와 거주지(행정) 정보의 연계도 이민자의 국내이동 패턴은 물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수도권 집중 같은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인구동태통계는 아니지만, 이민자의 체류자격 정보와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를 연계하면 이민의 목적 등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시적으로 언급한 이러한 다양한 자료원을 연계한 이민자 통계는 새롭게 조사를 추진할 필요 없이 기존에 구축된 행정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신규 이민자 통계의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구동태통계나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 미국 등 이민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 사회조사나 패널조사에서 충분한 이민자 표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에 필요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이동의 원인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향적(prospective) 또는 회고적(retrospective) 설계에 기초한 종단적 정보의 수집이 중요하다. 종단적 설계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뿐만 아니라 국제이동이 이루어진 당시의 정보도 중요하다(Bilsborrow, 2016, p. 147). 종단적 설계와 함께 국제이동 분야에서는 다양한 국가를 비교하는 접근(cross-national design)이 또 다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조사 설계 방식이다. 한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국제이동과 국제이동자의 특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사회조사와 비교할 때 이민자 집단의 다양성으로 인해 조사 대상자의 정의와 표집틀(sampling frame)의 구축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조사 방법 외에 표본 추출을 위한 대안적인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Salamońska, 2022, p. 426).

마지막으로 이민자 통계 자료의 질(특히 정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제이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민자 통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제이동의 복잡성이 커지고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 또한 확대됨으로써 고품질의 이민자 통계 생산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료의 질은 조사 비용과 관련이 있지만, 이민자를 포함한 소수 인종·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드는 1인당 비용이 일반 사회조사에 비해 많다는 점에서 조사 비용과 자료의 질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문제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Erens, 2013, p. 45).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를 포함하여 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민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매우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는 언어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2020년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처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조사의 비중이 확대된 것도 고품질의 자료 수집 측면에서 부정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외국인 조사표(10개 언어)를 사용하지만(통계청, 2023m), 비대면 조사에서 이민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면조사가 반드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면접자와 피면접자가 인종·민족, 언어, 문화 등에서 다르면 대면조사가 또 다른 편의(bias) 발

생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예컨대, Salamońska(2022, p. 427)는 면접자의 사회인구학적 속성이 질문의 내용과 관련될 때 면접자의 존재가 편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여기에서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이의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민자 통계 자료의 질 문제는 비단 현장 조사(면접) 과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고품질의 이민자 통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이민자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조사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제3절 인구변동 대응 정책과 이민의 역할

이 절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같은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 측면에서 이민의 역할을 살펴본다. 이 절의 내용이 다음 절에서 논의하는 정책 방향과도 관련되지만, 여기에서는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이민과 이민정책의 가능성과 한계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이민의 가능성과 한계가 명확히 이해되어야 한다. 이민이 인구의 절대적 크기나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인구 고령화 같은 연령 구조 변화에 대한 이민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임이 이해되어야 한다. 이민을 포함한 인구동태 현상들이 인구의 연령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문제는 인구 집단의로의 진입(출생, 유입 이동)과 탈퇴(사망, 유출 이동)가 이루어지는 연령과 분석 대상 인구의 평균 연령(A_p)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A_p > 0$). 출생이 항상 연령 구조를 젊게 하는 것은 (인구의 평균 연령(A_p)보다 낮은) 0세에 인구로 진입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사망의 경우 평균 연령을

초과하는 연령에서 사망이 발생하면 연령 구조를 젊게 하지만, 영아 사망처럼 평균 연령 아래에서 발생한 사망은 반대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동(이민)이 연령 구조에 미치는 효과도 사망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Preston과 동료들(Preston, Himes, and Eggers, 1989, pp. 691-695; Preston and Stokes, 2012, p. 222)은 이러한 인구동태 현상과 연령 구조의 관계를 아래의 수식으로 공식화한다. 아래 수식에서 b , d , i , o 는 각각 출생률, 사망률, 유입률, 유출률을 의미하며(crude rate), A_p 는 분석 대상 인구의 평균 연령, A_D 는 평균 사망 연령, A_i 는 유입자 평균 연령, A_o 는 유출자 평균 연령을 각각 나타낸다. 이들이 제시한 수식의 핵심은 인구변동 요인에서의 변화를 통한 상쇄 과정이 작동하지 않는 한 인구는 불가피하게 고령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dA_p/dt = 1$).

$$\frac{dA_p}{dt} = 1 - b(A_p - 0) - d(A_D - A_p) - i(A_p - A_i) - o(A_o - A_p)$$

Preston et al.(1989, p. 695)의 위 수식은 인구변동 요인에 의한 연령 구조의 단기적 변화를 보여 준다. 인구의 연령 구조에 대한 장기적 파급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생, 사망, 이동에 의한 진입과 탈퇴, 현시점의 연령 구조,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들 요인의 전개 양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변동 요인에서 나타난 변화가 인구의 연령 구조에 미치는 ‘장기적’ 파급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인구학적 분석 도구가 바로 안정인구 모형(stable population model)이다. 안정인구 모형이 알려주는 교훈은 장기적으로 인구의 연령 분포를 변화시키는 것은 출산율이나 사망률 같은 인구동태율(vital rates)에서 나타나는 ‘변화’(change)

이지 인구변동 요인의 절대적 '수준'(level)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제인 이동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젊은 연령층 중심의 대규모 국제이동이 연령 구조를 젊게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구의 연령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동(이민)의 절대적 수준(혹은 이동률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이동률에서의 변화(change in migration rates)이다. 이 연구의 인구 시뮬레이션에서 추론해 볼 수 있듯이 국제순이동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인구 고령화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민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민을 통해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무한대 기간에 걸쳐 이동률의 변화, 즉 이민자의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방법뿐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단기적인 시각에 기초하여 인구의 연령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시도는 또한 장기적으로 순이동률의 주기적 폭증 등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오는 문제가 있다(Blanchet, 1989, p. 36). 한편 이 연구의 인구 시뮬레이션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적인 조정 방법 대신에 대규모의 이민자를 고정적으로 받아들여더라도 현재에 비해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는 문제를 피하기는 어렵다. 비록 '이론적으로' UN(2000)의 사례처럼 인구 고령화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이민의 수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순전히 인구학적 의미에서만 그러할 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가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없다. UN(2000)의 대체이동 프로젝트는 순전히 인구의 규모와 연령 분포 같은 인구학적 측면을 겨냥할 뿐 대규모 이민자 수용에 따른 비용-편익은 분석되지 않은 것이다.

이민이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를 저지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는 있는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을 통해 인구 감소를 저지하기도 쉽지 않다. 우선, 인구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기에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상황은 이미 음(-)의 인구 모멘텀(negative population momentum) 현상을 초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 구조에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의미하는 인구 모멘텀은 현재 인구 대비 대체출산율에 기초한 정지인구(SP-RF)의 비(ratio)로 정의된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 모멘텀의 크기를 산출해 보면 모멘텀 계수(M)는 0.83 수준이다. 현 인구의 연령 구조로 인해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TFR 2.0~2.1)으로 즉각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인구가 궁극적으로 2021년 대비 대략 17% 감소한다는 것이다(사망률은 2021년 기준 고정).¹¹⁰⁾ 이는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출산율 감소로 인해 향후 출산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인구 감소는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참고로 2015년을 기준으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인구 모멘텀 계수가 0.92 수준(우해봉, 장인수, 2017, p. 146)이었음을 고려할 때 최근으로 올수록 음(-)의 인구 모멘텀 크기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조건이 음(-)의 인구 모멘텀을 발생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인구변동 대응 정책의 무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구 모멘텀의 존재는 인구정책에서 적기에 이루어지는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현

110) 여기에서는 Kim and Schoen(1997, p. 423)이 제안하는 다음의 수식을 사용하였다. $M_{2021} = [C_{pop\ 2021}(0, 30)] / [C_{pop\ stationary}(0, 30)]$. 이 수식에서 $C_{pop\ 2021}(0, 30)$ 은 기준 시점(2021년)의 전체 여성 인구 대비 30세 미만 여성 인구의 구성비, $C_{pop\ stationary}(0, 30)$ 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정지인구에서 30세 미만 여성 인구의 구성비를 의미한다. 인구 모멘텀의 크기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 시점 자료(분자)는 통계청(2023a) 장래인구추계의 2021년 추계인구이며, 정지인구 자료(분모)는 통계청(2023h)의 생명표 자료를 사용하였다. 정지인구에서 30세 미만 인구의 구성비는 $(T_0 - T_{30}) / T_0$ 로 산출할 수 있다. 참고로 인구 모멘텀은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Keyfitz의 모멘텀(Keyfitz, 1971)을 의미한다. 인구 모멘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우해봉, 장인수(2017)와 우해봉, 한정림(2018)을 참고할 수 있다.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적 개입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인구학적 변화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인구 시뮬레이션 모형은 국제순이동 50만 명 수준에서도 현재(2021년) 대비 인구의 감소 규모가 20% 수준에 근접할 것임을 보여 주며, 수리인구학 모형은 장기적으로 현(2021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국제순이동 규모가 61만 명 수준에 이름을 보여 준다. UN(2022a) 자료에 의하면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이러한 수준의 대규모 이민을 수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조차도 매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것은 아니다. 195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순이동자 규모가 60만 명을 넘어서는 사례로 미국 외에 스페인과 튀르키예가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페인(2002~2007년)은 기존 미등록 이민자의 합법화, 튀르키예(2014년)는 난민 수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¹¹¹⁾ 특히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대규모 이민자 수용이 인구의 구성(원주민 대 이민자)에서 상대적으로 가파른 변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수용성 또한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같은 인구학적 조건을 조절 혹은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이민정책(demographically-based immigration policy)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 이민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앞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 이민은 변동성이 가장 큰 인구변동 요인이다. 미래 전망은 물론이거니와 현재까지 국제이동의 정확한 현황조차

111) UN(2016, p. 9)에 의하면 튀르키예의 난민 수용자는 160만 명으로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하여 이민을 손쉬운 대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이민을 인구변동 대응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이민의 흐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이민은 전통적인 경제적 목적의 노동력 이동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정치적, 환경적 요인에 기초하여 발생하기도 하며, 이민의 유형별로 국가의 통제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국제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나 기관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는 한편 이민자의 인권 보장 등을 규율하는 사법 체계의 역할 또한 정부의 재량적 정책 개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이민정책은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 선거를 통해 권력이 교체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민과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할 것이 요구된다. 이민과 관련하여 특정 집단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접근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민에 대한 태도(정서)와 정치적인 이념(보수-진보) 지형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념 대립이 심화된 시대이지만, 국제이동에 대한 규제와 통제 측면에서는 진보-보수 진영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정치적 조정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이민 정책 분야에서 장기적인 안목에 기초하여 효과성 높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여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에 인구변동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단기적인 시각에서 그 파급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인구학적 조건이 일정한 단계를 지나면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은 물론 속도를 조절하

기도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는 인구 감소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구변동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구정책에서는 장기적 안목에 기초한 적기의 그리고 일관된 대응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민정책과 정치의 밀접한 연관성은 정책 패키지의 완결성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의 효과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개연성을 높인다.

넷째,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 이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사회 통합이 전제 조건임에 유의해야 한다. 이질적인 인과 기제의 작동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이민정책을 이민 규제-통제 (immigration regulation/control)와 이민자 통합 (immigrant integration) 정책으로 구분하지만 (Givens and Luedtke, 2005, p. 3), 현재까지도 노동 이민, 가족 상봉, 난민 등 이민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입국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이민 규제-통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이민 정책을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Meyers, 2000, p. 1246). 그러나 단순히 영토적 경계(국경)에 대한 통제를 넘어 실질적으로 이민자가 이민 수용국에서 정착하여 사회 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취업 활동이나 복지 급여 수급 등 물질적 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민자의 정착이나 통합 또한 이민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Bjerre, Helbling, Römer, and Zobel, 2015, p. 559, 562). 더욱이 200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급진 이슬람주의 관련 테러 사건들처럼 최근 들어 이민자 및 이민자 배경 세대의 통합 문제는 국가 안보 (national security)와 연계되기도 한다. 2000년대에 유럽의 이민정책에서 이민자 통합이 지배적인 이슈로 등장한 것 (Keely, 2009, p. 403)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민자의 사회 통합이 갖는 함의가 커지고 있지만, 이민 송출국, 인종·민족, 종교 등 이민자의 특성이 다양화되는 한편 교육, 언어,

노동시장 같은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의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젠더, 차별 금지 등 새로운 이슈들을 포괄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민자의 통합 문제는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민 규제-통제’ 영역과 비교할 때 ‘이민자 통합’ 영역에서 정치적 이념에 따른 정책 차이가 더욱 크다는 논의(Givens and Luedtke, 2005, p. 17) 또한 이민자 통합이 정치적 공감대를 확장하기 쉽지 않은 영역임을 시사한다.

새로운 영역으로 이민자 통합 정책이 확장되고 있지만, 전통적 영역 또한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예컨대, 노동력 부족 등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 이민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민 수용국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나 구조 조정 등과 같은 경기 침체의 부정적 효과는 이민자(특히 노동 이민)에게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Beets and Willekens, 2009, p. 19). 이는 일정 부분 원주민에 비해 이민자의 교육 수준과 경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시에 고용 조건이 열악하고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분야(제조업, 건설업, 호텔-숙박업 등)에 이민자가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경향과도 관계된다(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9, pp. 41-42). 또한 이민자는 언어적 장벽 등으로 이민 송출국에서 획득한 자격과 기술을 이민 수용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동시에 원주민과 비교할 때 새롭게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기도 쉽지 않다(특히 한시적 체류자). 더욱이 이민자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속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May, 2012, p. 36)에서 이민자의 노동시장 부적응 문제의 파급 효과는 더욱 크다. 다른 한편으로 이민자는 공간적으로,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사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 경향은 후속적으로 이민자의 사회 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들어 상당수 선진 유럽 국가들에서 이민자의 공간적

집중 문제는 사회 통합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OECD, 2021, p. 164).

종합적으로 전통적 영역과 새로운 영역을 모두 아울러 사회 통합이 전제되지 않은 이민자 수용은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세대를 거치며 재생산되는 부적응으로 인해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민정책이 다양한 영역과 이슈를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을 요구하기에 순수한 인구학적 목적으로 설계되는 이민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민이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인구변동에 대응하여 이민의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구학적 논의를 넘어 이민의 사회경제적 및 사회 통합적 측면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이민자의 경제적 및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측면에서도 그 기초가 되는 이민자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속도를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인구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한 정책 방향과 과제

현재까지도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가 어떠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관한 일치된 전망을 찾기는 어렵다. 비록 현재의 인구 고령화가 생활 수준의 향상이나 생존 기간의 연장 같은 인류의 오랜 열망이 초래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지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그 파급 효과가 부정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인구 고령화와 비교할 때 인구 감소의 파급 효과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기도 한다(Coleman and Rowthorn, 2011; Lutz, 2023). 환경

분야가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인구 감소의 경우에도 부정적 측면이 좀 더 부각할 여지가 많다. 비록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가 인과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이들 두 현상이 독립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구 감소 또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작지 않다. 무엇보다도 생산연령인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그 자체가 초래하는 문제와 함께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와 맞물려 부정적 상승효과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

이 절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공적연금, 건강보험, 사회서비스 분야의 재정 지출 증가와 지속 가능성,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 세대 간 부담의 공정성 등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지만, 이 절에서는 영역별로 과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대신에 다양한 영역을 모두 아울러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아래에서는 이민을 포함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학적 상황에서는 어떤 단일의 정책 수단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완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및 활용 강화(노동 생애 연장), 이민, 사회제도의 혁신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우선, 현 상황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가 불가피한 추세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사회 체제가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와 감소의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인구변동의 급격성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미국의 최근 국제순이동에 상응하는 수준으

로 대규모의 이민자를 수용하더라도 현재의 인구학적(출산력, 사망력) 조건에서는 이민을 통해 인구 고령화 추세를 되돌리기는 물론이거니와 추가적 진행을 막기도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까지의 선진 이민 수용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이민자 규모를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인구의 감소 또한 불가피하다. 더욱이 수용 이민자 규모를 확대할수록 인구의 구성에서 가파른 변화를 초래하기에 정치사회적 수용성도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고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일정한 수준까지 회복될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의 사례(Bijak et al., 2008, p. 340)처럼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출산율의 추가적인 상승 없이 이민이나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를 통해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구변동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는 더욱 어렵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민이 저출산 대응 정책의 대안적 선택지가 될 수는 없다. 물론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 여부와 그 정도는 인구 통제적 관점의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출산에 대한 개인적 욕구에 기초해야 한다.¹¹²⁾ 또한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체계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어나갈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하다.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 상황이 보여 주는 것처럼 출산율 회복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

112)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타당성 등 인구정책의 운영 원칙과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우해봉, 장인수(2017)를 참고할 수 있다(제6장).

처럼 우리나라가 이미 음(-)의 인구 모멘텀이 발생하는 인구학적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출산율 회복만으로 급격한 인구변동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저출산 수준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여성이나 중고령층의 인적자원 활용(노동 생애 연장) 등 노동시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 수준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대폭 높이더라도 최근까지 진행된 인구학적 조건을 고려할 때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노동력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적자원 활용 강화는 여성이나 노인 등 인적자원의 양적 확대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질적 측면에서도 현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전체 생애 주기를 모두 아울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비록 이민이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를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미래 한국 사회에서 이민의 역할이 지속해서 증가할 개연성은 높다. 이는 국제이동이 노동시장 불균형, 소득(부) 불평등, 정치 갈등(분쟁) 등 개별 국가의 이민정책이 온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국제적 요인들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더라도 최소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야 노동시장(노동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인적자원 활용 강화와 함께 중단기적으로 노동력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불일치(mismatch) 문제에 대응하여 이민 또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구변동의 파급 효과가 지역별 혹은 인구 집단별로 다르게 전개 되기에 이민의 긍정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구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의 일환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못지않게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지만, 비수도권이나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의 이동 같은 이민자의 공간적 분산 또한 쉽지 않은 과제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고급-숙련 기술자의 지역사회 유입이 중요하지만, 대도시 중심으로 고급-숙련 일자리가 창출되는 조건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이민자 또한 이러한 패턴에서 예외가 되기는 힘들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와 같이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업종의 단기적 필요에 기초한 이민정책은 경기변동에 따라 이민자 노동력의 과잉 공급과 기술 낭비 문제를 초래할 위험을 높이고, 더 나아가 이민자의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함의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시점의 국내 노동 공급 상황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전개될 분야별 노동력 감소(수요), 국내 노동 공급(교육, 훈련) 전망, 생산성 추이에 대응하도록 이민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특히 생산연령인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요구된다. 출산율 회복 같은 인구학적 조건에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인구변동 속에서 사회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혁신 노력 또한 중요하다. 급격한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출산율 상승 같은 인구학적 조건의 개선을 강조하기도 한다(유희원, 한신실, 2022, p. 136). 외국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민의 역할이 언급되기도 한다. 비록 인구학적 조건 개선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민을 통해 인구 고령화 추세를 되돌리거나 저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도 중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사회보장제도의 재

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는 (특히 중단기적으로) 인구학적 조건 개선에서 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자체의 혁신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 및 감소를 둘러싼 우려가 크지만, 혁신을 통한 사회 체계 전반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국방, 노동시장, 주거, 교통, 돌봄, 건강, 안전, 조세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된다.



- 국적법. (2023). 법률 제189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에서 2023. 2. 1. 인출.
- 김두섭. (2008). 외국인 배우자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1(3), 1-26.
- 김현식. (2015). 혼인이주자가족과 한국인가족의 출산력 비교 연구. **보건사회연구**, 35(1), 427-454.
- 김현식. (2018).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의 출산력에 관한 연구: 출신 국가별 출산력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2), 42-70.
- 다문화가족지원법. (2023). 법률 제1728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 9. 22. 인출.
- 법무부. (2023).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경기: 법무부.
- 우해봉. (2022). **인구통계 모니터링을 위한 연보 작성 시범 사업**.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2023). 인구 고령화의 인구학적 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43(1), 50-68.
- 우해봉, 장인수. (2017).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이지혜. (2019).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 분석과 정책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한정림. (2018). 저출산과 모멘텀 그리고 한국의 미래 인구변동. **보건사회연구**, 38(2), 9-41.
- 유삼현. (2017). 이주여성의 출산력 수준: 얽힌 실타래 풀기. **한국인구학**, 40(1), 29-55.
- 유삼현, 이정균. (2019).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분석. **한국인구학**, 42(2), 25-50.
- 유정균. (2015).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의 출산수준 비교: 합계출산율과 출산간격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8(3), 49-73.
- 유희원, 한신실. (2022).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확장: 제도

- 내·외적 수지균형의 조화. **비판사회정책**, 74, 109-148.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2023). 기획재정부령 제8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 9. 21. 인출.
- 출입국관리법. (2023). 법률 제190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3. 9. 1. 인출.
- 최윤정, 전기택,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양계민, ..., 황정미.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29에서 2023. 9. 22. 인출.
- 통계청. (2019). 2019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a103010100>에서 2023. 6. 12. 인출.
- 통계청. (2022).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417776&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23. 1. 4. 인출.
- 통계청. (2023a). 국가통계포털: 온라인간행물(주제별)-인구-장래인구추계[데이터파일].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에서 2023. 1. 8. 인출.
- 통계청. (2023b).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국제인구이동-내외국인/성/연령별 국제이동(월간, 연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8025&conn_path=I2에서 2023. 1. 12. 인출.
- 통계청. (2023c).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국제인구이동-내외국인/성/연령별 장기국제이동(연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8026&conn_path=I2에서 2023. 1. 12. 인출.
- 통계청. (2023d).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자료 이용-다운로드 서비스-인구주택총조사 패널데이터[데이터파일].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에서

2023. 2. 9. 인출.

- 통계청. (2023e).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 통계청. (2023f).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인구동향조사-출생-모의 연령별 출산율(각세)[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2&conn_path=I2에서 2023. 5. 4. 인출.
- 통계청. (2023g).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인구동향조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conn_path=I2에서 2023. 5. 2. 인출.
- 통계청. (2023h).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통계-보건-생명표-간이생명표(5세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1&conn_path=I2에서 2023. 5. 2. 인출.
- 통계청. (2023i). 국가통계포털: 온라인간행물(주제별)-인구-인구동태(출생, 사망)[데이터파일].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에서 2023. 6. 12. 인출.
- 통계청. (2023j).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인구동향조사-혼인-외국인과의 혼인건수-한국인 남편의 혼인종류/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혼인[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1&conn_path=I2에서 2023. 6. 13. 인출.
- 통계청. (2023k).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인구동향조사-혼인-외국인과의 혼인건수-한국인 아내의 혼인종류/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혼인[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22&conn_path=I2에서 2023. 6. 13. 인출.
- 통계청. (2023l).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국제인구이동-국적/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월간, 연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

- 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8023&conn_path=I2에서 2023. 6. 13. 인출.
- 통계청. (2023m). 인구주택총조사-2020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census.go.kr/bsm/faq/faqList.do?q_menu=1&q_sub=13에서 2023. 9. 18. 인출.
- 통계청, 법무부. (2022). 2022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400&bid=11109&act=view&list_no=422409에서 2023. 9. 22. 인출.
- 행정안전부. (2022).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L ELMvFbsWDR0AzGx8DdB3ezU.node20?bbsId=BBSMSTR_00000000014&nttId=96092에서 2023. 9. 1. 인출.
- Adsera, A., and Ferrer, A. (2014). Immigrants and demography: Marriage, divorce, and fertility. IZA Discussion Papers No. 7982. Retrieved from <https://docs.iza.org/dp7982.pdf>. 2023. 2. 1.
- Alho, J. M. (2008). Migration, fertility, and aging in stable populations. *Demography*, 45(3), 641-650.
- Andersson, G. (2004). Childbearing after migration: Fertility patterns of foreign-born women in Swede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2), 747-774.
- Arthur, W. B., and Espenshade, T. J. (1988).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nts' ag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2), 315-326.
- Beaujot, R. (2002). Effect of immigration on demographic structure. P SC Discussion Papers Series 16(9). Retrieved from <https://ir.lib.uwo.ca/cgi/viewcontent.cgi?article=1076&context=pscpapers>. 2023. 3. 11.
- Beets, G., and Willekens, F. (2009).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int

- ernational migration: An uncertain outlook.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7, 19-37.
- Belanger, A., and Rogers, A. (1992). The internal migration and spatial redistribution of the foreign-bor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1965-70 and 1975-80.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6(4), 1342-1369.
- Bell, M., Charles-Edwards, E., Kupiszewska, D., Kupiszewski, M., Stillwell, J., and Zhu, Y. (2015). Internal migration data around the world: Assessing contemporary practice. *Population, Space and Place*, 21(1), 1-17.
- Bell, M., and Muhidin, S. (2009). Cross-national comparison of internal migration. MPRA Paper No. 19213. Retrieved from https://mpra.ub.uni-muenchen.de/19213/1/MPRA_paper_19213.pdf.
- Bernard, A., Bell, M., and Charles-Edwards, E. (2014). Life-course transitions and the age profile of internal migr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0(2), 213-239.
- Bijak, J., Kupiszewska, D., and Kupiszewski, M. (2008). Replacement migration revisited: Simulations of the effects of selected population and labor market strategies for the aging Europe, 2002-2052.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7, 321-342.
- Billari, F. C., and Dalla-Zuanna, G. (2011). Is replacement migration actually taking place in low fertility countries?. *Genus*, 67(3), 105-123.
- Bilsborrow, R. E. (2016). Concepts, definitions and data collection approaches. In M. J. White (ed). *International Handbook of Migration and Population Distribution* (pp. 109-156). Dordrecht: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 Bjerre, L., Helbling, M., Römer, F., and Zobel, M. (2015).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immigration policies: A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9(3), 555-600.
- Blanchet, D. (1989). Regulating the age structure of a population through migration. *Population: An English Selection*, 44(1), 23-37.
- Bongaarts, J., and Potter, R. E. (1983). *Fertility, Biology, and Behavior: An Analysis of the Proximate Determinants*. San Diego: Academic press.
- Brettell, C. B., and Hollifield, J. F. (eds.) (2000).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New York: Routledge.
- Burcin, B., Drbohlav, D., and Kucera, T. (2005). Czech Republic population prospects in the mirror of replacement migration concept. *Acta Universitatis Carolinae-Geographica XL*, 40(1-2), 47-67.
- Carlson, E. D. (1985). The impact of international migration upon the timing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Demography*, 22(1), 61-72.
- Castles, S. (2010). Understanding global migration: A social transformation perspectiv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10), 1565-1586.
- Castles, S., and Miller, M. J.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Guilford Press.
- Chiswick, B. R., and Miller, P. W. (2004). Where immigrants settl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6(2), 185-197.
- Coale, A. J., Demeny, P., and Vaughan, B. (1983). *Regional Model Life Tables and Stable Populations* (Second Edi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Coleman, D. A. (2000). Who's afraid of low support ratios? A UK response

- to the UN Population Division report on 'Replacement Migration'. In United Nations 'Expert Group' Meeting on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Ageing and Population Decline. Retrieved from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sites/www.un.org.development.desa.pd/files/unpd-egm_200010_coleman.pdf. 2023. 3. 9.
- Coleman, D. A. (2002). Replacement migration, or why everyone is going to have to live in Korea: A fable for our times from the United Na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7(1420), 583-598.
- Coleman, D. A. (2006). Immigration and ethnic change in low-fertility countries: A thir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3), 401-446.
- Coleman, D. A. (2008). The demographic effe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4(3), 452-476.
- Coleman, D., and Rowthorn, R. (2011). Who's afraid of population decline? A critical examination of its consequenc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Supplement), 217-248.
- Colic-Peisker, V., and Peisker, A. (2023). Migrant residential concentrations and socio-economic disadvantage in two Australian gateway cities. *Journal of Sociology*, 59(2), 365-384.
- Courgeau, D., and Lelièvre, E. (2006). Individual and social motivations for migration. In G. Caselli, J. Vallin, and G. Wunsch (eds.). *Demography: Analysis and Synthesis* (Vol. 2). (pp. 345-357). MA: Elsevier Academic Press.
- Craveiro, D., De Oliveira, I. T., Gomes, M. S., Malheiros, J., Moreira, M. J. G., and Peixoto, J. (2019). Back to replacement migration. *Demographic research*, 40(45), 1323-1344.

- Darlington-Pollock, F., Lomax, N., and Norman, P. (2019). Ethnic internal migration: The importance of age and migrant status. *The Geographical Journal*, 185(1), 68-81.
- Donato, K. M., Durand, J., and Massey, D. S. (1992). Stemming the tide? Assessing the deterrent effects of 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Demography*, 29(2), 139-157.
- Duncan, O. D. (1957). The measurement of population distribution. *Population Studies*, 11(1), 27-45.
- Edmonston, B., Raymer, J., and Salzman, T. (2010). Introduction. In T. Salzman, B. Edmonston, and J. Raymer (eds.). *Demographic Aspects of Migration* (pp. 11-27). Heidelberg: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 Erens, B. (2013). Designing high-quality surveys of ethnic minority groups in the United Kingdom. In J. Font and M. Méndez (eds.). *Surveying Ethnic Minorities and Immigrant Populations: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Research Strategies* (pp. 45-68).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Espenshade, T. J. (1986). Population dynamics with immigration and low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2(Supplement), 248-261.
- Espenshade, T. J. (1994). Can immigration slow U.S. population aging?.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3(4), 759-768.
- Espenshade, T. J. (2001). "Replacement mi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quilibrium stationary populations. *Population and Environment*, 22(4), 383-389.
- Espenshade, T. J., Bouvier, L. F., and Arthur, W. B. (1982). Immigration and the stable population model. *Demography*, 19(1), 125-133.
- Fihel, A., Janicka, A., and Kloc-Nowak, W. (2018). The direct and indi

- rect impact of international migration on the population ageing process: A formal analysis and its application to Poland. *Demographic Research*, 38(43), 1303-1338.
- Garcia, M. A., Garcia, C., and Markides, K. (2019). Demography of aging. In D. L. Poston Jr. (ed). *Handbook of Population* (Second Edition) (pp. 143-161). Cham: Springer.
- Gesano, G. (1994). Nonsense and unfeasibility of demographically-based immigration policies. *Genus*, 50(3/4), 47-63.
- Givens, T., and Luedtke, A. (2005). European immigration poli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ssue salience, partisanship and immigrant rights.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3, 1-22.
- Goldstein, J. R. (2009). How populations age. In P. Uhlenberg (Ed.). *International Handbook of Population Aging* (pp. 7-18). Dordrecht: Springer.
- Golini, A. (1998). How low can fertility be? An empirical explor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1), 59-73.
- Hablicsek, L., and Tóth, P. P. (2002). The role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maintaining the population size of Hungary between 2000-2050. Working Papers on Population, Family and Welfare. Budapest: Hungarian Demographic Research Institute.
- Jargowsky, P. A. (2009). Immigrants and neighbourhoods of concentrated poverty: Assimilation or stagnatio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5(7), 1129-1151.
- Kalmijn, M. (1998). Inter-marriage and homogamy: Causes, patterns,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395-421.
- Kaplan, G., and Schulhofer-Wohl, S. (2012). Interstate migration has fallen less than you think: Consequences of hot deck imputation in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Demography*, 49(3), 1061-1074.

- Keely, C. B. (2000). Demograph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C. B. Brettell, and J. F. Hollifield (eds.).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pp. 43-60). New York: Routledge.
- Keely, C. B. (2009). Replacement migration. In P. Uhlenberg (ed). *International Handbook of Population Aging* (pp. 395-403). Dordrecht: Springer.
- Keyfitz, N. (1971). On the momentum of population growth. *Demography*, 8(1), 71-80.
- Kim, Y. J., and Schoen, R. (1997). Population momentum expresses population aging. *Demography*, 34(3), 421-427.
- King, R., and Skeldon, R. (2010). 'Mind the gap!' Integrating approaches to internal and international migratio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10), 1619-1646.
- Kohler, H. P., Billari, F. C., and Ortega, J. 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 Kohls, M. (2010). Selection, social status or data artefact: What determines the mortality of migrants in Germany?. In T. Salzmann, B. Edmonston, and J. Raymer (eds.). *Demographic Aspects of Migration* (pp. 153-177). Heidelberg: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 Kostaki, A., Kotzamanis, B., and Agorastakis, M. (2009). Effects of immigration on population growth and structures in Greece: A spatial approach.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7, 167-195.
- Lee, E. S.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47-57.
- Lesthaeghe, R., Page, H., and Surkyn, J. (1988). Are immigrants substitutes for births?. IPD Working Paper 1988-3. Retrieved from <https://d1wqtxts1xzle7.cloudfront.net/>. 2023. 3. 10.
- Lichter, D. T., and Johnson, K. M. (2006). Emerging rural settlement

- patterns and the geographic redistribution of America's new immigrants. *Rural sociology*, 71(1), 109-131.
- Lichter, D. T., Parisi, D., and Ambinakudige, S. (2020). The spat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Europe: A cross-national stud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9, 465-491.
- Lübke, C. (2015). How migration affects the timing of childbearing: The transition to a first birth among Polish women in Britai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1, 1-20.
- Lutz, W. (2023). Population decline will likely become a global trend and benefit long-term human wellbeing.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1, 1-15.
- Lutz, W., Skirbekk, V., and Testa, M. R. (2006). The low-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4, 167-192.
- Malone, N., Baluja, K. F., Costanzo, J. M., and Davis, C. J. (2003). The foreign-born population: 2000. Census 2000 Brief (C2KBR-34). Retrieved from <https://corpora.tika.apache.org/base/docs/govdocs1/658/658533.pdf>. 2023. 4. 13.
- Markides, K. S., and Coreil, J. (1986). The health of Hispanics in the southwestern United States: An epidemiologic paradox. *Public health reports*, 101(3), 253.
- Marois, G., Bélanger, A., and Lutz, W. (2020). Population aging, migration, and productivity in Europ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7(14), 7690-7695.
- Martin, P., and Widgren, J. (2002). International migration: Facing the challenge. *Population Bulletin*, 57(1), 3-40.
- Massey, D. S. (1981). Dimensions of the new immigration to the United

- States and the prospects for assimil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7(1), 57-85.
- Massey, D. S. (1990). 1990: Social structure, household strategies, and the cumulative causation of migration. *Population Index* 56(1), 3-26.
- Massey, D. S. (1999).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dawn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e role of the stat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5(2), 303-322.
- Massey, D. S. (2003). International migration. In P. Demeny and G. McNicoll (eds.). *Encyclopedia of Population* (pp. 548-553). New York: Macmillan Reference USA.
-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and Taylor, J. E.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31-466.
-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and Taylor, J. E. (1994). An evalu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ory: The North American cas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4), 699-751.
- Massey, D. S., and Denton, N. A. (1988). The dimens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Forces*, 67(2), 281-315.
- Massey, S. J., and Parr, N. (2012). The socio-economic status of migrant populations in regional and rural Australia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population policy (Author Version).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29(1), 1-21. Retrieved from <https://research-management.mq.edu.au/ws/portalfiles/portal/62429765/Author+final+version.pdf>. 2023. 9. 26.
- May, J. F. (2012). *World Population Policies: Their Origin, Evolution,*

- and Impact*. Dordrecht: Springer.
- McDonald, P., and Hosseini-Chavoshi, M. (2022). What level of migration is required to achieve zero population growth 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Asian examples. *Frontiers in Human Dynamics*, 4: 1-16.
- Meyers, E. (2000). Theories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policy: A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4(4), 1245-1282.
- Milewski, N. (2007). First child of immigrant workers and their descendants in West Germany: Interrelation of events, disruption, or adaptation?. *Demographic Research*, 17(29), 859-896.
- Mitra, S. (1990). Immigration, below-replacement fertility, and long-term national population trends. *Demography*, 27(1), 121-129.
- Mitra, S. (1992). Can immigration affect age composition when fertility is below replacement?.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19(2), 163-174.
- Molloy, R., Smith, C. L., and Wozniak, A. (2011). Internal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5(3), 173-196.
- Morrison, P. A., Bryan, T. M., and Swanson, D. A. (2004). Internal migration and short-distance mobility. In J. S. Siegel and D. A. Swanson (eds.).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Second Edition). (pp. 493-521). San Diego: Elsevier Academic Press.
- Moultrie, T. (2013). Evaluation of data on recent fertility from censuses. In T. Moultrie, R. Dorrington, A. Hill, K. Hill, I. Timæus, and B. Zaba (eds.). *Tools for Demographic Estimation*. (pp. 42-50). Paris: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 Murphy, M. (2016a). The effect of long-term migration dynamics on

- population structure in England and Wales and Scotland. *Population Studies*, 70(2), pp.149-162.
- Murphy, M. (2016b). The impact of migration on long-term European population trends, 1850 to presen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2(2), 225-244.
- Murphy, M. (2021). Use of counterfactual population projections for assessing the demographic determinants of population ageing.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7(1), pp.211-242.
-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2000). *Beyond Six Billion: Forecasting the World's Population*.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 Newbold, K. B. (1999). Internal migration of the foreign-born: Population concentration or dispersion?. *Population and Environment*, 20(3), 259-276.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6).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6*. Paris: OECD Publishing.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1).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1*. Paris: OECD Publishing.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2).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2*. Paris: OECD Publishing.
- Ortega, J. A. (2006). Birth replacement ratios: new measures of period population replacement. Fundación de las Cajas de Ahorros, Working Paper, 261, 1-32. Retrieved from file:///C:/Users/COM/Downloads/Ortega2006-BirthReplacementRatios-FUNCASDoc261.pdf. 2023. 7. 21.

- Palloni, A., and Arias, E. (2004). Paradox lost: Explaining the Hispanic adult mortality advantage. *Demography*, 41(3), 385-415.
- Parr, N. (2021). A new measure of fertility replacement level in the presence of positive net immigratio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7(1), 243-262.
- Parr, N. (2023). Immigration and the prospects for long-run population decreases in European countrie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1(1), 1-29.
- Parsons, A. J. Q, and Gilmour, S. (2018). An evaluation of fertility- and migration-based policy responses to Japan's ageing population. *PloS ONE*, 13(12), 1-14. Retrieved from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file?id=10.1371/journal.pone.0209285&type=printable>. 2023. 2. 15.
- Perrin, F. (2022). On the origins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Rethinking the European marriage pattern. *Cliometrica*, 16(3), 431-475.
- Perry, M. J., and Schachter, J. P. (2003). Migration of natives and the foreign born: 1995 to 2000. Census 2000 Special Reports CENSR-11. US Census Bureau. Retrieved from <https://usa.ipums.org/usa/resources/voliii/pubdocs/2000/censr-11.pdf>. 2023. 4. 4.
- Philipov, D., and Schuster, J. (2010). Effect of migration on population size and age composition in Europe.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European Demographic Research Papers, 2, 1-91. Retrieved from https://www.oeaw.ac.at/fileadmin/subsites/Institute/VID/PDF/Publications/EDRP/edrp_2010_02.pdf. 2023. 2. 15.
- Phillipson, C. (2019). 'Fuller' or 'extended' working lives? Critical perspectives on changing transitions from work to retirement. *Ageing and Society*, 39(3), 629-650.
- Preston, S. H., Heuveline, P., and Guillot, M. (2001). *Demography: Mea*

suring and Modeling Population Processes.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Preston, S. H., Himes, C., and Eggers, M. (1989). Demographic conditions responsible for population aging. *Demography*, 26(4), 691-704.
- Preston, S. H., and Stokes, A. (2012). Sources of population aging in more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2), 221-236.
- Ravenstein, E. G. (1885).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 48(2), 167-227.
- Ravenstein, E. G. (1889).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52(2), 241-301.
- Raymer, J., and Baffour, B. (2018). Subsequent migration of immigrants within Australia, 1981-2016.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7, 1053-1077.
- Reher, D. S., and Silvestre, J. (2009). Internal migration patterns of foreign-born immigrants in a country of recent mass immigration: Evidence from new micro data for Spai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3(4), 815-849.
- Reher, D. S., and Silvestre, J. (2011). Internal migration patterns of foreign-born immigrants in Spain. A study based on the National Immigrant Survey (ENI-2007). *Revista Internacional de Sociología*, 69(M1), 167-188.
- Rindfuss, R. R., Palmore, J. A., and Bumpass, L. L. (1982). Selectivity and the analysis of birth intervals from survey data. *Asian and Pacific Census Forum*, 8(3), 5-16.
- Rodriguez, G. and Hobcraft, J. N. (1980). Illustrative Analysis: Life Table Analysis of Birth Intervals in Colombia. World Fertility Survey Scientific Reports No. 16. Retrieved from <https://wfs.dhsprogram>.

- com/WFS-SR/ISI-WFS_SR-16_Rodriguez%20&%20Hobcraft_1980_Illustrative%20Analysis%20-%20Life%20Table%20Analysis%20of%20Birth%20Intervals%20in%20Colombia%20.pdf. 2023. 7. 5.
- Rogers, A. (1988). Age patterns of elderly migratio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Demography*, 25(3), 355-370.
- Rogers, A., and Castro, L. (1981). Model migration schedules. RR-81-30.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 Analysis. Retrieved from <https://pure.iiasa.ac.at/id/eprint/1543/1/RR-81-030.pdf>. 2023. 3. 15.
- Rowland, D. T. (2003). *Demographic Methods and Concep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aczuk, K. (2003). A development and critique of the concept of replacement migration. CEFMR Working Paper 4/2003. Retrieved from <https://citeseerx.ist.psu.edu/document?repid=rep1&type=pdf&doi=47d4330d57cfdc16f020b163e1f5264892ff3604>. 2023. 3. 8.
- Salamońska, J. (2022). Quantitative methods in migration research. In P. Scholten (ed). *Introduction to Migration Studies: An Interactive Guide to the Literatures on Migration and Diversity* (pp. 425-438). Cham: Springer.
- Schmertmann, C. P. (1992). Immigrants' ages and the structure of stationary populations with below-replacement fertility. *Demography*, 29(4), 595-612.
- Schmertmann, C. P. (2012). Stationary populations with below-replacement fertility. *Demographic Research*, 26(14), 319-330.
- Schmid, S., and Kohls, M. (2009). Reproductive behaviour of migrant women in Germany: Data, patterns and determinant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7, 39-61.
- Schmid, S., and Kohls, M. (2010). Fertility of female immigrants in Ger

- many. In T. Salzman, B. Edmonston, and J. Raymer (eds.). *Demographic Aspects of Migration* (pp. 179-207). Heidelberg: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 Scopilliti, M., and Iceland, J. (2008). Residential patterns of black immigrants and native-born black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Quarterly*, 89(3), 551-572.
- Shor, E., and Roelfs, D. (2021). A global meta-analysis of the immigrant mortality advantag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55(4), 999-1028.
- Silvestre, J., and Reher, D. S. (2014). The internal migration of immigrants: Differences between one-time and multiple movers in Spain. *Population, Space and Place*, 20(1), 50-65.
- Skeldon, R. (2019). A classic re-examined: Zelinsky's hypothesis of the mobility transition. *Migration Studies*, 7(3), 394-403.
- Sobotka, T. (2008). Overview Chapter 7: The rising importance of migrants for childbearing i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19(9), 225-248.
- Taylor, P. (2019). Working longer may be good public policy, but it is not necessarily good for older people. *Journal of Aging and Social Policy*, 31(2), 99-105.
- Teitelbaum, M. S. (2004). The media marketplace for garbled demograph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2), 317-327.
- Teitelbaum, M. S., and Winter, J. M. (1985). *The Fear of Population Decline*. Orlando: Academic Press.
- Toulemon, L. (2004). Fertility among immigrant women: New data, a new approach. *Population and Societies*. No. 400 (April 2004): 1-4.
- United Nations (UN). (1998). *Recommendations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Revision 1).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UN). (2000). *Replacement Migration: Is It a Solution to Declining and Ageing Populations?*.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UN). (2012). Toolkit on international mig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publications/others/docs/toolkit_DESA_June%202012.pdf. 2023. 1. 19.
- United Nations (UN). (2016).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5: Highlights*. Retrieved from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publications/migrationreport/docs/MigrationReport2015_Highlights.pdf. 2023. 9. 7.
- United Nations (UN). (2017a). Migration and population change: Drivers and impacts. Population Facts, No. 2017/8. Retrieved from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publications/populationfacts/docs/MigrationPopFacts20178.pdf>. 2023. 1. 8.
- United Nations (UN). (2017b).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ision 3)*. Retrieved from https://unstats.un.org/unsd/publication/seriesM/Series_M67rev3en.pdf. 2023. 2. 14.
- United Nations (UN). (2017c). *Handbook on Measuring International Migration through Population Censuses*. Retrieved from <https://unstats.un.org/unsd/statcom/48th-session/documents/BG-4a-Migration-Handbook-E.pdf>. 2023. 2. 14.
- United Nations (UN). (2020a). 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20[data file]. Retrieved from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content/international-migrant-stock>. 2023. 1. 2.
- United Nations (UN). (2020b). *International Migration 2020 Highlights*. Retrieved from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sites/>

- www.un.org.development.desa.pd/files/undesapd_2020_international_migration_highlights.pdf. 2023. 1. 2.
- United Nations (UN). (2022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Most used)[data file]. Retrieved from <https://population.un.org/wpp/Download/Standard/MostUsed/>. 2023. 1. 8.
- United Nations (UN). (2022b).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Population)[data file]. Retrieved from <https://population.un.org/wpp/Download/Standard/Population/>. 2023. 1. 19.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09).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Overcoming Barriers: Human Mobility and Development*. New York: UNDP.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 Lawful permanent residents (LPR). Retrieved from <https://www.dhs.gov/immigration-statistics/lawful-permanent-residents>. 2023. 9. 13.
- Verdugo, R. R., and Swanson, D. (2011). Immigration and its effects on demographic change in Spain. *The Open Demography Journal*, 4(1), 22-33.
- Viñuela, A. (2022). Immigrants' spatial concentration: Region or locality attractiveness?. *Population, Space and Place*, 28(2), e2530.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002/psp.2530>.
- Winter, J., and Teitelbaum, M. S. (2013). *The Global Spread of Fertility Decline: Population, Fear, and Uncertain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Wolf, D. A., and Longino, C. F. (2005). Our “increasingly mobile society”? The curious persistence of a false belief. *The Gerontologist*, 45 (1), 5-11.
- Wu, Z., and Li, N. (2003). Immigration and the dependency ratio of a host population. *Mathematical Population Studies*, 10(1), 21-39.

- Yusuf, F., Martins, J. M., and Swanson, D. A. (2014). *Methods of Demographic Analysis*. Dordrecht: Springer.
- Zelinsky, W. (1971). The hypothesis of the mobility transition. *Geographical Review*, 61(2), 219-249.

〈홈페이지〉

- International Migrant Stock.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content/international-migrant-stock>.
- The Human Fertility Database (HFD). <https://www.humanfertility.org/>.
- The Human Mortality Database (HMD). <https://www.mortality.org/>.